
충남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양극화 대응방안 연구

2020. 04.

제 출 문

충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충남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양극화 대응방안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0년 4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직무대행	김	영 주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양극화 논의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과 정책 활용	6
2. 충남도정의 양극화 접근 고려사항	7
1) 양극화에 대한 인식과 접근	7
2) 양극화 연구의 접근방법	9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설정	12
2) 연구 추진체계	13
3) 연구관련 주요 추진일정	14
제2절 양극화에 대한 개념과 시각	15
1. 양극화의 개념과 원인 및 전망	15
1) 양극화 개념과 원인	15
2) 양극화 전망 시나리오	18
2.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논의	19
1) 국제기구의 양극화 현상 주요논의	19
2) 주요 선진국의 양극화 정책사례	23
3. 우리나라의 포용국가 정책과 소득재분배 정책	29
1) 현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	29
2) 국가 미래비전 2045	33
3)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정책 검토	35
4. 시사점	41
1) 양극화 인식과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 강화	41
2) 지역차원의 역할과 기능 확대	42
3) 정책대상 특성에 따른 차별화 정책방안	43

제2장 충남의 경제 양극화 실태와 변화 동향

제1절 충남의 경제환경 변화와 경제양극화 실태 분석	47
1. 충남경제의 성장과 현재	47
1) 국가기간산업의 집적으로 인한 성장	47
2) 수출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 형성	48
3)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한계	50
2. 양극화요인에 대한 충남의 경제구조 검토	53
1) 양극화 요인에 대한 검토	53
2) 수출 중심의 대외적 개방형 경제 구조	54
3) 지역내 산업 및 고용구조의 취약성	57
4) 정부 정책적 대응의 한계성	62
3. 충남의 경제양극화 실태분석	64
1) 분석 개요	64
2) 근로소득 양극화 실태분석	66
3) 산업 및 업종별 양극화 실태분석	78
4) 지역별 소득 양극화 실태분석	82
제2절 충남의 인구·고용분석을 통한 향후 전망	84
1. 충남의 인구변화 전망	84
1) 장래인구 및 인구구조 전망	84
2) 충남의 장래 인구구조 변화와 시사점	85
2. 충남의 주요 산업별 전망	90
1) 주요 산업별 성장전망	90
2) 산업별 취업자 성장전망 및 충남 특화업종분야 검토	91

제3장 충남의 사회 양극화 실태와 변화 동향

제1절 충남의 사회 변화와 사회양극화 실태 분석	97
1. 충남 인구 사회적 특성	97
1) 인구 변화	97
2) 저출산·고령화 현황	99
3) 가구·가족 변화	103
4) 아동·청소년 현황	108
2. 충남 도민 삶의 질 분석	114

1) 분석개요	114
2) 충남 주요 삶의 질 지표 현황	115
3) 충남 복지·보건·안전 계획 주요 관리지표 현황	143
4) 충남 아동의 삶의 질 지표 현황	147
3. 요약 및 시사점	149
1) 분석결과 요약	149
2) 정책적 시사점	153
제2절 충남 도민 특성별 삶의 질 실태분석	157
1. 분석개요	157
1) 충남 삶의 질 열위지표 및 분석의 한계	157
2) 충남 도민 특성별 삶의 질 분석범위	158
2. 충남 도민 특성별 삶의 질 실태	159
1) 국민 삶의 질 열위지표 유사 충남 사회지표 분석 결과	159
2) 충남(비열위) 사회통합 영역 사회지표 분석 결과	166
3. 요약 및 시사점	168
1) 분석결과 요약	168
2) 정책적 시사점	172
제3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175
1. 가족, 공동체, 사회통합	175
2. 교육, 문화·여가	176
3. 주거, 환경	176
4. 건강	176
5. 노동, 소득	177
제4장 충남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제1절 양극화 정책수립을 위한 도민 의식조사	181
1. 조사개요	181
2. 조사결과	183
제2절 양극화 대응과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주요과제	189
1. 양극화에 대한 전망과 대응	189

2. 충남의 양극화 대응을 위한 방향과 추진과제	191
1) 정책의 접근 방향	191
2) 목표별 추진전략	192
3) 양극화 대응전략 추진방향	195
3. 추진 전략별 주요 과제	197
1) 소득 및 고용 불균형 완화	197
(1) 임금보장과 근로여건 개선	197
① 충남형 지역사회 협약	197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시범사업	199
③ 최저임금미달 사업장 실태조사 및 특성화 방안 마련	201
④ 지자체 근로감독권 부여	203
⑤ 노동법원 신설	205
⑥ 노동권익센터 운영 활성화	207
⑦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209
⑧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211
(2)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214
①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214
②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	216
③ 청년 지역 인재 순환시스템 구축	218
④ 청년 창작·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220
⑤ 신중년 성공 프로젝트	223
⑥ 일자리 진흥원 운영 활성화	225
⑦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	228
⑧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확대	230
⑨ 장애인 일자리 지원	232
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4
⑪ 노인 일자리 장려금 지원	236
⑫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238
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40
⑭ 충남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작업장 설치	242
⑮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충	244
2) 취약계층의 보호와 회복	246
(1) 경제적 약자 지원	246

①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사업	246
②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48
③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	250
④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52
⑤ 취업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254
⑥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256
⑦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258
⑧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260
⑨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262
⑩ 농어촌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	264
⑪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266
⑫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268
⑬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270
⑭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271
⑮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지원	273
⑯ 경로당 태양광 설치	275
⑰ 도서관 여객선 운임지원	277
(2) 사회 안전망 확대	279
① 충남형 독거노인 공유주거모델 개발	279
② 노인 자살예방 관리 체계 강화	281
③ 의용소방대 현장 밀착형 자살예방 활동	283
④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284
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86
⑥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88
⑦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290
⑧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119구급 서비스	292
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 서비스 지원	293
⑩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	294
⑪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296
⑫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297
3) 경제사회 포용성장 기반 강화	299
(1) 지역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	299
① 충남형 기업과 지역의 공유가치 창출 지원	299
② 사회적경제 지원 플랫폼 구축	301
③ 지역기업 현지화	303

④ 지역화폐 활성화	305
⑤ ICT기반 지역 협력적 소비플래너 양성	307
⑥ 마을기업 육성	309
⑦ 상생형 여촌계 연금제 도입	311
⑧ 청년 여촌정착 지원	313
⑨ 성과공유제 도입	315
⑩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317
 (2) 공정한 기회보장과 공동체 형성	318
① 도지사 직속 '포용성장위원회' 신설	318
② 학교 밖 청소년 성장수당 지원	320
③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활성화	322
④ 충청남도 진로융합교육원(가칭) 설립 지원	324
⑤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및 교육권 확보	326
⑥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328
⑦ 사회문제해결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지원	330
⑧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331
⑨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333
⑩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서비스	335
⑪ 읍면동 마을 공동체 지원	337
⑫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 사회통합 특화사업 추진	339
 참고문헌	341

〈표 1-1〉 일본 시기별 격차문제 관련 논의와 정책대응	27
〈표 1-2〉 일본 포용성장 관련 정책과제	28
〈표 1-3〉 국민부담률의 구성	40
〈표 2-1〉 충남 인구의 시군간 격차	52
〈표 2-2〉 주요 업종의 지역내 비중	56
〈표 2-3〉 가계부문 분석 주요내용	65
〈표 2-4〉 기업부문 분석 주요내용	65
〈표 2-5〉 전국과 충남의 성별 평균임금과 지니계수 변화	70
〈표 2-6〉 전국과 충남의 연령별 평균임금과 지니계수 변화	71
〈표 2-7〉 근로형태에 따른 평균임금 및 지니계수 비교	73
〈표 2-8〉 전국과 충남의 교육수준별 평균임금과 지니계수 변화	75
〈표 2-9〉 전국과 충남의 평균임금과 지니계수 변화	77
〈표 2-10〉 충남의 농가소득 구간별 가구 현황	80
〈표 2-11〉 충남의 농업소득 구간별 가구 현황	80
〈표 2-12〉 충남 및 전국의 인구 전망(2017년~2047년)	84
〈표 2-13〉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86
〈표 3-1〉 출생아 수 현황	99
〈표 3-2〉 충남 합계출산율(2000~2017)	99
〈표 3-3〉 합계 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100
〈표 3-4〉 충남 부양 인구비 및 노령화 지수 (2000~2019)	101
〈표 3-5〉 노령화지수(2000~2019)	101
〈표 3-6〉 충남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현황(2013~2018)	102
〈표 3-7〉 충남 1인 가구 및 65세 이상 1인 가구(2017~2018년)	103
〈표 3-8〉 충남 1인 가구 비율	103
〈표 3-9〉 독거노인가구 비율	104
〈표 3-10〉 충남 등록장애인 현황	105
〈표 3-11〉 충남 한부모 가구 현황	106
〈표 3-12〉 충남 외국인주민 증가 현황(2006~2018)	107
〈표 3-13〉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인구 (2008~2018)	108
〈표 3-14〉 충청남도 시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2017)	109
〈표 3-15〉 충청남도 학업중단자 수 및 비율	110
〈표 3-16〉 충청남도 자살 아동청소년수	111
〈표 3-17〉 충청남도 양육시설 및 보호아동 수	112
〈표 3-18〉 충청남도 가정위탁 현황	113

〈표 3-19〉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15
〈표 3-20〉 충남 여가활용 만족도	116
〈표 3-21〉 충남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	116
〈표 3-22〉 충남 근로시간	117
〈표 3-23〉 충남 일자리만족도	118
〈표 3-24〉 충남 소득만족도	118
〈표 3-25〉 소비생활만족도	119
〈표 3-26〉 자살률	120
〈표 3-27〉 상수도 보급률	121
〈표 3-28〉 가해에 의한 사망률(타살)	121
〈표 3-29〉 아동 안전사고사망률	122
〈표 3-30〉 교통사고 사망자수(인구십만명당)	123
〈표 3-31〉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123
〈표 3-32〉 충남 도민 삶 만족도(긍정정서)	124
〈표 3-33〉 사회조사(보건 분야) 총괄	125
〈표 3-34〉 충남 규칙적 운동 실천	125
〈표 3-35〉 사회조사(가족 분야) 현황(총괄)	126
〈표 3-36〉 부모생활비 주제공자(부모스스로 해결 응답)	127
〈표 3-37〉 사회조사(교육 분야) 현황(총괄)	127
〈표 3-38〉 학교생활만족도(교육내용)	128
〈표 3-39〉 사회조사(노동) 현황(총괄)	129
〈표 3-40〉 직장 전반적 만족도	130
〈표 3-41〉 사회조사(소득과 소비) 현황(총괄)	131
〈표 3-42〉 사회조사(환경) 현황(총괄)	131
〈표 3-43〉 사회조사(안전) 현황(총괄)	132
〈표 3-44〉 사회조사(여가와 문화) 현황(총괄)	133
〈표 3-45〉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133
〈표 3-46〉 사회조사(사회통합 분야) 현황(총괄)	134
〈표 3-47〉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134
〈표 3-48〉 다음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135
〈표 3-49〉 주거환경 만족도	135
〈표 3-50〉 도시가스 보급률	136
〈표 3-51〉 지역사회 소속감	138
〈표 3-52〉 충남도민의 이주민 인권존중 정도 인식 변화(2012~2019)	139
〈표 3-53〉 충남 도민의 다문화사회 인식 변화(2016년/2019년)	139
〈표 3-54〉 2016년 충청남도 지역안전지수 및 2020-2030 분야별 목표 등급	146
〈표 3-55〉 「충남 아동 삶의 질 순위」요약(17개 시도/ 순위/평균대비 점수)	147
〈표 4-1〉 양극화 대응 지표체계(안)	195
〈표 4-2〉 양극화 대응전략 소요예산(잠정)	196

[그림 1-1] 전 세계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	4
[그림 1-2] 1분위대비 10분위 배율	4
[그림 1-3] 주요국 가계소득/GNI 비율 추이	5
[그림 1-4] 양극화 정책의 3가지 큰 틀	8
[그림 1-5] 양극화 연구를 위한 접근	9
[그림 1-6] 양극화 대책 수립을 위한 공동협업체계 구축	13
[그림 1-7] 글로벌 전체 소득중 하위 50%와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의 예측(1980~2050)	18
[그림 1-8] 하위, 중위, 상위집단의 실질 가구소득추세(OECD)	19
[그림 1-9] 조세 및 사회보장의 불평등 연관효과	20
[그림 1-10]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격차발생추이	21
[그림 1-11]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분야의 지속성 조건의 차이성 분석지표	26
[그림 1-12] 문재인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	29
[그림 1-13] 한국 사회의 불평등 재생산 구조	30
[그림 1-14] 혁신 촉진적 사회정책이 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경로	31
[그림 1-15]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32
[그림 1-16] 혁신적 포용국가 4대 전략 추진체계	33
[그림 1-17] OECD국가의 소득재분배적 세수 비중 및 규모	37
[그림 1-18] 국가별 소득재분배 효과(빈곤탈출률)	38
[그림 1-19]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규모(1960, 1990, 2018)	39
[그림 1-20]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40
[그림 2-1] 충남 및 전국의 제조업 비중(2000~2017년)	47
[그림 2-2]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비중(2000~2016년)	48
[그림 2-3] 충남의 수출변화 추이(2000~2018년)	48
[그림 2-4] 충남 상위 10대 수출국가	49
[그림 2-5]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비중	49
[그림 2-6] 충남의 주요 수출품목 비중(2018년 기준)	49
[그림 2-7] 시도별 역외유출 비중(2017년 기준)	50
[그림 2-8] 충남 15개 시군의 GRDP 비중(2016년 기준)	51
[그림 2-9] 충남의 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2018년 기준)	52
[그림 2-10] 충남 주요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	54
[그림 2-11] 시도별 수출의존도 및 수출비중(2017년 기준)	54
[그림 2-12] 충남의 대중국 수출 특화계수	55
[그림 2-13] 대중국 수출 비교우위지수(CAC)	56

[그림 2-14] 종사자규모별 비중	57
[그림 2-15]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58
[그림 2-16] 시도별 제조업본사 비중(단독 사업체 제외)	58
[그림 2-17] 우리도와 주변지역간 직주실태(통근통학권 및 제조업 분표)	59
[그림 2-18] 충남의 자영업자 비중 및 변화 추이	59
[그림 2-19] 세계 주요국의 자영업자 비중	60
[그림 2-20] 주요 서비스업의 종사자 지위별 구성	60
[그림 2-21] 주요 서비스업의 조직형태별 구성	61
[그림 2-22] 충남 업종별 자영업자 비중 및 변화 추이	61
[그림 2-23] 양극화의 원인과 흐름	64
[그림 2-24] 충남의 분위별 소득(월평균 임금)격차 변화 추이(만원)	66
[그림 2-25] 전국 분위별 소득(월평균 임금)격차 변화 추이(만원)	67
[그림 2-26] 종합소득금액 분위별 전국대비 충남비중	67
[그림 2-27] 1분위 대비 10분위 배율(상위1 0%와 하위 10%)	68
[그림 2-28] 중산층비율(중위소득의 50%~150% 미만)	68
[그림 2-29]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남성임금=1)	69
[그림 2-30] 성별 임금 격차(지니계수)	69
[그림 2-31] 분위별 성별 근로자 비중	70
[그림 2-32] 연령별 상용직 격차(지니계수)	71
[그림 2-33] 연령별 임시·일용직 격차(지니계수)	71
[그림 2-34]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비율(상용직임금=1)	72
[그림 2-35] 근로형태별 임금불평등도(지니계수)	72
[그림 2-36] 분위별 근로형태별 근로자 비중	73
[그림 2-37] 대졸이상 대비 고졸이하 임금수준(대졸자임금=1)	74
[그림 2-38] 교육수준별 임금불평등도(지니계수)	74
[그림 2-39] 분위별 교육수준별 근로자 비중	75
[그림 2-40] 전국 광역별 지니계수 비교(월평균임금 기준)	76
[그림 2-41] 기업규모별 (1인당)매출액 변화추이	78
[그림 2-42] 중소기업 (1인당)영업이익률 변화추이(대기업=100)	78
[그림 2-43] 산업별 평균임금(시간당) 변화 추이	79
[그림 2-44] 산업별 임금불평등도(지니계수) 변화 추이	79
[그림 2-45] 생산(1인당 GRDP)과 시군별 임금지니계수	82
[그림 2-46] 소득(1인당 월평균임금)과 시군별 임금지니계수	83
[그림 2-47] 참고: 시군별 1인당 GRDP 및 지니계수	83
[그림 2-48] 세대별 임금근로자 비중 변화 추이	86
[그림 2-49] 20대와 50대 임금근로자 비중 변화(1980-2016)	87
[그림 2-50] 20대와 50대 비정규직 및 비중(임금근로자 대비) 변화 추이	88
[그림 2-51] 20대와 50대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변화	88

[그림 2-52] OECD 회원국의 고령인구 부양비 : 추세와 전망(1980~2050년)	89
[그림 2-53] 제조업 세부산업별 실질성장률 증가 전망(%)	90
[그림 2-54]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실질성장률 증가전망(% , 2030년 전망)	91
[그림 2-55] 영역별 고용노동정책 매트릭스	92
[그림 2-56] 제조업 취업자전망과 충남의 종사자 특화(LQ)비중	93
[그림 2-57] 서비스업 취업자전망과 충남의 종사자 특화(LQ)비중	93
[그림 3-1] 유소년, 생산연령 및 고령 인구 비율	98
[그림 3-2] 합계출산율	100
[그림 3-3] 노령화지수	101
[그림 3-4] 1인가구 비율	104
[그림 3-5] 독거노인가구 비율	105
[그림 3-6] 충남 등록장애인 현황	106
[그림 3-7] 충남 한부모가구 현황	106
[그림 3-8] 충남 외국인주민 증가 현황	107
[그림 3-9]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인구(2008~2018)	108
[그림 3-10] 충청남도 시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17)	109
[그림 3-11] 충청남도 교급별 학업중단율 (2000~2017)	110
[그림 3-12] 충청남도 자살 아동청소년수 (2000~2017)	111
[그림 3-1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15
[그림 3-14] 여가활동만족도	116
[그림 3-15] 문화예술스포츠 관람횟수	117
[그림 3-16] 충남 근로시간	117
[그림 3-17] 일자리만족도	118
[그림 3-18] 소득만족도	119
[그림 3-19] 소비생활만족도	119
[그림 3-20] 자살률	120
[그림 3-21] 상수도 보급률	121
[그림 3-22] 가해에 의한 사망률(타살)	122
[그림 3-23] 아동 안전사고사망률	122
[그림 3-24] 교통사고 사망자수(인구십만명당)	123
[그림 3-25]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124
[그림 3-26] 삶의 만족도(긍정정서)	124
[그림 3-27] 충남 규칙적 운동 실천	126
[그림 3-28] 부모생활비 주제공자(부모스스로 해결 응답)	127
[그림 3-29] 학교생활만족도(교육내용)	129
[그림 3-30] 근로여건만족도(전반적)	130
[그림 3-3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133
[그림 3-32]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134

[그림 3-33] 다음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135
[그림 3-34] 주거환경 만족도	136
[그림 3-35] 도시가스 보급률	137
[그림 3-36] 2018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	137
[그림 3-37] 지역사회 소속감	138
[그림 3-38] 충남 도민 성별 다문화사회 인식 변화: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	140
[그림 3-39] 충남 도민 성별 다문화사회 인식 변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필요성	140
[그림 3-40] 충남 도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40
[그림 3-41] 한국 아동 삶의 질 추이(2012~2017년)	148
[그림 4-1] 양극화에 대한 인식	183
[그림 4-2] 전국에 비해 충남의 양극화 상황	184
[그림 4-3] 충남지역이 양극화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84
[그림 4-4] 개인의 10년간 생활수준의 변화	185
[그림 4-5] 생활수준 변화 원인	185
[그림 4-6] 경제적 측면에서 직면한 어려운 점	186
[그림 4-7] 양극화 원인에 대한 의견	186
[그림 4-8] 정책분야별 중요성 ; 경제분야	187
[그림 4-9] 정책분야별 중요성 ; 사회분야	187
[그림 4-10] 정책분야별(경제분야) 중요도 및 시급성	188
[그림 4-11] 정책분야별(사회분야) 중요도 및 시급성	188
[그림 4-12] 충남의 양극화 정책방향과 전략	192
[그림 4-13] 양극화 대응전략 추진체계	195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양극화 논의
제2절 양극화에 대한 개념과 시각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양극화 논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의 격차 확대

- 전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의 과정, 즉 탈 농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산업간·기업간 불균형성장과 이로 인한 양극화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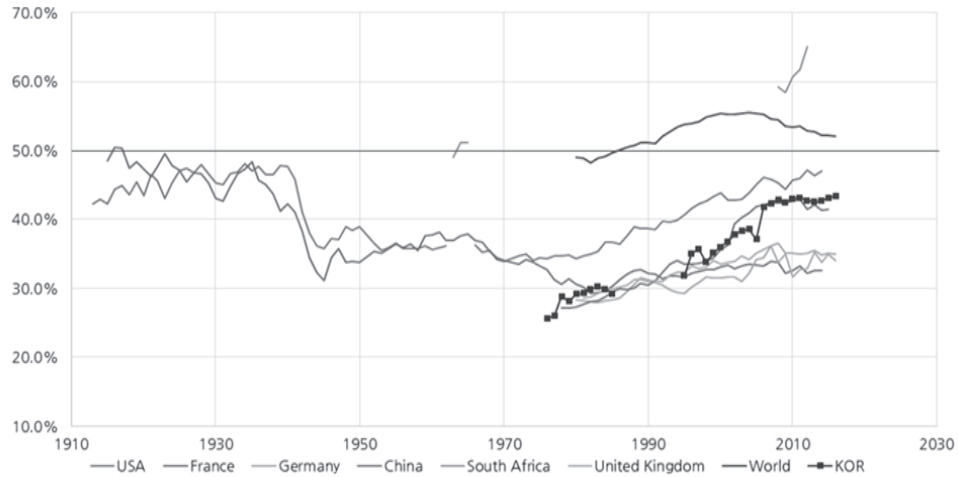
– 최근 몇 십 년 동안 소득에 기반한 경제적 불평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이슈로 확대

* 글로벌 GDP : 4.5%('00~'07)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4%('08~'18)

- 우리나라 역시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 불평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OECD 중 격차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2018년 발행된 세계불평등보고서(Facundo Alvaredo, 2018)에서는 1970년대 이후 북유럽 등의 복지국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불평등 확대는 단순히 국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

[그림 1-1] 전 세계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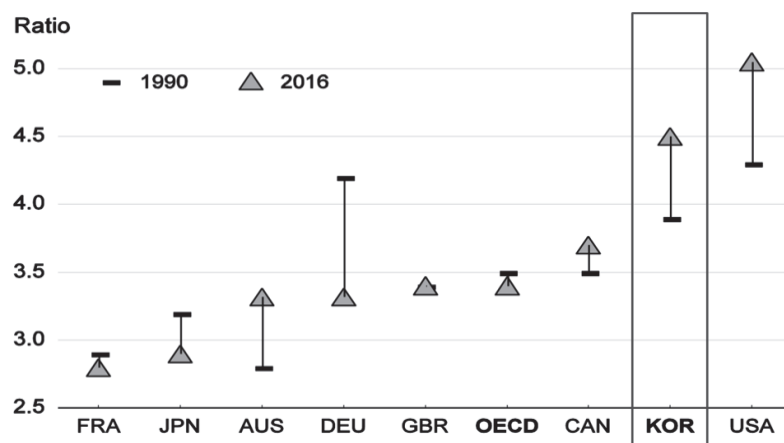


자료 : WID(World Inequality Database, 2019)와 Top Incomes in Korea : Update, 1933-2016 (Kim, 2018)을 통해 재구성

≫ 우리나라도 격차 문제가 확대되고 이동성의 제약 문제로 확대

- 세계적인 불평등, 격차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로 산업, 고용, 소득, 사회복지 등 양극화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
 - OECD(2018)의 자료에 의하면 양극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1분위대비 10분위 배율이 1990년에 비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한국, 1990년, 3.9 → 2016년, 4.5배로 증가(OECD평균, 3.5 → 3.4배로 하락)

[그림 1-2] 1분위대비 10분위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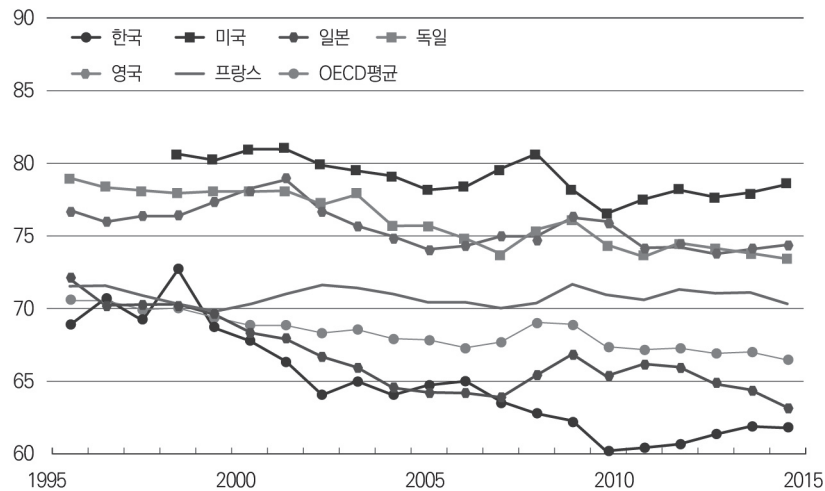


자료 : OECD(2018), Economic Survey of Korea.

- 그동안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경제·사회 다양한 양극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계층,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정책의 한계를 노정
 - 이러한 격차의 문제는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 역시 경직화되는 상황

[그림 1-3] 주요국 가계소득/GNI 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2017)에서 재인용(OECD).

>> 충남 경제의 특수성과 양극화

- 충남은 한국경제의 축소판으로서 국가기간산업의 집적 및 수출제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간·기업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수출 제조업기반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 대기업의 생산·투자전략에 지역경제 변동성이 크고 외부 경제충격에 민감
 - *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CAGR) 6.3%(전국 3.8%)로 전국 최고의 경제성장률 시현 (GRDP 115조원, 2017)
- 결과적으로 지역의 총부가가치 생산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이러한 생산이 지역내 소득과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짐
 - 2017년 기준 1인당 GRDP 5,149만원(전국 2위), 1인당 개인소득 1,761만원(전국 6위), 1인당 민간소비 1,405만원(전국 16위)

- 이러한 요인은 충남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경제주체의 고용·임금이 산업, 기업규모, 업종 등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 우리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지속가능한 충청남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충남의 도정철학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이 필요

2) 연구 목적과 정책 활용

- 충남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명확한 현실 진단을 추진
-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통해 계층간·지역간 사회통합과 도민 중심의 정책 방향과 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 양극화 실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민선 7기 핵심도정 구현을 위한 충청남도 각 실국의 양극화 시책의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충청도정의 양극화 접근 고려사항

1) 양극화에 대한 인식과 접근

>> 양극화 정책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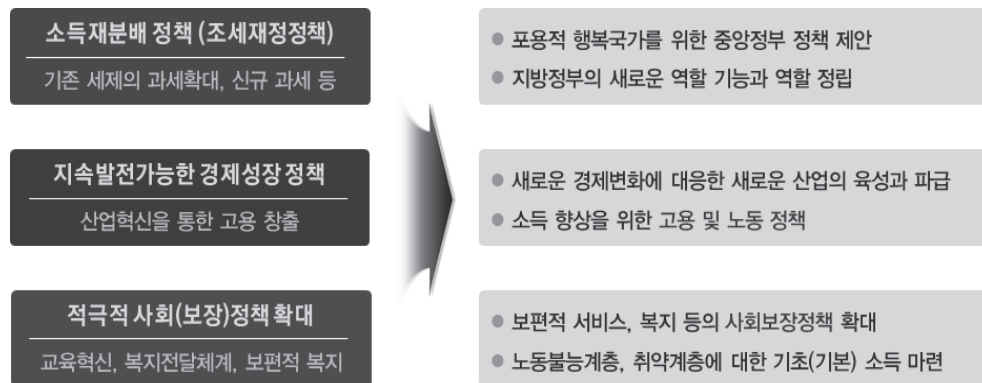
- 그동안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경제·사회 다양한 양극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계층,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정책의 한계를 노정
 - 외환위기 이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각 정부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양극화 현상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확대되고 있음
 -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증가의 원인은 노동과 자본간 소득의 불균형에서 출발 (노동소득분배율 79.3%(1996년) → 70.6%(2014년)), 한국노동연구원(2015년)
 - 현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동반성장)의 3대 경제정책과 포용적·혁신적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과 분배 개선 등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 충청도 역시 양극화 기준¹⁾ 등의 정책, 경제양극화²⁾, 사회양극화³⁾, 지역양극화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를 가짐
 - 충남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한국경제의 축소판처럼 우리나라가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지역경제에 내재하고 있음
-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 사전적으로 우리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임

1) (법정)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기본계획, (비법정)충남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각년도), 각 계획의 전략지표 등
 2) (법정)민선7기 충청남도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19~2022), (법정)제4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2018~2020, 산업통상자원부), (비법정)충청남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계획, (비법정)충청남도 사회적경제 2차 5개년계획(2018~2022), (비법정)충남 소상공인 발전계획, (비법정)충청남도 경제발전전략, (비법정)충남 경제비전2030 등
 3) (비법정)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2018~2020), (법정)제4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2), (법정)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2019.2022), (비법정)충남형 가족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2019~2023), (비법정)충남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2013), (법정)제3차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2016~2020), (법정)제3차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2018~2022) 등
 4) (비법정)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2018~2020), (법정)제4차 충청남도 발전계획(2018~2022,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연계), (법정)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연계) 등

>> 충남도정의 정책의 한계와 정책적 수단에 대한 고려

- 충청남도는 양극화 대책이나 완화라는 계획이나 정책명칭이 없었을 뿐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의 격차 완화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왔음
- 양극화에 대해 주요 북유럽 국가의 사례 등을 기반으로 할 때 양극화 정책은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 지속적 성장, 복지기반의 사회정책 3가지로 귀결되고 있음

[그림 1-4] 양극화 정책의 3가지 큰 틀



- 소득재분배 정책은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상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정부차원에 있어서는 접근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한 성장은 양극화를 완화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고용 촉진적 새로운 산업육성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업 탈출과 소득개선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지역내 취약계층 및 격차가 확대되는 분야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사회 정책역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접근방법이 됨

2) 양극화 연구의 접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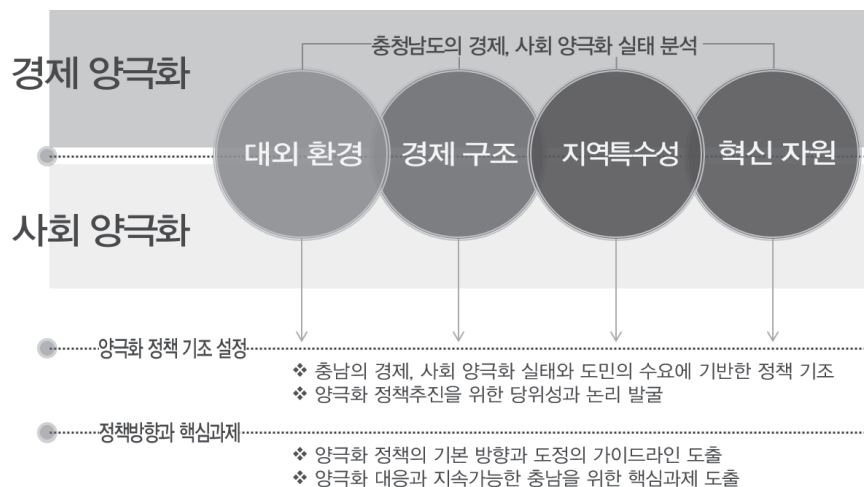
≫ 양극화 연구와 정책마련을 위한 접근 방향 설정

- 충남에 대한 양극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극화된 사회·경제구조를 완화하고, 각 계층에 대한 격차를 줄임으로써 전반적인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속발전이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드는데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충남의 도정철학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충청도정의 양극화 정책방향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결과적으로 양극화라는 민선 7기 도정 현안에 대해 충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분석과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충청남도 각 실국의 양극화 시책의 정책적 근거 자료를 찾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경제사회 분야의 다양한 양극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계층,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책적 수단의 한계에 따라 충남도 주도의 양극화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지역경제 구조 하에서의 양극화 분석과 대응

- 일반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복지와 사회전분야로 확대 재생산되므로 경제·사회 구조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

[그림 1-5] 양극화 연구를 위한 접근



- 양극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경제분야와 사회분야가 서로 다른 측면이 있음
 - 경제측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고용·노동분야의 정책과 함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필요
 - 사회측면에 있어서는 집단 간의 차이(격차)의 존재와 이의 부당함(차별, 불평등) 인식과 불평등의 구조화도 이에 포함되며, 보편적 복지의 측면도 일부 포함됨
- 사회 정의,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되는 경우 사회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결속·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 필요
 - 현존하는 격차와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구조화, 고착화되어 취약계층의 계층이동성·희망 약화

》충남지역의 특수성 고려

-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충남의 명확한 현실 진단 기준 마련
 - 충남은 국가기간산업 입지로 우리나라 경제의 축소판, 1990년대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에 적극 참여하면서 고성장과정에 구조적인 소득불균형 요인들이 내재
 - * 2000년 이후 성장률 6.3%, 충남지역은 인구 4.1%(2018), GDP의 7.4%(2017), 우리나라 수출의 15.2%(2018)점유
-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통해 계층간·지역간 사회통합과 도민 중심의 도정 구현
 - 충남지역 경제 격차(양극화)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명확한 정량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과 수요, 그동안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한 수단적 방법에 대한 접근 필요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연계성 확보

- 현 정부는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2018) 발표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여 장기적 성장을 유도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제시

-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련 법안 제정 논의 중
 - 양극화 해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19)⁵⁾ 논의 중
- 중앙정부차원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기획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의 연결성 확보가 필요

>> 명확한 현실진단과 당위성 논리 개발이 선행

- 양극화관련 정책은 그동안의 시장중심의 정책과는 달리 적극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을 기반하기 때문에 정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당위성 확보가 필요함
 - 양극화는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가지는 절대적 측면이 있지만, 특성에 따라 절대적 기준이 없는 상대적 측면(가치측면)의 성격이 강함
- 또한 취약부문(양극화된)의 ‘사회적 이동성’을 가진 resilience(복원력)마련이 필요하나 정책적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도정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논리 개발도 필요함

5) '양극화'란 소득, 노동, 시장 등 특정 분야에서 사회 내의 계층 또는 집단 간에 불평등, 차별 등으로 인한 격차가 발생하여 심화되는 현상. '양극화 해소'란 각 분야에서의 양극화를 경감,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행 등의 제반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제2조 정의)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설정

>> 연구의 시간적 범위

- 연구의 시간범위는 향후 10년간을 기간의 중기적 계획으로 기간을 설정하고, 정책 사업의 추진시기에 따라 단기(민선 7기, 현재~2022년), 중기(2023~2030년)로 구분하여 추진함
 - 사업추진 시기는 충남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단기적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중앙정부 역제안 사업 등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
 - * 양극화나 격차에 대한 정책은 중앙 및 지방정부 본연의 정책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와 함께 양극화 분석을 위한 범위는 분석대상과 내용에 따라 구득 가능한 시계열자료를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실태분석을 추진

>> 연구의 공간적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15개 시·군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전역으로 설정하되, 필요에 따라 시군, 권역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
- 이와 함께 연구추진에 따라 세계기구 및 주요 선진국, 타시도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충남의 현재 위상에 대한 분석 추진

>> 연구의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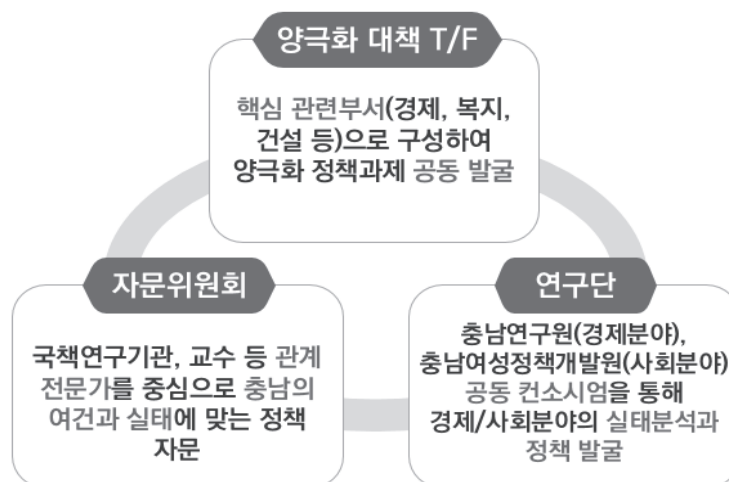
- 양극화 연구의 주요내용은 충남도내 거시경제, 기업경제, 개인임금소득 등 경제주체별 현황분석 및 소득불평등 추정, 의료·주거·복지·교육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를 통한 양극화 정책방향과 사업을 모색함
- 또한,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책동향 및 주요 정책조사 및 분석도 함께 추진함

- 양극화에 대한 정책연구는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여, 기본적으로는 경제와 소득에 기반한 연구와 복지 등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연구로 이원적 접근을 통해 분석함
- 따라서 1장에서는 충청남도의 양극화 연구의 필요성과 양극화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2장에서는 소득에 기반한 경제 분야의 분석을, 3장에서는 사회분야의 분석을 통해 4장에 충남도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코자 함

2) 연구 추진체계

- 양극화 분석과 정책발굴을 위한 충남도-연구기관-전문가 등의 공동협력체계 구축
 - (양극화 대책 T/F) 핵심 관련부서(경제, 복지 등)로 구성, 양극화 정책과제 공동 발굴
 - (자문위원회) 국책연구기관, 교수 등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실태 분석과 정책자문
 - (양극화 공동연구단) 충남연구원(경제분야)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사회분야) 공동컨소시엄을 통해 경제 · 사회분야의 실태분석과 정책발굴
- 전담팀 신설, 양극화 대책 T/F 구성을 통한 협업 체계, 도민의 아이디어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 추진

[그림 1-6] 양극화 대책 수립을 위한 공동협업체계 구축



3) 연구관련 주요 추진일정

- 2019. 1.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 2019. 3. 충남도 양극화 정책 기획 및 방향성 검토
- 2019. 4.12. 양극화 정책마련을 위한 도정철학 분석
- 2019. 4.16. 정책방향 기획 및 기관별 역할 분담
- 2019. 4.29. 양극화 자문위원회 개최(착수보고)
- 2019. 5~7. 해외사례 조사 및 워크숍(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 2019. 6~8. 실무회의 및 워크숍 (실태 및 정책 검토)
- 2019. 8.22. 양극화 대응 충남도 T/F 1차 회의(팀장급)
- 2019. 9.19. 양극화 대응 충남도 T/F 2차 회의(과장급)
- 2019. 9.24. 연구진 및 실무전문가 자문회의
- 2019. 9.30. 양극화 대책 자문위원회 개최
- 2019.10. 7. 정책방향 설정 실무회의
- 2019.10.14. 양극화 과제 전문가 조사
- 2019.10.16. 정책 대토론회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
- 2019.10 양극화 완화를 위한 도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10.28~11.8)
- 2019.11 양극화 인식과 정책 설문조사(11.18~11.29, 충남도민 대상)
- 2019.11.28.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2019.12.10. 연구진 및 실무회의(정책방안 및 주요사업 검토)
- 2019.12.13. 행정부지사 보고
- 2019.12.30. 도지사 보고
- 2020.3.4. 양극화 대응전략 자문회의
- 2020.4.2. 최종보고회(행정부지사 주재)

제2절

양극화에 대한 개념과 시각

1. 양극화의 개념과 원인 및 전망

1) 양극화 개념과 원인

≫ 양극화 개념 검토

- 양극화(polarization)의 사전적 개념은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됨
- 그러나, 사전적 개념의 양극화 보다는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며 이는 외형적으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상호 이질적 집단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상태를 말함(정책기획위원회, 2006)
 - 예를 들면, 흑인과 백인 간의 간격이 커져 투표행위나 사회적 행태 등에서 양극단으로 몰리는 사회적 현상이나, 고소득자의 부의 축적이 확대되면서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상대적 측면의 현상도 양극화에 포함
- 기본적으로 양극화는 중산층이 소멸되고 빈곤이 증대되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형성된 개념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 현상과는 개념과 문제의식이 다르며, 측정하는 수단과 과제도 다른 측면이 있음(김학규, 2013)
 - 소득분배는 전체 소득계층의 분배 상태에 대한 문제인 반면에, 양극화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양극단으로의 이동하는 상태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들 두 가지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
 - 소득분배가 매우 평등한 나라에서도 양극화는 일어날 수 있으며, 반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나라인데도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다시 말해서 양극화는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전체 인구집단이 양극단으로 떨어져 가는 부익부 빈익빈 등의 추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소득 분배 또는 소득 불균형은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 상태에 있는가의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임
- 결과적으로, 소득분배는 주로 소득만을 문제 삼는 데 비해, 양극화는 소득 외에도 자산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고용의 양극화, 그 밖에 주택·교육·문화·권리의 양극화 등 여러 측면을 문제를 발생시키며 양극화라는 단어로 함축됨
 - 정책과제 면에서도 양극화는 주로 소득의 양극단 중에서 최빈곤층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는데, 이것이 반드시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위한 정책과 일치하지는 않음

>>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극화' 개념의 도입과 적용

-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소득격차·소득불평등 현상에 대해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의 저성장·소득격차 심화 우려와 더불어 다시 논의 확대
- 이중 소득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적 배제(social and economic exclusion)에서 발생하는 문제임(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소득분포의 양극화는 저소득층이 소득순환체계로부터 배제됨을 의미.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양극화는 각각 저부가가치 전통산업, 중소기업, 침체지역에 속하는 사회구성원이 그 사회의 선순환적 경제체제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과정을 뜻함.
 - 경제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경제체제 내에서 특정 부문에 대한 구조적인 배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경제정책 영역에서 발생하는 ①수출과 내수업종간 격차, ②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③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격차, ④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격차 등 각 경제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는 격차를 경

제양극화(economical polarization)현상으로 통칭하는 경향(한국개발연구원, 2012)

- 또한 개별 경제부문간 격차가 궁극적으로는 소득격차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소득 양극화로 지칭
- 반면, 사회 양극화(social polarization)는 사회계층이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하며 주로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격차를 지칭
- 최근에는 경제 사회 각 분야별로 격차와 포용성,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 되고 있음
 - 변미리 외(2017)는 사회 내에 격차, 차별, 박탈, 배제, 빈곤의 악순환은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배제(exclusion)⁶⁾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
 - 박경호(2017)는 교육의 양극화, 즉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차이의 정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극단화되는 현상, 심화하는 불평등에 대한 우려 표명
 - 김세훈 외(2006)는 사회 양극화는 좁게는 소득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중산층이 감소하고 상위소득계층과 하위소득계층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지칭하며, 넓게는 소득 수준 격차의 확대에 따라 제반 사회 영역이 이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한 사회 내에 두 개의 양 극단적인 사회 구조 및 이에 상응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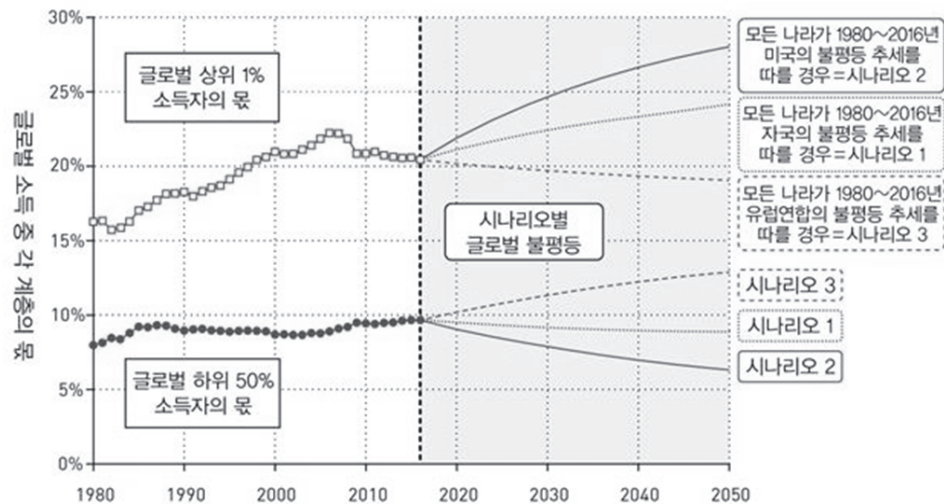
6) 사회적 배제(exclusion)란 사회에서 참여나 이익의 결핍을 다루는 규범적 개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정치적 영역에서 자원, 권리, 서비스 부재나 제한, 사회 대다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적 관계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포함 : 변미리 외. 2017.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서울연구원.

7) 김세훈 외(2006)는 양극화란 양극화 그 자체의 의미보다 그것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 효과 측면이 보다 강조되는 개념이다. 빈부격차의 확대로 나타나는 양극화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의 생계상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노동 등 제반 영역에서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문제를 불러 일으키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계층간/공동체간 갈등, 범죄율 및 자살률 증가, 지역간 갈등 확대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들을 가져 오기도 한다고 우려. 김세훈 외. 2006. 「문화양극화 대응 중기 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 양극화 전망 시나리오

- 세계불평등보고서(2018)에는 양극화 전망에 대해 글로벌 자산과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음
 - 보고서에서는 1980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각국의 불평등 추세를 고려해 2050년까지 전망하고 있음
-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글로벌 자산 분포상 중산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부의 편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유럽, 미국의 경험을 합쳐 세계의 추세를 파악할 경우 1980년부터 2016년 사이 전세계 부에서 가장 부유한 1%에 속하는 이들의 몫이 28%에서 33%로 확대될 전망
- 앞으로 30여년 동안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에서 비교적 높은 소득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각국이 1980년 이후 거처온 소득 불평등의 경로를 계속 따라 간다면 글로벌 소득 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든 나라가 미국과 같이 1980년부터 2016년까지 경험한 불평등 경로를 따른다면 2017년부터 2050년까지 글로벌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0년 2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그림 1-기] 글로벌 전체 소득중 하위 50%와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의 예측(1980~2050)



자료 : 세계불평등보고서(2018)에서 재인용

2.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논의

1) 국제기구의 양극화 현상 주요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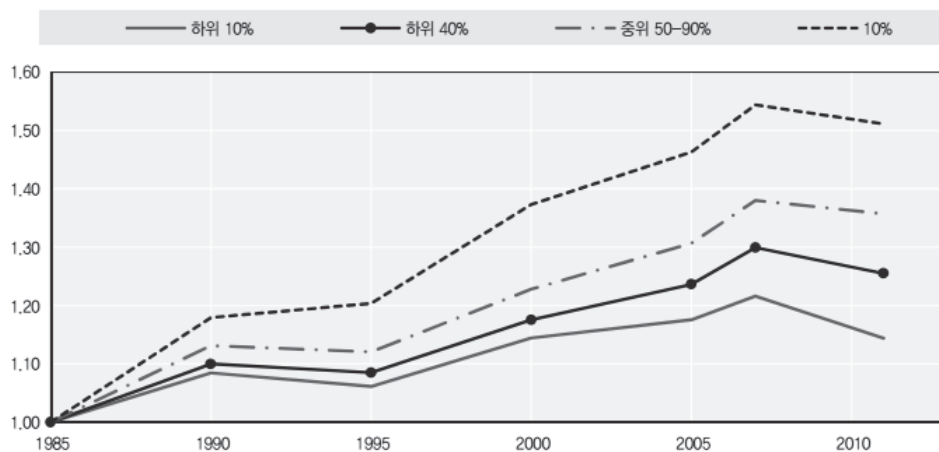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양극화 현상 및 원인

- 경제호황기에는 금융수익률의 영향으로 고소득층의 수익증가가 나타나며, 경제침체와 경제위기시에도 지속적인 소득 계층 간 불평등 현상 심화
 -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시, 하위 10% 소득계층의 실질소득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OECD에 따르면 하위 40%에 달하는 인구집단은 많은 국가에서 경제 성장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음

[그림 1-8] 하위, 중위, 상위집단의 실질 가구소득추세(OECD)

(OECD평균, 1985=1)



자료 : OECD (2015)

- 경제성장 저해와 사회격차 구조의 양극화 주요 원인으로 소득불평등, 비정규직 증가, 부의 편중으로 인한 투자 기회 제한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고용안정화, 저소득층 부채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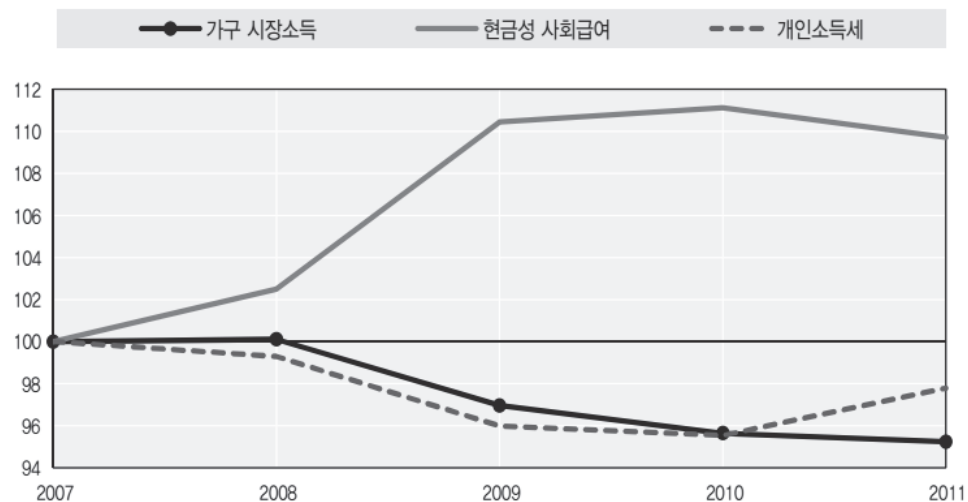
* OECD(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 양극화 대응정책

- 지속적인 소득불평등이 국가나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경우에만 불평등 정책이 유의미하며 바람직하다고 해석
 - 성장강화정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정책이 분배에 미칠 악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도입
 - 정책대상으로는 절대적 빈곤의 감소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층 및 중하위 집단이라는 좀 더 광범위한 집단에 대해 목표집단과 정책 도구 설정필요
 - 정책내용으로는 노동시장 내 남녀 차별적 요소철폐, 양질의 일자리를 중시하는 포용적 노동정책,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확대, 종합적이고 신속한 정책처방을 제안
- 조세이전을 통해 적절히 수행된 재분배정책은 평등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
 - 실질임금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급여와 세금부과의 누진효과 약화로 인해 재분배 정책 효과성이 약화되고 있음
 - 부유한 개인 및 다국적 기업들이 자기 몫에 해당하는 세금 부담을 지도록 해야하며, 저소득 집단 대상의 소득지원 정책과 경기 대응적인 사회지출이 필요
 - 세금규정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하여 한계세율인상, 납세 준수율제고, 세금공제 감축 또는 철폐, 세금의 역할 재평가 등을 제안

[그림 1-9] 조세 및 사회보장의 불평등 연관효과

(2007=100, OECD전체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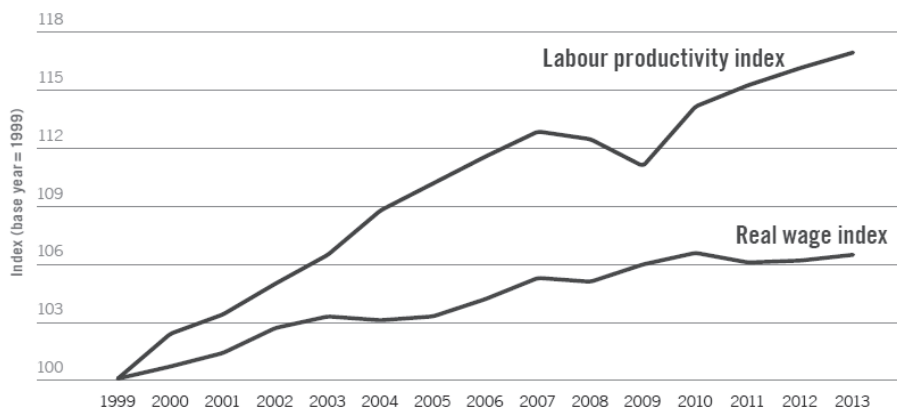
자료 : OECD (2015)

(2)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 양극화 현상 및 원인

- 노동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근로소득이 모든 불평등의 원인이라 지적하며, 경제발전단계를 막론하고 노동생산성과 임금상승률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격차는 자본과 노동간 분배의 차이에서 비롯하는데 생산된 이익이 근로자가 아닌 기업주(또는 자산가)에게 귀속됨을 의미
 -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비용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시켰으며, 기업들은 경영수익을 고용확대에 지출하지 않음으로 격차 발생
- * Lavoie & Stockhammer(2012), Wage-led growth: Concept, theories and policies, ILO

[그림 1-10]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격차발생추이



자료 : ILO (2014)

》 양극화 대응정책

- 소득분배를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을 해결책으로 제시
 - 분배형평성을 매우 강조하며, 조세나 이전지출을 통한 부의 재분배의 편향성은 제한된 효과밖에 가져오지 못하기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배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
 -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을 위해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 및 협상력 강화, 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 메커니즘 구현, 누진세 인상,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제 실행,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제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 제안

(3)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 양극화 원인

- 소득격차의 원인으로 기술의 진보를 주장(Norris et al. 2015)
 - 기술격차로 인한 생산성이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
 - 기술프리미엄(skill premium)은 노동집약적 시장을 구축하고 노동집약적 사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흥 개도국의 평균소득을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
-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성장의 원동력이며, 중산층 증대를 통한 격차해소
 - 상위20%의 소득비중이 증가하면 국가 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중기GDP상승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중산층 확대(빈곤층 감소)의 중요성을 제기
 - 중산층은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성향이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소비진작과 경제성장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대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중요

≫ 양극화 대응정책

- 정책방향으로는 국가 경제발달 수준에 따른 해법을 제시
 - 선진국은 세제의 누진율을 높이면서 인적 자본과 직업능력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개혁정책
 - 신흥개도국: 포용적 금융정책의 구현과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 개선정책이 필요하며, 소득격차 양상의 심각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양화 하는 것이 요구됨(Norris et al., 2015)
- 정책내용으로는 교육정책의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 금융안정성과 포용성의 균형점 모색, 효과적 노동시장 정책의 운영, 성장과 소득불평등의 상호보완성 강화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
 - 기술격차 해결을 위한 교육수준 강화, 취약계층 경제위기 영향력 최소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거시적 경기부양 정책 동시시행,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제도적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최저임금보장, 적극적 노동시장 지원, 근로취약계층의 고용보호, 고용안정성 강화 등을 제안
 - 노동, 사회복지, 금융포용, 세제,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과 기술 확산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품시장 규제를 완화하며 생산된 제품을 가치사슬의 상부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상호보완성 정책 강화를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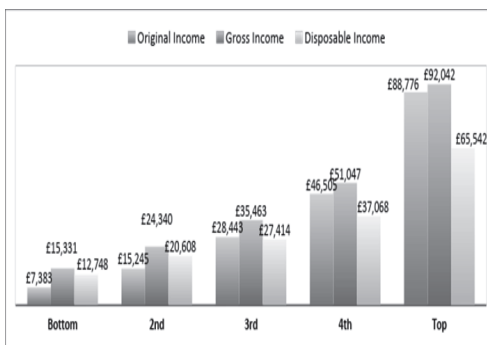
2) 주요 선진국의 양극화 정책사례

(1) 영국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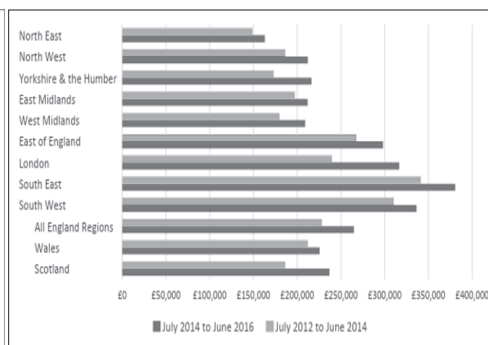
》 양극화 현황

-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8% 이상의 실업률을 겪은 후 지수상으로는 호전되었으나 노동시장에서는 양극화 양상을 보임
 - 2016년 기준 소득하위1분위가 전체 소득 중 8%를 차지한 반면 5분위는 40%를 점유
 - 각 지역간 성장률은 1인당 가구별 가처분소득과 평균 고용률 성장 측면에서 격차가 나타남
- * 영국은 여타 선진국가와 마찬가지로 고령화문제, 싱글족의 확산, 이민자의 증가 등 사회적 문제 존재

[영국 계층간 소득격차(2016)]



[영국 지역간 소득격차(2014)]



자료: KDI, 2019글로벌경제포럼

》 포용성장 정책방향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에 기반하며, 산업화를 거치면서 정체된 지방의 생활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지방으로의 재정권한 이양 등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정책방향) 사회적·물질적 인프라 구축, 포용적 산업정책, 기업주도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규제지원 등을 강조
 - (실행방안) 지역기반 산업전략, 중앙·지방의 관계 재정립, 포용적 공공투자, 포용적 성장의 개념 재정립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실행조직) 민간단체인 포용성장위원회(2016)를 통해 영국 각 도시와 협약을 맺고 각각의 여건과 필요를 반영한 지역경제전략 및 포용성장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

>> 지역별 포용성장 프로그램

- 포용적 성장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포용성장 프로그램을 시행함
 - (브래드포드, Bradford): GBW(Get Bradford Working)이라는 고용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시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 집중 지원(14~19세를 위한 변혁적 교과과정 시행 포함)
 - (뉴캐슬, Newcastle): Working city, Newcastle Futures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회 주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직업능력 개발 유도. 고용가능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의 고용관련 문제점 완화·해소를 위해 실업, 주택, 디지털 및 금융, 아동빈곤, 건강 등의 분야를 우선순위로 설정
 - (맨체스터, Manchester): Working Well Pilot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실업자(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에게 최대 1년간 근속 지원 및 최대 2년간 맞춤형 지원(근로 기술, 건강, 주거 등을 포함) 제공
 - (웨일즈, Wales): 사회적 경제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 적극 활용. 노동 시장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지리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이 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포용적으로 촉진

(2) 독일 사례

>> 경제 및 양극화 현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성장세를 회복하였으나, 최근 생산능력 한계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OECD, 2018)
 - 최근 실업률은 역대 최저(3.7%)이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이 독일 경제의 생산능력 한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인구(8,150만명), 1인당 GDP(5.07만 달러), 최근 5년 평균 실질경제성장률(1.7%), 고용률(75.3%), 지니계수(0.289) 등
 - 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높은 대외경쟁력 확보. 유로화 절하, 신흥국과 유럽 연합의 수요에 맞춰 수출 강세

-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높은 수준의 삶의 질과 임금을 제공하며 소득불평등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심각한 편은 아님(WEF, 2018)
- 그러나 높은수준의 지역 격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누진세율 개선 등이 과제로 남아있음

>> 포용성장 정책방향

- 독일은 경제적 장점을 지속하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발전을 전제하고 있음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연방정부정책: ①투자에 대한 우선/ ②혁신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③디지털 전략 2025/ ④독일과 유럽을 위한 산업정책/ ⑤교육기회 확대/ ⑥높은 고용 수준과 더 나은 임금/ ⑦유연하고 공정한 근무시간/ ⑧강력한 여성, 강력한 경제/ ⑨보호주의 반대, 세계화를 위한 공정한 무역/ ⑩고용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조세체계

(3) 이탈리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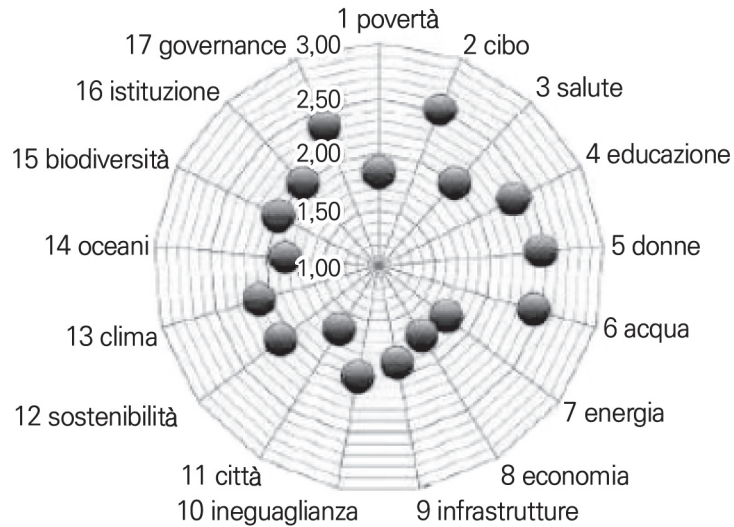
>> 경제현황

-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기반과 정치경제 상황이 변화하였으며, 정부의 비효율성과 부정부패한 사회구조가 만연되어있다고 평가
-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와 서비스산업이 70%이상을 차지하는 취약한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간 격차가 매우 심각(북부, 중부, 남부의 지역별 격차)
- 인구(6,046만명), 1인당 GDP(4.18만 달러), 최근 5년 평균 실질경제성장률(0.38%)

>> 포용성장 정책방향

- UN의 2040어젠다(2015)를 이탈리아에서 실행하기 위한 후속기구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차원의 ASVIS(지속성장을 위한 이탈리아 정책, 2016)를 발족하여 200여 기구와 시민사회 조직 등이 참여
- 경제, 사회, 환경, 교육 4개 영역, 통합, 보편성, 참여 3가지 시행원칙을 담고 있음

[그림 1-11]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분야의 지속성 조건의 차이성 분석지표



>> 사회협약모델

- 노동과 산업정책 자문 및 지방정부 산하기구로서 경제사회협의회(1990년 대초)를 통해 산별협약과 기업별협약 체결
 - 노동과 산업정책 자문 및 지방정부 산하기구화를 통해 산별협약과 지역협약을 운용하며 이는 기업의 재조직, 노동조건, 고용기준, 채용조건의 변화 등 항시 협상하게 되어 있음(이탈리아 노조가입률은 23% 정도로 세계 1,2위)
- 지역협약이란 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역에서 행하고, 지방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협약을 맺고 정책시행
 - 지역협약은 산별협약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제도로 사회적 기업과 지역별 협동조합이 중심이 됨
 - 주요 거점 지역과 해당 지역에 지부나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지역 노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과 제3섹터 등을 연결하여 원활하고 조직화된 지역협약을 수행함

(4) 일본 사례

≫ 경제 및 양극화 현황

- 일본은 최근 실질 성장률 증가 등 상대적으로 경기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고용증가와 임금 상승에 기인한 것이나, 일본의 생산성 증가속도는 둔화하고 있음
 - 인구(126백만명), 1인당 GDP(4.33만 달러), 최근 5년 평균 실질경제성장률(1.2%), 고용률(75.3%), 실업률(2.8%), 소득불평등도(0.339)
- 소득 불평등도와 상대적 빈곤율(약 16%)은 OECD 평균(약 11.5%) 이상으로 세대 단위의 소득 차이는 확대
 - 소득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들 수 있음(비정규직 비중이 1994년 20.3%에서 2016년에는 37.5%까지 증가)
 - 근로 연령층으로부터 고령층으로의 소득이전은 상당한 수준으로 세대간 불평등 초래
 - 일본의 대표적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호제도는 인구의 1.6%만 지원하며, 이는 상대 빈곤 인구 중 소수에 해당되어, 소비세 인상 및 복수세율 적용, 개인소득세수 증가 등 조세·지출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양극화 정책대응

- 일본의 양극화(격차)문제는 장기간 논의되어 왔으며 시기별 격차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제안

〈표 1-1〉 일본 시기별 격차문제 관련 논의와 정책대응

시기 시대구분	격차문제	정책대응
1960~70년대 고도성장	대도시권과 지방권의 경제, 소득 격차	지역균형발전, 지역산업진흥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와 비자산가 간 격차	지가 억제 대책
2000년대 중반 고이즈미·아베	구조개혁에 따른 소득 및 고용문제(비정규직)	재도전 정책
2010년대 후반 제2차 아베	아베노믹스에서의 소득 및 고용, 지역 격차	임금인상에 따른 경기활성화, 지방 창생(創生)

자료: KDI글로벌경제포럼 발표자료, 2019

- 포용성장 대응을 위하여 취약계층부터 성장동력 육성정책까지 전범위를 포괄하는 분야별 정책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1-2〉 일본 포용성장 관련 정책과제

구분	주요내용
빈곤대책	실업 시 소득보장·사회보장, 최저임금 인상, 소득자의 급부, 후생연금 적용 확대
고착화 방지	소득세·상속세 활용, 교육·훈련 확충, 취업 촉진, 보육환경 개선
기회균등	여성 활약 추진, 비정규직 대우 개선, 정규직 전환의 유연화
낙수경제	경기 활성화(임금 인상, 고용확대 등)를 위한 환경 정비, 지방 창생, 중소기업 대책
파이확대	성장전략에 따른 성장력 향상, 소득수준의 종합적인 향상, 금융·재정정책 전개

자료: KDI글로벌경제포럼 발표자료,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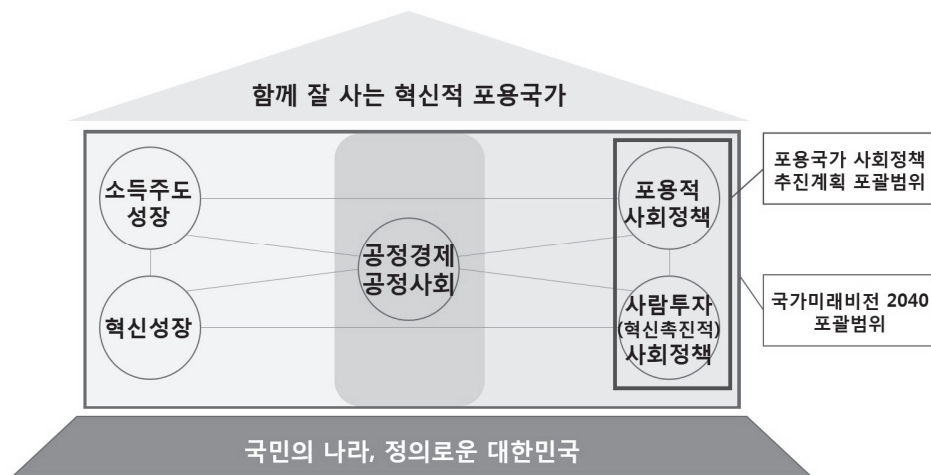
3. 우리나라의 포용국가 정책과 소득재분배 정책

1) 현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⁸⁾

》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제시
 - 사회부총리, '사회정책전략회의' 신설 건의('18.1월)
 -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수립('18.4월~9월)
 - '포용국가전략회의' 개최('18.9.6)
 - 사회분야 범부처 TF 회의('18.10.23)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수립('18.11월~'19.2월), 2019.2. 발표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임기 내 추진할 사회분야 정책 로드맵(교육부 총괄)이며, 「국가미래비전 2040」은 정치·경제·사회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책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수립 중('19.9월)

[그림 1-12] 문재인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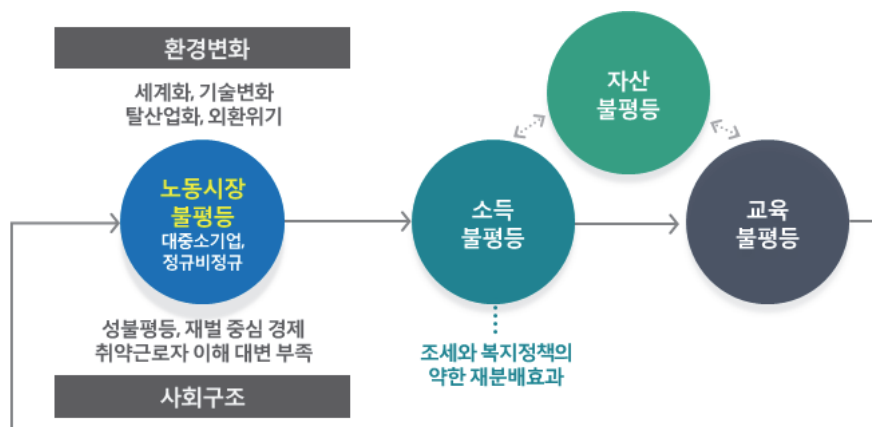
8) 관계부처 합동,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2019.2.19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국가발전 동력 확보
 -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고용·사회안전망 확대 등 포용적 사회정책은 가구소득 증대로 이어져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
 - 창의적 인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는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을 배양하여 혁신성장의 사회적 기반으로 기능
 - 또한, 정의와 공정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사회적인 신뢰가 축적될 때 개인의 창의성과 집단 차원의 혁신역량이 발휘

>>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수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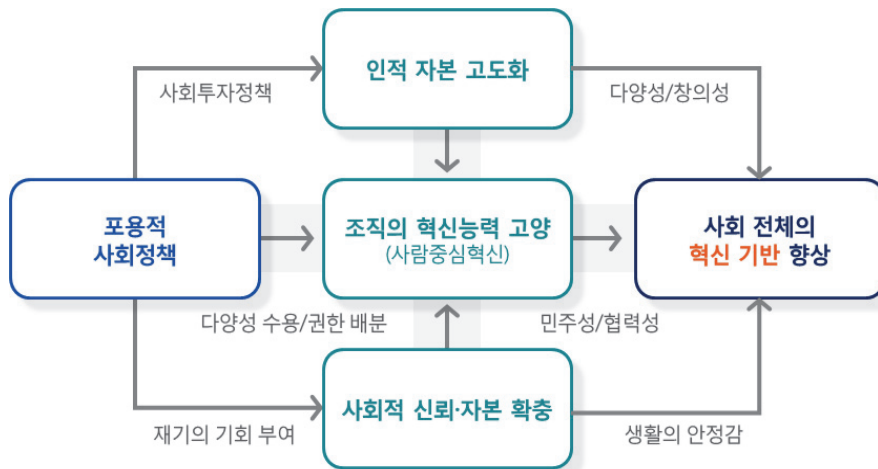
- 한국은 경제·정치 부문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냈으나, 개발시대에 뿌리 내린 ‘최소주의 사회정책’ 기조는 사회부문의 낙후 초래
- 국민 소득 3만불 시대 진입에도 취약계층 다수,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도 낮은 수준
 - 삶의 질 지수('17, OECD) : 주거(개인당 방 수 25위), 환경(대기오염 38위, 수질 26위), 건강(자기진단상태 38위), 일과 삶(장시간 근로 35위, 여가 26위) 삶의 만족도 (행복도 30위)
-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소득·교육·자산의 격차는 상호작용을 통해 불평등을 재생산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협
 - 시장소득 지니계수 : ('98) 0.311 → ('16) 0.406

[그림 1-13] 한국 사회의 불평등 재생산 구조



- 인적자본의 확충과 사람 중심의 혁신을 통한 혁신 촉진적 사회정책의 필요성 확대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나, 입시 중심 現 교육체계로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이 어려운 상황
 - * OECD 28개국 중 인지활성화 교육수준(창의성) 28위, 문제해결 개방성(다양성) 27위('12, PISA)
 - 아울러,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공정을 자동화하는 Technology 중심의 혁신은 노동 시장에서 노동과 숙련을 배제하는 결과 초래
 - 사회 전반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적자본의 창의성, 다양성 증진과, 일터에서 사람의 역량이 제대로 활용되는 사람 중심의 혁신 필요

[그림 1-14] 혁신 촉진적 사회정책이 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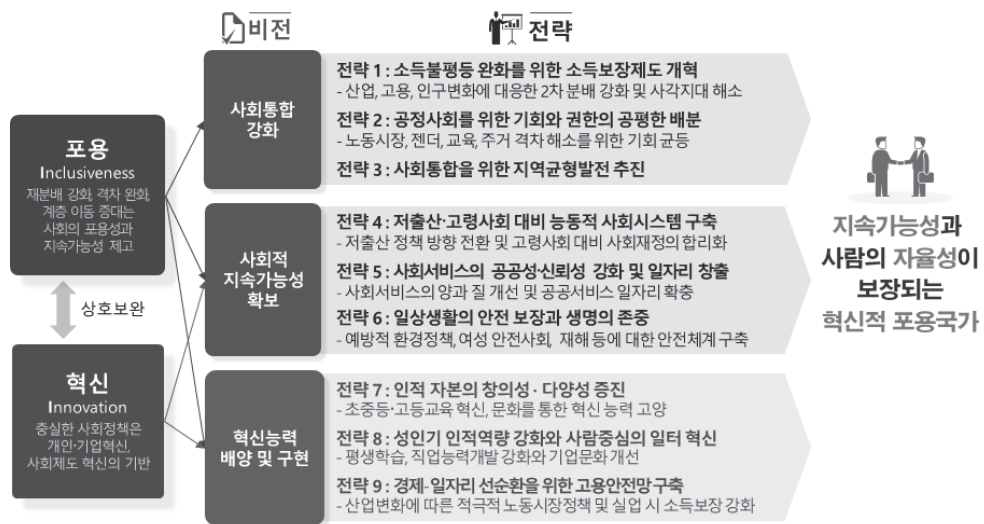


》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통해 사회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사람중심 사회’로 대전환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면서 질적 성장과 공존·상생의 사회를 도모
 -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의 기본방향은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 구체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재구조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국정 운영 지도, 국민의 달라지는 삶을 체감도 있게 제시
-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통해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안

- 첫째,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 둘째,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셋째, 전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함께 사회정책의 분야별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또한, 현재의 추세로는 사회정책 전반의 혁신이 없다면 불평등·격차가 심하고 혁신능력도 낮은 비효율적인 사회체제가 될 우려가 높음을 지적하고, 한국 사회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강조
-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

[그림 1-15]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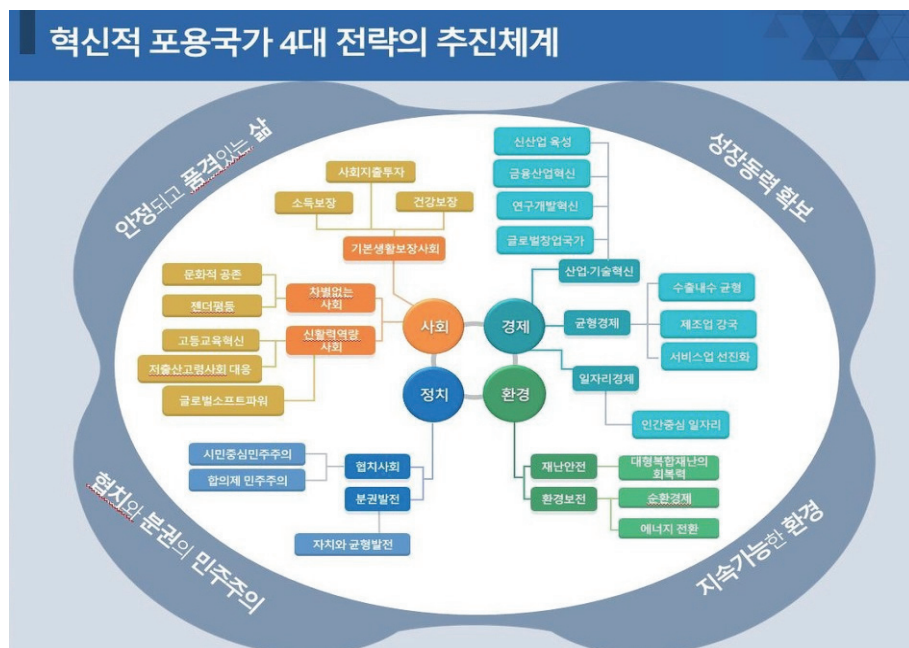


2) 국가 미래비전 2045⁹⁾

≫ 국가미래비전과 포용국가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근 (2019.12)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제시
- 미래비전은 포용과 혁신, 공정과 평화의 4대 가치에 기반을 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우리가 지향할 국가 유형으로 제시
 - “미래의 격변과 도전을 볼 때 개발국가나 신자유주의 시장국가의 패러다임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며,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가 한국 사회 전반을 새롭게 하고 정치, 경제, 사회까지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큰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 미래비전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성장동력 확보,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환경 등 4대 전략과 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22대 실천과제를 제시

[그림 1-16] 혁신적 포용국가 4대 전략 추진체계



자료 : 혁신적 포용국가 4대 전략의 추진 체계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9) ‘포용과 혁신이 선순환해 따뜻하고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청사진’. (한겨레 2019.12.23.), 당초 비전2040을 계획하였으나 비전 수립과정에서 비전2045로 변경수립

- 4대 전략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별도의 다섯번째 전략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대외부문의 전략 제시
- 사회부분의 경우, 기본적 소득 및 사회지출 투자, 건강 보장, 차별 없는 사회(문화공존과 젠더평등), 신 활력 사회(고등교육혁신과 글로벌 소프트 파워,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제시

>> 재원 관련 증세 로드맵 제시

- 증세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로드맵을 세 단계로 설계
- 먼저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확대하는 등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둘째는 국민이 복지를 누리면서 신뢰가 높아지는 걸 전제로 사회보험 기여금을 늘리며, 마지막으로 소비세 등 간접세를 통해 폭넓은 재원 마련

3)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정책 검토¹⁰⁾

(1) 소득재분배정책의 개념과 세수 변화 추이¹¹⁾

≫ 조세정책과 재분배정책

- 조세제도는 사회보장지출 등 재정지출과 함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과 함께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 재정지출의 재분배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분배정책은 조세정책과 재정정책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음
- 소득재분배정책이란 경제주체 혹은 개인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양한 경제·사회정책을 의미함
 - 정부는 조세제도와 정부지출, 사회보험 등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경제주체의 소득 분배를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

≫ 재정의 소득재분배정책 수단

- 재정의 소득재분배 수단은 크게 사회보장제도와 누진적 조세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사회보장제도는 다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나눌수 있음
 - 사회보험은 국민 전체 또는 대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험제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포함되는데,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험료 또는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 반면 공적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기여금의 납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정부가 일반 국민세금으로 공적부조급여를 제공하며, 그 수급자는 사전에 정부에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10) 국가차원이 아닌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소득재분배정책의 한계성을 내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국가간 비교를 통해 중장기적인 방향을 모색코자 국가차원의 소득재분배정책을 검토.

11) 국회예산정책처(2018)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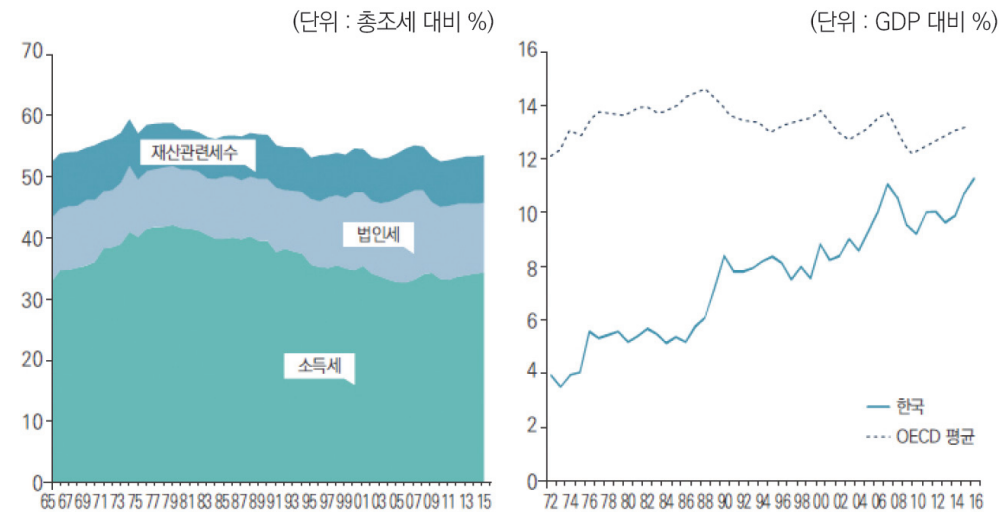
-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누진적 조세제도 역시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조세는 누진적(progressive), 비례적(proportional), 역진적(regressive) 조세로 구분됨
 - 누진세란 과세기반이 증가할 때 세율이 상승하는 조세를 말하며, 여기서 과세기반이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소비 등을 의미하며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상속증여세·재산세 등이 여기에 포함됨
 - 비례세란 세율이 일정한 조세를 말하며, 예로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교통세 등이 여기에 포함됨
- 한편 사회보장제도 및 조세제도 이외에 교육 및 농어민·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정책 역시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정부가 국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능력을 배양해 주거나, 농어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세수 비중 및 규모

-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과세기반으로 하여 누진적인 과세체제를 갖는 조세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소득재분배적 세목에는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상속증여세·재산세 등이 포함
- 총 조세에서 소득재분배적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년대 35% 내외 수준에서 1990년대 이후 소득세 및 재산관련 세수의 비중 상승으로 47% 대로 급등하였으며, 이후 차츰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경제성장 등으로 소득과세 세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개별소비세·관세율 인하 등으로 소비세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한 데 기인함. 또한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 등으로 2000년을 기점으로 법인세수가 크게 증가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적 세수의 빠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규모는 OECD 평균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적 세수의 GDP대비 비율은 2016년 11.3%로 OECD 평균(13.2%, 2015년)에 비해 아직 낮은 편임
 - OECD에서는 총 조세에서 소득재분배적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를 기점으로 둔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선진 각국을 중심으로

높은 세율이 경제유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의 세율을 낮추는 대신 소비세율을 인상하였던 흐름과 관련이 있음

[그림 1-17] OECD국가의 소득재분배적 세수 비중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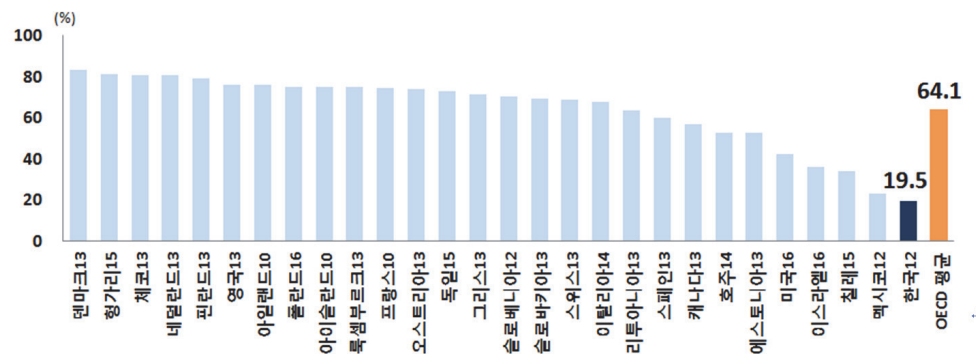


(2) 소득재분배정책 효과에 대한 국제 비교

- 경제주체의 소득불균형과 격차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통합력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저해하기 때문에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역할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음
 - 앞서 OECD, ILO, IMF 등의 국제기구들은 양극화와 불균형에 대한 접근에 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OECD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관련된 지출을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로 규정하고 항목별로 구분하여 각국의 사회지출 규모를 발표하고 있으며,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작은 편임(국회예산정책처, 2018)
- 기본적인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검토할 수 있음
 -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조세, 공적연금보험납부액)을 제외하고 공적이전(정부지원금, 연금보험수령액)을 합한 소득을 말함

- 현대경제연구원(2018)에 의하면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후 OECD 회원국의 저소득층은 평균 35.9%만 남아있고 64.1%¹²⁾가 저소득층을 벗어남
 - 빈곤탈출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빈곤탈출률이 83.1%에 달하고 있으며, 헝가리(81.4%), 체코(80.6%), 네덜란드(80.6%)도 높은 수준
- 반면, 우리나라의 빈곤 탈출률은 19.5%로 나타났으며, 조세재정정책시행 후에도 80.5%가 저소득층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2018)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효과가 미미하여 빈곤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저소득층 탈출비율은 OECD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아 룩셈부르크소득연구(LIS) 데이터가 있는 28개국중 최하위를 나타냄

[그림 1-18] 국가별 소득재분배 효과 (빈곤탈출률)



- 주 1) 국가 옆의 숫자는 분석연도를 의미.
 2) 빈곤탈출률이란 시장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을 의미
 3) 데이터의 한계로 한국의 경우 2012년을 분석,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로 분석해본 결과 2016년 한국의 빈곤 탈출률은 24.7%로 여전히 낮은 수준. 단 가계동향조사는 농어가를 제외한 데이터이며 룩셈부르크소득연구(LIS)데이터는 농어가가 포함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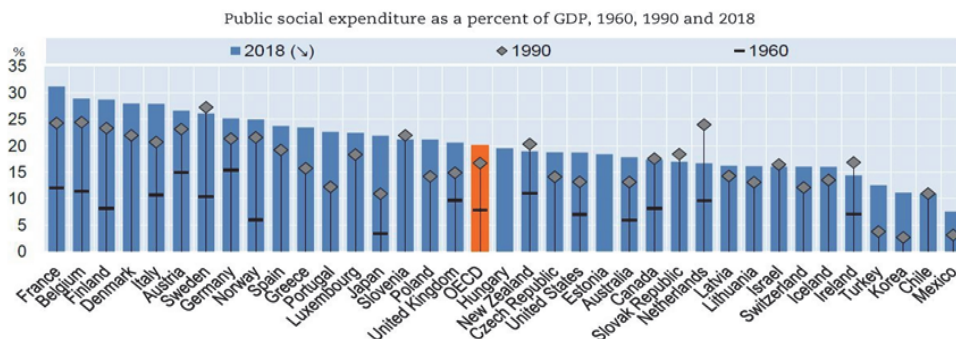
12) 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이었지만, 가처분소득기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된 비율.

(3) 사회복지지출규모와 국민부담률 비교

≫ 경제규모 대비 낮은 사회복지지출 규모

- 이러한 소득재분배 정책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해 낮은 공적 사회지출규모에 기인하고 있음
 - OECD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공적 사회지출규모는 20.1%를 넘어선 반면, 우리나라는 11.1% 수준
- 다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 악화가 우리경제에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각 계층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조세정책에서 나타남(국회에산정책처, 2018)
 - 우리나라의 그동안 소득재분배정책은 OECD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나 금융위기 이후 변화가 나타남

[그림 1-19]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규모(1960, 1990,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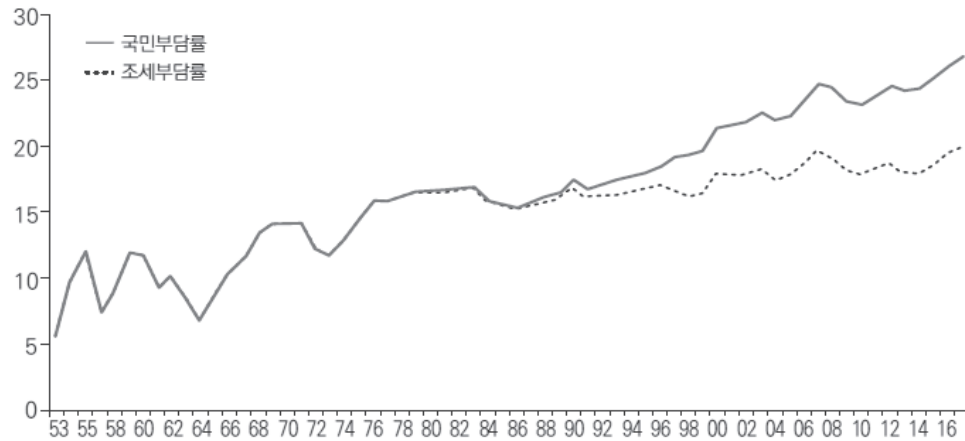
자료: OECD(2019)

≫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추이

- 국민의 조세부담률과 조세수입에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을 합하여 구하는 국민부담률은 1980년대 말 국민연금의 도입 및 의료보험의 전 국민 적용 이후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50년대 전체와 1960년대 전반기 중 조세부담률은 5~10%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15%,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함
 - 1980년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도입된 후 조세부담률은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부담률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20]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GDP대비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8)에서 재인용

- 2016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19.4%, 국민부담률은 26.2%로서,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은 6.9%에 해당하고 있음
 - 국민부담률의 빠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아직 낮은 편이며 특히, 개인소득세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과세는 약 2/3 수준임
 - *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을 합산

〈표 1-3〉 국민부담률의 구성

(단위 : GDP대비 %, %)

	한국					OECD
	1972	1980	1990	2000	2016	2015
개인소득세	1.5(11.9)	1.9(11.5)	3.8(20.0)	3.1(14.6)	4.6(17.6)	8.4(24.8)
법인소득세	1.3(10.5)	1.9(11.0)	2.4(12.8)	3.0(14.1)	3.6(13.6)	2.8(8.3)
사회보장기여금	0.1(0.8)	0.2(1.1)	1.9(10.1)	3.6(16.7)	6.9(26.2)	9.0(26.5)
소비과세	7.1(57.5)	10.6(62.7)	8.3(44.3)	8.2(38.4)	7.4(28.1)	10.2(29.9)
재산과세	1.1(9.2)	1.4(8.0)	2.2(11.8)	2.7(12.4)	3.0(11.6)	1.9(19.8)
기타	1.2(10.0)	1.0(5.7)	0.2(1.1)	0.8(3.8)	0.8(2.9)	1.7(3.3)
국민부담률	12.4(100.0)	16.9(100.0)	18.8(100.0)	21.5(100.0)	26.2(100.0)	34.0(100.0)

주 : 1.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재산과세는 특정 세목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집계한 결과

2. ()는 전체 국민부담률 대비 비중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8)에서 재인용

4. 시사점

1) 양극화 인식과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 강화

≫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양극화에 대한 접근에 있어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부담과 복지 수혜, 미래 기회의 접근성 등에 대한 국민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
 -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부담과 복지 수혜 등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의 이슈가 상존
-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간, 그리고 각 분야의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양극화 분야, 취약 및 성장지체 부문에 대한 적극적 정책 개입

- 양극화 대응과 완화에 있어 취약 및 성장지체 부문의 회복력(resilience) 마련을 통해 경쟁력과 생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임
 - 고용측면에 있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취업지도, 고용기회 알선 등을 통해 빈곤계층으로의 추락 방지와 상향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고용시장정책이 필요함
 - 또한, 교육 및 인적자원의 투자는 기회의 공정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장기적 성장동력으로서 유력한 사회적 재분배 정책 수단이 됨
- 사회보장제도측면에서의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개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인들이 함께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동반 추락하는 빈곤의 연쇄화를 막는 주요한 수단이 됨(현대경제연구원, 2018)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안전망 등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크게 미흡한 상황

≫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기능 강화

-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소득재분배 정책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취약 및 저소득 층 지원을 강화가 필요가 있음

- OECD국들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복지 향상과 함께 사회 시스템적 안정을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조세정책에 있어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만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에 한계가 있어, 조세구조의 정상화를 통해 과세기반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
 -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평균세율이 낮아, 전반적인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국회예산정책처, 2018)
- 또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상 상당수의 납세자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부의 지속가능한 복지와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정책수혜자와 부담자간의 간극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2) 지역차원의 역할과 기능 확대

≫ 소득격차해소 정책을 위한 지역의 역할 강조

- 선진사례 종합결과 도시 및 지방으로의 재정권한 이양 등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별도시와 지역의 협력 및 연합의 필요성 강조
 - 지역중심의 경제·사회적 정책이 통합되어야 하며, 공공부문 지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 필요 강조

≫ 지역자원과 지역주체의 직접관여

- 지역내 대학, 기업, 지역기관 등이 직접 관여하고 주민이 협력하는 지역자원활용의 지역기반투자 활성화 필요
 - 지역자원 활용으로서 공공지출의 지역협력이 용이하도록 중앙과 지방 간 새로운 사회협력시스템 필요
 - 지역기반 성장투자펀드 등 자금조성을 통한 지역정책 우선투자 자원마련방안 필요

3) 정책대상 특성에 따른 차별화 정책방안

≫ 취약계층 보호 및 성장강화 정책의 동시시행 필요

- 취약계층 성장지원과 혁신성장기반 기업지원 정책의 동시시행을 통해 전반적 소득향상을 통한 격차해소 필요
 - 취약계층 소득보전 지원과 성장강화 정책을 동시에 도입하여 유의미한 정책효과담보 필요

≫ 중산층 집중 육성전략 필요

-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목표는 절대적 빈곤의 감소뿐 아니라 중하위집단 확대라는 포괄적 범위의 목표집단 설정 필요
 - 지역전체의 경제성장 증가를 위한 중산층 확대의 중요성 제기

≫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화 정책집중

- 소득불평등의 주요요인으로 근로소득이 지적되고 있으며, 임금격차 완화를 주요 정책내용으로 삼고 있음
 - 적정수준의 임금보장, 비정규직 감소, 근로취약계층의 보호, 기술격차 해결을 위한 교육수준 강화, 차별제한 등

≫ 소득취약계층의 교육 및 의료지원 정책집중

-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부양인구 증대에 따른 분배형평성 문제의 근본적 개선구조 접근 필요
 -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간 소득이전으로 인한 분배형평성 고려 및 세대간 격차해소 방안마련 고려필요
 - 조세나 이전지출을 통한 부의 재분배 편향성은 제한된 효과밖에 가져오지 못하며, 생산과정에서의 분배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구조개선 필요
- 소득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층의 교육지원 및 노인세대의 의료지원 정책집중 필요
 - 아동청소년 대상의 교육확대지원 및 노인 및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서비스지원 확대 필요

제2장

충남 경제 양극화 실태와 변화 동향

제1절 충남의 경제환경 변화와 경제양극화 실태 분석

제2절 충남의 인구·고용분석을 통한 향후 전망

제1절

충남의 경제환경 변화와 경제양극화 실태 분석

1. 충남경제의 성장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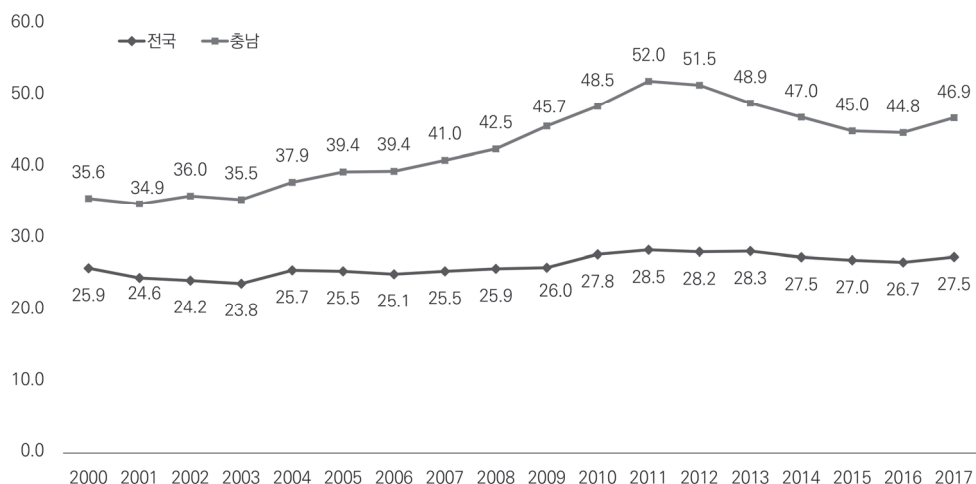
1) 국가기간산업의 집적으로 인한 성장

≫ 제조업 중심의 국가기간산업 집적과 확대

- 충남의 지역경제는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의 집적으로 제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충남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성장을 주도
 - 충남지역은 1980년대 후반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고 1994년 현대자동차, 삼성 전자 등이 충남 북부권에 입지함으로써 연관 기업 및 관련 시설이 집적화
 - * 지역경제 제조업 비중 23.4%(1990년) → 40.3%(2000년) → 48.7%(2017년)

[그림 2-1] 충남 및 전국의 제조업 비중 (200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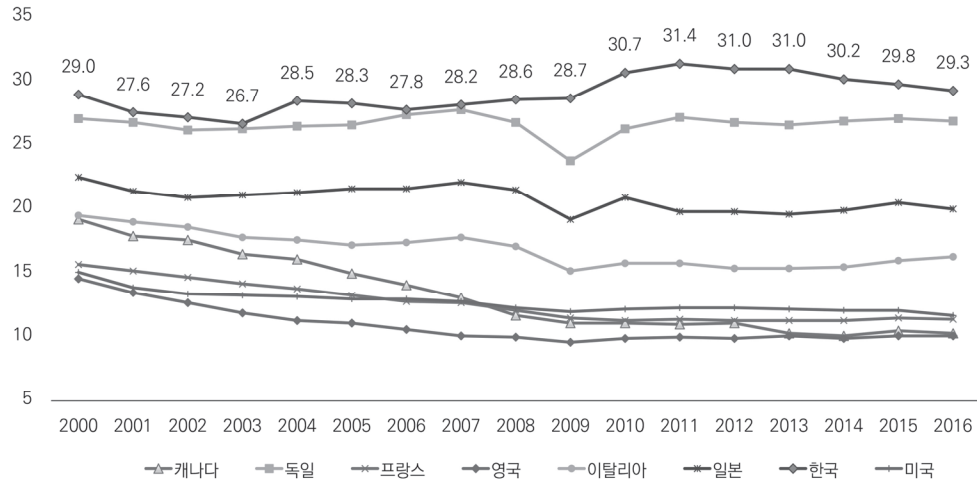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각년도

[그림 2-2]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비중(2000~2016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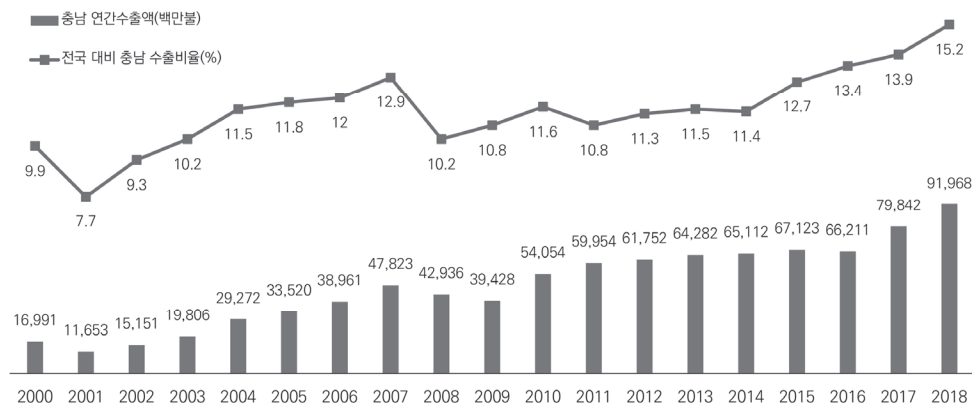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계 분석시스템(ISTANS)

2) 수출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 형성

>>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전환

- 전국 대비 충남 수출 비율은 2000년 9.9%에서 2018년은 15.2%로 점차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충남 수출액 측면에 있어서도 2000년 170억 달러에서 2018년 920억 달러로 규모 면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그림 2-3] 충남의 수출변화 추이(2000~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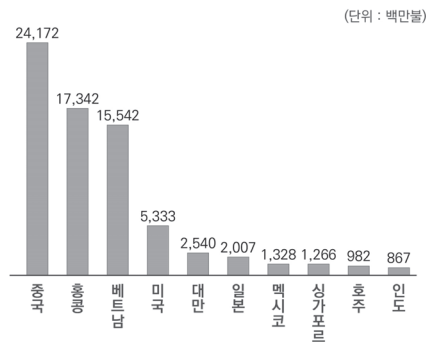


자료: K-stat 수출입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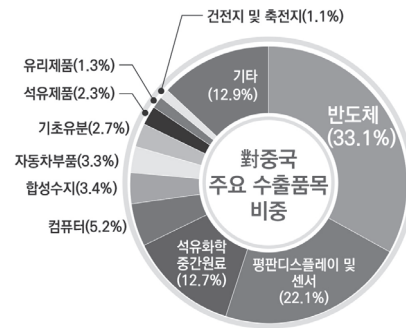
》 중국 등 수출국 집중으로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에 취약한 구조

- 충남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3%로 가장 높음 (홍콩 포함 52.0%)
 - 對중국 수출품목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전체의 55.2%를 점유하여 수출편중이 심함
- 중국과의 경쟁관계 심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여건에 취약한 구조
 - 중국 중심의 대외거래 구조는 충남 산업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그림 2-4] 충남 상위 10대 수출국가



[그림 2-5]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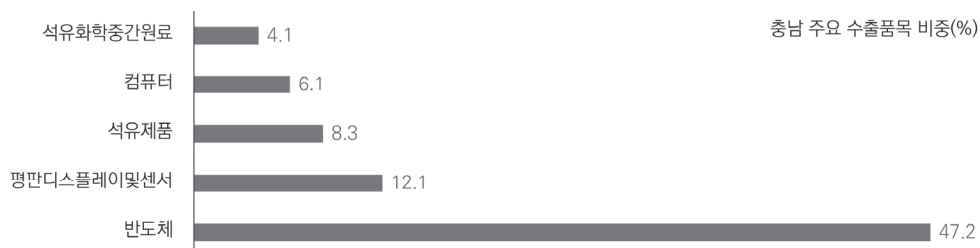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자체 통계, 2017년 기준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가 수출의 60.0%, 중간재 위주 수출입

- 충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석유제품, 컴퓨터, 석유화학중간원료 순(전체 수출의 77.8%)

[그림 2-6] 충남의 주요 수출품목 비중(2018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MTI 3단위 기준(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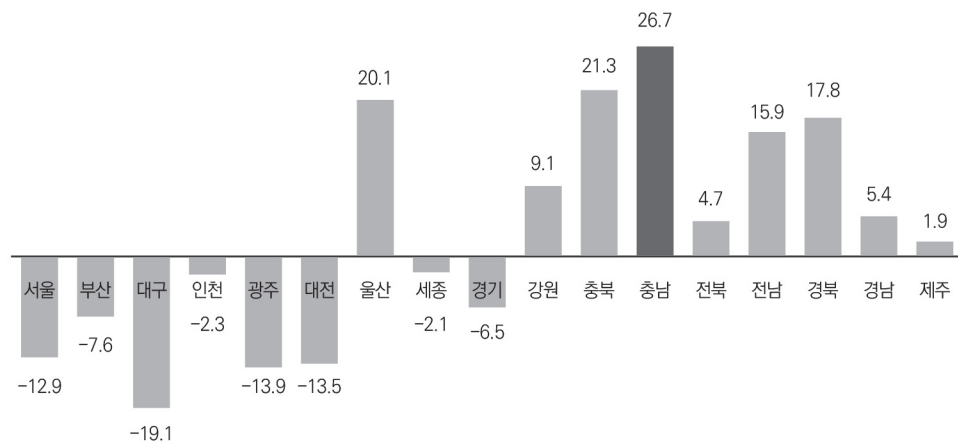
3)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한계

>> 지역경제의 높은 역외유출¹³⁾ 규모

- 지역경제의 역외유출 규모가 높다는 것은 지역내 생산된 기업의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임금)가 지역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고른 성장에 한계성을 가지게 됨
 - 지역내 경제가 생산-분배-지출이 체계적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단순한 생산중심의 기능만 담당
- 2017년 기준 충남의 역외유출비중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가장 높음
 - 역외유출 비중 순위 충남 1위(26.7%), 충북(21.3%), 울산(20.1%) 등이며, 역외유입이 높은 지역은 대구(19.1%), 광주(13.9%), 대전(13.5%) 등
 - * 역외유출 비중 : 29.8%('14) → 26.4%('15) → 25.3%('16) → 26.7%('17)

[그림 2-7] 시도별 역외유출 비중(2017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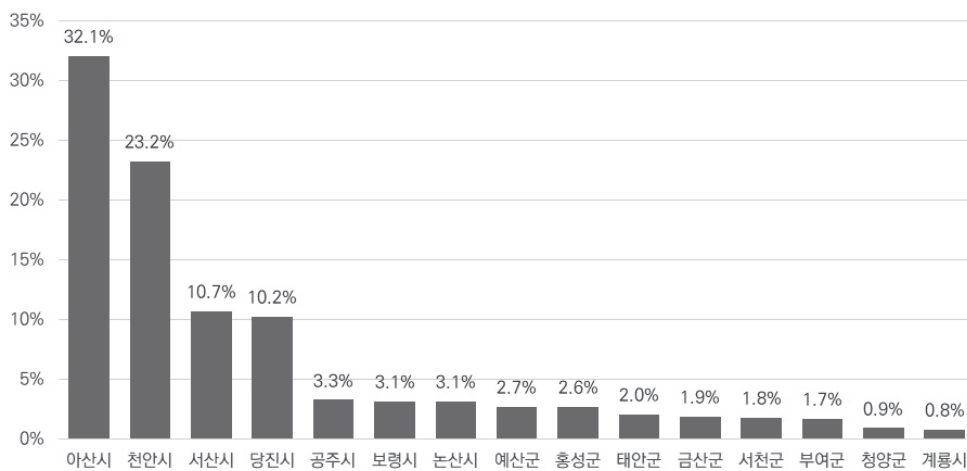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 2019(2017년 기준)

13) 역외유출이란 지역에서 창출된 요소소득(영업잉여 및 피용자 보수)이 분배와 지출의 과정에서 해외 및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유출형태는 첫째, 분공장 형태로 인한 영업잉여의 본사귀속, 둘째, 직주분리 등으로 인한 피용자 보수의 역외소비, 셋째,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및 서비스의 역외 구입이 이에 해당됨

》 북부권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내륙지역 간 경제력 격차

- 충남 북부권 내 4개 시군이 충남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 74.2%를 점유하고 있으며, 천안, 아산 두 지역이 충남 전체 50.7%이상을 점유
 - 시군별 지역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내 일자리와 지역의 사업 추진의 한계성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2-8] 충남 15개 시군의 GRDP 비중(2016년 기준)



자료 :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 2018

- 북부권과 이외 권역(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간의 경제력 격차심화로 인해 발생된 지역간 불균형 문제해소는 충남 지역경제의 최대 당면과제
 - 충청남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하고 8개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편중과 함께 인구도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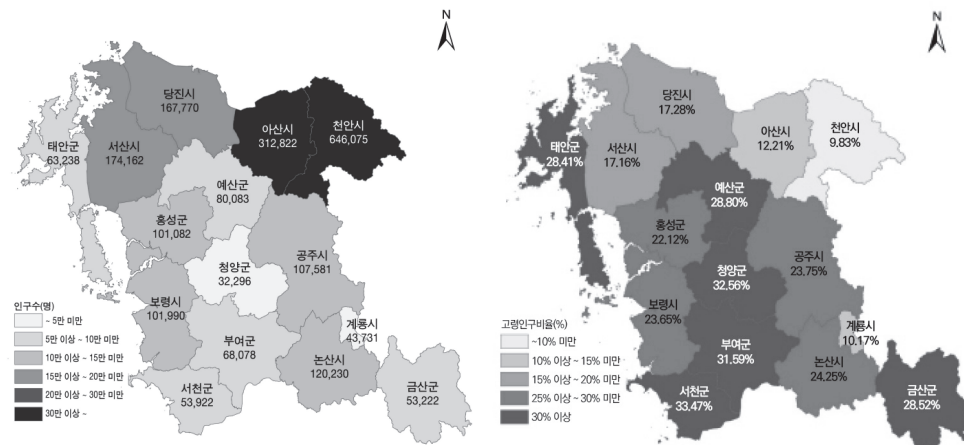
- 충남은 산업이 발달된 북부지역과 농림어업 중심의 남부지역 간 인구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충남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지역 내 시군 간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충남 전체의 고령화율은 17.52%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일부 시군은 초고령사회¹⁴⁾에 진입

14)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표 2-1〉 충남 인구의 시군간 격차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인구격차(최고-최저)	393,913	471,908	525,132	573,291	613,779
변동계수	75.65	93.01	98.75	105.13	110.38

[그림 2-9] 충남의 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2018년 기준)



시군별 인구규모(2018)

고령인구비율(2018)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

2. 양극화요인에 대한 충남의 경제구조 검토

1) 양극화 요인에 대한 검토

- 양극화는 중장기 산업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에 파급되어 나타남
 - 경제성장과정 즉, 탈농업화·탈공업화로 대변되는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산업·업종·기업간 ‘불균형성장’과 이에 따른 양극화를 경험 (선진국의 경험, KDI(2005년))
-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양극화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성장에 따른 분배 개선 : 고생산성 부문이 고용이 늘면서 팽창 → 해당/연관부문의 고임금 직종의 고용증가
 - 성장에 따른 분배 악화 : 고생산성 부문이 고용 증대없이 팽창 할 경우 → 저임금부문의 고용이 증가
- 양극화의 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충남경제의 특성에 대해 아래 3가지 측면에서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봄
- 양극화의 3대 요인¹⁵⁾
 - 글로벌화, 중국의 급부상, IT등 기술진보, 상품자본시장 개방 등으로 인한 대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 국가나 지역의 경제구조에 있어 부품소재 중소기업 기반 취약하거나 자영업주 비대 등의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
 - 정부차원의 경제 구조 개혁 지체, 단기적 요법, 인력투자 및 사회안전망 대책 미흡 등의 정책적 대응미흡
- 본 절에서는 충남의 일반적인 지역 현황이외 양극화 요인에 대한 충남의 경제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충남의 경제구조적 변화방향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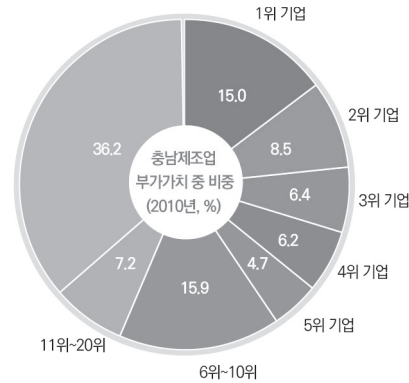
15)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기업의 양극화와 경쟁력, 2012

2) 수출 중심의 대외적 개방형 경제 구조

» 대기업 중심 성장과 동시에 한계성도 내제

- 충남은 자생적 지역경제의 성장보다는 대기업,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자 및 성장이 정체될 때 지역경제의 변동성이 큰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대부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연계구조로 수직 계열화된 기업생태계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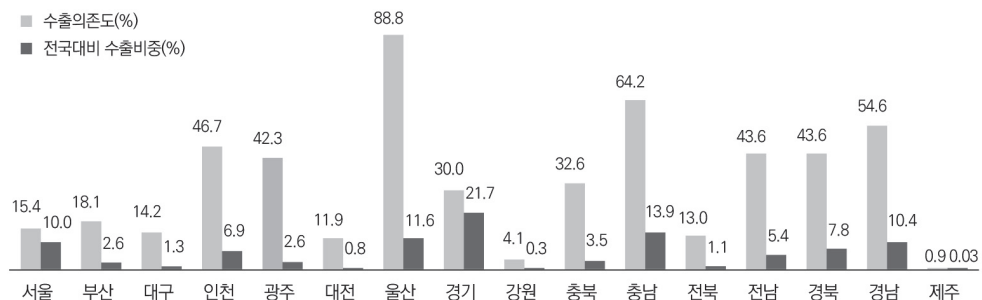
[그림 2-10] 충남 주요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



자료: 충청남도, 충남경제비전 2030

- 지역내 디스플레이·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입지로 인해 2018년 국내 수출의 15.2%점유(920억불, 국내 6,047억불)로 지역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 충남의 GRDP 대비 수출비중(수출의존도)은 64.2%이고, 울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2%점유(920억불, 국내 6,047억불)

[그림 2-11] 시도별 수출의존도 및 수출비중(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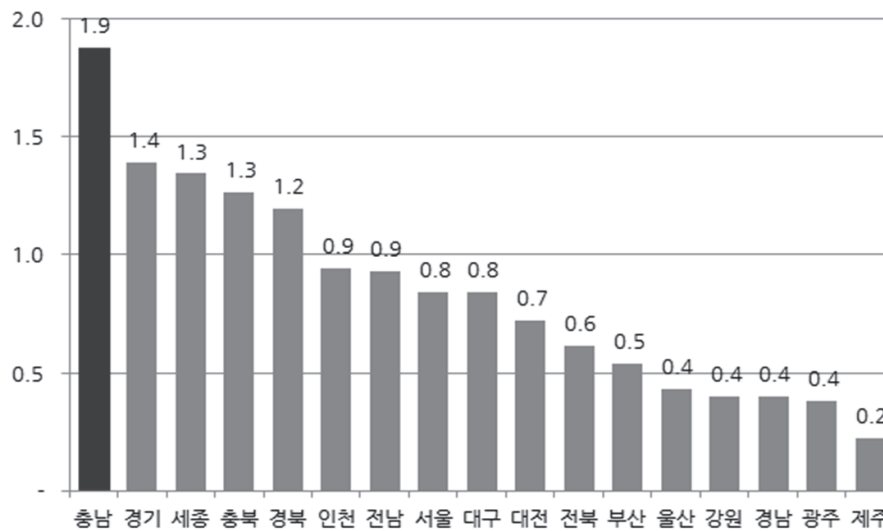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2018.

>>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와 경쟁 격화

- 충남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3%로 가장 높으며, 홍콩을 포함하면 52.0%로 중화권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를 가짐
- 중국경제와 충남(우리나라를 포함)은 산업구조에 있어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상호 경쟁적인 양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음
- * 중국의 실질 GDP 1%하락시 → 충남지역의 총수출(실질) 0.8%p, GDP(실질, 전산업) 0.4%p 하락 (한국은행,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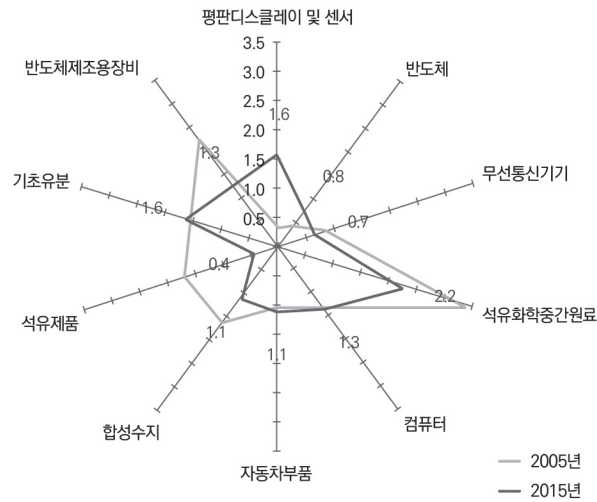
[그림 2-12] 충남의 대중국 수출 특화계수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2018.

- 반면, IT제품 및 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출이 급증, 저가 생산재 및 소비재에 대한 중국과의 경쟁격화
- 중국의 생활소비재 제품 및 중간재 수입증가로 전통적 산업부문에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지속하락 감소

[그림 2-13] 대중국 수출 비교우위지수(CAC)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자료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진보에 대한 대응력 미흡

- 충남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센서를 비롯한 IoT, 빅데이터 등 기술 기업 및 관련 지원서비스가 매우 취약
 -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분야 역시 대기업 주도 제조업을 제외하면 지역내 정보서비스 분야 종사자 비중은 0.5%에 불과(전국 1.2%)

〈표 2-2〉 주요 업종의 지역내 비중

구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산업		정보서비스분야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사업체비중(%)	종사자비중(%)
충남	1.8	2.1	0.3	0.5
전국	2.6	4.7	0.4	1.2

자료: 통계청, 사업체조사, 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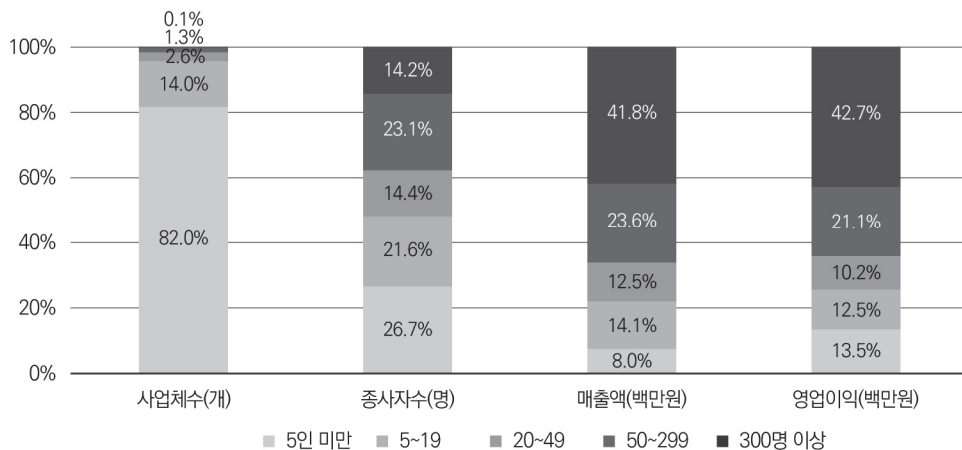
- 이와 함께 기술간 융·복합화로 시장통합 및 경쟁심화로 인해 기존 제조업 및 산업에 대한 한계업체의 확대
 - 그동안 첨단기술 중심의 충남 주력산업은 다양한 수요확대로 제품혁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수요 둔화로 인한 전통적 제조업에 대한 한계기업 증가

3) 지역내 산업 및 고용구조의 취약성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취약

- 수출 대기업 납품에 연관된 산업과 기업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구조로 인해 이외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저성장
 - 300인 이상 대기업이 지역 고용의 14.2%, 지역매출의 41.8%, 영업이익의 42.7% 점유
 - * 5인 미만의 소기업은 129,826개(82.0%)인데 반해 지역고용은 26.7% 점유
 - 충남은 1990년대 이후 국가기간산업(제조업)의 집적과 함께 성장하였으나, 지역의 서비스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저성장

[그림 2-14] 종사자규모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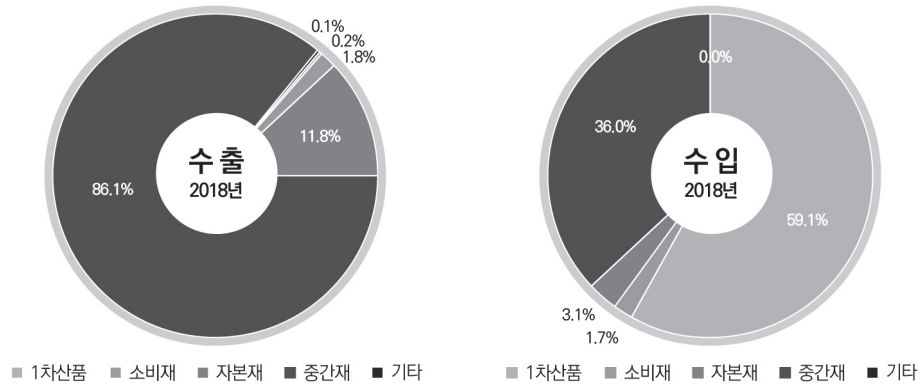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

》 원자재수입과 중간재 위주의 수출, 가공무역중심 구조

- 중간재와 기초소재 수입을 통해 가공된 중간재 수출의 가공무역형 구조
 - 중간재 수출이 점차 확대 58.9%(2010년) → 86.1%(2018년)
 - 충남의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석유제품 등으로 아산·천안·서산·당진 지역의 대기업 중심 가공무역형 구조임

[그림 2-15]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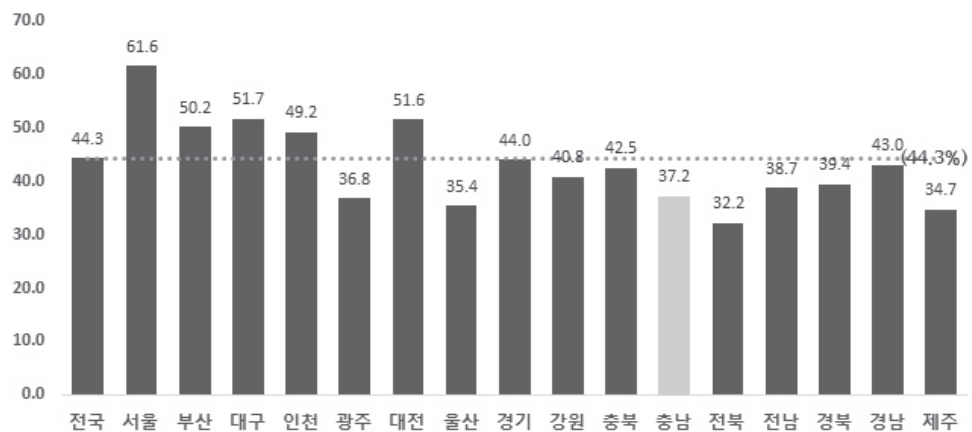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자료

>> 생산과 소득, 소비와의 괴리

- 대기업중심의 생산중심지역으로 소득, 소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형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다수 기업의 분공장 형태 입지로 인해 영업잉여의 역외 귀속수준 높아 지역경제 성과의 외부유출이 큼
 - 도내 제조업 본사 비중이 37.2%로 전국 평균 44.3%를 크게 하회하는 실정

[그림 2-16] 시도별 제조업본사 비중(단독 사업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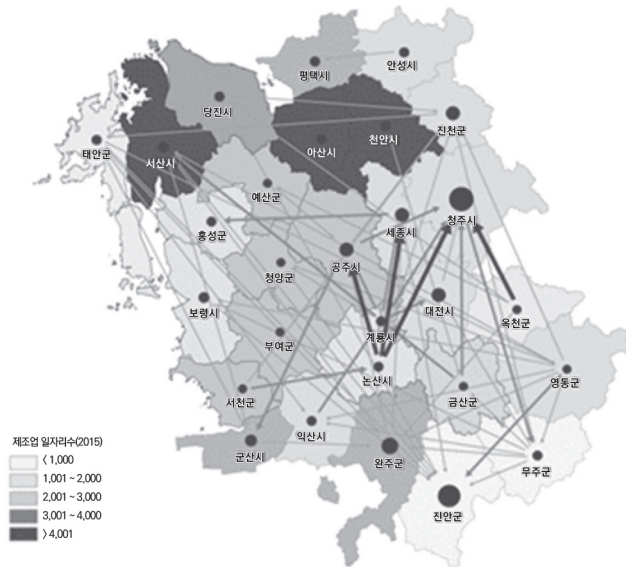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

- 직주분리로 인한 피용자 보수(임금소득)의 높은 역외소비성향
 - 정주여건이 양호한 세종, 청주, 대전, 군산과 인접해 있어 실거주지와 근로지간 불일치로 역내 소비 진작에 한계

[그림 2-17] 우리도와 주변지역간 직주실태 (통근통학권 및 제조업 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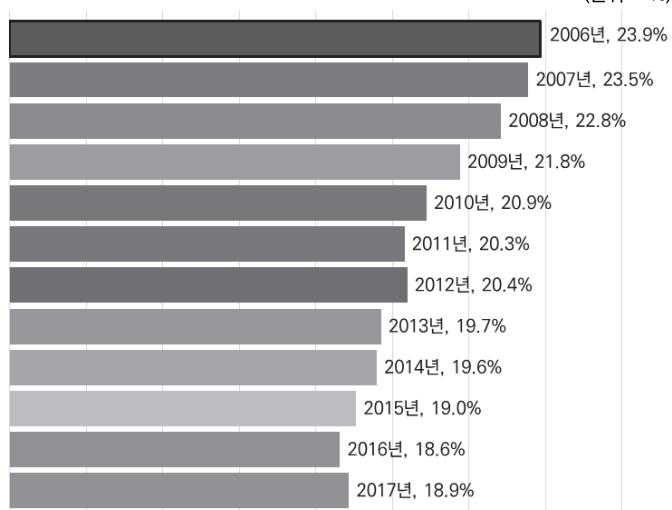
자료 : 충남연구원(2019)

》 자영업자의 과다상태 지속과 성장의 한계성

- 충남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7년기준 18.9%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지역 산업특성상 자영업의 불안정성과 사업주의 고령화가 확대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90년대 이후 25~28%수준 유지 (미국 6.5%, 일본 11.1%, OECD 평균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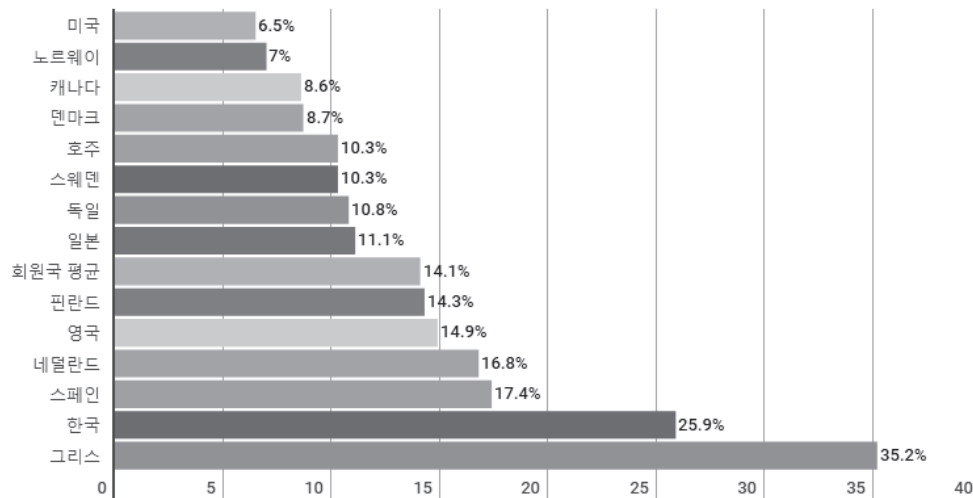
[그림 2-18] 충남의 자영업자 비중 및 변화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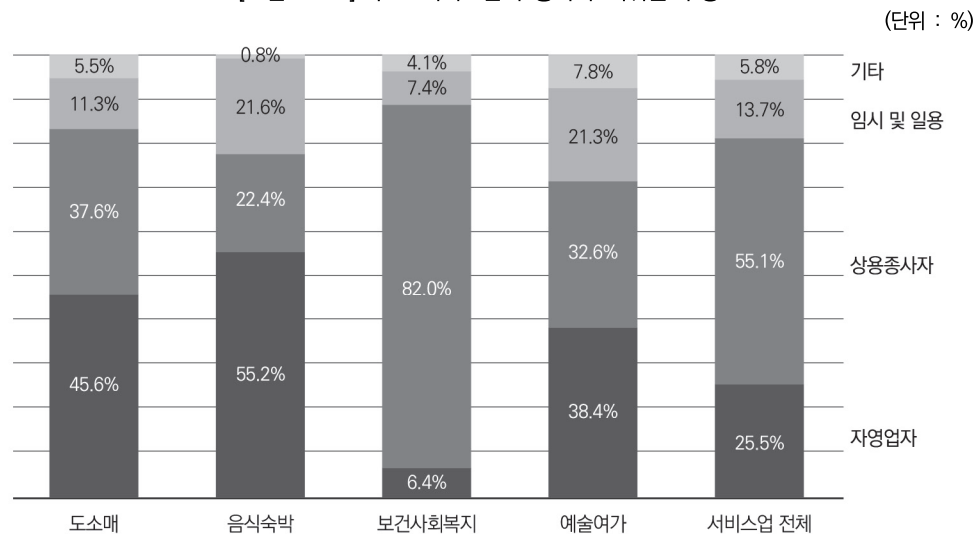
[그림 2-19] 세계 주요국의 자영업자 비중



자료 : OECD, 총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율(2015년 기준)

- 자영업의 경우 대부분 전 근대적 경영으로 경영, 조직 등에 대해 정보와 지원이 취약하여 생산성 향상에 한계, 조직화 미흡으로 영세화
 - 단독 경영 및 가족구성원에 의존한 영세업체 (무급가족종사자 169,331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8.9%, 농림어업 제외 165,195명, 2017년 기준)
 - 개인사업체 위주로 조직형태의 낙후, 영세화로 인한 경영안정성 미흡
- *자영업자의 조직형태별 구성을 보면 개인사업체 비중이 지배적, 회사법인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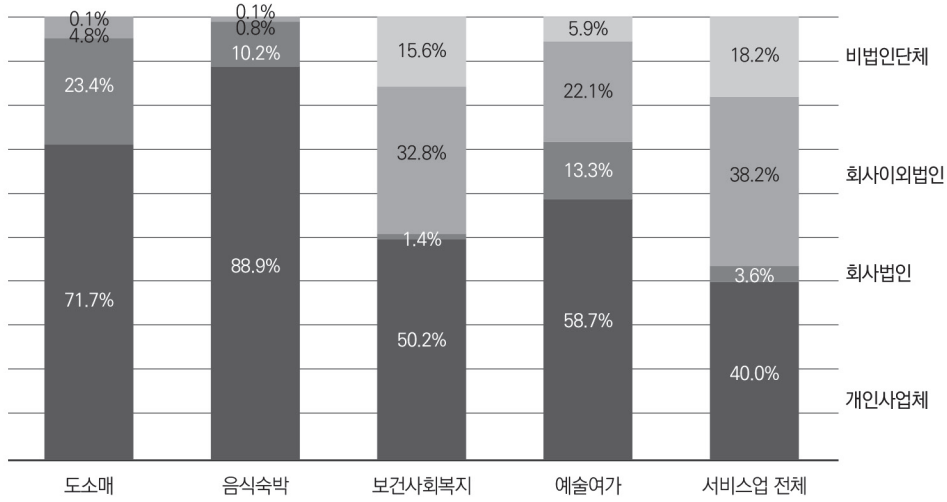
[그림 2-20] 주요 서비스업의 종사자 지위별 구성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년 기준

[그림 2-21] 주요 서비스업의 조직형태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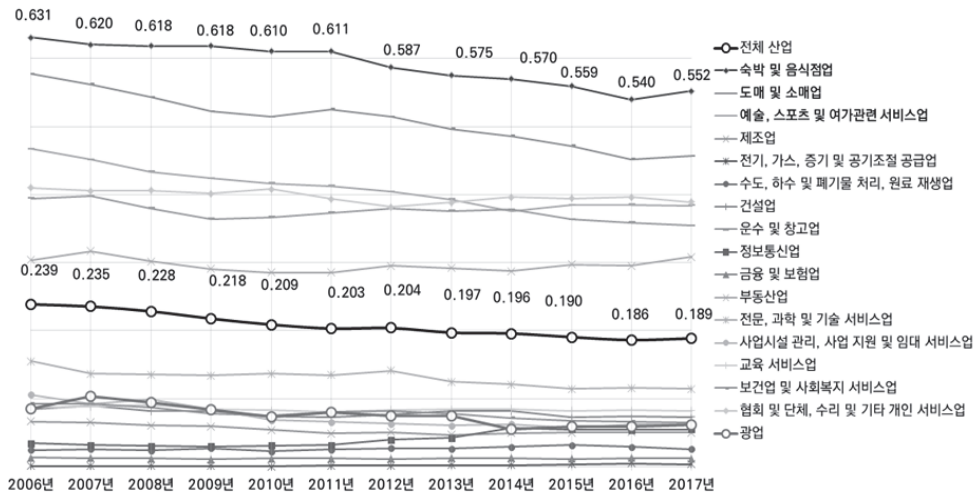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년 기준

[그림 2-22] 충남 업종별 자영업자 비중 및 변화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2017

4) 정부 정책적 대응의 한계성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과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한 성장산업과 기업 발굴의 미흡
 -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한 구조조정 진행,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개혁으로 과도한 비정규직 양성
 - * 취약 중소기업체 등의 한계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부 서비스업종의 과잉
- 중앙정부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아닌 단기적 처방으로 과도한 창업지원과 무리한 내수부양(가계대출 확대, 부동산규제 완화 등)

>> 인력투자 및 사회안전망 대책 미흡

- 취업근로자의 취업능력 향상/전직 지원이 미흡하고, 지원하더라도 단순지원과 사후관리 미비로 한계
- 4대 보험, 기초생활보장제 도입 등의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폭넓게 존재
 -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매우 낮은편으로 OECD회원국 36개국 중 33위 수준 (GDP대비 공적사회지출규모 기준)

>>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 미흡

- 앞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정책 검토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미흡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됨
 -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빈곤탈출률의 경우 OECD평균 64.1%이나, 한국은 19.5%로 최하위로 나타남(한국데이터 2012년 기준, 현대경제연구원(2018))
- 이는 정부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소득재분배 정책방향에 대한 재점검 및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추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 미비

- 충청남도 역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양극화 정책 사업의 제약과 지방정부라는 정책추진 수단의 한계성을 가짐
 - (재정자립도) 도본청 31.5%, 시군 평균 23.0%(2018년 기준)

3. 충남의 경제양극화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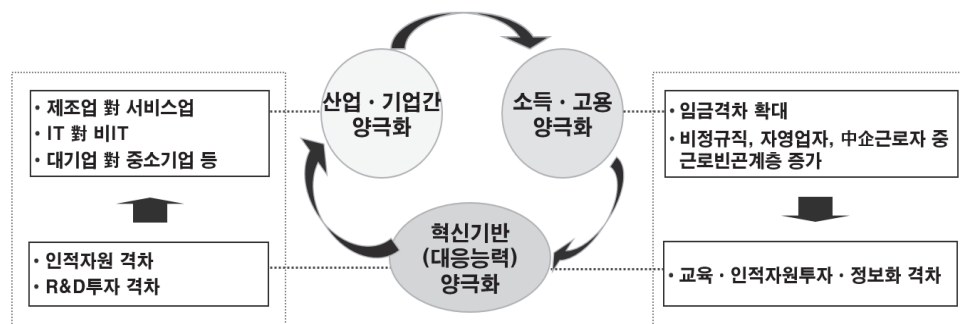
1) 분석 개요

(1) 양극화 분석의 틀

≫ 충남의 경제 구조적 변화에 따른 양극화 현황 및 변화 추이

- 충남지역내 산업·기업·업종간 양극화 실태, 지역내 경제주체의 소득·고용 격차, 혁신기반(교육·인적자원투자기회) 격차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지역 경제 실태 분석) 경제의 성장으로 소득과 분배가 산업·기업·업종간 격차 → 소득·고용 격차 → 혁신기반(교육, 인적자원 투자기회 등) 격차 → 산업·기업간 격차로 확대 재생산
- (지역 정책 분석) 경제양극화 관련 사업의 특성/예산배분/정책전달체계 등 구조적·기능적 관점에서 검토(2019년 실국업무계획 중심)

[그림 2-23] 양극화의 원인과 흐름



자료 :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정부 T/F합동·한국개발연구원, 2005

≫ 충남 지역내 산업별/업종별/기업별 격차분석

- 지역 경제주체에 대한 정량적 실태분석
- 생산규모(매출액, 부가가치 변화 추이), 1인당 노동생산성, 고용규모 및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한시근로자 등), 임금수준(업종별, 매출액대비 임금비중, 생산직 임금비중) 등 분야별 시계열적 비교 검토
- * 전국(시도별) 비교, OECD 및 주요 지표와의 비교 검토 <자료분석 : 기업신용정보, 산업연관표, 경제총조사 등>

(2) 양극화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 지역 경제주체의 양극화 정량적 실태분석을 위한 자료의 구성

- 지역의 양극화를 분석하기 위해 신뢰성 있고, 분야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모든 시계열 데이터의 활용
- 양극화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성별/근로형태별/업종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득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자산 등의 검토는 정책접근성과 연구 한계)
 - 가계(소득)부문: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2008~2018년),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세분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2018기준 충남 표본 27,197명 /전국 387,379명)
 - 기업부문: 신용평가정보(kisvalue, 2000년~2018년), 우리나라 기업 중 외부감사대상 기업 전체에 대한 정보로 재무정보와 R&D투자 매출, 영업잉여 등 정보를 포함하여 매년 기업공시는 하는 자료(2018기준 충남기업 1,096개, 역외공장 99개 / 전국 31,255개)
 - 정책부문: 2019년 실국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의 특성/예산/전달체계 등 검토

〈표 2-3〉 가계부문 분석 주요내용

구분	주요분석 내용	비고
소득분위 ¹⁶⁾	임금격차 차이 저임금군 대비 고임금군 배율	10분위 기준
인구특성	성별 임금격차 및 지니계수 ¹⁷⁾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및 지니계수 교육수준별 임금격차 및 지니계수	남/여 상용직/임시·일용직 고졸이하/대졸이하/대학원이상
지역	시도별 지니계수 차이	

〈표 2-4〉 기업부문 분석 주요내용

구분	주요분석 내용
기업규모	대기업·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 유형자산, 연구개발비 변화추이
산업	산업별 1인당 매출액, 1인당 영업이익, 1인당 인건비, 1인당 유형자산, 1인당 연구개발비 변화추이
지역	시도별 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 유형자산, 연구개발비 변화추이

16) 균등화 개인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 이들을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의 집단으로 묶었을 때 집단별 평균값

17) 지니계수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 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냄. 본 연구에서는 시군별, 인구특성별 소득불평등도를 추정하기 위해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개인별 근로소득을 기초로 지니계수를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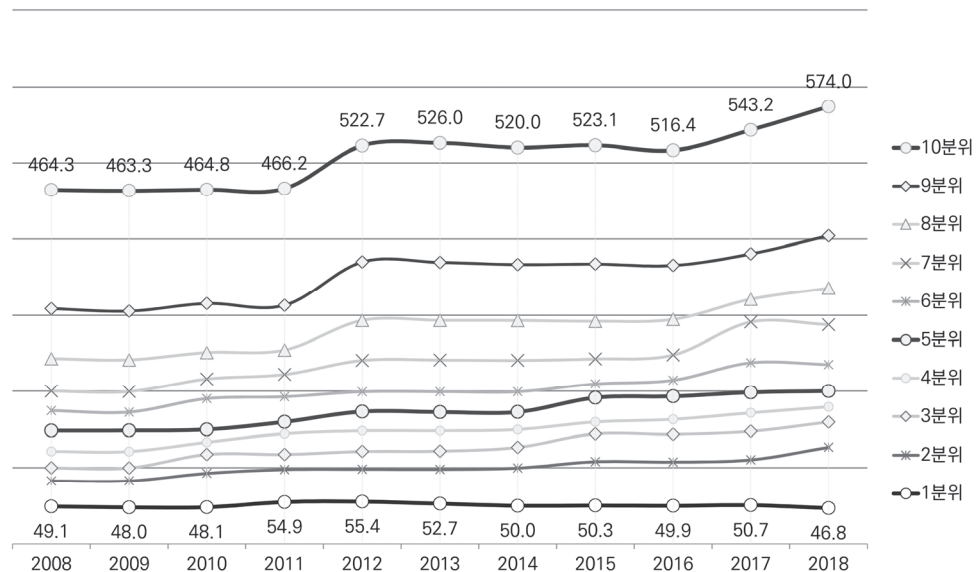
2) 근로소득 양극화 실태분석

(1) 소득(평균임금) 분위별 격차 추이

》지역내 소득분위별 평균임금 격차 확대

-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소득이 상승했지만, 소득 최하위인 1분위는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수준을 나타냄
 - 소득 1분위(하위 10%)의 소득이 타 분위와 같이 상승하지 못한 요인으로는 비정규직, 시간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은 전국에 비해 소득불평등 추세는 양호한 수준이나, 격차 심화수준은 전국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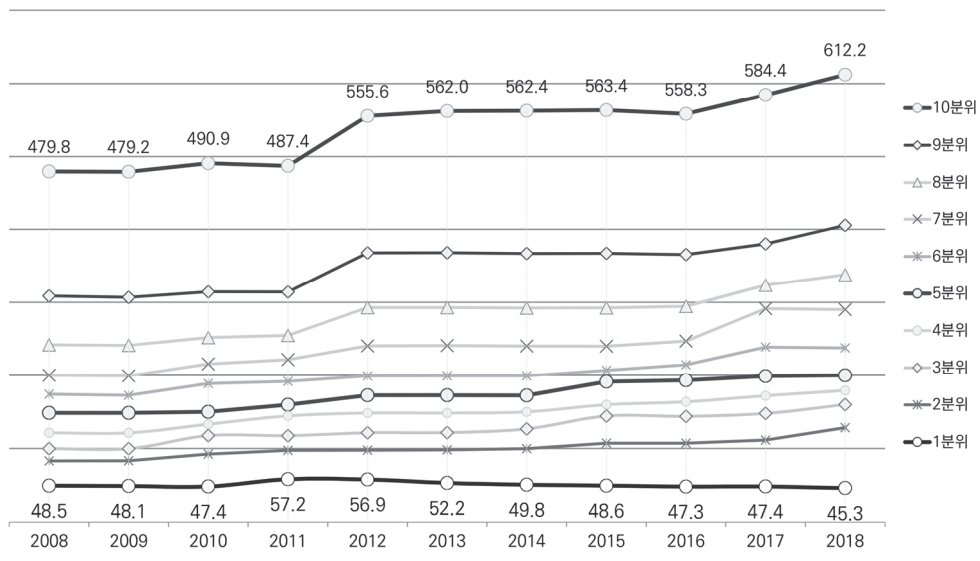
[그림 2-26] 충남의 분위별 소득(월평균 임금)격차 변화 추이(만원)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 전국의 분위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10분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국의 소득분위별 임금격차에 있어서도 1분위가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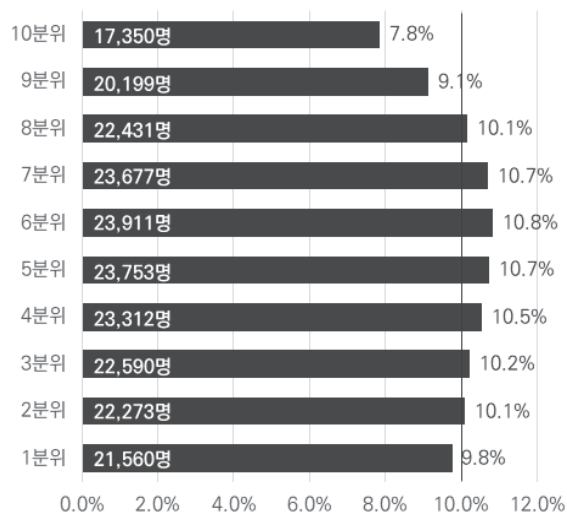
[그림 2-27] 전국 분위별 소득(월평균 임금)격차 변화 추이(만원)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와는 별개로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소득분위별 분포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비해 10분위(고소득)가 낮게 나타남
 - 소득10분위 및 9분위가 전국대비 7.8%, 9.1%로 타 분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소득 3~7분위의 중간계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2-26] 종합소득금액 분위별 전국대비 총남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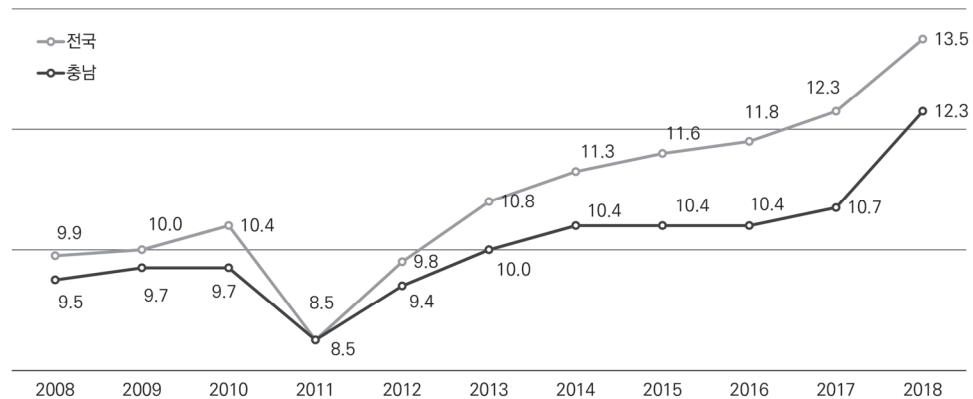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2019)

>> 저소득층 소득 격차 확대와 중산층 비중 감소

-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양극화 지표인 10분위 배율은 2011년 소폭 감소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양극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1분위와 10분위 소득배율은 2008년 9.5배에서 2018년 12.3배로 더욱 격차가 확대(전국 9.9배 → 13.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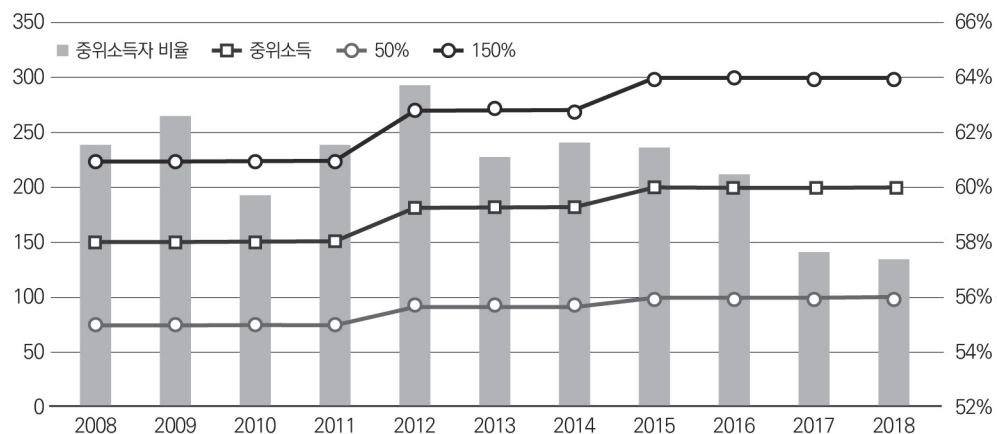
[그림 2-27] 1분위 대비 10분위 배율(상위 10%와 하위 10%)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 정책적으로 핵심이 되는 중산층 비율 역시 절대적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내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 비중(중위소득의 50%~150%)은 61.5%('08) → 57.4%('18)로 감소

[그림 2-28] 중산층비율(중위소득의 50% ~ 150% 미만)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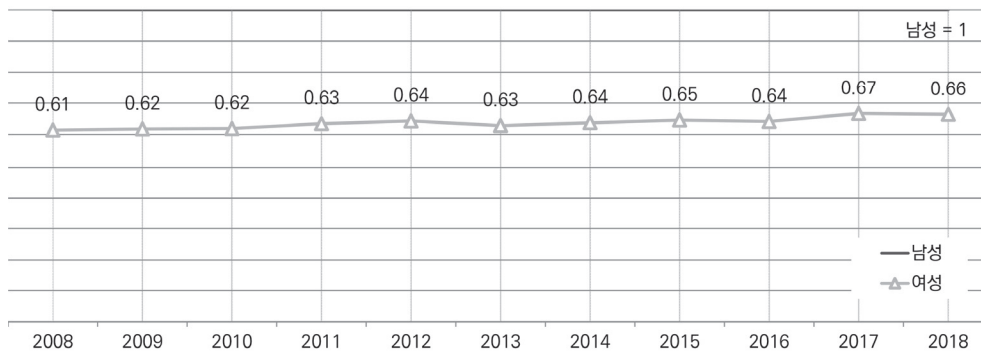
(2) 성별 격차

》 여성 평균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완화되는 추세임

- 지역내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아직까지 크게 존재하고 있으며,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남성임금을 1이라고 했을 때 여성임금의 상대적 비율은 0.66수준으로 나타났으며, 0.61(2008년)에서 0.66(2018년)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2018년, 시간당임금기준, 남성 16,400원 / 여성 10,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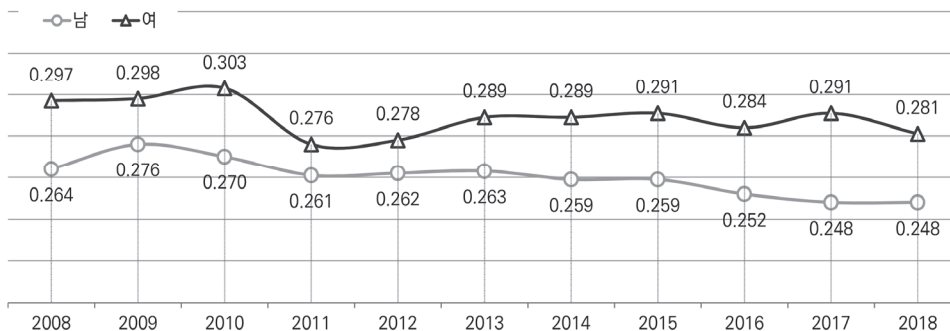
[그림 2-29]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남성임금=1)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 남성과 여성의 각각 성별 내부의 임금격차에 있어서는 모두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의 임금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성별 소득불평등도(성별임금 지니계수)는 여성이 0.281, 남성이 0.248로 남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개선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0] 성별 임금 격차(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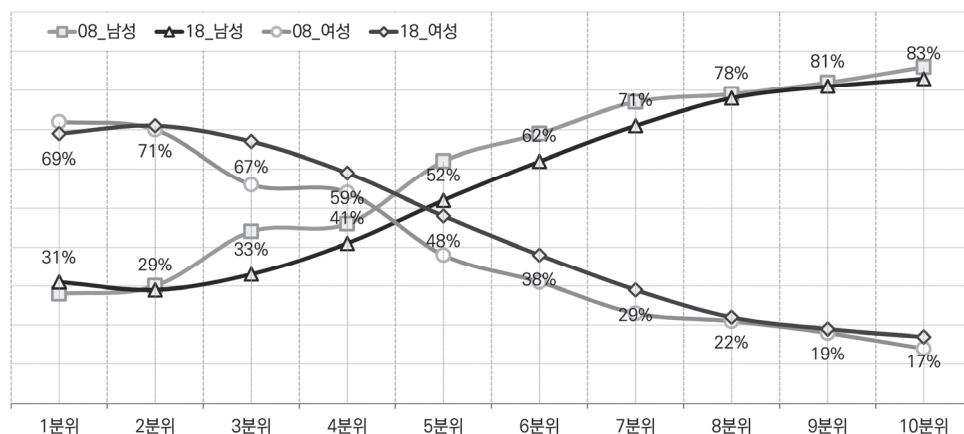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 소득분위별 여성 경제활동은 여전히 큰 장벽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소득분위별 남녀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은 여전히 큰 장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각각의 소득분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저소득구간인 1분위에서 여성이 69%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이 높아지는 5분위부터 남성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2-31] 분위별 성별 근로자 비중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 전국 평균대비 충남의 격차는 다소 양호한 편임

- 전국대비 임금의 격차는 전국보다는 비슷하나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임금 및 지니계수 격차는 전국보다 낮은수준을 보이고 있음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소득상위계층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 전국과 충남의 성별 평균임금과 지니계수 변화

구분		2008년				2018년			
		평균임금		지니계수		평균임금		지니계수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성별	남	232.6	222.5	0.298	0.264	309.9	305.74	0.294	0.248
	여	137.5	128.4	0.312	0.297	192.5	192.21	0.309	0.281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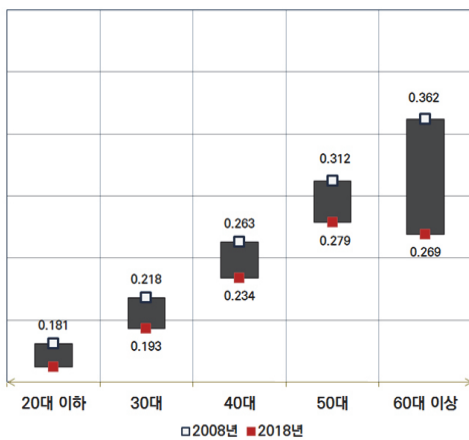
(3) 연령별 격차

≫ 연령별 격차) 50,60대 이상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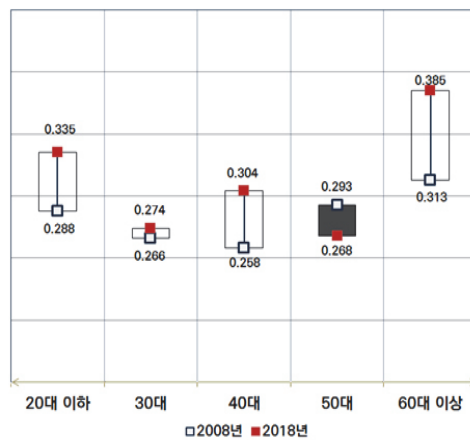
- 50대, 60대 이상에서 높은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임시·임용직은 격차가 확대되어 나타남

* 상용직 → 소득불평등 완화, 임시·일용직 → 소득 불평등 악화

[그림 2-32] 연령별(상용직) 격차(지니계수)



[그림 2-33] 연령별(임시·일용직) 격차(지니계수)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표 2-6〉 전국과 충남의 연령별 평균임금과 지니계수 변화

구분		2008년				2018년			
		평균임금		지니계수		평균임금		지니계수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연령	15-29	148.9	149.5	0.247	0.224	188.3	205.86	0.251	0.232
	30대	211.8	202.6	0.273	0.251	278.1	281.19	0.235	0.215
	40대	223.8	217.2	0.345	0.312	309.1	299.45	0.303	0.266
	50대	205.4	191.8	0.388	0.360	291	286.26	0.346	0.314
	60대이상	118.5	97.0	0.411	0.386	164.1	157.3	0.421	0.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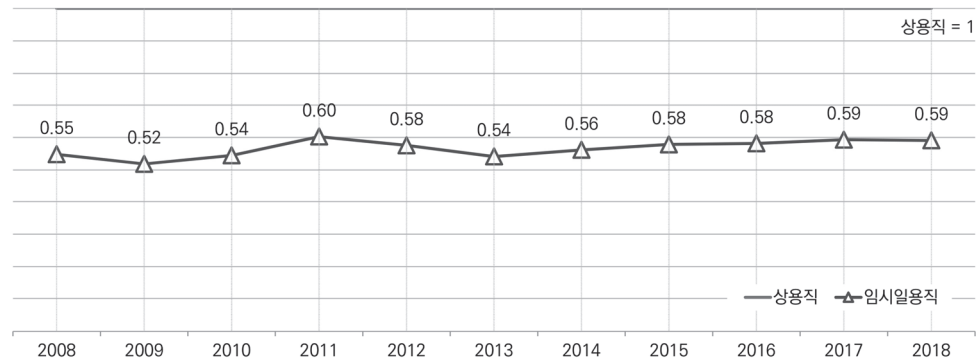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4) 근로형태별 격차

》 임시·일용직의 평균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완화되는 추세임

- 상용근로자 대비 임시·일용직의 상대적 임금수준은 0.59로 근로형태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나,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 2018년 기준 상용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55.2만원, 임시직 135.5만원, 일용직 109.9만원이며, 시간평균임금은 상용직 1만5천원, 임시직 9천3백원, 일용직 9천2백원 수준으로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히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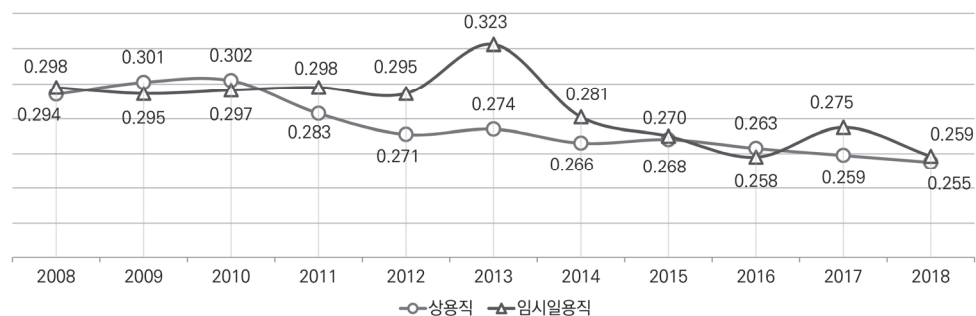
[그림 2-34]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비율(상용직임금=1)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 근로형태별 임금불평등도는 모두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안정적으로 감소추세인 상용직에 비하여 임시·일용직의 불평등도는 불안정적으로 나타남
 - 근로형태별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2018년기준 상용직이 0.255 임시·일용직이 0.259로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음

[그림 2-35] 근로형태별 임금불평등도(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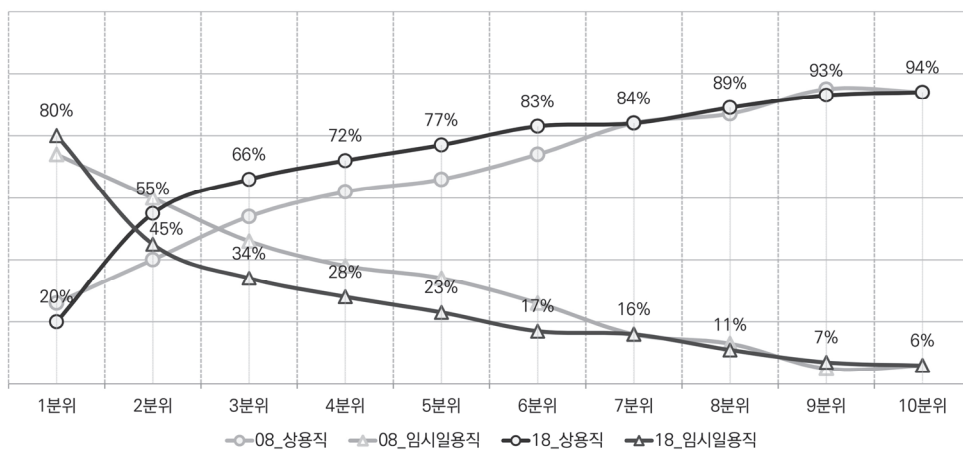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 소득분위별 근로형태별 근로자 비중은 여전히 큰 격차를 나타냄

- 소득분위로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의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여전히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각각의 소득분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저소득구간인 1분위에서 임시·일용직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3분위부터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여 10분위에서는 상용직이 94%, 임시일용직이 6%에 달함

[그림 2-36] 분위별 근로형태별 근로자 비중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 전국대비 충남의 평균임금은 낮은 수준이나 임금불평등도는 양호한 편

- 전국대비 근로형태별 평균임금은 전국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임금불평등도 역시 전국보다는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일용직의 경우 평균임금이 전국보다 충남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임금불평등도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2-7〉 근로형태에 따른 평균임금 및 지니계수 비교

구분		2008년				2018년			
		평균임금		지니계수		평균임금		지니계수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근로 형태	상용	237.4	220.6	0.282	0.262	308.6	295.85	0.269	0.237
	임시	123.1	124.2	0.274	0.265	146.9	148.38	0.340	0.336
	일용	99.8	98.7	0.322	0.330	153.0	142.75	0.322	0.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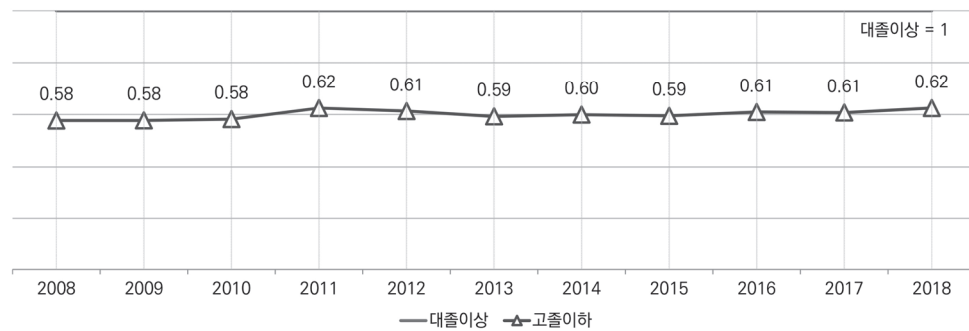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5) 교육수준별 격차

》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완화되는 추세임

- 고졸이하의 임금수준은 대졸이상에 비해 약 0.62수준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 대졸이상자 임금을 1이라고 했을 때 고졸이하 임금은 0.62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0.58에서 2018년 0.62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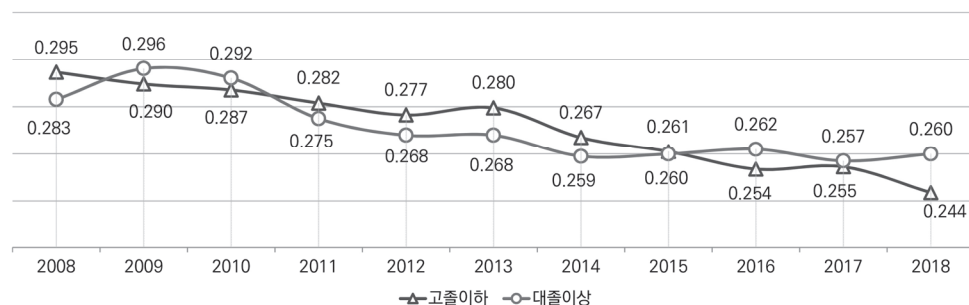
[그림 2-37] 대졸이상 대비 고졸이하 임금수준(대졸자임금=1)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불평등도는 모두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고졸이하 근로자의 임금불평등도 개선도가 더 안정적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별 임금불평등도(지니계수)는 2018년기준 고졸이하 0.244, 대졸이상 0.260으로, 고졸이하 임금수준의 불평등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 2-38] 교육수준별 임금불평등도(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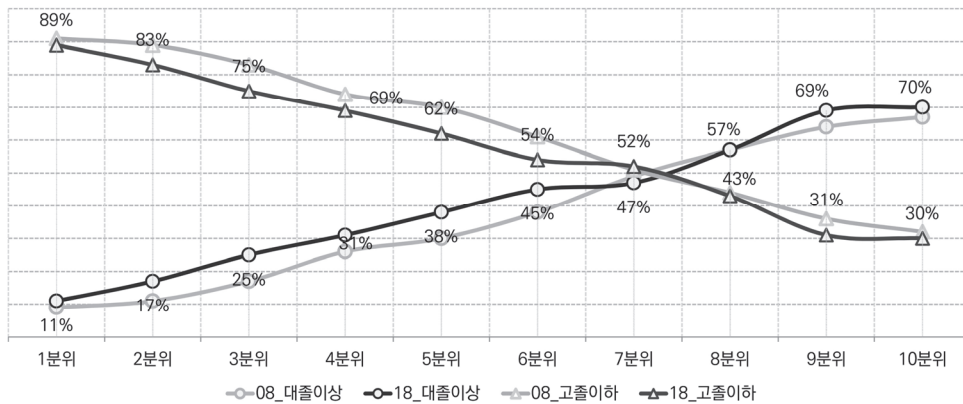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 소득분위별 교육수준별 근로자 비중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 소득분위별 근로자 비중은 교육수준별로 여전히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분위별 교육수준별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저소득 구간인 1분위에서는 고졸이하 근로자 비중이 80%, 대졸이상 근로자 비중이 11%였으나, 7분위 이후 구간부터 10분위로 갈수록 대졸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2-39] 분위별 교육수준별 근로자 비중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 전국대비 충남은 고학력군의 평균임금이 낮은 수준이나 임금불평등도는 양호한 편

- 전국대비 교육수준별임금 격차는 전국과 비슷한 양상이며, 불평등도는 전국 보다는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충남은 대학원이상 고학력직군의 평균임금은 전국보다 낮게 나타나며, 고졸이하 및 대학수준의 근로자 임금은 전국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8〉 전국과 충남의 교육수준별 평균임금과 지니계수 변화

구분		2008년				2018년			
		평균임금		지니계수		평균임금		지니계수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교육수준	고졸이하	113.5	116.3	0.301	0.301	140.6	141.78	0.341	0.327
	대학교	162.5	172.4	0.302	0.284	213.4	236.05	0.288	0.277
	대학원이상	248.1	239.2	0.293	0.263	318.0	312.96	0.292	0.253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6) 광역시도별 격차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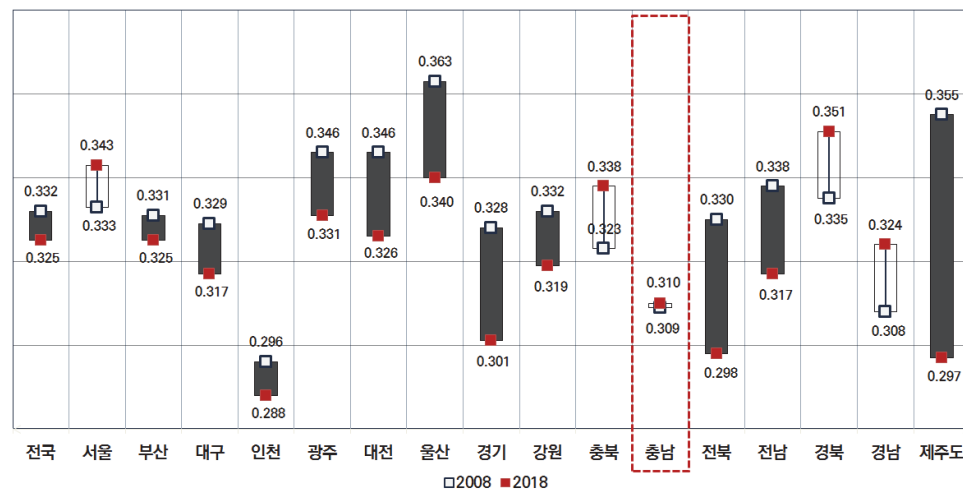
» 충남은 전국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그룹에 속함

- 전국 광역별 지니계수(Generalized Entropy indices)를 추정한 결과 - 전국적으로 불평등도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0.332(2008년) → 0.341(2013년) → 0.325(2018년)

- 충남은 2008년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4번째로 불평등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군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에는 12위로 순위가 다소 상승하였음

- 충남도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09에서 2018년 0.310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 기간에 걸쳐 전국평균을 모두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충남의 경우 지니계수의 변동폭이 가장 작은 지역으로 나타남

[그림 2-40] 전국 광역별 지니계수 비교(월평균임금 기준)



〈표 2-9〉 전국과 충남의 평균임금과 지니계수 변화

구분	평균임금			지니 계수		
	2008년	2013년	2018년	2008년	2013년	2018년
전국	188.1	211.0	253.2	0.332	0.341	0.325
서울	209.5	239.1	273.6	0.333	0.347	0.343
부산	178.9	200.2	245.3	0.331	0.349	0.325
대구	166.2	192.7	241.3	0.329	0.342	0.317
인천	175.4	202.5	232.5	0.296	0.317	0.288
광주	191.1	212.7	249.9	0.346	0.320	0.331
대전	189.1	218.7	257.8	0.346	0.354	0.326
울산	244.2	285.2	292.1	0.363	0.356	0.340
경기	202.9	229.1	307.2	0.328	0.336	0.301
강원	170.6	194.1	272.1	0.332	0.350	0.319
충북	185.5	195.3	217.9	0.323	0.299	0.338
충남	187.0	213.5	248.1	0.309	0.316	0.310
전북	177.3	198.6	256.2	0.330	0.335	0.298
전남	192.1	204.3	231.5	0.338	0.343	0.317
경북	180.9	202.1	237.8	0.335	0.345	0.351
경남	188.2	219.6	242.0	0.308	0.319	0.324
제주도	169.9	168.4	246.4	0.355	0.343	0.297
세종	-	-	227.9	-	-	0.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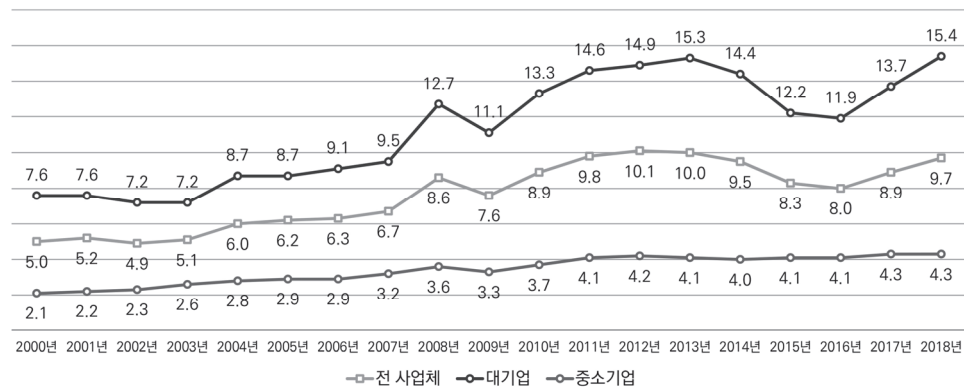
3) 산업 및 업종별 양극화 실태분석

》충남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률 격차 확대

- 1인당 매출액은 증가 추세,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대기업이나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 기업의 기간별 증가율에 있어서는 11.0% (2000년~2009년) → 4.8% (2010년 ~ 2018년)으로 증가폭이 축소

[그림 2-41] 기업규모별 (1인당)매출액 변화추이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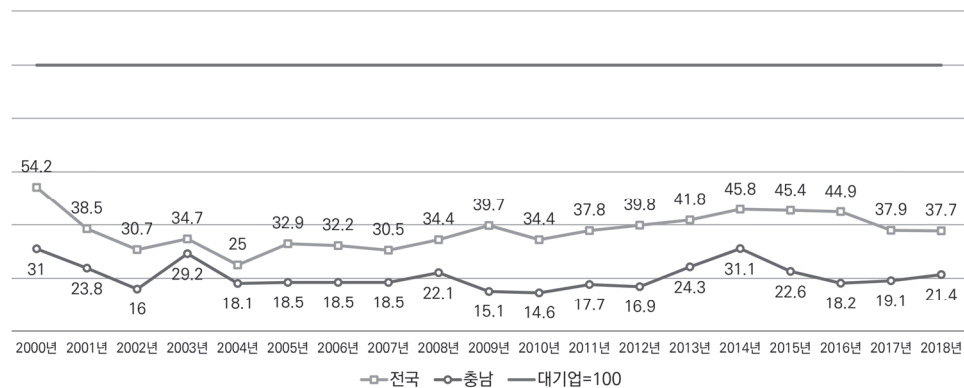


자료 : kisvalue, 2000~2018

- 충남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충남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대기업대비 20%수준이며, 전국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

[그림 2-42] 중소기업 (1인당)영업이익률 변화추이(대기업=100)

(단위 : p, 대기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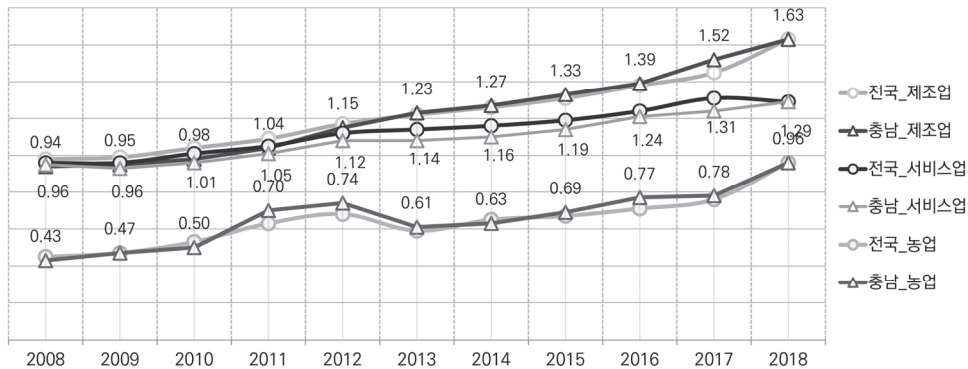


자료 : kisvalue, 2000~2018

≫ 제조업 격차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농업부문은 변동성이 큼

- 산업별 임금은 전산업에서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국과 충남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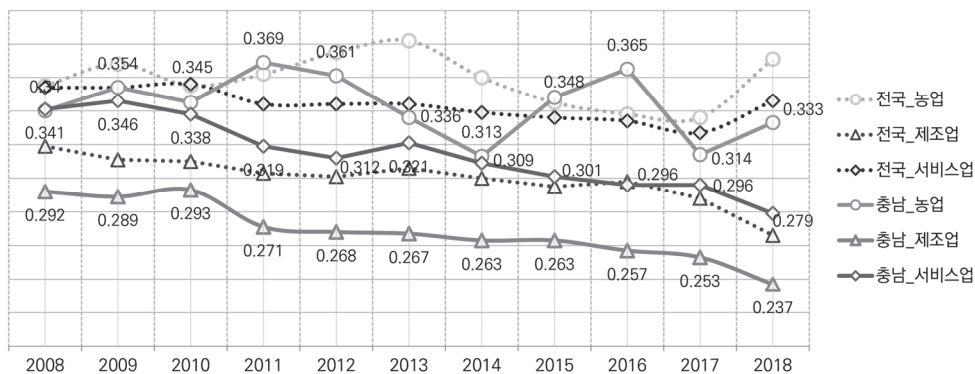
[그림 2-43] 산업별 평균임금(시간당) 변화 추이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08~2018

- 제조업의 격차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농업부문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지역내 대형 또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많지 않은 특성으로 성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농업 부문) 임금격차의 큰 변동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충남과 전국 모두 높은 격차를 가짐
 - (제조업 부문) 임금격차는 충남과 전국 모두 전체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 (서비스업 부문) 임금격차는 충남은 완화되는 반면, 전국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그림 2-44] 산업별 임금불평등도(지니계수) 변화 추이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08~2018

>> 농가소득 정체 및 농가간 소득 양극화 심화

- 2010년 농가 평균소득은 3,212만원, 2017년에는 3,824만원으로 정체, 반면 농가부채는 큰 폭 확대되고 있음
- 소농과 대농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 (하위 20% 농가의 소득은 감소 또는 정체, 상위 20% 소득은 지속 상승)
 - 소득 5분위 배율 확대(양극화 지속 확대 추세) : 10.1 (2005) → 12.4 (2010) → 14.5(2015)

〈표 2-10〉 충남의 농가소득 구간별 가구 현황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000만원 미만	57	16.1%	34	10.7%	38	13.7%	34	10.1%
1000만원 ~ 2000만원	97	27.4%	69	21.7%	68	24.5%	69	20.5%
2000만원 ~ 3000만원	78	22.0%	48	15.1%	53	19.1%	48	14.2%
3000만원 ~ 4000만원	45	12.7%	41	12.9%	34	12.2%	41	12.2%
4000만원 ~ 5000만원	25	7.1%	32	10.1%	33	11.9%	32	9.5%
5000만원 ~ 7000만원	31	8.8%	46	14.5%	29	10.4%	46	13.6%
7000만원 ~ 1억원	13	3.7%	34	10.7%	16	5.8%	34	10.1%
1억원 이상	8	2.3%	33	10.4%	7	2.5%	33	9.8%
총계	354	100%	318	100%	278	100%	337	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표 2-11〉 충남의 농업소득 구간별 가구 현황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000만원 미만	211	59.6%	200	62.9%	184	66.2%	198	58.8%
1000만원 ~ 2000만원	73	20.6%	61	19.2%	41	14.7%	56	16.6%
2000만원 ~ 3000만원	35	9.9%	25	7.9%	23	8.3%	18	5.3%
3000만원 ~ 4000만원	13	3.7%	9	2.8%	9	3.2%	24	7.1%
4000만원 ~ 5000만원	9	2.5%	8	2.5%	6	2.2%	10	3.0%
5000만원 ~ 7000만원	7	2.0%	10	3.1%	8	2.9%	10	3.0%
7000만원 ~ 1억원	4	1.1%	1	0.3%	1	0.4%	4	1.2%
1억원 이상	2	0.6%	4	1.3%	6	2.2%	17	5.0%
총계	354	100%	318	100%	278	100%	337	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메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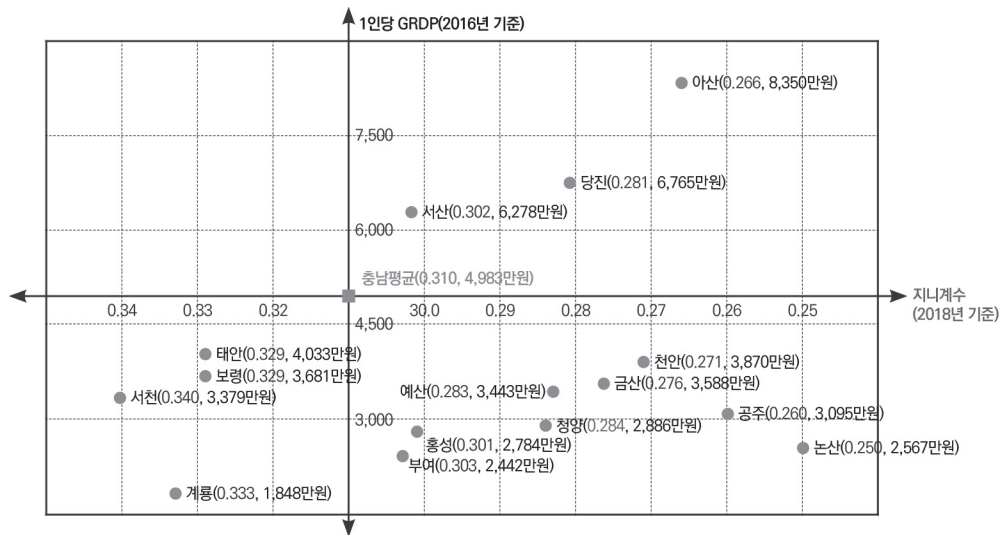
- 농업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며, 농업소득이외 겸업소득, 사업외 소득, 이전소득이 확대되었음
 - 농업소득의 평균값 대비 중위값 비율 58.8%(2003년) → 37.0%(2018년), 양극화 확대 (대농의 확대)
 - * 농가소득: 농업소득 38.8%, 겸업소득 13.9%, 사업외소득 20.0%, 이전소득 20.9%, 비경상 소득 6.4% (2018년 기준)

4) 지역별 소득 양극화 실태분석

>> GRDP 기준의 지역소득 분석의 한계

- 그동안 지역소득에 대한 대용변수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던 1인당 GRDP와 임금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격차가 너무 크게 구조화되어 나타남
 - 아산지역과 계룡지역은 6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민의 소득과는 상당히 괴리를 나타냄
- 지역내 격차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군에 대한 지표적 검정과 정책영역의 도출
 - 1인당 GRDP는 지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수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지역의 소득을 나타내기는 한계성을 가짐

[그림 2-45] 생산(1인당 GRDP)과 시군별 임금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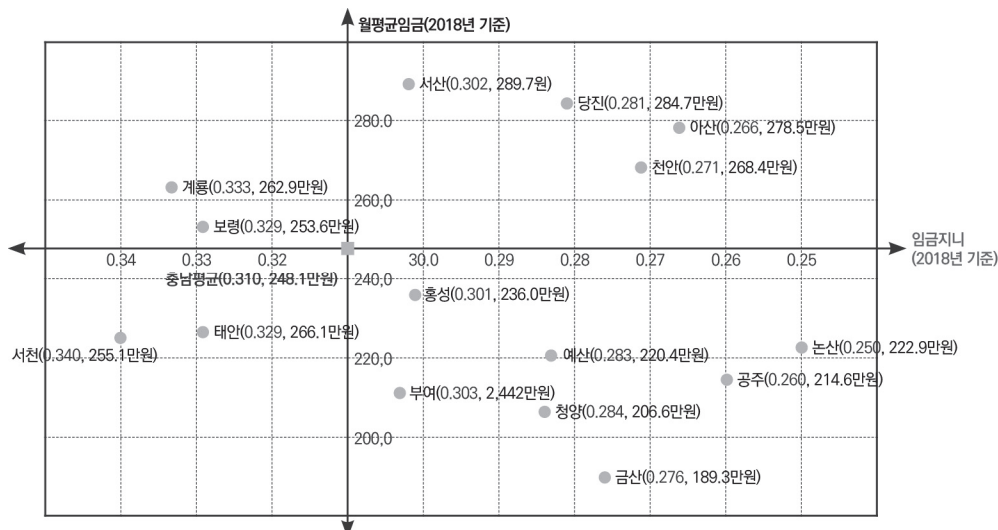
자료 : GRDP-통계청 지역소득, 지니계수-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자료 활용

>> 소득기반의 지역경제 접근과 격차 비교

- 시군별 소득과 임금격차에 대한 상호 비교에 있어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천안시 등의 북부권 지역이 소득도 높고 격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서천군, 계룡시, 태안군, 보령시는 생산과 소득측면에서 충남 평균(지니계수=0.310, 1인당GRDP=4,983만원)이하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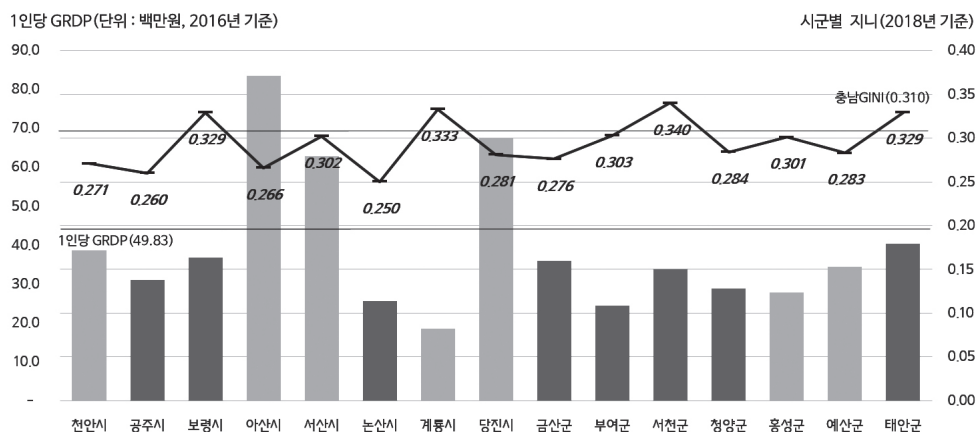
- 소득과 임금지니계수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접근을 했을 때, 산업지역과 해안(어촌)지역, 농촌지역으로 유형화된 지역실태가 도출
 - 산업지역인 북부권은 임금수준이 높고 격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안지역은 임금수준도 낮고 격차도 크게 나타남
- 기존 지역정책 목표를 GRDP 등의 생산중심 지표에서 소득과 격차 중심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함
 - 충청남도 균형발전 시군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그림 2-46] 소득(1인당 월평균임금)과 시군별 임금지니계수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2-47] 참고: 시군별 1인당 GRDP 및 지니계수



제2절

충남의 인구·고용분석을 통한 향후 전망

1. 충남의 인구변화 전망

1) 장래인구 및 인구구조 전망

≫ 충남의 총 인구는 소폭 증가

- 충남 인구는 2017년 215만명에서 2039년 236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 이후는 마이너스 인구 증가 예상, 2047년에는 232만명 전망¹⁸⁾
- 2017년 대비 2047년 16만명(7.6%) 증가 예상, 그러나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2018년부터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자연감소 지속

〈표 2-12〉 충남 및 전국의 인구 전망(2017년~2047년)

구분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47	'17년 대비 '47년	
									증감	증감률(%)
전국	5,136	5,178	5,191	5,193	5,163	5,086	4,957	4,891	-245	-4.8
충남	215	220	227	232	235	236	234	232	16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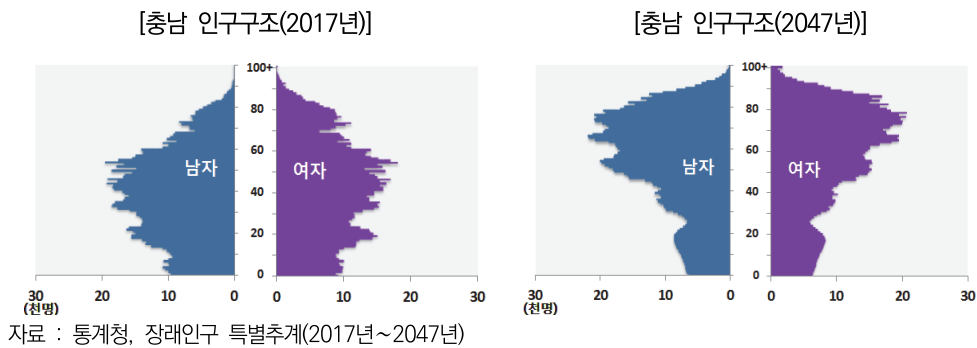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년~2047년)

- 우리나라 전체의 경우 2017년 총인구는 5,136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 2047년에는 4,891만명(-245만명)에 이를 전망

18)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년~2047년) : 시도별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30년(2017~2047년)간 장래인구 전망 결과임

》고령화로의 인구구조변화 가속화

- 60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청장년층의 인구 부족문제 확대
 - 인구 중위 연령은 42.1세('17년) → 58.1세('47년), 전국 동기간 42세 → 56.8세



2) 충남의 장래 인구구조 변화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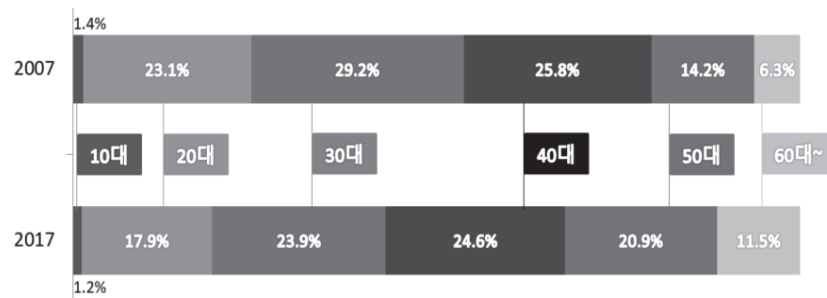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확대

- 2047년 충남의 고령인구(65세이상) 40%(93만명) 초과 전망(통계청, 2018)
 - 15세~64세의 생산연령인구 급감과 경제활동인구 축소(경제활동인구는 현재의 126만명 → 70만명 수준)
 - * 65세 고령인구 : 35만명(16.3%, 2017년)→ 93만명(40%, 2047년), 동기간 전국은 707만명(13.8%, 2017년) → 1,879만명(38.4%, 2047년)으로 확대
 - * 85세이상 초고령 인구 : 3.6만명(1.7%, 2017년) → 18.7만명(8.1%, 2047년), 동기간 전국은 60만명(1.2%, 2017년) → 366만명(7.5%, 2047년)
- (노동자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제약)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20년 이후 '노동'이 경제성장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
 - 경제성장률 추정(한국은행, 2017) : 3.9%(2000년~2015년) → 1.9%(2016년~2025년) → 0.4%(2026년~2035년)까지 하락 추정(26년~35년)
 - 인구감소로 2050년 한국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GDP기준) 밖으로 밀려날 것(EIU 전망, 2017)
 - *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 151만명(70.2%, 2017년)→117만명(50.7%, 2047년) 동기간 전국은 3,757만명(73.2%, 2017년) → 2,562만명(52.4%, 2047년)으로 30년간 1,195만명(-20.8%p) 감소 전망
 - * 주요경제활동인구(25세~49세) : 78만명(36.1%, 2017년)→ 51만명(22.1%, 2047년)

>> 급속한 고령화 정책의 한계직면

- 은퇴지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청년 취업 확대 등의 전통적인 대응 방식은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기에 충분치 않음
 -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가 65세가 되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가 급증

[그림 2-48] 세대별 임금근로자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 2018.7

>> 단기적 청년층 고용정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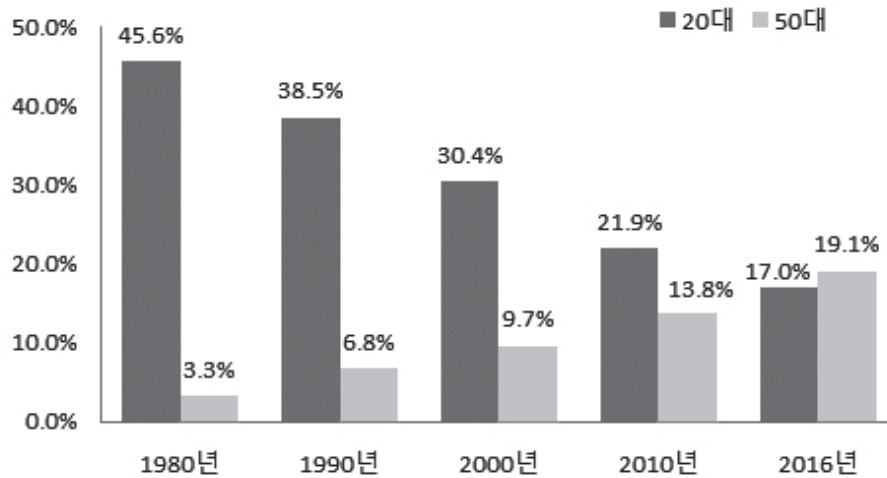
- 최근 20대, 30대 임금근로자 비중이 크게 감소, 고령화시대 대비 아직까지 청년중심의 노동정책은 유효
 - 취업준비생 등 광범위한 비경제활동인구로 인하여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의 2배를 상회
 - 1980년 전체 임금근로자 중 20대 임금근로자는 1980년 45.6%에서 2016년 17.0%로 대폭 감소되었으나, 50대 임금근로자는 1980년 3.3%에서 2016년 19.1%로 대폭 증가

〈표 2-13〉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경제 활동인구 (a)	체감 실업자 (b)				공식 실업률 (c/a)	체감 실업률 (b/(a+d))
		공식 실업자 (c)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잠재경제 활동인구 (d)		
4,333	1,122	426	79	618	9.8%	2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

[그림 2-49] 20대와 50대 임금근로자 비중 변화(198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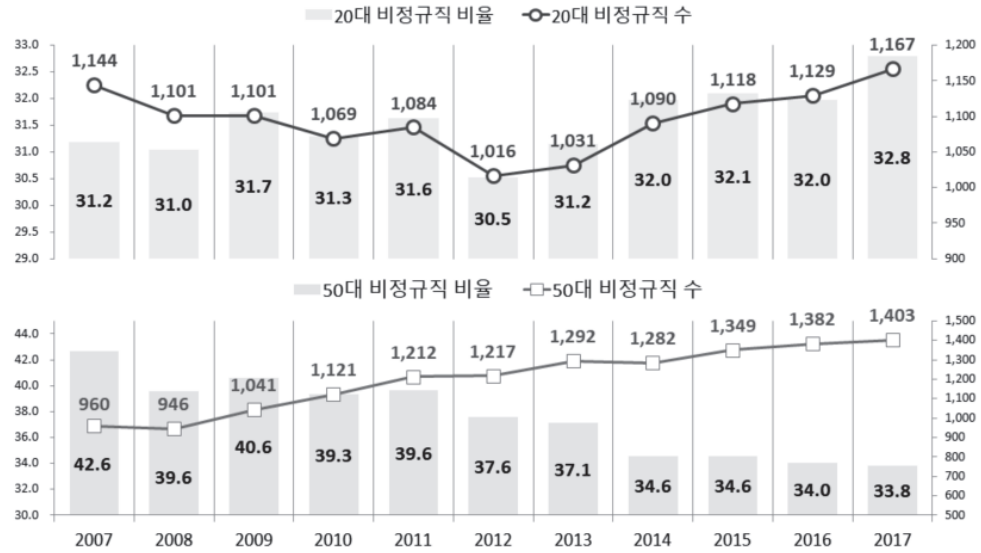


자료 : 한국경영자총연합회(2018)에서 재인용.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직종별임금실태조사, 임금 구조기본통계조사),

>> 고령화 확대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상존

- 최근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 정부의 정규직전환 등의 고용 강화는 적절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짐
- 고용강화정책의 방향과 함께 방법도 고려 필요
 - 2007~2017년 기간동안 20대와 50대 모두 비정규직 수는 지속적으로 상승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50대 중장년층이 20대 청년 임금근로자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향이 뚜렷(경영자총연합회))
 - 현 정규직 전환이 임금이 아닌 신분만 전환되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이 실제 임금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강구 필요 (소득 양극화 문제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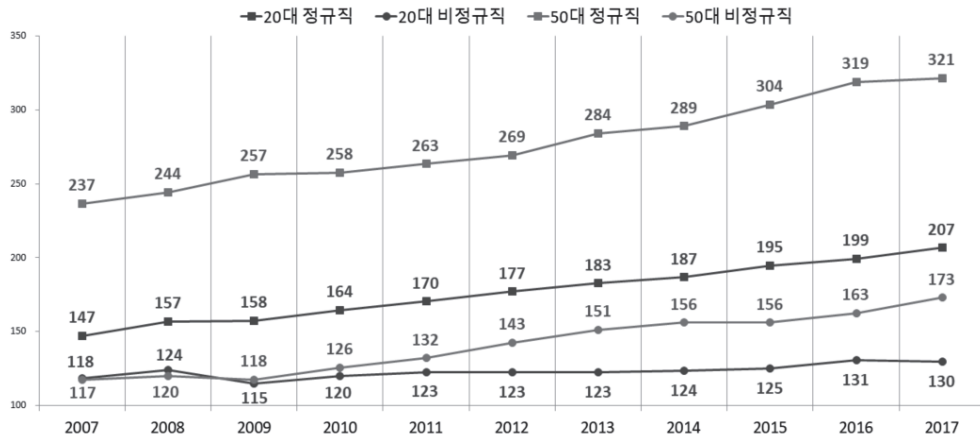
[그림 2-50] 20대와 50대 비정규직 및 비중(임금근로자 대비) 변화 추이



자료 : 한국경영자총연합회(2018)

* 주 : 2007~2017년 각 연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원시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층과 부모 세대인 50대 중장년층의 일자리 변화 추이 비교 · 분석(15세 미만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범위 외인 관계로 분석에서 제외)

[그림 2-51] 20대와 50대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변화



자료 : 한국경영자총연합회(2018)

* 주 : 2007~2017년 각 연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원시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층과 부모 세대인 50대 중장년층의 일자리 변화 추이 비교 · 분석(15세 미만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범위 외인 관계로 분석에서 제외)

>> 유소년인구 및 학령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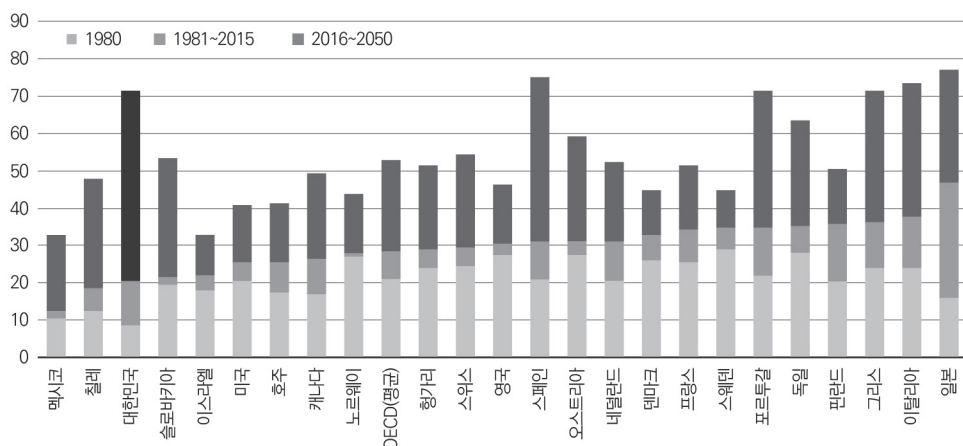
- 2047년 중남미의 유소년인구는 2017년 대비 8만명 감소, 학령인구는 12만명 감소
 - 0~14세 유소년인구 : 29만명(13.6%, 2017년) → 22만명(9.3%, 2047년), 동기간 전국은 672만명(13.1%, 2017년) → 450만명(9.2%, 2047년) 전망
 - 6~21세 학령인구 : 37만명(2017년) → 25만명(2047년)

>>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2047년 중남미의 총부양비는 97.4명, 유소년부양비는 18.4명, 노년요양비는 79명
 - 총부양비 42.5명(2017년) → 97.4명(2047년), 동기간 전국 36.7명 → 90.9명(유소년 17.6명, 고령자 73.3명)
 - ※ 총부양비 : 생산연령인구 1백명이 부양하는 유소년 및 고령 인구를 의미
 - 노령화 지수 : 120명(2017년) → 428.2명(2047년), 동기간 전국 105.1명 → 417.2명
 - ※ 노령화 지수 :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 의미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가 증가
 -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평균보다 약 20%p 높은 수준

[그림 2-52] OECD 회원국의 고령인구 부양비 : 추세와 전망(1980~2050년)

(단위 : %)



자료 : 이재준(2019)에서 재인용.(OECD, preventing ageing unequally,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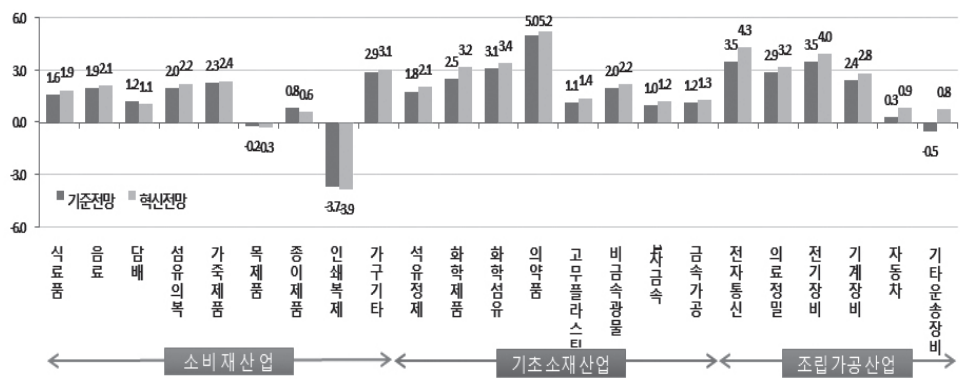
2. 충남의 주요 산업별 전망

1) 주요 산업별 성장전망

≫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성장 변화

- 4차산업혁명 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창출·소멸됨에 따라 직업구조에 큰 변화 예상
- (제조업 분야 2.4%성장 전망) 2030년까지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조립가공산업과 중간재·기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전망
 - 조립가공(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하는 전자통신과 전기장비), 기초소재(화학제품, 화학섬유, 의약품 등), 소비재산업(대체적으로 성장률이 약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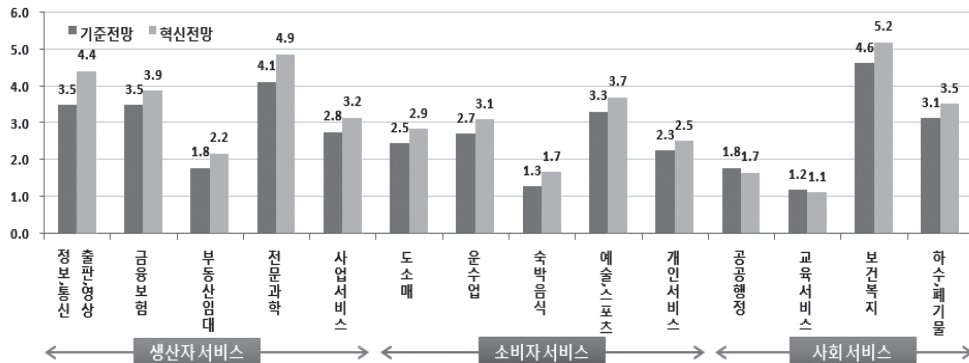
[그림 2-53] 제조업 세부산업별 실질성장률 증가 전망(%)



자료 :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2016~2030), 2018.3

- (서비스업분야 3.1%성장 전망)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확대되나, 세부산업별로는 성장속도 차이 존재
 - 생산자서비스(영상,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업 등), 소비자서비스(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개인서비스업 소득수준 향상으로 동반성장), 사회서비스(사회복지, 의료보건 등 사회서비스 전분야의 성장 전망)

[그림 2-54]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실질성장률 증가전망(% , 2030년 전망)



자료 :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추정(2016~2030), 2018.3

2) 산업별 취업자 성장전망 및 충남 특화업종분야 검토

》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전망

- 2030년까지 경제성장, 기술혁신, 일자리 대체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 총 12만명의 고용이 증가할 전망
 -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규산업 수요 확대로 46만명의 고용증가와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34만명 감소

》 업종별 고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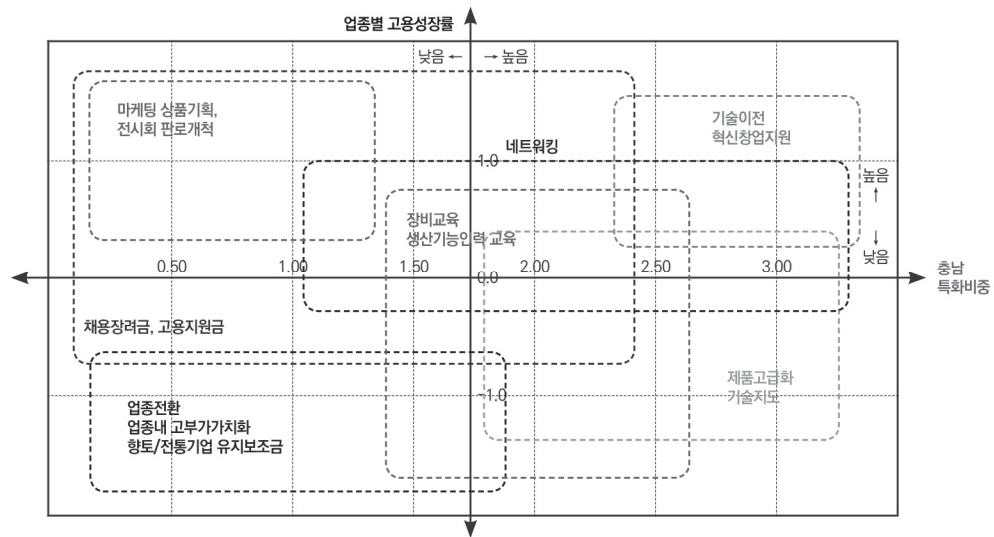
- (고용증가 산업)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관련 기반산업과 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등으로 일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
 - 정보·통신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전기·전자·기계산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문화·예술·스포츠 등
- (고용감소 산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금융업, 운수업(무인자동차 등의 확대) 등은 기술혁신 가속화로 취업자 수 감소
 -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공공행정, 금융서비스업, 운수업 등
- (고용유지 산업) 금속제품, 석유화학, 식료품 제조업 등은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변화는 크게 없음

- 금속제품, 석유화학, 식료품 제조업 등

>> 고용전망을 고려한 충남의 정책영역 검토

- 업종별 취업자수 성장전망은 충남과 전국이 동일하므로 충남의 업종, 산업별 특화수준(종사자수LQ¹⁹⁾)을 비교하여 정책접근 영역을 도출

[그림 2-55] 영역별 고용노동정책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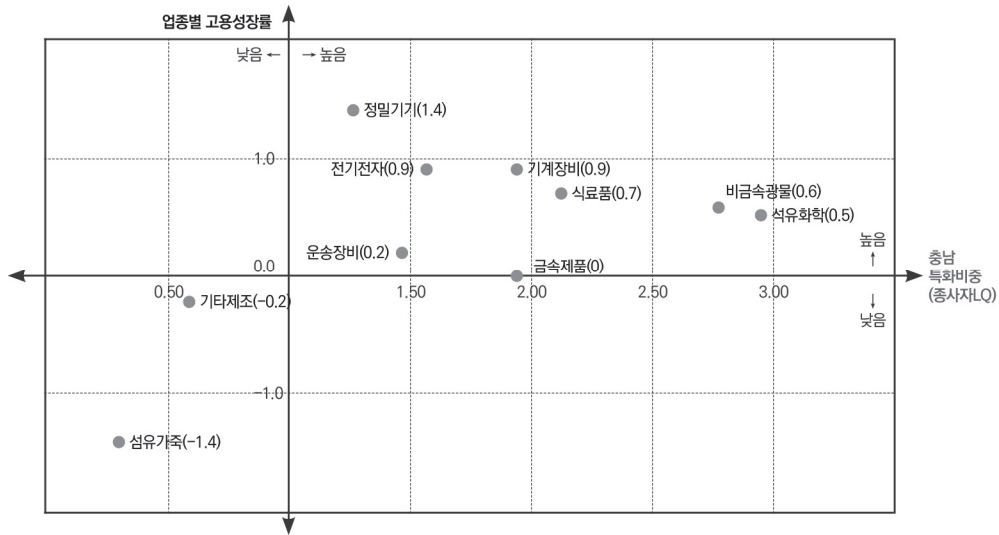


>> 업종별 취업자 성장전망과 충남 특화업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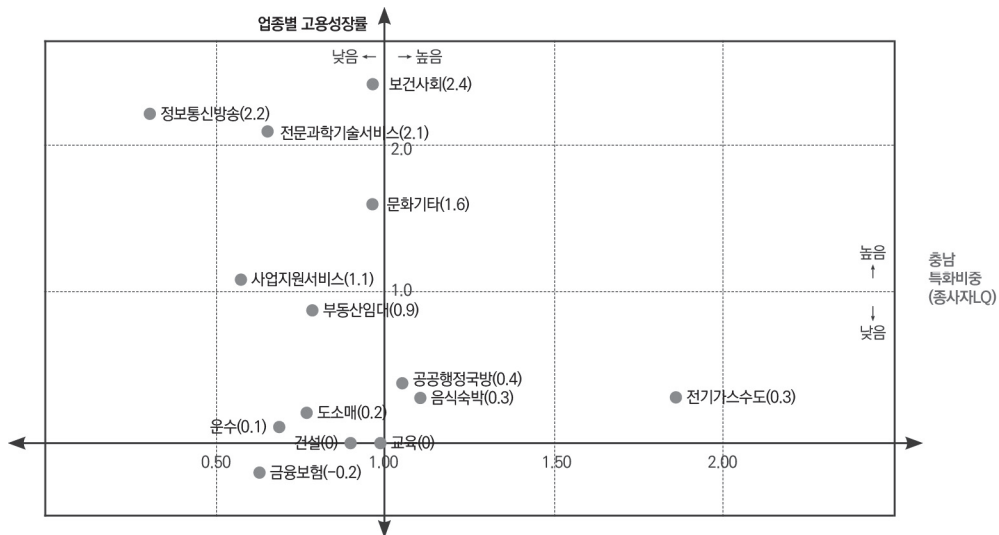
- 고용증가 업종과 고용감소업종(양극화 측면에서 취약계층으로서)에 대한 업종별 정책 검토
- 기존의 발달된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계장비, 전기전자, 정밀기기 등에 대한 정책과 이와 관련된 전문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 산업 확대 정책 필요
 - * (고용 및 지역특화 핵심업종)기계장비, 비금속광물, 식료품,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 * (고용감소 및 업종보호/전환 대상)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등
 - * (직종 및 지역특화 핵심분야)운송 및 기계, 전기 및 전자, 영상 및 통신장비 등
 - * (직종내 고용감소 및 업종보호/전환 대상)생산관리, 섬유 의복 및 가죽제조 등은 취약

19)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란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지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특화 산업을 분석할 때 사용 [LQ = 지역 X산업 비중 / 전국 X산업 비중]

[그림 2-56] 제조업 취업자전망과 충남의 종사자 특화(LQ)비중



[그림 2-57] 서비스업 취업자전망과 충남의 종사자 특화(LQ)비중



참고 : 2016~2030년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자 전망(고용노동부)

- * (기준전망)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최근 성장추이가 지속되는 상황
 - 기준전망은 '17.12월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2030년까지 확장
- * (혁신전망)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경제·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성장률을 반영

[2016~2030년 우리나라 업종]

구분	취업자 수			증감(2016~2030)		증감률(2016~2030)	
	2016년	2030년 (기준성장)	2030년 (혁신성장)	기준성장	혁신성장	기준성장	혁신성장
전체	26,235	28,099	28,217	1,863	1,982	0.49	0.52
식료품	376	418	417	42	41	0.8	0.7
섬유가죽	428	358	350	-70	-78	-1.3	-1.4
석유화학	487	524	519	37	32	0.5	0.5
비금속광물	134	146	146	12	12	0.6	0.6
금속제품	517	511	519	-6	1	-0.1	0.0
기계장비	464	509	524	45	61	0.7	0.9
전기전자	796	872	907	76	111	0.7	0.9
정밀기기	112	143	136	31	24	1.8	1.4
운송장비	708	756	732	47	24	0.5	0.2
기타제조	208	206	204	-2	-4	-0.1	-0.2
전기가스수도	89	99	94	10	4	0.7	0.3
건설	1,845	1,879	1,840	34	-5	0.1	0.0
도소매	3,729	3,891	3,825	162	96	0.3	0.2
운수	1,412	1,460	1,435	48	23	0.2	0.1
음식숙박	2,277	2,439	2,374	162	96	0.5	0.3
정보통신방송	786	947	1,069	162	284	1.3	2.2
금융보험	796	810	777	13	-20	0.1	-0.2
부동산임대	570	614	645	43	74	0.5	0.9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102	1,381	1,483	279	381	1.6	2.1
사업지원서비스	1,293	1,473	1,505	180	213	0.9	1.1
공공행정국방	993	1,113	1,057	120	64	0.8	0.4
교육	1,846	1,836	1,834	-9	-12	0.0	0.0
보건사회	1,851	2,521	2,582	670	730	2.2	2.4
문화기타	406	473	508	67	102	1.1	1.6
기타산업	3,009	2,719	2,737	-290	-272	-0.7	-0.7

제3장

충남의 사회 양극화 실태와 변화 동향

제1절 충남의 사회 변화와 사회양극화 실태 분석

제2절 충남 도민 특성별 삶의 질 실태분석

제3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충남의 사회 변화와 사회양극화 실태 분석

1. 충남 인구 사회적 특성

1) 인구 변화

≫ 총인구(2007~2018)

- 충청남도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2007년 1,995,531명에서 2018년 2,126,282명으로 증가
- 여성의 비율이 2007년 49.5%에서 2018년 49.2%로 감소

≫ 인구증가율

- 인구증가율은 2000년 0.21%, 2005년 0.5%, 2010년 2.07%로 증가하다가 2012년 -3.46%, 2015년 0.82%, 2018년 0.62%로 증가율 둔화

*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 연령별 인구 수(2018년, 내국인)

- 0~14세 인구는 288,606명(남성 148,390명, 여성 140,216명)
- 15~65세 미만 인구는 1,465,161명(남 775,822명, 여 689,339명)
- 65세 이상 인구는 372,515명(남성 157,797명, 여성 214,7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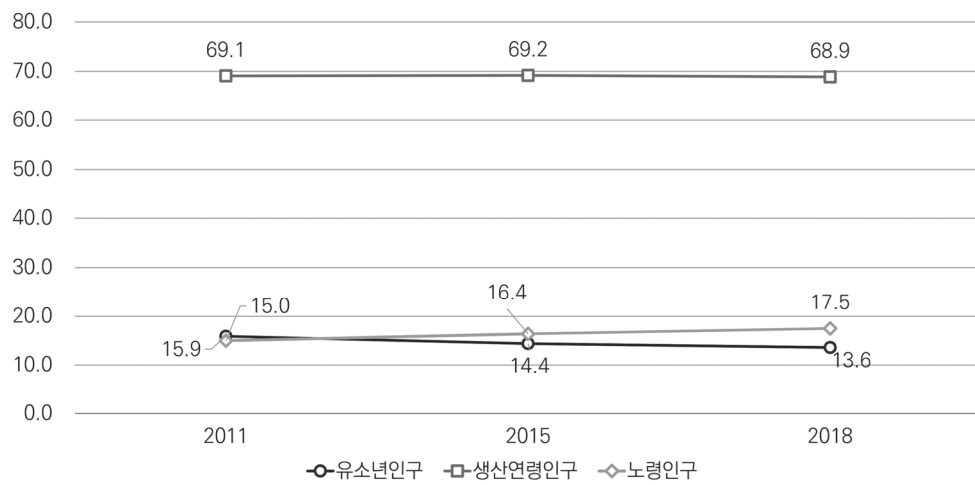
≫ 유소년, 생산연령 및 고령 인구 비율(2011~2018)

- 전체인구 중 유소년인구(15세 미만) 비율은 2011년 15.9%, 2015년 14.4%, 2018년 13.6%로 감소

- 생산연령인구(15~65세 미만) 비율은 2011년 69.1%, 2015년 69.2%로 상승하였다가 2018년 68.9%로 감소
- 반면에 노령인구(65세 이상)는 2011년 15.0%, 2015년 16.4%, 2018년 17.5%로 증가

[그림 3-1] 유소년, 생산연령 및 고령 인구 비율

(단위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 저출산·고령화 현황

》 성별 출생아 수 및 성비

- 출생아 수는 2010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추세
- 출생성비는 2005년 106.1명, 2010년 106.5명, 2015년 106.6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 105.2명으로 감소

〈표 3-1〉 출생아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여아	남아	출생성비
2005	8,427	8,939	106.1
2010	9,803	10,439	106.5
2015	9,006	9,598	106.6
2017	8,033	7,637	105.2

주 :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수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 합계 출산율 및 연령별출산율²⁰⁾(2000~2017)

-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80명에서 2017년 1.276명으로 하락
- 20대 출산율은 하락하고 30대 출산율이 증가
 - * 20~24세 출산율 : 2000년 57.7명 → 2017년 17.4명
 - * 25~29세 출산율 : 2000년 171.3명 → 2017년 75.7명
 - * 30~34세 : 2000년 80.2명 → 2017년 107.8명
 - * 35~39세 : 2000년 17.5명 → 2017년 45.3명

〈표 3-2〉 충남 합계출산율(2000~2017)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전국	1.480	1.085	1.226	1.239	1.052
충청남도	1.698	1.267	1.479	1.480	1.27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 연령별출산율 : 당해연도의 출생아수를 당해연령의 여자인구로 나눈 비율을 1,000분비로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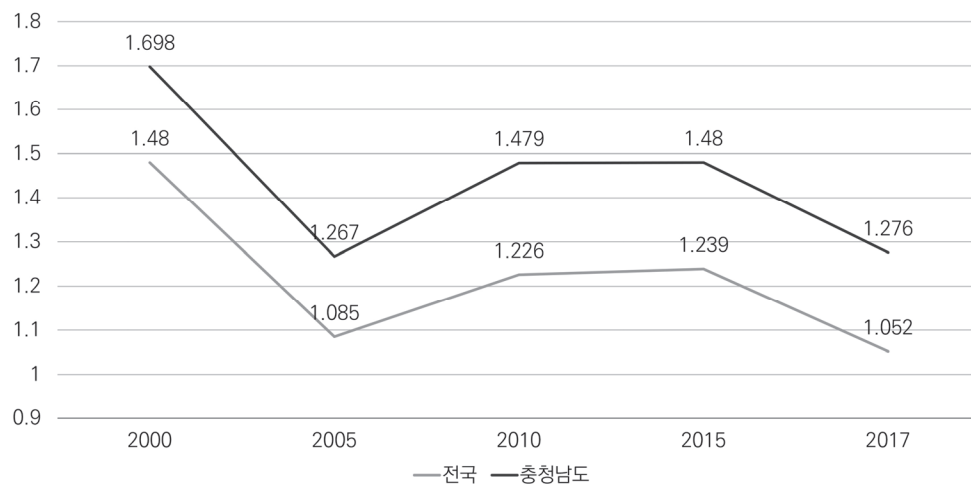
〈표 3-3〉 합계 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구분	연령별 출산율							합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0	4.9	57.7	171.3	80.2	17.5	2.8	0.3	1.698
2005	3.3	31.1	115.2	78.5	18.9	3.1	0.2	1.267
2010	2.6	29.7	116.8	112.9	31.0	4.2	0.3	1.479
2015	2.0	22.5	97.8	123.0	44.5	5.3	0.1	1.480
2016	2.0	20.4	85.4	118.6	45.8	5.2	0.2	1.395
2017	1.8	17.4	75.7	107.8	45.3	5.9	0.2	1.276

주 :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그림 3-2] 합계출산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부양 인구비 및 노령화 지수 (2011~2019)

- 총부양비는 2000년 47.1명에서 2019년 42.8명으로 감소
- 노년부양비는 2000년 17.5명에서 2019년 24.3명으로 증가
- 노령화지수는 2000년 59.1명에서 2019년 130.5명으로 증가
- 유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

〈표 3-4〉 충남 부양 인구비 및 노령화 지수(2000~2019)

(단위 : 명)

구분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2000	47.1	29.6	17.5	59.1
2005	48.0	27.6	20.4	74.0
2010	45.1	23.5	21.6	91.9
2015	42.7	20.3	22.4	110.4
2018	42.5	18.9	23.6	124.6
2019	42.8	18.6	24.3	130.5

주 : 1) 총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15세 미만)과 고령(65세 이상)인구의 수
 2) 유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15세 미만 인구 수
 3)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 수
 4)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14세)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인구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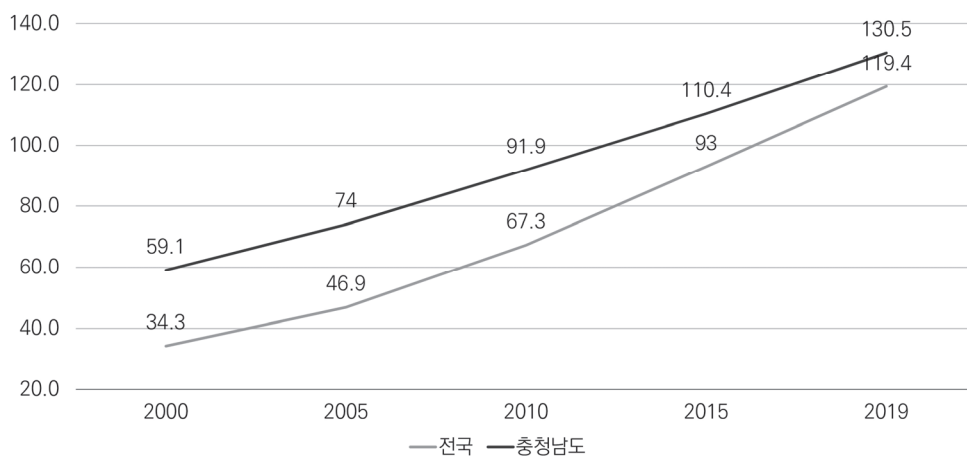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표 3-5〉 노령화지수(2000~2019)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전국	34.3	46.9	67.3	93	119.4
충청남도	59.1	74	91.9	110.4	130.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3-3] 노령화지수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충남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현황(2013~2018)

- 2019. 3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2018년 사망자수(15.8천명)가 출생아수(14.4천명)를 추월
- 2015년 이후 혼인 건수 감소(2015년 12.3천건, 2018년 11.0천건)

〈표 3-6〉 충남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현황(2013~2018)

(단위: 천 명, %)

충 남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출생아 수	누계	전년 누계비	사망자 수	누계	전년 누계비	혼인 건수	누계	전년 누계비	이혼 건수	누계	전년 누계비
2013년	18.6	-	-8.9	13.9	-	-1.0	12.5	-	-2.9	4.8	-	2.9
2014년	18.2	-	-2.3	14.1	-	2.1	12.0	-	-3.5	4.9	-	2.0
2015년	18.6	-	2.2	14.5	-	2.3	12.3	-	2.4	4.7	-	-3.9
2016년	17.3	-	-7.0	14.6	-	0.9	11.8	-	-4.4	4.7	-	-0.9
2017년	15.7	-	-9.2	15.3	-	4.9	11.0	-	-7.0	4.8	-	3.3
2018년p	14.4	-	-8.2	15.8	-	3.0	11.0	-	0.1	4.8	-	0.1

자료: 2019년 3월 인구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19.5.29.)

3) 가구·가족 변화

》 1인 가구 및 65세 이상 1인 가구 수(2017, 2018)

- 1인 가구는 2017년 259,727명에서 2018년 270,497명으로 증가
-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17년 72,498명에서 2018년 75,698명으로 증가
- 2018년 충남 65세 이상 1인가구 중 여성은 55,164명, 남성은 20,534명으로 여성 노인 1인가구가 남성 노인 1인가구의 2배 이상

〈표 3-7〉 충남 1인 가구 및 65세 이상 1인 가구(2017~2018년)

(단위 : 명)

성별	구분	2017	2018
계	1인가구	259,727	270,497
	65세 이상 1인가구	72,498	75,698
남성	1인가구	134,104	140,596
	65세 이상 1인가구	19,170	20,534
여성	1인가구	125,623	129,901
	65세 이상 1인가구	53,328	55,164

주 : 1) 일반 가구의 가구원(일반 가구원)을 대상으로 집계(혼인 상태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 단, 집단 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 시설 등), 특별 조사구(군인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1인 가구 비율

-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7.2%, 2005년 22.6%, 2010년 27.0%, 2015년 29.5%, 2018년 31.8%로 지속적으로 증가
- 2018년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9.3%이며, 충남은 31.8%로 전국 6위

〈표 3-8〉 충남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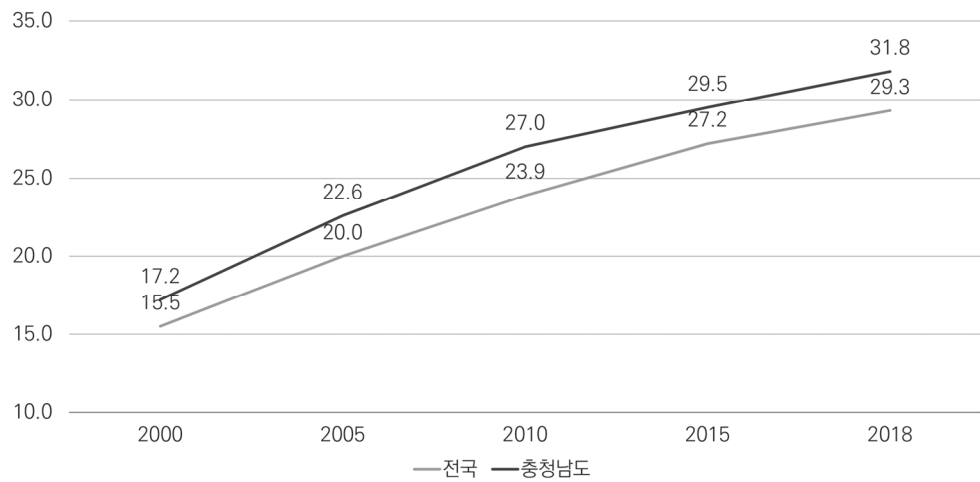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전국	15.5	20.0	23.9	27.2	29.3
충청남도	17.2	22.6	27.0	29.5	31.8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4] 1인가구 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독거노인 가구 비율

- 충남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2000년 5.9%, 2010년 8.5%, 2015년 8.2%, 2018년 8.9%로 증가
- 2018년 전국 독거노인 가구비율은 7.2%, 충남은 8.9%로 전국 6위

<표 3-9> 독거노인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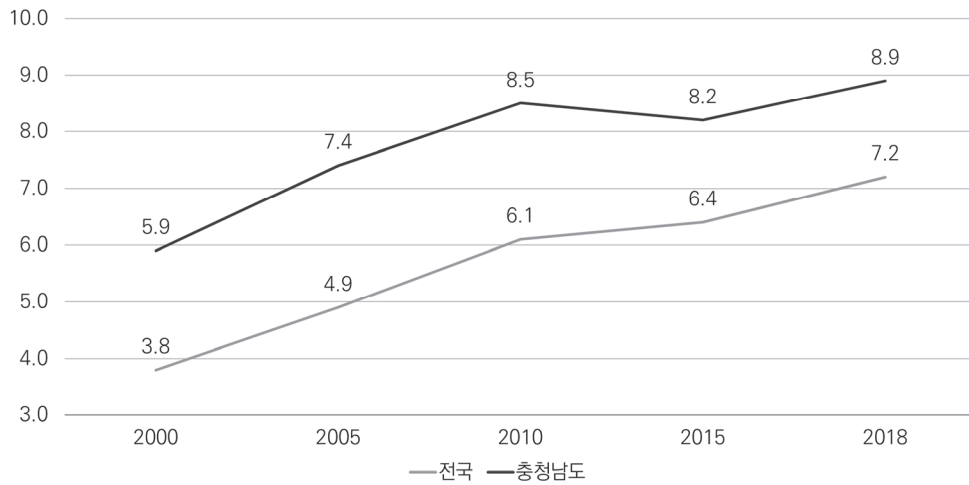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전국	3.8	4.9	6.1	6.4	7.2
충청남도	5.9	7.4	8.5	8.2	8.9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5] 독거노인가구 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2018년)

- 2018년 기준 가구원 모두 65세 이상인 가구 수는 135,377가구

>> 장애인 현황(2018, 등록장애인 기준)

- 충남 장애인 수는 총 131,910명으로 남성 75,727명, 여성 56,183명
- 충남의 장애인 수는 전국 8위

〈표 3-10〉 충남 등록장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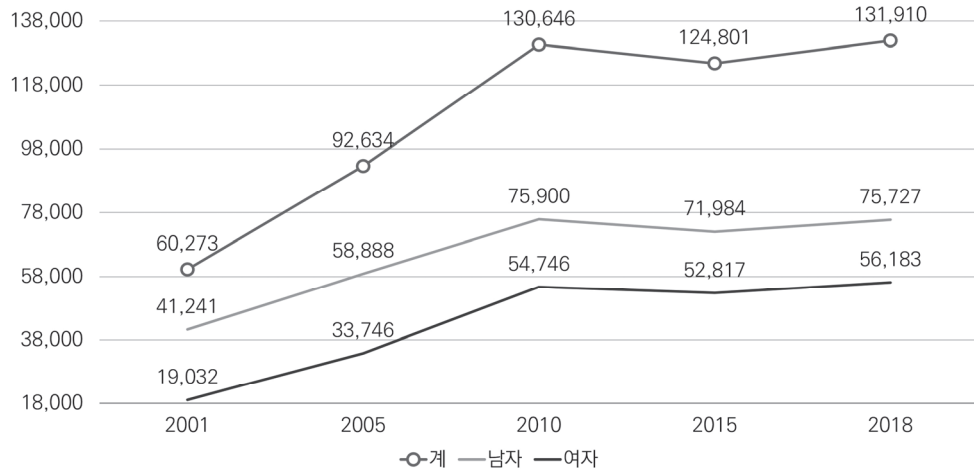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01	2005	2010	2015	2018
계	60,273	92,634	130,646	124,801	131,910
남성	41,241	58,888	75,900	71,984	75,727
여성	19,032	33,746	54,746	52,817	56,183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그림 3-6] 충남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 한부모가족 현황

- 2018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충남 한부모 가구는 16,890가구

<표 3-11> 충남 한부모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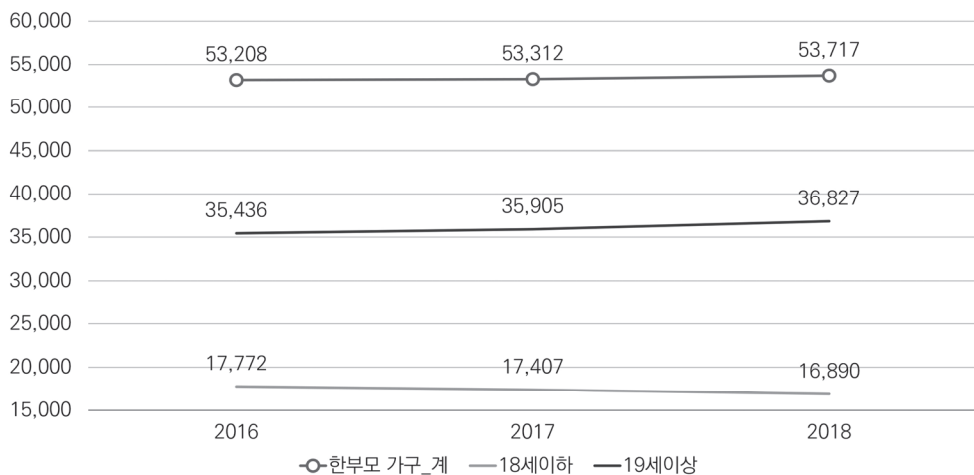
(단위 : 가구)

항목	2016	2017	2018
한부모 가구	53,208	53,312	53,717
18세이하	17,772	17,407	16,890
19세이상	35,436	35,905	36,827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7] 충남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 가구)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4) 아동·청소년 현황

>> 충남 아동 및 청소년 수

- 0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아동 및 청소년 전체를 합한 인구를 보면 2008년 약 59.8만명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10년 후인 2018년 현재는 53만명 정도로 6.8만명 감소
- 0~18세 미만에 이르는 아동인구는 2008년 42.7만명이었고, 2018년에는 35.2만명으로 7.5만명 가량 감소
- 9~24세에 이르는 청소년 인구는 2008년 41.1만명에서 2018년 36.0만명으로 5.1만명 가량 감소

〈표 3-13〉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인구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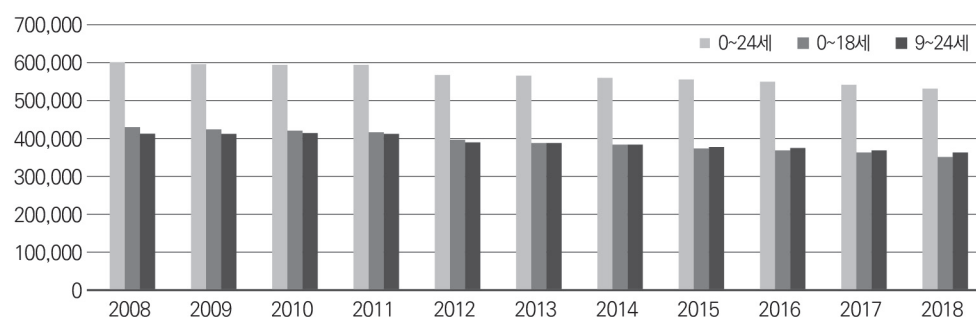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0~24세인구			0~18세 미만 인구			9~24세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8	598,416	312,757	285,659	427,574	223,270	204,304	410,916	215,666	195,250
2009	594,781	310,168	284,613	423,034	220,793	202,241	412,491	215,957	196,534
2010	594,034	309,548	284,486	419,355	218,387	200,968	413,073	216,106	196,967
2011	593,789	309,476	284,313	416,209	216,621	199,588	410,726	215,019	195,707
2012	567,208	295,914	271,294	394,611	204,956	189,655	390,225	204,570	185,655
2013	564,205	294,493	269,712	388,503	201,441	187,062	386,869	203,037	183,832
2014	559,180	292,365	266,815	380,830	197,332	183,498	381,415	200,605	180,810
2015	555,035	290,000	265,035	374,044	193,823	180,221	377,004	198,166	178,838
2016	549,122	286,781	262,341	368,267	190,319	177,948	373,106	196,397	176,709
2017	541,151	282,763	258,388	362,295	187,059	175,236	367,599	193,671	173,928
2018	530,011	276,942	253,069	352,133	181,501	170,632	360,666	190,196	170,47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3-9]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인구 (2008~2018)

(단위: 명)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아동 학대 현황

-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많은 지역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순

〈표 3-14〉 충청남도 시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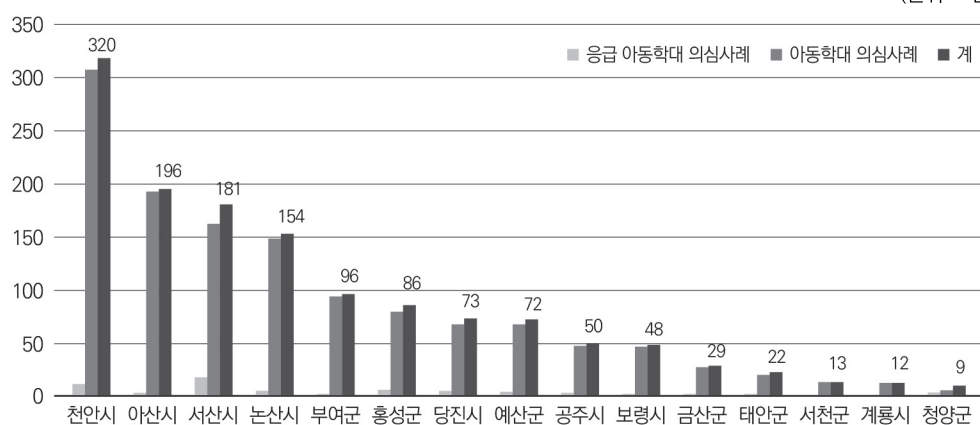
(단위 : 건)

시군구별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계	아동인구수
천안시	11	309	320	120,742
아산시	3	193	196	63,622
서산시	18	163	181	30,517
논산시	5	149	154	16,258
부여군	2	94	96	7,296
홍성군	6	80	86	16,132
당진시	5	68	73	29,793
예산군	4	68	72	8,714
공주시	3	47	50	13,218
보령시	2	46	48	13,725
금산군	2	27	29	6,554
태안군	2	20	22	7,154
서천군	0	13	13	5,551
계룡시	0	12	12	27,128
청양군	3	6	9	3,089
계	66	1,295	1,361	369,493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그림 3-10] 충청남도 시군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17)

(단위 : 건)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

- 2000년 3,441명에서 2011년 2,695명으로 최대의 수치를 보이다가 2017년 현재 1,809명으로 감소 추세(학생수의 감소)
- 학업중단율은 2000년 1.1%에서 2017년 0.7%로 약간 감소
- 교급별로 보면 2017년 기준 고등학교는 1.5%로 가장 많고, 중학교 0.5%, 초등학교 0.4% 순

〈표 3-15〉 충청남도 학업중단자 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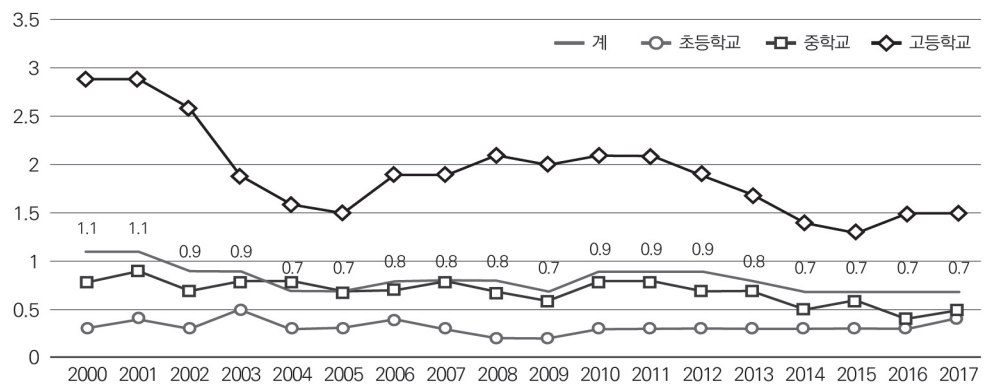
(단위: 명, %)

학년도	학업중단자				학업중단율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0	3,441	396	606	2,439	1.1	0.3	0.8	2.9
2001	3,478	588	642	2,248	1.1	0.4	0.9	2.9
2002	2,794	409	489	1,896	0.9	0.3	0.7	2.6
2003	2,653	758	546	1,349	0.9	0.5	0.8	1.9
2004	2,084	449	543	1,092	0.7	0.3	0.8	1.6
2005	2,119	525	550	1,044	0.7	0.3	0.7	1.5
2006	2,383	552	552	1,279	0.8	0.4	0.7	1.9
2007	2,481	536	610	1,335	0.8	0.3	0.8	1.9
2008	2,464	374	556	1,534	0.8	0.2	0.7	2.1
2009	2,200	254	461	1,485	0.7	0.2	0.6	2.0
2010	2,652	403	620	1,629	0.9	0.3	0.8	2.1
2011	2,695	422	656	1,617	0.9	0.3	0.8	2.1
2012	2,436	407	566	1,463	0.9	0.3	0.7	1.9
2013	2,143	371	490	1,282	0.8	0.3	0.7	1.7
2014	1,745	349	384	1,012	0.7	0.3	0.5	1.4
2015	1,723	363	367	993	0.7	0.3	0.6	1.3
2016	1,734	403	267	1,064	0.7	0.3	0.4	1.5
2017	1,809	492	271	1,046	0.7	0.4	0.5	1.5

주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학생수 × 100 / 주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학생수는 해당학년도 4월 1일 기준이며, 학업중단자는 해당학년도 3월~차년도 2월 기준) / 주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 주4.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 주5.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그림 3-11] 충청남도 교급별 학업중단율 (2000~2017)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 자살 청소년 수

- 아동청소년 자살자 수는 2000년 11명에서 증가와 감소의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8명

〈표 3-16〉 충청남도 자살 아동청소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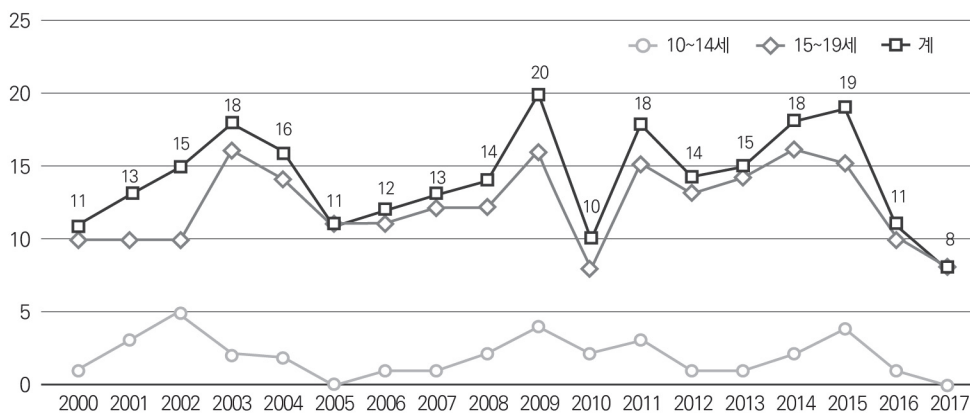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10 ~ 14세			15 ~ 19세			합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00	1	1	0	10	6	4	11	7	4
2001	3	1	2	10	5	5	13	6	7
2002	5	2	3	10	7	3	15	9	6
2003	2	0	2	16	11	5	18	11	7
2004	2	0	2	14	11	3	16	11	5
2005	0	0	0	11	9	2	11	9	2
2006	1	1	0	11	5	6	12	6	6
2007	1	0	1	12	8	4	13	8	5
2008	2	1	1	12	5	7	14	6	8
2009	4	2	2	16	10	6	20	12	8
2010	2	0	2	8	1	7	10	1	9
2011	3	2	1	15	12	3	18	14	4
2012	1	1	0	13	8	5	14	9	5
2013	1	1	0	14	8	6	15	9	6
2014	2	0	2	16	9	7	18	9	9
2015	4	1	3	15	9	6	19	10	9
2016	1	1	0	10	6	4	11	7	4
2017	0	0	0	8	3	5	8	3	5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그림 3-12] 충청남도 자살 아동청소년수 (2000~2017)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양육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 보호아동을 위한 양육시설수를 보면 15개소 내외를 보이고 있고, 2017년 현재는 14개소
- 입소아동수는 약간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2017년 현재는 166명
- 퇴소자도 동일한 추세를 보여 2017년의 경우 145명
- 생활인수는 상당수 감소하여 2000년 825명에서 2017년 현재 634명

〈표 3-17〉 충청남도 양육시설 및 보호아동 수

(단위 : 개소, 명)

항목	시설수 (개소)	입소자	퇴소자	생활인수
2000	15	212	197	825
2002	16	208	199	878
2003	16	230	184	924
2004	15	165	169	920
2005	15	110	129	901
2006	15	106	131	876
2007	15	86	105	857
2008	15	99	105	851
2009	15	123	125	849
2010	15	81	136	794
2011	15	98	107	785
2012	14	94	117	702
2013	14	91	121	673
2014	14	115	165	623
2015	14	122	109	636
2016	14	129	130	635
2017	14	166	145	634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현황 보고)

>> 가정위탁 현황

- 가정위탁아동 세대 및 아동수를 보면 2010년 471세대 656명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여 2018년 현재는 466세대, 610명
- 대리양육위탁가정이 가장 많으며 2018년 현재 307세대, 418명이고, 그 다음은 친인척 위탁가정으로 115세대, 142명
- 일반위탁가정은 가장 적은 44세대, 50명

〈표 3-18〉 충청남도 가정위탁 현황

(단위 : 세대, 명)

위탁가정 유형별	구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세대수	471	1,160	441	450	500	503	472	460	466
	아동수	656	1,551	606	615	664	669	619	604	610
대리양육가정	세대수	281	887	304	304	334	342	320	308	307
	아동수	411	1,203	426	431	462	472	437	420	418
친인척 위탁가정	세대수	151	212	107	117	122	119	114	113	115
	아동수	195	268	143	149	154	151	139	138	142
일반 위탁가정	세대수	39	61	30	29	44	42	38	39	44
	아동수	50	80	37	35	48	46	43	46	50

자료 :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2. 충남 도민 삶의 질 분석

1) 분석개요

(1) 분석 내용

>> '국민 삶의 질' 지표 및 '사회조사' 지표 검토

- 시도별 비교가 가능한 충남지역 열위지표 도출
- 광역 순위 파악은 가능하나, 계층·연령 분석자료 미제공

>> 사회통합 주요 지표 분석

-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도민 희망 고려
- 10년 후, 4차 산업혁명시대 주역으로 활동할 차세대(청소년·청년) 계층상승, 사회자본 강화 고려

* 본인 계층이동 가능성(2017년 사회조사 : 전국 22.7%, 충남 22.5%)

* 다음세대 계층이동 가능성(2017년 사회조사 : 전국 29.5%, 충남 31.8 %)

>> 도정 주요 관리 지표 검토

- 충남 지속가능발전 지표
- 충남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관리 지표
- 충남 지역보건의료 중장기계획 관리 지표 등

>> 그 외 민간 조사연구 자료 검토

- 한국 아동 삶의 질 지수 등

2) 충남 주요 삶의 질 지표 현황

(1) '국민 삶의 질' 지표 분석을 통해 본 충남 도민 삶의 질

》 가족·공동체

- 독거노인 비율(역순) 지표는 2017년 8.7%, 2018년 8.9%로 전국 6위
- 사회단체참여율 지표는 2017년 43.2%, 전국 16위에서 2019년 68.0%, 전국 8위로 향상

》 교육

- 교육분야 삶의 질 지표로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충남은 전국평균 대비 가장 낮은 수준임.
 - 2018년 전국 평균 29.1만원, 충남 18.7만원으로 충남은 전국 17위

〈표 3-19〉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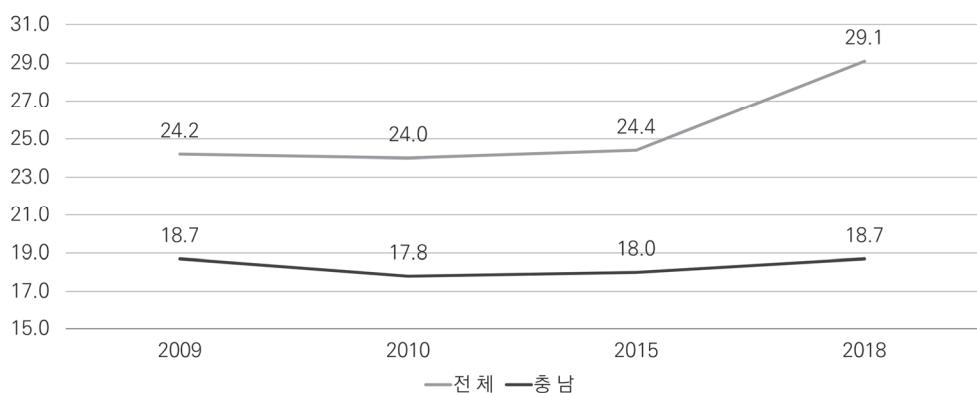
(단위 : 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5년	2018년
전체	24.2	24.0	24.4	29.1
충청남도	18.7	17.8	18.0	18.7

자료 : 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그림 3-1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자료 : 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여가

- 여가시간은 평일 3.3시간, 11위, 주말 5.2시간, 9위(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여가시간 충분도는 평일 35.6%, 주말 47.9%로 전국 16위(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여가활용만족도는 최근 하락 후 상승, 2017년 24.2%, 전국 14위에서 2019년 28.2%로 전국 12위로 상승

〈표 3-20〉 충남 여가활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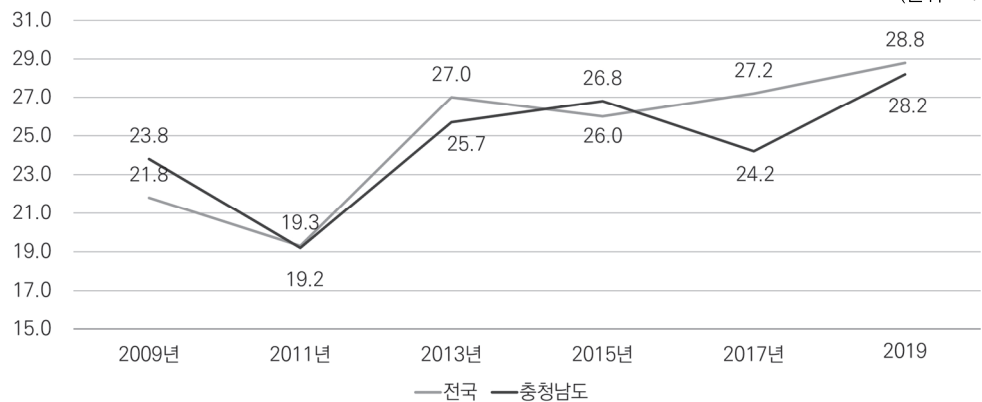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전국	21.8	19.3	27.0	26.0	27.2	28.8
충청남도	23.8	19.2	25.7	26.8	24.2	28.2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3-14] 여가활용만족도

(단위 :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는 최근 하락 후 상승, 2017년 7.6%, 전국 17위에서 2019년 8.0%, 전국 공동 10위로 상승

〈표 3-21〉 충남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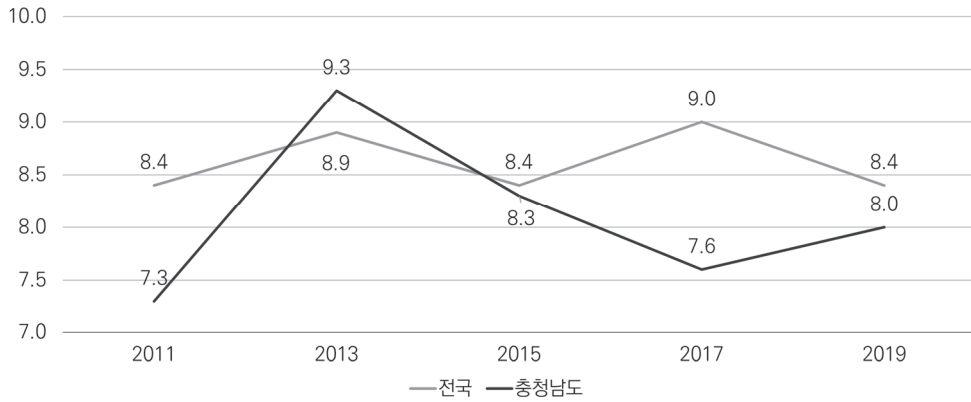
(단위 : 회)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전국	8.4	8.9	8.4	9.0	8.4
충청남도	7.3	9.3	8.3	7.6	8.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3-15] 문화예술스포츠 관람횟수

(단위 : 회)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고용·임금

- 충남의 근로시간(역순)은 전국 대비 많은 편이며, 2018년 182.6시간, 2019년 187.3시간으로 모두 전국 2위

〈표 3-22〉 충남 근로시간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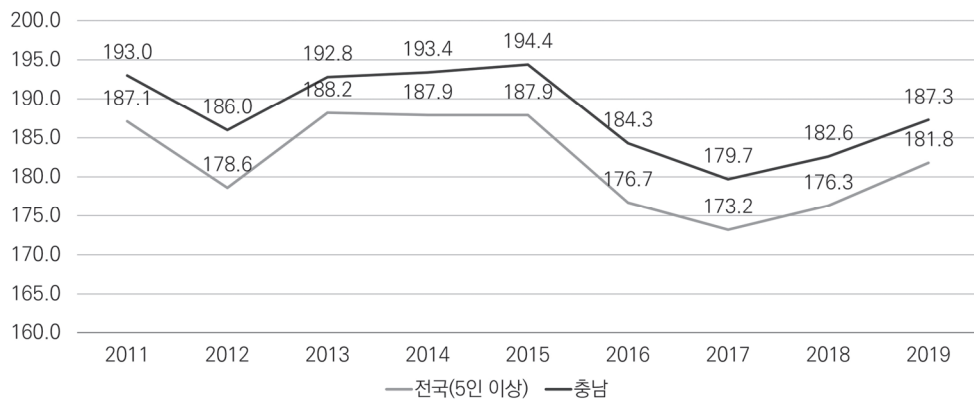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5인이상)	187.1	178.6	188.2	187.9	187.9	176.7	173.2	176.3	181.8
충청남도	193.0	186.0	192.8	193.4	194.4	184.3	179.7	182.6	187.3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 주 2. 각년도 자료는 4월 기준 자료

[그림 3-16] 충남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일자리만족도는 2017년 23.7%로 전국 16위였으나, 2019년 33.6% 전국 5위로 상승

〈표 3-23〉 충남 일자리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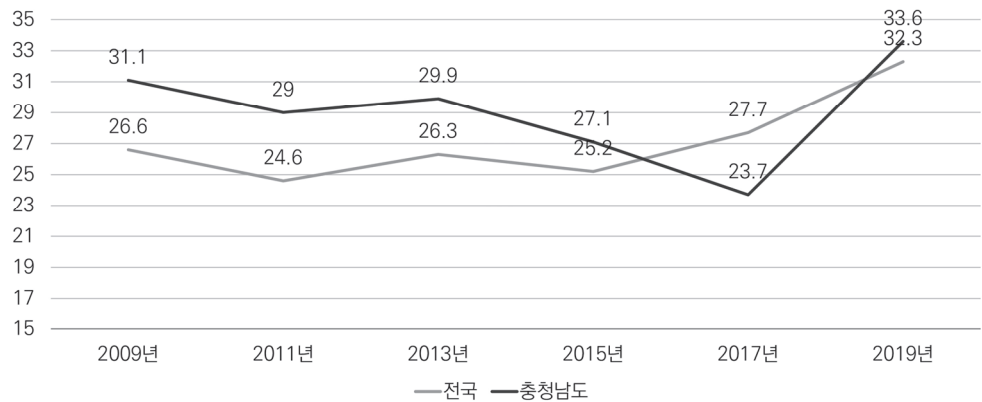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전국	26.6	24.6	26.3	25.2	27.7	32.3
충청남도	31.1	29	29.9	27.1	23.7	33.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3-17] 일자리만족도

(단위 :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소득 · 소비 · 자산

- 가구순자산 지표는 30,807만원으로 전국 14위(2018년)
- 소득만족도는 하락 후 상승하여 2017년 11.6%, 전국 13위에서 2019년 14.5%, 전국 8위로 상승

〈표 3-24〉 충남 소득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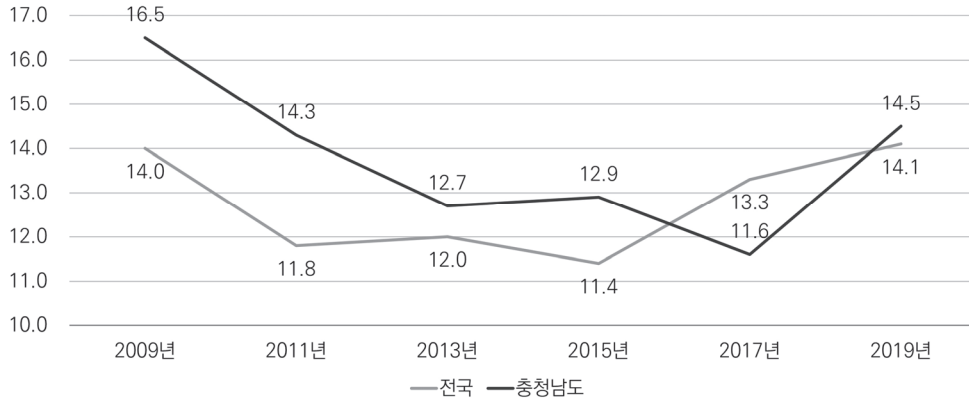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전국	14.0	11.8	12.0	11.4	13.3	14.1
충청남도	16.5	14.3	12.7	12.9	11.6	14.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3-18] 소득만족도

(단위 :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소비생활만족도는 하락 후 상승, 2017년 12.1%, 전국 16위에서 2019년 15.9%, 전국 13위로 상승

〈표 3-25〉 소비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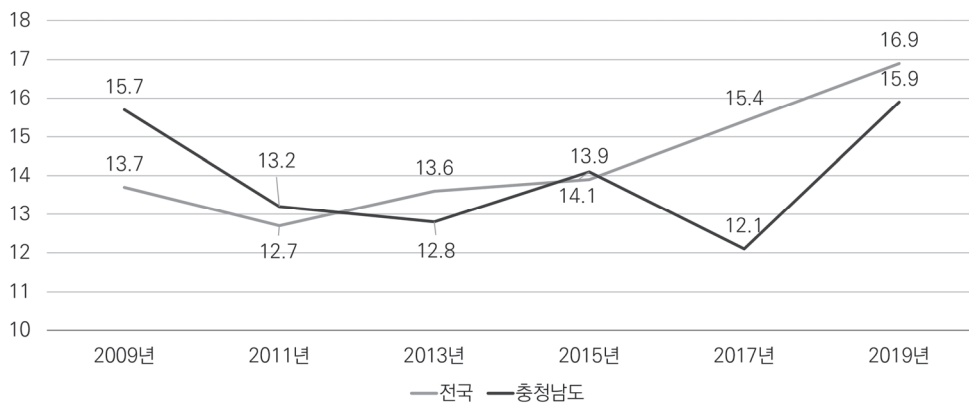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전국	13.7	12.7	13.6	13.9	15.4	16.9
충청남도	15.7	13.2	12.8	14.1	12.1	15.9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3-19] 소비생활만족도

(단위 :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건강

- 기대여명 지표는 82.2년으로 전국 9위(2017년)
- 비만율 지표는 32.1%로 전국 13위(역순 6위)(2018년)
- 고혈압(역순)은 19.5%로 전국 5위(2018년)
- 당뇨(역순)는 7.8%로 전국 9위(2018년)
- 충남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역순)은 35.5명으로 전국 1위(2018년)
 - 남성의 자살률(50.9명)이 여성(19.6명)의 2배 이상 높은 편
- 65세 이상 자살률 지표는 62.6명(인구 10만명당)으로 전국(48.6명)보다 높은 편(2018년)
 - 15~64세 35.8명(십만명당), 65세 이상 62.6명(십만명 당)
 - 65세 이상 남성 101.9(십만명 당)

〈표 3-26〉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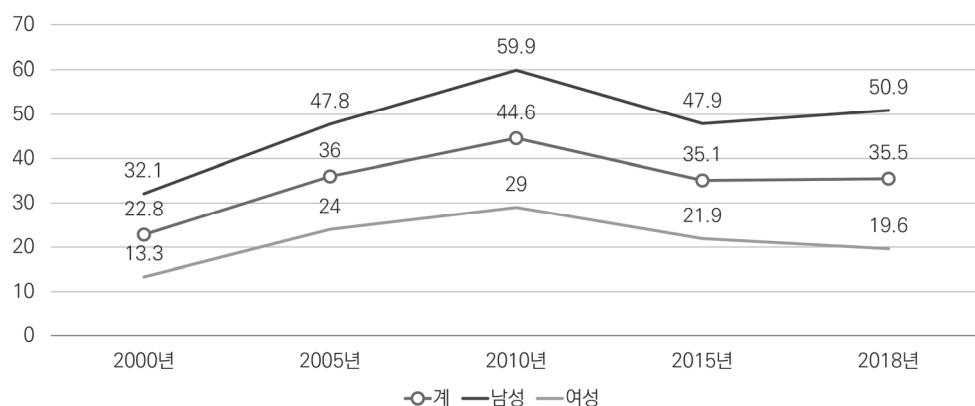
(단위 : 십만명당 명)

성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계	22.8	36.0	44.6	35.1	35.5
남성	32.1	47.8	59.9	47.9	50.9
여성	13.3	24.0	29.0	21.9	19.6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그림 3-20]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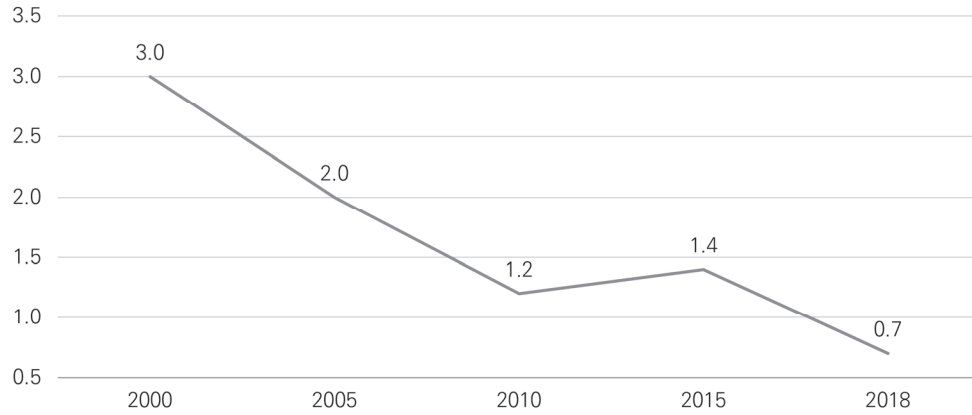
(단위 : 십만명당 명)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그림 3-22] 가해에 의한 사망률(타살)

(단위 : 명/십만명당)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아동안전사고사망률(아동십만명당 안전사고사망률) 지표는 2018년 4.5명으로 전국 1위

〈표 3-29〉 아동 안전사고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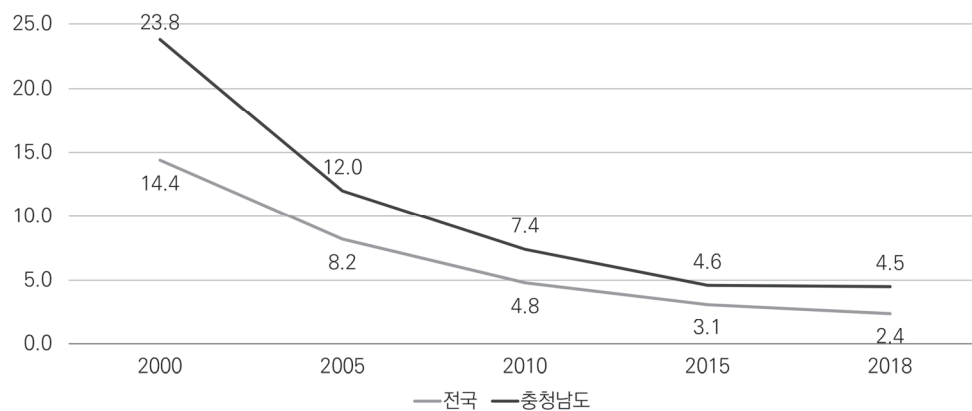
(단위 : 명/십만명당)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8
전국	14.4	8.2	4.8	3.1	2.4
충청남도	23.8	12.0	7.4	4.6	4.5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인구동향조사

[그림 3-23] 아동 안전사고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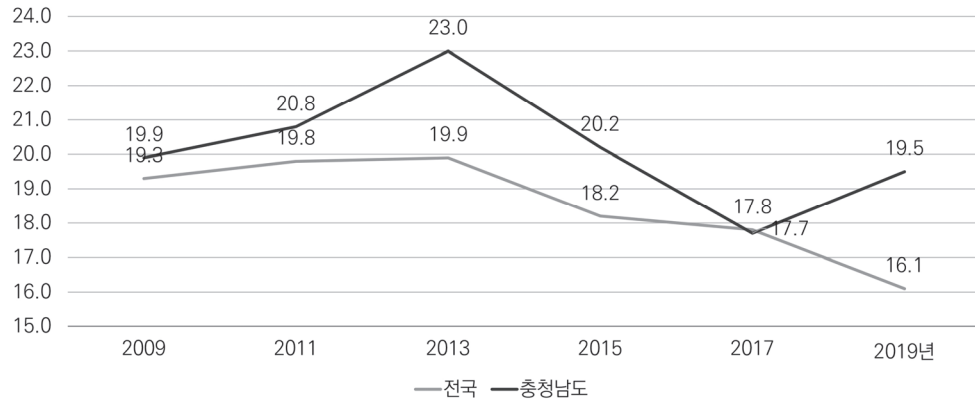
(단위 : 명/십만명당)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인구동향조사

[그림 3-25]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단위 :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긍정정서)는 최근 하락, 2017년 28.7%, 전국 11위에서 2019년 39.1%, 전국 9위로 변화

<표 3-32> 충남 도민 삶 만족도(긍정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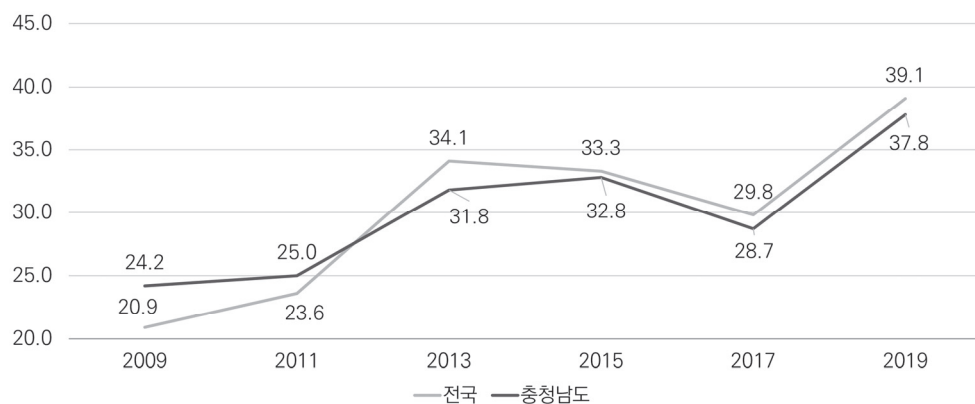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국	20.9	23.6	34.1	33.3	29.8	39.1
충청남도	24.2	25.0	31.8	32.8	28.7	37.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3-26] 삶의 만족도(긍정정서)

(단위 :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분석을 통해 본 충남 도민 삶의 질²¹⁾

>> 보건(건강)

- 규칙적 운동, 성인 흡연, 유병률, 건강검진 등 열위 수준

〈표 3-33〉 사회조사(보건 분야) 총괄

영역	지표명	연도	전국 평균	충남 평균	충남 순위	비고
보건	주관적 건강평가(%)	2018	48.7	50.9	4	(매우 좋음+좋은편)으로 응답한 비율
	건강관리(아침식사 실천)	2018	67.3	71.5	4	실천함 응답비율
	건강관리(규칙적 운동 실천)	2018	38.3	35.2	15	실천함 응답비율
	건강관리(정기 건강검진 실천)	2018	80.4	80.5	9	실천함 응답비율
	19세 이상 흡연(역순)	2018	20.3	21.1	6	피움 응답비율
	19세 이상 음주(역순)	2018	65.2	60.8	14	마심 응답자
	유병률	2018	27.5	30.0	7	(지난 2주일동안 아팠던 적 있음)
	스트레스 정도(직장생활)	2018	71.8	66.9	14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임)
	스트레스 정도(전반적인 생활)	2018	54.4	53.2	9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임)

- 음주율은 비열위이지만 절대 값은 높은 편(2018년 60.8%)
- 정기 건강검진 실천 저조(2018년 80.4%, 전국 9위)
- 유병률도 높은 편(2018년 30%, 전국 7위)
- 규칙적 운동 실천 저조(2018년 35.2%, 전국 15위)

〈표 3-34〉 충남 규칙적 운동 실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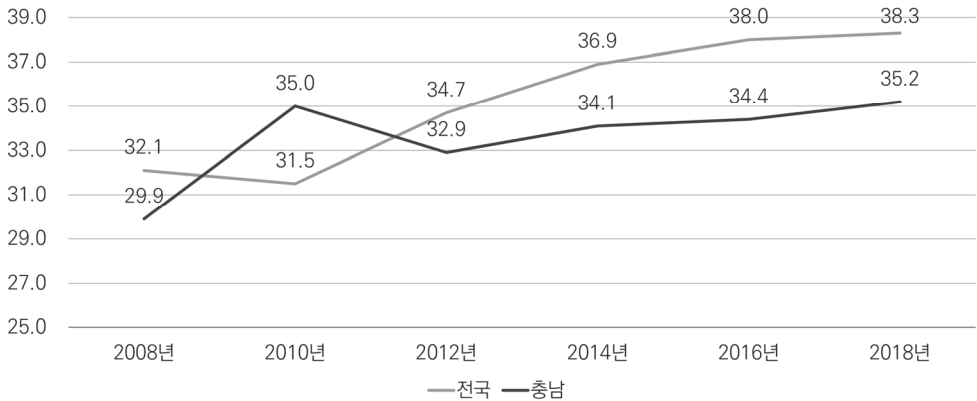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32.1	31.5	34.7	36.9	38.0	38.3
충남	29.9	35.0	32.9	34.1	34.4	35.2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1) 영역별로 격년 조사. 2017년 조사: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2018년 조사 :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그림 3-27] 충남 규칙적 운동 실천

(단위 :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가족

- 가족 영역 현황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

〈표 3-35〉 사회조사(가족 분야) 현황(총괄)

영역	지표명	연도	전국평균	충남평균	충남순위	비고
가구 와 가족	부모생활비주제공자	2018	55.5	49.1	16	(부모 스스로 해결)로 응답한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배우자)	2018	69.5	72.9	4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자녀관계)	2018	75.6	79.3	6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자기 부모 관계)	2018	67.0	70.3	6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배우자 부모 관계)	2018	56.4	58.7	6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자기 형제자매 관계)	2018	55.7	62.2	4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	2018	46.1	53.2	3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전반적 가족 관계)	2018	56.7	62.9	4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 부모생활비를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는 가구주 응답 비율은 2018년 49.1%로 전국 16위

〈표 3-36〉 부모생활비 주제공자(부모 스스로 해결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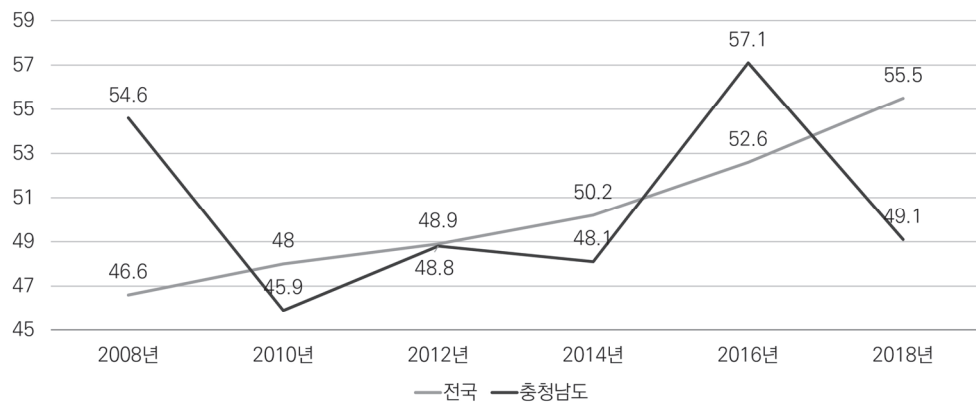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46.6	48.0	48.9	50.2	52.6	55.5
충청남도	54.6	45.9	48.8	48.1	57.1	49.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3-28] 부모생활비 주제공자(부모 스스로 해결 응답)

(단위 :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교육

- 학교 영역 지표 값 및 순위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편

〈표 3-37〉 사회조사(교육 분야) 현황(총괄)

영역	지표명	연도	전국평균	충남평균	충남순위	비고
교육	학교교육효과/ 지식기술습득	2018	46.8	50.9	8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학교교육효과/ 인격형성	2018	32.5	35.7	5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학교교육효과/ 국가사회관정립	2018	28.8	32.7	5 6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학교교육효과/ 생활직업취업 활용	2018	35.6	40.4	5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학교생활만족도/ 교육내용	2018	53.1	51.8	12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학교생활만족도/ 교육방법	2018	44.7	49.5	6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영역	지표명	연도	전국평균	충남평균	충남순위	비고
교육	학교생활만족도/ 교우관계	2018	76.6	74.6	12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학교생활만족도/ 교사(교수)와의 관계	2018	61.6	61.4	7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시설 및 설비	2018	47.4	46.7	10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학교생활만족도/ 학교 주변 환경	2018	47.1	47.3	10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학교생활만족도/ 소질과 적성 개발	2018	37.2	49.7	1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학교생활만족도/전공	2018	42.3	45.9	2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학교생활만족도/ 전반적인 학교생활	2018	58.0	59.7	7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 비열위지표의 경우에도 만족도가 30~50%로 높지 않은 편
 - 학교교육효과(인격형성) 지표는 35.7%(2018년)
 - 학교교육효과(국가사회관정립) 지표는 32.7%(2018년)
 - 학교교육효과(생활직업취업 활용) 지표는 40.4%(2018년)
 - 학교생활만족도(교육방법) 지표는 49.5%(2018년)
 - 학교생활만족도(소질과 적성 개발) 지표는 49.7%(2018년)
 - 학교생활만족도(전공)지표는 45.9%(2018년)
- 학교생활만족도(학교 시설 및 설비)는 2018년 46.78%로 전국 10위
- 학교생활만족도(학교 주변 환경)는 2018년 47.3%로 전국 10위
- 학교생활만족도(교우관계)는 2018년 74.6%로 전국 12위
- 학교생활만족도(교육내용)는 2018년 51.8%로 전국 12위

〈표 3-38〉 학교생활만족도(교육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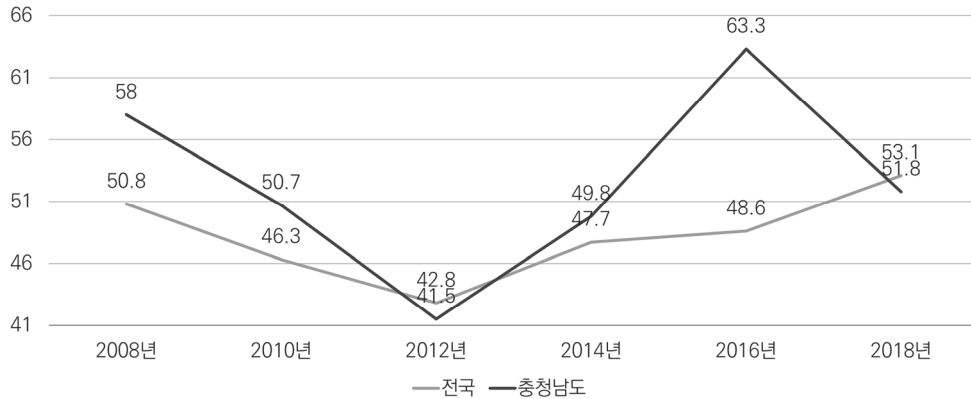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50.8	46.3	42.8	47.7	48.6	53.1
충청남도	58.0	50.7	41.5	49.8	63.3	51.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3-29] 학교생활만족도(교육내용)

(단위 :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노동

- 노동 분야 주관적 지표는 전반적으로 나쁜 수준

〈표 3-39〉 사회조사(노동) 현황(총괄)

영역	지표명	연도	전국평균	충남평균	충남순위	비고
노동	하는 일 만족도	2019	39.4	37.5	13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임금 만족도	2019	23.1	25.8	5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복리후생 만족도	2019	25.4	25.4	8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직장 장래성 만족도	2019	24.7	22.3	15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	2019	41.6	41.9	8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근로시간 만족도	2019	34.6	35.5	5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직장 내 교육훈련 기회 만족도	2019	32.3	33.2	8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직장 내 근무환경 만족도	2019	34.1	32.1	12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직장 전반적 만족도	2019	32.3	33.6	5	(매우만족+약간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 하는 일 만족도 지표는 37.5%로 전국 13위(2019년, 전국 평균 39.4%)
- 임금 만족도 지표는 25.8%로 전국 5위(2019년, 전국 평균 23.1%)
- 복리후생 만족도 지표는 25.4%로 전국 8위(2019년, 전국 평균 25.4%)
- 직장 장래성 만족도 지표는 22.3%로 전국 15위(2019년, 전국 평균 24.7%)
-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 지표는 41.9%로 전국 8위(2019년, 전국 평균 41.6%)
- 근로시간 만족도 지표는 35.5%로 전국 5위(2019년, 전국 평균 34.6%)
- 직장 내 교육훈련 기회 지표는 33.2%로 전국 8위(2019년, 전국 평균 32.3%)
- 직장 내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는 32.1%로 전국 12위(2019년, 전국 평균 34.1%)
- 직장 전반적 만족도 지표는 33.6%로 전국 5위(2019년, 전국 평균 32.3%)

〈표 3-40〉 직장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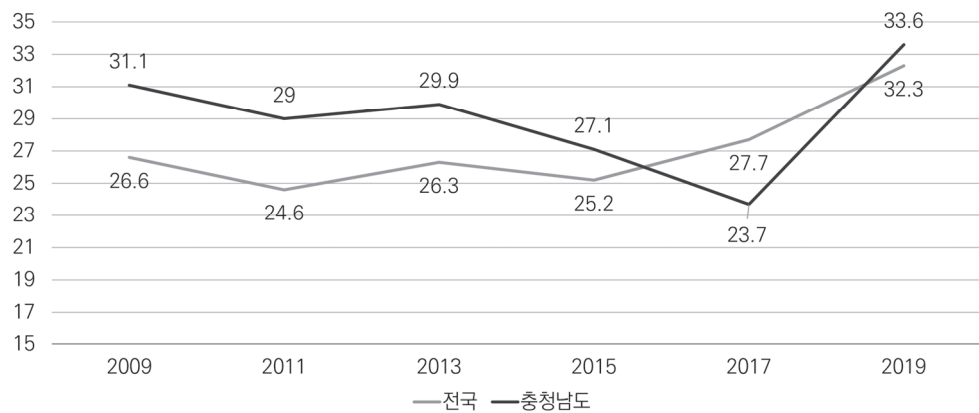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국	26.6	24.6	26.3	25.2	27.7	32.3
충청남도	31.1	29	29.9	27.1	23.7	33.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3-30] 근로여건만족도(전반적)

(단위 :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안전

- 안전 분야 지표는 국가안보 지표가 열위
- 비열위 경우에도 대체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지 않은 편

〈표 3-43〉 사회조사(안전) 현황(총괄)

영역	지표명	연도	전국평균	충남평균	충남순위	비고
안전	국가 안보	2018	31.1	31.6	9	(매우 안전+약간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
	자연재해	2018	22.7	29.1	2	(매우 안전+약간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
	건축물 및 시설물	2018	23.9	30.6	1	(매우 안전+약간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
	교통사고	2018	13.1	17.1	1	(매우 안전+약간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
	화재(산불 포함)	2018	21.0	30.6	1	(매우 안전+약간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
	범죄	2018	17.2	18.9	4	(매우 안전+약간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
	정보 보안	2018	17.5	18.6	8	(매우 안전+약간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
	식품 안전(먹거리)	2018	25.5	32.6	2	(매우 안전+약간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
	신종 전염병(질병)	2018	16.7	19.4	4	(매우 안전+약간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
	전반적 사회 안전	2018	20.5	23.8	4	(매우 안전+약간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

-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해 2018년 23.8%가 안전으로 응답, 전국 4위
- 국가안보 지표는 31.6%로 전국 9위(2018년, 전국 평균 31.1%)

>> 사회참여

〈표 3-46〉 사회조사(사회통합 분야) 현황(총괄)

영역	지표명	연도	전국평균	충남평균	충남순위	비고
사회 참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2019	16.1	19.5	3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
	기부 여부	2019	25.6	23.7	13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
	본인 계층이동 가능성	2019	22.7	22.0	11	(매우 높다 + 비교적 높다)로 응답한 비율
	다음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2019	28.9	27.3	15	(매우 높다 + 비교적 높다)로 응답한 비율

-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는 2019년 19.5%로 전국 3위
- 기부 여부 지표는 23.7%로 전국 13위(2019년, 전국 평균 25.6%)
- (본인 및 자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낮은 기대
 - 본인 계층이동 가능성 충남 22.0%, 전국 22.7%(2019년 사회조사)
 - 다음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충남 27.3%, 전국 28.9%(2019년 사회조사)

〈표 3-47〉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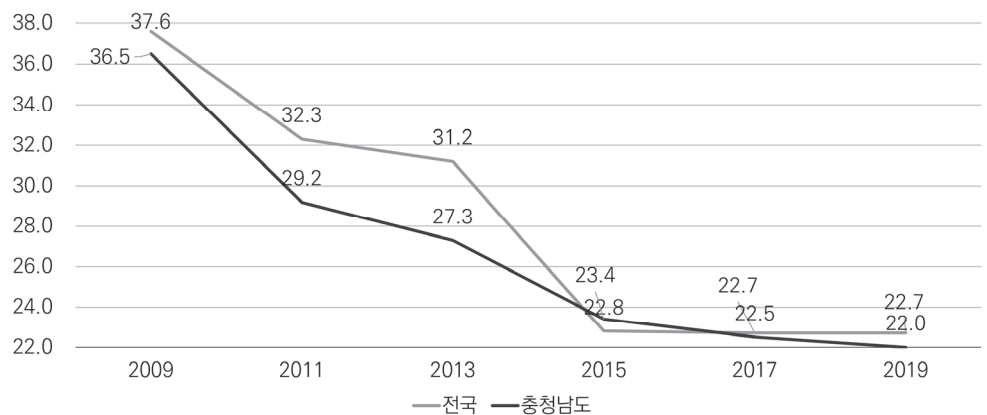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국	37.6	32.3	31.2	22.8	22.7	22.7
충청남도	36.5	29.2	27.3	23.4	22.5	22.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3-32]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단위 :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표 3-48〉 다음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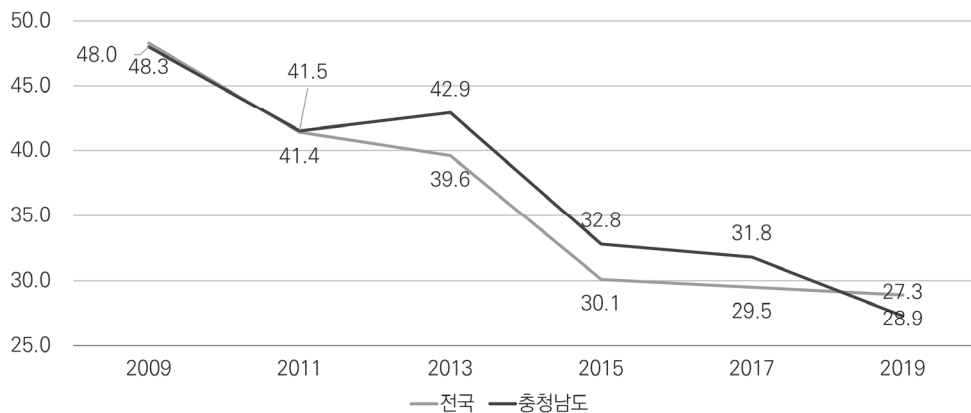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국	48.3	41.4	39.6	30.1	29.5	28.9
충청남도	48.0	41.5	42.9	32.8	31.8	27.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3-33] 다음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단위 :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3) ‘충남 사회지표’를 통해 본 도민의 삶²²⁾

》 주거환경

- 2018년 주거환경 만족도 중 휴식 공간(5.05점), 교육환경(5.07점), 병원 및 의료시설(5.19점) 만족도가 낮은 편

〈표 3-49〉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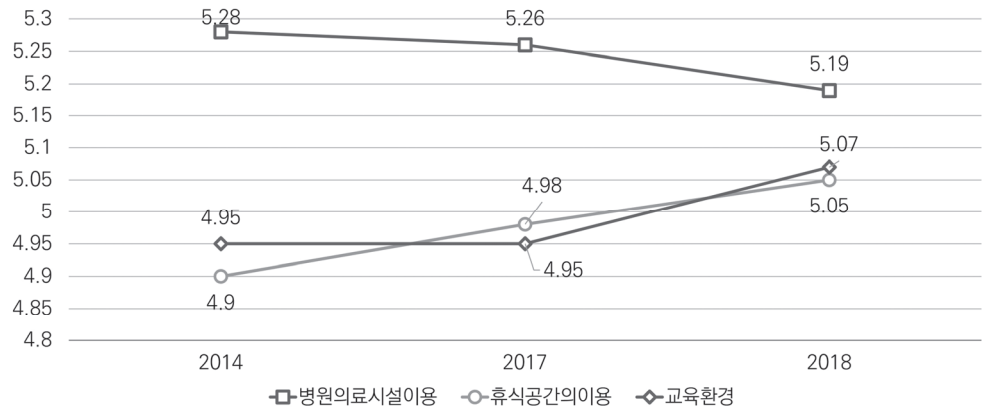
	2014	2017	2018
병원의료시설 이용	5.28	5.26	5.19
휴식공간의 이용	4.9	4.98	5.05
교육환경	4.95	4.95	5.07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사회조사

22) 건강, 인구, 가족가구, 교육, 노동, 소득소비 영역은 사회조사 및 E 지방지표 등과 중복하여 여기서는 생략. 통계청 사회조사와 같은 항목 제시는 생략

[그림 3-34]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점)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사회조사

>> 환경

- 2018년 환경체감도(대기)는 (0~10점) 4.23점
- 2018년 환경체감도(수질)는 (0~10점) 5.41점
- 2018년 환경체감도(미세먼지)는 (0~10점) 3.53점
- 2016년 하수도 보급률은 76.9%
- 2017년 도시가스 보급률은 64.5%

<표 3-50> 도시가스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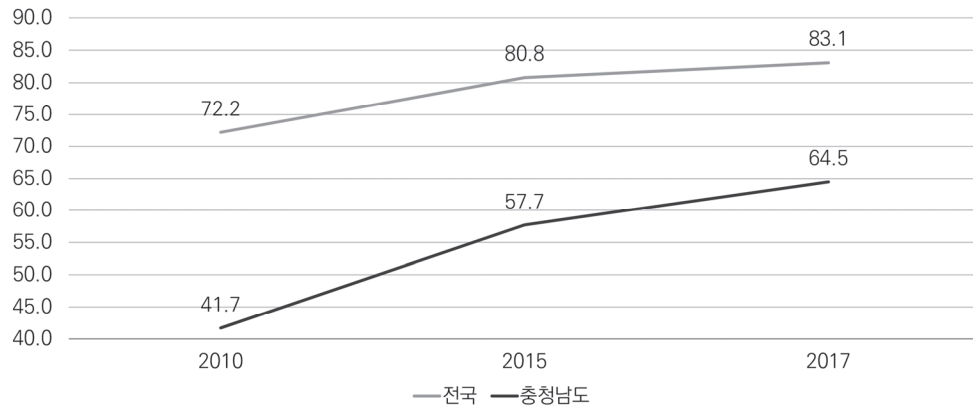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10	2015	2017
전국	72.2	80.8	83.1
충청남도	41.7	57.7	64.5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그림 3-35] 도시가스 보급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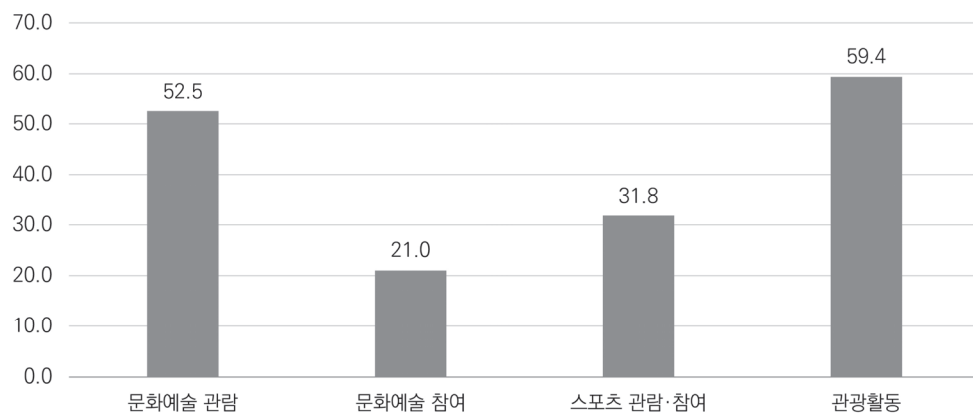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여가와 문화

- 2018년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문화예술 관람) 52.5%
- 2018년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문화예술 참여) 21%
- 2018년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스포츠 관람) 31.8%
- 2018년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관광 활동) 59.4%

[그림 3-36] 2018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

(단위 : %)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사회조사

>> 사회통합

- 2018년 주관적 귀속계층(사회경제적 지위) 지표는 (0~10점) 3.71점(10점 만점)으로 낮은 편(상 1.9%, 중 63.6%, 하 34.5%)
 - *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총남은 ‘중’ 비율이 61.7%로 높은 편
 - * 모든 연령대 ‘중’ 인식 비율이 전국 대비 높은 편
- 전 연령대 ‘하’ 응답비율이 전국 보다 낮은 편
 - 시 중에서는 보령이 ‘하’ 40%이상
 - 군 중에서 홍성, 금산, 태안을 제외한 모든 군들은 ‘하’ 응답자 40%이상(부여군 ‘하’ 응답자 53.4%)
-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13.7%로 낮은 편(2018년)
- 도정참여 효능감은 (10점 만점) 3.95(2018년)
- 지역사회 소속감(10점 만점)은 5.81점(2018년)

〈표 3-51〉 지역사회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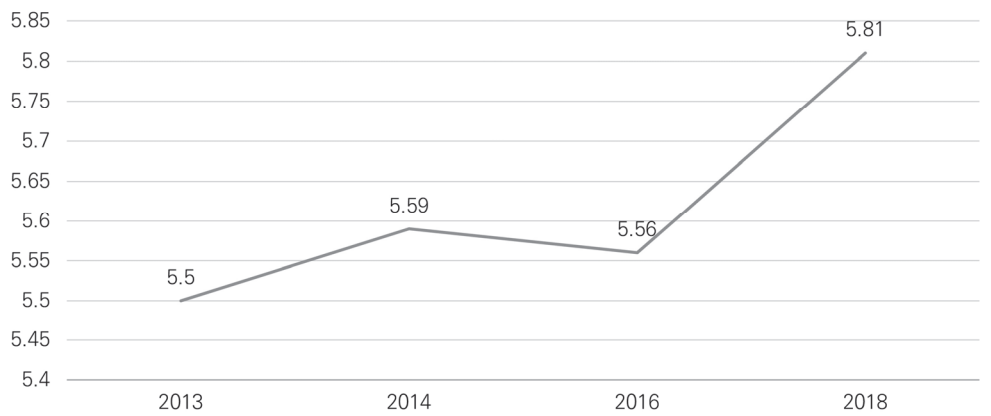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2013	2014	2016	2018
충청남도	5.5	5.59	5.56	5.81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사회조사

[그림 3-37] 지역사회 소속감

(단위 : 점)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사회조사

>> 도정 특성

- 이주민 인권 존중도(0~10)에 대한 도민 인식은 2018년 이후 하락
 - 외국인노동자 인권 존중도는 2018년 5.34점, 2019년 5.09점으로 하락
 - 결혼이민자 인권 존중도는 2018년 5.48점, 2019년 5.31점으로 하락

〈표 3-52〉 충남도민의 이주민 인권존중 정도 인식 변화(2012~2019)

(단위: 점)

년도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2012	4.73	4.93	
2014	4.83	5.00	
2016	5.06	5.30	5.35
2017	5.60	5.74	5.75
2018	5.34	5.48	5.52
2019	5.09	5.31	5.41
2018 대비 2019년 증감	-0.25	-0.17	-0.11

자료: 「충남사회조사」, 충청남도. 각 년도 재구성. 0~10점.²³⁾

- 다문화사회에 대한 도민의 인식은 2016년 대비 2019년 4개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변화
 - 4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5점 만점 2점대
 - 4개 항목 모두에서 인식도 하락

〈표 3-53〉 충남 도민의 다문화사회 인식 변화(2016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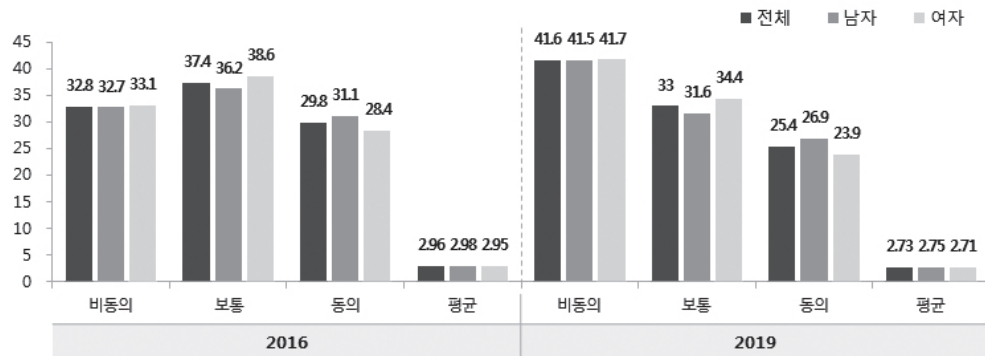
연도	인구감소문제해결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		중소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필요		사회적 편견 해소 필요 ²⁴⁾		다문화이주민의 국내정착지원 필요	
	평균(5점)	반대(%)	평균(5점)	반대(%)	평균(5점)	반대(%)	평균(5점)	반대(%)
2016	2.96	32.8%	3.09	26.8%	3.49	13.8%	3.04	28.2%
2019	2.73	41.6%	2.91	32.7%	3.33	15.2%	2.92	29.7%

자료 : 「충남사회조사」, 충청남도. 2016.2019. 척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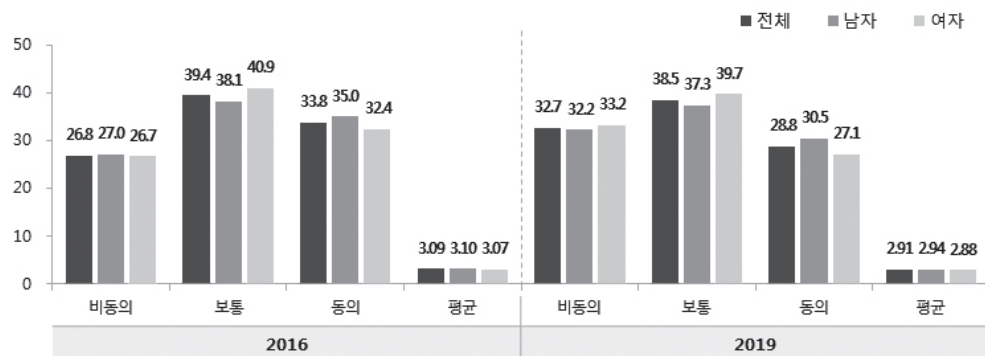
23) 2012년 [결혼이주여성]항목, 2014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단일 항목, 2016년부터 [결혼이민자], [귀화자] 로 구분하여 조사됨. 한편, 2012년, 2014년은 10점 척도로 조사되어 10점 만점 평균이 제시됨.(0 전혀 존중 안 됨 ~ 10 매우 존중). 2016년 이후 5점 척도로 조사됨. 이에 여기서는 10점 척도 평균으로 제시함.

24) 사회적 편견 해소 문항의 경우, 2016년 결혼이민자에 대한 질문이 2019년 다문화이주민에 대한 질문으로 변경되어 직접 비교는 불가

[그림 3-38] 충남 도민 성별 다문화사회 인식 변화: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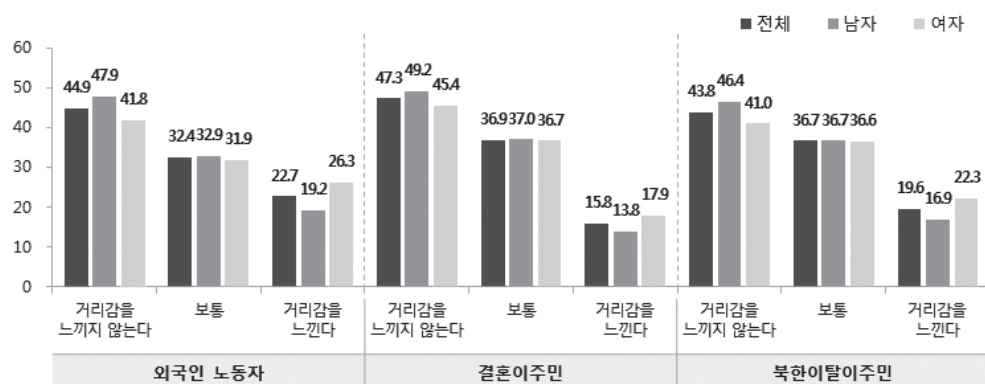
[그림 3-39] 충남 도민 성별 다문화사회 인식 변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필요성



- 2019년 충남 도민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0~10점)은 내국인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큰 편(성소수자 제외)
 - 외국인노동자(4.20), 북한이탈주민(4.16), 결혼이주민(3.94) 순

[그림 3-40] 충남 도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단위 : %)



(4) 충남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통해 본 도민 삶의 질²⁵⁾

》 악화지표 현황

- 17개 영역 지표 중 악화지표가 포함된 영역은 3개 영역 4개 지표
- 생활체육 참여율 지표는 2014년 66.3%, 2016년 64.4%, 2018년 54.0%로 악화
- 여가생활 만족도 지표는 2014년 63.8%, 2016년 52.7%, 2018년 45.3%로 악화
- 그 외 지하수 오염 및 소상공인 업황 지표 악화

(5) ‘2017년 전국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본 충남 노인 삶의 질

》 정서영역

- 차별 경험은 2014년 2.3%에서 2017년 6.7%로 증가(2017년 전국 5위)
- 학대경험률은 2014년 7.7%에서 2017년 19.3%로 증가(2017년 전국 1위)
- 자살생각률은 2014년 13.4%에서 2017년 7.8%로 감소(2017년 전국 5위)
- 자살률은 2014년 76.2명에서 65.1명으로 감소(2017년 전국 1위)
- 자살의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원인 중 하나(2017)
 - 경제적 어려움 27.7%, 건강 27.6%, 부부, 자녀, 친구 갈등 및 단절 18.6%
- 남성, 독거노인, 저소득 노인 자살 시도 비율이 높은 편(2017)
 - 자살 생각률 : 남성 6.1%, 여성 7.1%
 - 자살 시도율 : 남성 15.7%, 여성 11.6%
 - 독거노인 : 자살 생각률 10.6%, 자살 시도율 15.4%
 - 제1오 분위 가구소득 : 자살 생각률 10.8%, 자살 시도율 16.7%
 - 제5오 분위 가구소득 : 자살 생각률 4.4%, 자살 시도율 3.5%

25) 도 홈페이지 공개 관리 지표(2030 목표치는 관련 계획에서 발췌)

>> 건강

- 과음주율은 2014년 15.6%에서 2017년 15.7%로 증가(2017년 전국 1위)
- 일상생활수행능력은 2014년 92.7%, 2017년 90%로 감소(2017년 전국 14위)
-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은 2014년 71.1%, 2017년 68%로 감소(2017년 전국 13위)

>> 여가문화

- 단체활동참여율은 2014년 47.2%에서 2017년 43.7%로 감소(2017년 전국 16위)
-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2014년 9.4%에서 2017년 7.3%로 감소(2017년 전국 14위)

3) 충남 복지·보건·안전 계획 주요 관리 지표 현황

(1) 제7기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2019~2022년)

》 의료접근성

- 의료기관 접근성(내과) 지표는 1.6%로 전국 12위(2017년)
- 의료기관 접근성(외과) 지표는 3.7%로 전국 13위(2017년)
- 의료기관 접근성(산부인과) 지표는 19.7%로 전국 15위(2017년)

》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 기준시간내 의료이용률(내과)은 62.3%로 전국 14위(2017)
- 기준시간내 의료이용률(외과)은 56.5%로 전국 15위(2017년)
- 기준시간내 의료이용률(산부인과)은 50.4%로 전국 16위(2017년)
- 기준시간내 의료이용률(소아청소년과)은 70.6%로 전국 15위(2017년)
- 기준시간내 의료이용률(정형외과)은 50.1%로 전국 17위(2017년)

》 관내 의료이용률

- 관내 의료이용률(병원) 지표는 64.3%로 전국 16위(2017년)

》 의료기관 소재지별 예방가능 입원율

- 의료기관 소재지별 예방 가능 입원율(만성폐쇄성 폐질환, 건·인구 십만명당) 지표는 148건으로 전국 10위(2016년)
- 의료기관 소재지별 예방 가능 입원율(울혈성심부전, 건·인구 십만명당) 지표는 47.6건으로 전국 16위

》 건강생활습관

- 비만율(역순) 지표는 28.9%로 전국 6위(2017년)
- 걷기실천율 지표는 35.7%로 전국 12위(2017년)

-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지표는 21.1%로 전국 15위(2017년)
- 체중조절시도율 지표는 64.0%로 전국 9위(2017년)
- 월간음주율 지표는 62.2%로 전국 11위(2017년)
-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역순)은 20.3%로 전국 4위(2017년)

》》 정신보건 등

- 우울감(역순) 경험률은 7.6%로 전국 2위
- 청소년 우울 경험률(역순)은 27.1%로 전국 4위(2017년)
- 아침결식 예방인구비율 지표는 62.7%로 전국 10위(2017년)
- 치매유병률 11.5%로 3위(2017년)
- 성인 남자 흡연율 40.6%로 전국 6위(2017년)
- 청소년 흡연율(남) 10.9%로 5위(2017년)
- 그 외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율은 2013년 68.1%, 2017년 66.7%로 악화

(2)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지표(2019년 시행계획)

- 복지보건인프라, 사회복지, 저출산 대책, 고령화대책, 장애인복지, 건강증진식품, 여성 가족분야 등 8개 분야, 56지표

》 재정 하위지표 현황

- 일반회계 재정 대비 보건·복지재정 비율 수준은 2017년 31.5%, 2018년(실적안) 31.8% 수준으로 ‘하’ 수준
- 도민 1인당 복지재정은 2017년 630천원, 2018년(실적안) 650천원으로 ‘하’ 수준
- 노인 1인당 관련 복지재정은 2017년 1,600천원, 2018년(실적안) 1,800천원으로 ‘하’ 수준
- 장애인 1인당 복지재정은 2017년 1,465천원, 2018년(실적안) 1,520천원으로 ‘하’ 수준

》 봉사 및 기부 관련 하위 지표

- 활동 자원봉사자의 연평균 봉사활동시간은 2017년 17.73시간, 2018년(실적안) 18.73시간으로 ‘하’ 수준
- 1인당 기부금액은 2017년 11,515원, 2018년(실적안) 11,248원으로 ‘하’ 수준

》 일자리 관련 하위 지표

-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일자리 참여자수는 2017년 64.5명, 2018년(실적안) 65.9명으로 ‘하’ 수준
-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은 2017년 2.64%, 2018년(실적안) 2.64%로 ‘하’ 수준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율은 2017년 1.7%, 2018년 1.9%로 ‘하’ 수준

》 건강관련 하위 지표

- 고혈압 지표는 2017년 21.1%, 2018년(실적안) 20.75%로 ‘하’ 수준

- 당뇨병 지표는 2017년 8.5%, 2018년(실적안) 8.3%로 ‘하’ 수준
- 자살률(인구십만명당) 전체 지표는 2017년 31.7명, 2018년(실적안) 23.0명으로 ‘하’ 수준
- 자살률(인구십만명당) 노인 지표는 2017년 65.1명, 2018년(실적안) 59명으로 ‘하’ 수준

(3)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지표

》 장애인 관련 하위지표(복지서비스 분야)

- 장애인거주시설 수 지표는 2017년 62개소로 전국 12위
-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지표는 2017년 60개소로 전국 9위
- 직업재활시설 수 지표는 2017년 21개소로 전국 11위
- 장애아 어린이집 이용인원 지표는 2017년 337명으로 전국 12위

(4) 행복한 안전 충남 실행계획 2050

》 2016년 충남 안전분야별 등급 및 목표

- 충남 안전 분야 중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살 분야 ‘하’ 수준

〈표 3-54〉 2016년 충청남도 지역안전지수 및 2020-2030 분야별 목표 등급

영역	2016년 등급/총 5등급	등급	2020목표	2030목표
화재	4	하	3	2
교통사고	4	하	3	1
자연재해	3	중	2	1
범죄	3	중	2	1
안전사고	4	하	3	1
자살	4	하	2	2
감염병	3	중	2	1

자료 : 행복한 안전충남 실행계획 2050, 충청남도

4) 충남 아동의 삶의 질 지표 현황²⁶⁾

》 충남 아동 삶의 질 수준

- 충남은 대부분 하위권
 - 2012년 13위, 2013년 16위, 2015년 13위, 2017년 16위

》 2017 아동 삶의 질 지수(CWBI) 현황(충남)

- 충남은 모든 영역 8위 이하
 - 건강 8위, 주관적 행복감 14위, 아동의 관계 13위, 위험과 안전 14위, 주거환경 15위, 바람직한 인성 14위, 물질적 상황 17위, 교육 17위 등

〈표 3-55〉 「충남 아동 삶의 질 순위」요약(17개 시도/ 순위/평균대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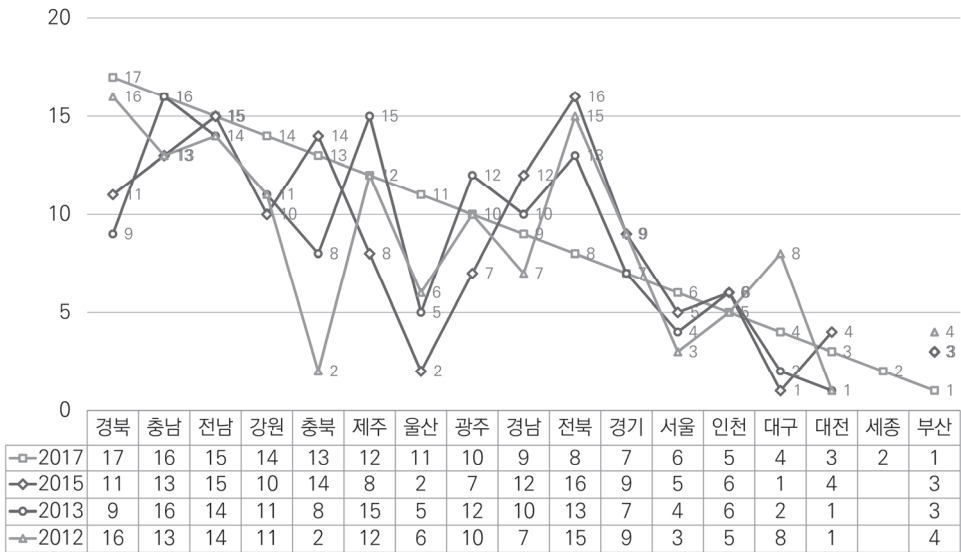
번호	영역	2012	2013	2015	2017	2012대비 2017 증감
1	건강	12	16	16(85.1)	8(100.7)	4 상승
2	주관적 행복	11	15	14(91.1)	14(94.9)	3 하락
3	관계	13	13	12(94.1)	13(92.8)	하위 유지
4	물질적 상황	14	13	11(96.2)	17(80.7)	3 하락
5	위험과 안전	12	12	14(92.8)	14(89.4)	2 하락
6	교육	16	13	8(102.3)	17(82.7)	1 하락
7	주거환경	14	6	14(91.2)	15(92)	1 하락
8	바람직한 인성	12	16	11(94)	14(91)	2 하락
종합 순위		13	16	13	16	
점수				92.69	87.9	

자료 : 2015년 지수 -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2017. 세이브더칠드런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17년 지수 - 「2018 한국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움 자료」(2018.8.30. 세이브더칠드런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 충남 종합지수 16위(87.9점, 평균을 100으로 산정)

26) 2017(일반조사), 2018(부가조사)

[그림 3-41] 한국 아동 삶의 질 추이(2012~2017년)



자료 : 2018년 한국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움 자료집

3. 요약 및 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

- 출생아 수는 2010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추세
- 합계출산율은 2000년 1.698명에서 2017년 1.276명으로 하락
- 유소년인구(15세 미만) 비율은 2011년 15.9%, 2018년 13.6%로 감소
- 노령인구(65세 이상)는 2011년 15.0%, 2018년 17.5%로 증가
- 노령화지수는 2000년 59.1명에서 2019년 130.5명으로 증가

≫ 아동·청(소)년 수 감소, 낮은 아동 삶의 질

- 0~18세 미만 아동인구는 2008년 42.7만 명에서 2018년에는 35.2만 명으로 7.5만 명 감소
- 9~24세 청소년 인구는 2008년 41.1만 명에서 2018년 36.0만 명으로 5.1만 명 감소
- 청소년 학업중단율은 2000년 1.1%에서 2017년 0.7%로 약간 감소
- 아동양육시설 생활인수는 2000년 825명에서 2017년 634명으로 감소
-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는 2000년 197명에서 2017년 145명으로 감소
- 아동 삶의 질 지수에서 충남은 하위권으로, 대부분 영역 하위 수준
 - 2012년 13위, 2013년 16위, 2015년 13위, 2017년 16위
 - 2017년 : 건강 8위, 주관적 행복감 14위, 아동의 관계 13위, 위험과 안전 14위, 주거환경 15위, 바람직한 인성 14위, 물질적 상황 17위, 교육 17위

≫ 가구·가족의 다양성 증가

- 2018년 1인 가구 비율 31.8%로 전국 6위
- 2018년 독거노인 가구비율 8.9%로 전국 6위
- 2018년 가구원 모두 65세 이상인 가구는 135,377가구
- 2018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16,890가구
- 외국인주민 수는 2006년 20,641명에서 2018년 117,094명으로 증가

>> 건강 분야 만성질환 지표 하위권 수준

- 2018년 비만율은 32.1%로 전국 (역순) 6위
- 2018년 고혈압(역순)은 19.5%로 전국 5위
- 2018년 규칙적 운동 실천 35.2%로 전국 15위

>> 교육 분야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 2018년 충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국 17위
- 2018년 학교생활만족도(학교 시설 및 설비)는 46.78%, 전국 10위
- 2018년 학교생활만족도(학교 주변 환경)는 47.3%, 전국 10위
- 2018년 학교생활만족도(교우관계)는 74.6%, 전국 12위
- 2018년 학교생활만족도(교육내용)는 51.8%, 전국 12위

>> 노동(일자리) 분야 장시간 근로시간, 낮은 일자리 만족도

- 충남의 근로시간(역순)은 2018년 182.6시간, 2019년 187.3시간으로 전국 2위
- 일자리만족도는 2017년 23.7%(전국 16위)에서, 2019년 33.6%(전국 5위)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수치가 높지 않은 수준

>> 일자리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가 낮은 수준

-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일자리 참여자수는 2017년 64.5명, 2018년(실적안) 65.9명으로 '하' 수준
-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은 2017년 2.64%, 2018년(실적안) 2.64%로 '하' 수준

>> 소득·소비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

- 소득만족도는 2017년 11.6%(전국 13위)에서 2019년 14.5%(전국 8위)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소비생활만족도는 2017년 12.1%(전국 16위)에서 2019년 15.9%(전국 13위)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2018년 가구순자산 지표는 30,807만원으로 전국 14위

≫ 주거지역 휴식, 교육, 의료 환경 만족도는 보통 수준

- 2018년 주거환경 만족도 중 휴식 공간(5.05점), 교육환경(5.07점), 병원 및 의료시설(5.19점) 만족도가 낮은 편

≫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 실정

- 2018년 인구십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역순)는 16.3명으로 2위

≫ 상하수도, 도시가스 보급이 낮은 수준

- 2017년 농어촌 상수도보급률은 88.4%로 전국 16위
- 2016년 하수도 보급률은 76.9%
- 2018년 수질 만족도는 32.0%로 전국 10위
- 2017년 도시가스 보급률은 64.5%

≫ 타살 및 아동안전사고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순위는 낮은 수준

- 가해에 의한 사망률(타살) 지표는 2017년 1.1명(전국 14위)에서 2018년 0.7명(전국 12위)으로 상승하였으나, 지속적 감소 조치 필요
- 아동안전사고사망률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2018년 4.5명으로 전국 1위 (2018년 전국 2.4명)로 지속 감소 조치 필요

≫ 여가와 문화예술 스포츠 관련 지표는 대체로 하위권 수준

- 2018년 여가시간 충분도는 평일 35.6%, 주말 47.9%로 전국 16위
- 2019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은 61.4%로 전국 14위
- 2019년 여가활용만족도는 28.2%로 전국 12위

≫ 보건복지재정비율, 노인 및 장애인 1인당 재정은 하위 수준

- 일반회계 재정 대비 보건·복지재정 비율 수준은 2017년 31.5%, 2018년(실적안) 31.8% 수준으로 '하' 수준
- 도민 1인당 복지재정은 2017년 630천원, 2018년(실적안) 650천원으로

‘하’ 수준

- 노인 1인당 관련 복지재정은 2017년 1,600천원, 2018년(실적안) 1,800천원으로 ‘하’ 수준
- 장애인 1인당 복지재정은 2017년 1,465천원, 2018년(실적안) 1,520천원으로 ‘하’ 수준

>> 자살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

- 2018년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역순)은 35.5명으로 전국 1위
- 2018년 65세 이상 자살률은 62.6명으로 전국(48.6명)보다 높은 수준

>>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직업재활시설 참여는 낮은 수준

- 장애인 수는 2001년 60,273명에서 2018년 131,910명으로 증가
- 2018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율은 1.9%로 ‘하’ 수준

>> 삶의 만족도(긍정정서)는 최근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삶의 만족도(긍정정서)는 2017년 28.7%(전국 11위)에서 2019년 39.1%(전국 9위)로 상승하였으나 상승세 지속 필요

>> 계층이동가능성 및 귀속계층 인식이 낮은 수준

- 본인 계층이동가능성은 2017년 22.5%에서 2019년 22.0%로 감소
- 다음세대계층이동가능성은 2017년 31.8%에서 2019년 27.3%로 감소
- 2018년 주관적 귀속계층(사회경제적 지위)은 (0~10점) 3.71점으로 낮은 편 (상 1.9%, 중 63.6%, 하 34.5%)

>>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가 여전히 낮은 수준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17년 17.7%(전국 11위)에서 2019년 19.5%(전국 3위)로 순위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참여율은 소폭 상승
- 2019년 기부 여부 지표는 23.7%로 전국 13위(전국 평균 25.6%)

≫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낮은 편이고, 지역사회 소속감은 보통 수준

- 2018년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13.7%로 낮은 편
- 지역사회 소속감(10점 만점)은 5.81점(2018년)으로 보통 수준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일반 도민의 사회적 거리감이 큰 편

- 2019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0~10점)이 큰 편
 - 외국인노동자(4.20), 북한이탈주민(4.16), 결혼이주민(3.94)

≫ 최근 이주민 인권 존중도가 하락 추세로 변화

- 이주민 인권 존중도(0~10)에 대한 도민 인식은 2018년 이후 하락
 - 외국인노동자 인권 존중도는 2018년 5.34점, 2019년 5.09점으로 하락
 - 결혼이민자 인권 존중도는 2018년 5.48점, 2019년 5.31점으로 하락

≫ 도정참여 효능감이 낮은 수준

- 2018년 도정참여 효능감은 (10점 만점) 3.95점으로 낮은 수준

2) 정책적 시사점

≫ 인구구조 변화 추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 출생아 수 감소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노령 인구가 증가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인구구조 변화 추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지역 경제사회 영향 분석 및 대응체계 강화

≫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 확대

-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다음세대인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아동 삶의 질 지수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취약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와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의 삶 전반에 대한 정책적 관심 확대 요구

>> 가족다양성 증가에 대응하는 가족정책 고도화

- 1인 가구와 독거노인 가구, 가구원 모두 노인인 가구, 다문화가구 등 가구 유형, 가족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한 가족정책 고도화

>> 건강지표 지속 관리 필요

- 비만, 고혈압 등 도민의 건강수명을 위협하는 건강 지표 추이 관리와 더불어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규칙적 운동 실천 비율을 높이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도민의 전반적 건강증진 유도

>>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 활성화

-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수준이 하위권에 속하여 가정 차원의 교육적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만족도(학교 시설 및 설비, 학교 주변 환경, 교우관계, 교육내용 등)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관심 확대와 다양한 교육정책 활성화 필요

>> 근로시간 축소와 일자리 만족도 향상 조치 강화

-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길고 일자리만족도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축소와 일자리 만족도 향상 조치 강화

>> 노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 기회 확충

-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자리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고용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참여 기회 확충

>> 소득·소비 만족도 추이 관리

- 최근 소득과 소비생활 만족도 순위는 상승하였으나 만족도 자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소득과 소비생활 만족도 추이 관리·분석

>> 정주지역 교육환경 만족도 향상

- 주거환경 만족도 중 휴식 공간, 교육환경, 병원 및 의료시설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관련 정주여건 개선 정책 강화

>> 상하수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 물과 에너지 복지 확대

- 농어촌 상수도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편이고, 도시가스 보급률 역시 낮은 편으로, 수질과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맑은 물과 에너지 취약지역의 주민 지원 확대

>> 타살,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조치 강화

- 가해에 의한 사망률(타살)과 아동안전사고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인구십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므로 관련 사망자 수 감소 조치 강화

>> 여가와 문화 분야 정책 강화

- 여가시간 충분도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여가활용만족도 등 여가문화 분야 수준이 낮은 편으로 여가시간 확보 및 여가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필요

>> 복지재정 확충

- 일반회계 재정 대비 보건·복지재정 비율, 도민 1인당 복지재정, 노인 1인당 관련 복지재정, 장애인 1인당 복지재정 등이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복지재정 확충 노력 지속

>> 자살예방 등 자살률 감소 조치 강화

- 자살률, 특히 노인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살률 감소를 위한 조치 강화

>> 장애인 복지, 노동, 건강 등 정책 강화

- 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율은 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장애인 정책 강화

>> 삶의 만족도(긍정정서) 상승 추세 유지 관심 지속

- 삶의 만족도(긍정정서)는 최근 상승하였으나 상승세 지속을 위한 지속적 관리 필요

>> 귀속계층 하락 예방 강화 및 계층이동가능성 향상 조치

- 주관적 귀속계층(사회경제적 지위)이 낮은 수준이며 본인 및 다음세대 계층이동가능성이 낮은 편이므로 계층이동가능성 향상을 위한 조치 강화

>> 자원봉사 및 기부 활성화 정책 확대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전국 순위는 상승하였으나 참여율 자체의 상승 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고 기부도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자원봉사 및 기부 활성화 정책 확대

>> 지역사회 소속감, 일반인에 대한 신뢰, 참여효능감 향상 정책

- 지역사회 소속감은 보통 수준이지만 일반인에 대한 신뢰와 도정참여효능감이 낮은 편이므로 지역사회 소속감 강화, 일반인에 대한 신뢰 및 도정참여효능감 향상 정책 요구

>>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축소 및 인권 정책 강화

-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0~10점)이 크고, 인권 존중도가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축소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조치 강화

제2절

충남 도민 특성별 삶의 질 실태분석

1. 분석개요

1) 충남 삶의 질 열위지표 및 분석의 한계

≫ ‘국민 삶의 질’ 지표 충남 현황

- 국민 삶의 질 지표 검토 결과, 광역순위 비교가 가능한 지표 중 충남열위 지표는 총 10개 영역 20개 지표
 - 건강, 교통, 안전, 환경 영역 9개 지표는 최근 수립 관련 비전·계획에서 중점관리
- 도민 삶의 질 관련 6개 영역 사회부문 지표 관리 중요
 - 가구, 교육, 소득·소비, 고용과 노동, 문화여가, 사회통합 지표

≫ ‘국민 삶의 질 지표’ 분석의 한계

- 통계청 제시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지역단위 연령·소득계층별 차이를 보여 줄 통계 미제공
- 본 절에서는 충남 사회조사 유사지표를 선정하여 연령과 가구소득 등 도민 특성별 분석 및 시사점 제시

2) 충남 도민 특성별 삶의 질 분석범위

>> 국민 삶의 질 열위지표 유사 충남 사회지표 분석

- 국민 삶의 질 열위지표와 유사한 충남사회지표 15개 분석
 - 교육, 문화·여가, 사회통합, 소득·소비, 고용·노동 등 5개 영역 15개 지표
 - * 인구, 건강, 교통, 안전, 환경 영역 제외(연령, 가구소득 분석 불가)
- 국민 삶의 질 현황을 보여줄 열위지표들이 소득계층, 연령 등 특성별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 한계로, 충남 사회조사 지표 중 유사지표를 통해 연령 및 가구소득에 따른 특성 도출
- 조사 시작 이래 약간의 지표조정들이 있어 시계열 변화 추이분석 가능한 지표는 제한적

>> 충남 (비열위) 사회통합 영역 사회지표 분석

- 전국 열위지표는 아니지만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지표(귀속계층, 계층이동성 인식) 분석
- 전국 순위를 알 수 없어도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지표(신뢰 및 소속감, 공동체) 분석
- 연령 및 가구소득별 특성을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충남 도민 특성별 삶의 질 실태

1) 국민 삶의 질 열위지표 유사 충남 사회지표 분석 결과

(1) 교육 영역

≫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월평균 공교육비 증가
 - 초등학교 월평균 공교육비 : 100만원 미만 1.10만원, 100~200만원 미만 1.71만원, 200~300만원 미만 2.46만원, 300~400만원 미만 2.38만원, 400~500만원 미만 2.57만원, 500만원 이상 3.32만원
 - 중학생 월평균 공교육비 : 100만원 미만 1.81만원, 100~200만원 미만 2.62만원, 200~300만원 미만 2.78만원, 300~400만원 미만 4.74만원, 400~500만원 미만 3.91만원, 500만원 이상 4.42만원
 - 고등학교 월평균 공교육비 : 100만원 미만 5.69만원, 100~200만원 미만 17.77만원, 200~300만원 미만 21.34만원, 300~400만원 미만 22.61만원, 400~500만원 미만 27.05만원, 500만원 이상 가구 30.24만원
-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초, 중, 고 사교육비 지출액 증가
 - 초등학교 월평균 사교육비 : 100만원 미만 5.86만원, 100~200만원 미만 16.11만원, 200~300만원 미만 24.05만원, 300~400만원 미만 31.21만원, 400~500만원 미만 34.94만원, 500만원 이상 47.60만원
 - 중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 100만원 미만 10.12만원, 100~200만원 미만 18.95만원, 200~300만원 미만 27.85만원, 300~400만원 미만 31.93만원, 400~500만원 미만 39.25만원, 500만원 이상 47.31만원
 - 고등학교 월평균 사교육비 : 100만원 미만 2.49만원, 100~200만원 미만 9.93만원, 200~300만원 미만 17.19만원, 300~400만원 미만 30.06만원, 400~500만원 미만 33.83만원, 500만원 이상 43.79만원
- 충남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 이하
 - 2017년 전국 평균 29.1만원, 충남 18.7만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로 다수의 30~50대가 시간부족을 선택
 - '시간부족' 비율 15~19세 12.8%, 20대 44.4%, 30대 69.6%, 40대 68.6%, 50대 63.6%, 60세 이상 31.8%
-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로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로 응답 비율 증가
 - 100만원 미만 10.0%, 100~200만원 미만 9.4%, 200~300만원 미만 7.1%, 300~400만원 미만 6.0%, 400~500만원 미만 6.1%, 500만원 이상 4.1%

>> 받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 받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10~30대 '직업능력향상교육' 선호도, 모든 연령대에서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선호도 상승
 - '직업능력향상교육' 선호도 15~19세 65.4%, 20대 64.8%, 30대 56.3%
 - '문화예술스포츠교육' 15~19세 47.0%, 20대 53.4%, 30대 55.3%, 40대 54.6%, 50대 51.1%, 60세 이상 42.4%
- 받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의 응답비율 증가
 - 100만원 미만 37.1%, 100~200만원 미만 46.1%, 200~300만원 미만 51.0%, 300~400만원 미만 52.8%, 400~500만원 미만 54.0%, 500만원 이상 57.5%

(2) 문화와 여가 영역

>>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

- 50대 이상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은 충남 평균 이하
 - 관광활동 참여율 : 충남 59.4%, 60세 이상 43.8%
 - 문화예술 관람 : 충남 52.5%, 50대 45.4%, 60세 이상 18.1%
 - 스포츠 관람 참여 : 충남 31.8%, 50대 27.0%, 60세 이상 12.0%
 - 문화예술 참여 : 충남 21.0%, 50대 19.1%, 60세 이상 7.5%

-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낮은 여가문화 활동 참여
 - 관광활동 참여율 : 총남 59.4%, 100만원 미만 37.6%, 100~200만원 미만 46.6%, 200~300만원 미만 57.2%
 - 문화예술 관람 : 총남 52.5%, 100만원 미만 20.4%, 100~200만원 미만 33.1%, 200~300만원 미만 50.2%
 - 스포츠 관람 참여 : 총남 31.8%, 100만원 미만 14.1%, 100~200만원 미만 19.1%, 200~300만원 미만 28.3%
 - 문화예술 참여 : 총남 21.0%, 100만원 미만 8.8%, 100~200만원 미만 13.1%, 200~300만원 미만 18.3%
-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여가문화 활동 참여
 - 관광활동 참여율 : 총남 59.4%, 500만원 이상 75.7%
 - 문화예술 관람 : 총남 52.5%, 500만원 이상 75.6%
 - 스포츠 관람 참여 : 총남 31.8%, 500만원 이상 48.8%
 - 문화예술 참여 : 총남 21.0%, 500만원 이상 33.2%

>> 여가문화 활동 불만족 이유

- 여가문화활동 불만족 이유는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경제적 부담’,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의 응답 비율 상승
 - 경제적 부담 응답 비율 : 100만원 미만 33.5%, 500만원 이상 19.6%
 -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응답 비율 : 100만원 미만 37.5%, 500만원 이상 2.6%
- ‘200만원 이상’ 소득집단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응답비율 상승
 - 100만원 미만 10.9%, 100~200만원 미만 25.0%, 200~300만원 미만 44.9%, 300~400만원 미만 47.9%, 400~500만원 미만 53.7%, 500만원 이상 46.5%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하락
 - 총남 53.2%, 60세 이상 18.4%, 100만원 미만 20.7%

>> 문화예술행사 관람 안한 이유

- 문화예술행사 관람 안한 이유는 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돈이 없어서’ 응답 비율이 상승한 반면, ‘시간이 없어서’ 응답 하락
 - 돈이 없어서 응답 비율 : 100만원 미만 16.8%, 100~200만원 미만 12.3%, 200~300만원 미만 6.6%, 300~400만원 미만 8.1%, 400~500만원 미만 5.2%, 500만원 이상 2.8%
 - 시간이 없어서 응답 비율 : 100만원 미만 7.6%, 100~200만원 미만 20.7%, 200~300만원 미만 33.4%, 300~400만원 미만 40.8%, 400~500만원 미만 41.7%, 500만원 이상 44.7%

>> 생활시간 압박

- 30~40대의 생활시간 압박 상승
 - 평일 : 15~19세 7.00점, 20대 6.50점, 30대 7.12점, 40대 6.93점, 50대 6.34점, 60세 이상 3.69점
 - 주말 : 15~19세 5.86점, 20대 5.75점, 30대 6.20점, 40대 6.11점, 50대 5.73점, 60세 이상 4.09점
- 소득이 높을수록 평일 및 주말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응답 비율 상승
 - 평일 ‘항상 그렇다’ 응답 비율 : 100만원 미만 8.7%, 100~200만원 17.7%, 200~300만원 미만 26.0%, 300~400만원 미만 30.1%, 400~500만원 미만 30.5%, 500만원 이상 31.7%
 - 주말 ‘항상 그렇다’ 응답 비율 : 100만원 미만 7.6%, 100~200만원 13.5%, 200~300만원 미만 17.5%, 300~400만원 미만 19.0%, 400~500만원 미만 17.5%, 500만원 이상 20.1%

(3) 소득·소비 영역

>> 소득 만족도

- 소득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 점수 하락
 - 15~19세 4.87점, 20대 4.89점, 30대 4.83점, 40대 4.71점, 50대 4.49점, 60세 이상 3.95점

- 60세 이상 소득 만족도 비율은 15.6%로 가장 낮은 편
 - 15~19세 24.9%, 20대 28.1%, 30대 28.2%, 40대 27.0%, 50대 24.6%, 60세 이상 15.6%
- 가구소득에 비례하여 소득 만족도가 높아지는 편
 - 100만원 미만 8.8%, 100~200만원 미만 13.4%, 200~300만원 미만 21.1%, 300~400만원 25.6%, 400~500만원 미만 29.5%, 500만원 이상 42.1%

>> 소비생활 만족도

- 60세 이상 소비생활 만족도는 4.10(10점 만점)으로 가장 낮고, 불만족 비율이 41.4%로 가장 높은 편
 - 소비생활만족도 점수 : 15~19세 4.92점, 20대 4.77점, 30대 4.79점, 40대 4.65점, 50대 4.54점, 60세 이상 4.10점
 - 소비생활만족도 불만족 비율 : 15~19세 23.5%, 20대 29.6%, 30대 27.8%, 40대 32.2%, 50대 33.4%, 60세 이상 41.4%
-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생활 만족도 평균이 낮은 편
 - 100만원 미만 3.57점, 100~200만원 미만 4.00점, 200~300만원 미만 4.36점, 300~400만원 미만 4.72점, 400~500만원 미만 4.92점, 500만원 이상 5.44점

>> 월평균 오락 및 문화비 지출액

- 20만원 이상 월평균 오락 및 문화비 지출액은 20~40대 비율이 높은 수준
 - 15~19세 6.2%, 20대 28.6%, 30대 35.7%, 40대 29.9%, 50대 22.1%, 60세 이상 6.7%
- 60세 이상 집단은 오락 및 문화비 지출액의 '없음' 응답 비율 72.8%
 - 15~19세 21.9%, 20대 11.9%, 30대 19.1%, 40대 26.2%, 50대 43.5%, 60세 이상 72.8%
- 오락 및 문화비 평균 지출액은 가구소득에 비례
 - 100만원 미만 12,027원, 100~200만원 미만 37,728원, 200~300만원 미만 84,628원, 300~400만원 미만 114,666만원, 400~500만원 미만 141,889원, 500만원 이상 208,581원

- 오락 및 문화비에 대한 20만원 이상 응답 비율은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 46.5%
 - 100만원 미만 1.1%, 100~200만원 미만 7.3%, 200~300만원 미만 19.0%, 300~400만원 미만 26.5%, 400~500만원 미만 32.8%, 500만원 이상 46.5%
- 오락 및 문화비 없음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편
 - 100만원 미만 81.0%, 100~200만원 미만 64.3%, 200~300만원 미만 42.6%, 300~400만원 미만 29.8%, 400~500만원 미만 20.6%, 500만원 이상 15.8%

(4) 고용·노동 영역

>> 일자리 (근로여건) 만족도

- 60세 이상 연령 집단에서 임금수준 및 고용안정성의 만족도 하락
 - 임금수준 만족도 : 15~19세 13.3%, 20대 27.5%, 30대 29.6%, 40대 29.1%, 50대 30.7%, 60세 이상 28.4%
 - 고용안정성 만족도 : 15~19세 22.1%, 20대 33.9%, 30대 38.2%, 40대 36.8%, 50대 37.1%, 60세 이상 26.2%
- 소득이 낮은 집단의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근무환경의 만족도 하락
 - 임금수준 만족도 : 100만원 미만 24.6%, 500만원 이상 40.3%
 - 고용안정성 만족도 : 100만원 미만 16.8%, 500만원 이상 48.5%
 - 근무환경 만족도 : 100만원 미만 28.5%, 500만원 이상 44.2%

(5) 사회통합 영역

>>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 50대 이상에서 삶의 만족, 가치, 행복이 평균 이하
 - 삶에 대한 만족 : 총남 6.08점, 50대 5.96점, 60세 이상 5.76점
 - 삶에 대한 가치 : 총남 6.17점, 50대 6.14점, 60세 이상 5.68점
 - 행복 : 총남 6.11점, 50대 6.00점, 60세 이상 5.75점

- 삶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가치, 행복 경험은 소득이 높을수록 상승
 - 삶에 대한 만족 : 100만원 미만 5.55점, 100~200만원 미만 5.79점, 200~300만원 미만 5.99점, 300~400만원 미만 6.23점, 400~500만원 미만 6.24점, 500만원 이상 6.56점
 - 삶에 대한 가치 : 100만원 미만 5.49점, 100~200만원 미만 5.90점, 200~300만원 미만 6.10점, 300~400만원 미만 6.34점, 400~500만원 미만 6.37점, 500만원 이상 6.71점
 - 행복 : 100만원 미만 5.58점, 100~200만원 미만 5.82점, 200~300만원 미만 6.03점, 300~400만원 미만 6.25점, 400~500만원 미만 6.31점, 500만원 이상 6.61점

》 후원(기부) 참여 현황

- 후원활동 참여율 4~50대 비율 상승
 - 15~19세 7.4%, 20대 9.9%, 30대 19.3%, 40대 24.3%, 50대 20.1%, 60세 이상 8.9%
- 소득이 높은 집단의 후원(기부) 참여율 상승
 - 100만원 미만 5.1%, 100~200만원 미만 8.4%, 200~300만원 미만 11.7%, 300~400만원 미만 16.5%, 400~500만원 미만 20.7%, 500만원 이상 28.2%

》 필요 편의시설(1+2순위)

- 10~20대 필요 편의시설 중 ‘문화예술시설’ 응답 비율 상승
 - 15~19세 40.1%, 20대 32.6%, 30대 26.1%, 40대 25.7%, 50대 20.2%, 60세 이상 10.4%
-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 편의시설 중 ‘보건의료시설’ 응답 비율 상승
 - 15~19세 16.5%, 20대 20.6%, 30대 31.4%, 40대 32.0%, 50대 36.5%, 60세 이상 47.5%
- 400만원 이상 가구의 필요 편의시설 중 ‘문화예술시설’ 응답 비율 상승
 - 100만원 미만 11.9%, 100~200만원 미만 16.0%, 200~300만원 미만 21.9%, 300~400만원 미만 24.3%, 400~500만원 미만 28.3%, 500만원 이상 30.8%

2) 충남(비열위) 사회통합 영역 사회지표 분석 결과

>> '주관적 귀속계층' 응답 특성

- 30대 이후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귀속계층 중 '중' 응답비율 하락
 - 15~19세 71.7%, 20대 67.1%, 30대 71.9%, 40대 71.2%, 50대 66.0%, 60세 이상 48.6%
- 50대 이상 주관적 귀속계층 중 '하' 응답 비율 상승
 - 15~19세 26.5%, 20대 31.7%, 30대 26.5%, 40대 26.1%, 50대 31.5%, 60세 이상 49.9%
-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귀속계층 중 '중' 응답 비율 상승, '하' 응답 비율 하락
 - 중 응답 비율 : 100만원 미만 33.3%, 100~200만원 미만 48.9%, 200~300만원 미만 60.9%, 300~400만원 미만 72.1%, 400~500만원 미만 80.1%, 500만원 이상 84.0%
 - 하 응답 비율 : 100만원 미만 66.0%, 100~200만원 미만 50.6%, 200~300만원 미만 38.0%, 300~400만원 미만 27.0%, 400~500만원 미만 18.5%, 500만원 이상 10.4%

>> 일반인에 대한 신뢰[국민 삶의 질 유사지표 : 대인신뢰]

- 20대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반인에 대한 신뢰 비율 상승
 - 15~19세 8.6%, 20대 8.5%, 30대 8.8%, 40대 10.6%, 50대 14.9%, 60세 이상 21.5%
- 소득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일반인에 대한 신뢰 응답 상승
 - 100만원 미만 20.1%, 100~200만원 미만 14.8%, 200~300만원 미만 11.8%, 300~400만원 미만 13.0%, 400~500만원 미만 11.5%, 500만원 이상 11.6%

>> 지역사회 소속감[국민 삶의 질 지표]

- 20대 이후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소속감이 증가(있음 비율 및 평균 점수), 20대의 지역사회 소속감 점수 및 있음 비율 하락
 - 있음 응답 비율(점수) : 15~19세 48.8%(4.77점), 20대 45.7%(4.57점), 30대 54.7%(5.10점), 40대 64.1%(5.57점), 50대 72.3%(6.12점), 60세 이상 85.4%(7.03점)

-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 집단의 소속감이 가장 높은 점수
 - 100만원 미만 6.43점, 100~200만원 미만 6.14점, 200~300만원 미만 5.46점, 300~400만원 미만 5.48점, 400~500만원 미만 5.64점, 500만원 이상 5.77점

>> 지역사회 소속감을 못 느끼는 이유

- 지역사회 소속감을 못 느끼는 이유로 10대 '교육환경 낙후', '문화체육시설 낙후', 20대 '일자리 부족', '물가', 30~50대 '물가', '일자리', 60대 '물가', '지역민 인심' 순으로 응답
 - 10대 : 교육환경 낙후 23.4%, 문화체육시설 낙후 20.4%
 - 20대 : 일자리 부족 23.8%, 타시군에 비해 물가가 높아서 20.5%
 - 30대 : 타 시군에 비해 물가가 높아서 27.3%, 일자리 부족 15.0%
- 400만원 이상 소득 집단에서 '물가'와 '문화체육시설 낙후' 응답 상승
 - 400만원~500만원 미만 타 시군에 비해 물가가 높아서 23.0%, 문화체육시설 낙후 16.7%
 - 500만원 이상 타 시군에 비해 물가가 높아서 23.8%, 문화체육시설 낙후 17.1%
 - 40대 : 타 시군에 비해 물가가 높아서 25.1%, 일자리 부족 17.0%
 - 50대 : 타 시군에 비해 물가가 높아서 22.1%, 일자리 부족 19.6%
 - 60세 이상 : 타 시군에 비해 물가가 높아서 23.0%, 지역민의 인심이 좋지 않아서 21.4%

>> 공동체효율성 지수[충남사회지표 : 공동체]

- 공동체 효율성 지수는 20대 이후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상승
 - 15~19세 4.04점, 20대 4.02점, 30대 4.56점, 40대 5.08점, 50대 5.74점, 60세 이상 6.69점
 - 100만원 미만 6.11점, 100~200만원 미만 5.88점, 200~300만원 미만 5.07점, 300~400만원 미만 5.01점, 400~500만원 미만 5.07점, 500만원 이상 5.05점
- 공동체 효율성 지수는 200만원 이상 가구에서 평균보다 하락
 - 충남 5.35, 200~300만원 미만 5.07점, 300~400만원 미만 5.01점, 400~500만원 미만 5.07점, 500만원 이상 5.05점

3. 요약 및 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격차 발생

-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월평균 공교육비 지출 증가
 - 고등학생 월평균 공교육비 : 100만원 미만 5.69만원, 100~200만원 미만 17.77만원, 200~300만원 미만 21.34만원, 300~400만원 미만 22.61만원, 400~500만원 미만 27.05만원, 500만원 이상 가구 30.24만원
-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증가
 - 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 100만원 미만 2.49만원, 100~200만원 미만 9.93만원, 200~300만원 미만 17.19만원, 300~400만원 미만 30.06만원, 400~500만원 미만 33.83만원, 500만원 이상 43.79만원

>>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격차 발생

-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로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로 응답 비율 증가
 - 100만원 미만 10.0%, 100~200만원 미만 9.4%, 200~300만원 미만 7.1%, 300~400만원 미만 6.0%, 400~500만원 미만 6.1%, 500만원 이상 4.1%

>> 연령에 따른 평생교육 활성화 분야 차이 존재

- 받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10~30대 '직업능력향상교육' 선호도, 모든 연령대에서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선호도 상승
 - 직업능력향상교육 : 15~19세 65.4%, 20대 64.8%, 30대 56.3%
 - 문화예술스포츠교육 : 15~19세 47.0%, 20대 53.4% 30대 55.3%, 40대 54.6%, 50대 51.1%, 60세 이상 42.4%

>> 50대 이상 연령과 저소득층의 문화여가활동 참여 저조

- 50대 이상 문화여가 활동 참여율은 충남 평균 이하 수준

- 문화예술 관람 : 총남 52.5%, 50대 45.4%, 60세 이상 18.1%
- 스포츠 관람 참여 : 총남 31.8%, 50대 27.0%, 60세 이상 12.0%
- 문화예술 참여 : 총남 21.0%, 50대 19.1%, 60세 이상 7.5%

-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낮은 여가문화 활동 참여 실정

- 문화예술 관람 : 총남 52.5%, 100만원 미만 20.4%, 100~200만원 미만 33.1%, 200~300만원 미만 50.2%
- 스포츠 관람 참여 : 총남 31.8%, 100만원 미만 14.1%, 100~200만원 미만 19.1%, 200~300만원 미만 28.3%
- 문화예술 참여 : 총남 21.0%, 100만원 미만 8.8%, 100~200만원 미만 13.1%, 200~300만원 미만 18.3%

-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총남 53.2%, 60세 이상 18.4%, 100만원 미만 20.7%

- 문화예술행사 관람 안한 이유로 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돈이 없어서' 응답 비율 상승

- 돈이 없어서 응답 비율 : 100만원 미만 16.8%, 100~200만원 미만 12.3%, 200~300만원 미만 6.6%, 300~400만원 미만 8.1%, 400~500만원 미만 5.2%, 500만원 이상 2.8%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의 생활시간 압박 심화

- 소득이 높을수록 평일 및 주말 시간부족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 상승

- 평일 '항상 그렇다' 응답 비율 : 100만원 미만 8.7%, 100~200만원 17.7%, 200~300만원 미만 26.0%, 300~400만원 미만 30.1%, 400~500만원 미만 30.5%, 500만원 이상 31.7%

>> 노인과 저소득층의 근로여건 만족도가 낮은 수준

- 60세 이상 연령 집단에서 임금수준 및 고용안정성 만족도 하락

- 임금수준 만족도 : 15~19세 13.3%, 20대 27.5%, 30대 29.6%, 40대 29.1%, 50대 30.7%, 60세 이상 28.4%

- 고용안정성 만족도 : 15~19세 22.1%, 20대 33.9%, 30대 38.2%, 40대 36.8%, 50대 37.1%, 60세 이상 26.2%

- 소득이 낮은 집단의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근무환경의 만족도 하락

- 임금수준 만족도 : 100만원 미만 24.6%, 500만원 이상 40.3%
- 고용안정성 만족도 : 100만원 미만 16.8%, 500만원 이상 48.5%
- 근무환경 만족도 : 100만원 미만 28.5%, 500만원 이상 44.2%

>> 노인과 저소득층의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가 낮은 수준

- 60세 이상 소득 만족도 비율은 15.6%로 가장 낮은 편
 - 15~19세 24.9%, 20대 28.1%, 30대 28.2%, 40대 27.0%, 50대 24.6%, 60세 이상 15.6%
- 60세 이상 소비생활 만족도는 10점 만점 4.10점으로 가장 낮고, 불만족 비율이 41.4%로 가장 높은 편

>> 노인과 저소득층의 오락 및 문화비 지출이 낮은 수준

- 60세 이상 집단은 오락 및 문화비 지출액 '없음' 응답 비율 72.8%
- 오락 및 문화비 평균 지출액은 가구소득에 비례하여 상승
 - 100만원 미만 12,027원, 100~200만원 미만 37,728원, 200~300만원 미만 84,628원, 300~400만원 미만 114,666만원, 400~500만원 미만 141,889원, 500만원 이상 208,581원

>> 50대 이상, 저소득층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수준

- 50대 이상에서 삶의 만족, 가치, 행복이 평균 이하
 - 삶에 대한 만족 : 총남 6.08점, 50대 5.96점, 60세 이상 5.76점
 - 삶에 대한 가치 : 총남 6.17점, 50대 6.14점, 60세 이상 5.68점
 - 행복 : 총남 6.11점, 50대 6.00점, 60세 이상 5.75점

- 삶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가치, 행복 경험은 소득이 높을수록 상승
 - 삶에 대한 만족 : 100만원 미만 5.55점, 100~200만원 미만 5.79점, 200~300만원 미만 5.99점, 300~400만원 미만 6.23점, 400~500만원 미만 6.24점, 500만원 이상 6.56점
 - 삶에 대한 가치 : 100만원 미만 5.49점, 100~200만원 미만 5.90점, 200~300만원 미만 6.10점, 300~400만원 미만 6.34점, 400~500만원 미만 6.37점, 500만원 이상 6.71점
 - 행복 : 100만원 미만 5.58점, 100~200만원 미만 5.82점, 200~300만원 미만 6.03점, 300~400만원 미만 6.25점, 400~500만원 미만 6.31점, 500만원 이상 6.61점

>> 50대 이상 '주관적 귀속계층' 하 응답 비율이 30% 이상 수준

- 50대 이상 주관적 귀속계층 중 '하' 응답 비율 상승
 - 15~19세 26.5%, 20대 31.7%, 30대 26.5%, 40대 26.1%, 50대 31.5%, 60세 이상 49.9%

>> 10~30대 공동체효율성 지수가 낮은 수준

- 10~30대 공동체 효율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5점 이하
 - 15~19세 4.04점, 20대 4.02점, 30대 4.56점, 40대 5.08점, 50대 5.74점, 60세 이상 6.69점

>> 10~20대 청(소)년 후원(기부) 참여가 10% 이하로 낮은 수준

- 후원활동 참여율 40~50대 비율 상승
 - 15~19세 7.4%, 20대 9.9%, 30대 19.3%, 40대 24.3%, 50대 20.1%, 60세 이상 8.9%

>> 10~30대 청(소)년의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10%이하 수준

- 10~30대 10% 이하, 40~50대 10%대, 60대 이상 21.5%에 불과
 - 15~19세 8.6%, 20대 8.5%, 30대 8.8%, 40대 10.6%, 50대 14.9%, 60세 이상 21.5%

>> 10~20대 청(소)년 지역사회 소속감 50% 이하 수준

- 10~20대 지역사회 소속감 느낌 비율이 50% 이하
 - 있음 응답 비율(점수) : 15~19세 48.8%(4.77점), 20대 45.7%(4.57점), 30대 54.7%(5.10점), 40대 64.1%(5.57점), 50대 72.3%(6.12점), 60세 이상 85.4%(7.03점)

>> 10~20대 지역사회 소속감 저하 원인은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낙후

- 필요 편의시설(1순위+2순위)로 10~20대 '문화예술시설' 가장 선호
 - 15~19세 40.1%, 20대 32.6%, 30대 26.1%, 40대 25.7%, 50대 20.2%, 60세 이상 10.4%
- 지역사회 소속감을 못 느끼는 이유로 10대 '교육환경 낙후', '문화체육시설 낙후'로 응답
 - 15~19세 : 교육환경 낙후 23.4%, 문화체육시설 낙후 20.4%

2) 정책적 시사점

>>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완화

- 충남은 전국 대비 낮은 교육비 지출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도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월평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등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적 체계에서 이를 보완하는 조치 강화

>> 저소득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로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로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구소득에 따른 평생교육 기회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조치

>> 직업능력향상 및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평생교육 활성화

- 받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10~30대는 '직업능력향상교육'을 선호

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을 선호하므로 직업 및 문화예술 관련 평생교육 활성화

≫ 50대 이상 연령대와 저소득층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정책 필요

- 50대 이상 연령, 저소득층에서 문화여가활동 참여율이 충남 평균 이하 수준을 보이므로 50대 이상, 저소득층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의 생활시간 압박 완화 정책 확대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일 및 주말 시간부족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상승하는데, 일과 가정 양립 등으로 시간빈곤에 처한 가구의 생활시간 압박 완화 요구

≫ 60세 이상 연령대와 저소득층 근로여건 향상 정책 강화

- 60세 이상 연령 집단에서 임금수준 및 고용안정성 만족도가 하락하고 소득이 낮은 집단의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근무환경의 만족도가 하락하므로 60세 이상, 저소득층의 근로여건 향상 정책 강화

≫ 60세 이상 연령대의 소득과 소비생활 만족도 향상

- 60세 이상 소득 만족도 비율과 소비생활 만족도가 낮으므로 60세 이상의 소득과 소비수준 추이 관리 및 만족도 향상 조치 필요

≫ 저소득층, 노인 문화여가 활성화

- 60세 이상 집단은 오락 및 문화비 지출액 ‘없음’ 응답 비율이 높으며 오락 및 문화비 평균 지출액이 가구소득에 비례하여 상승하므로 60세 이상, 저소득가구의 문화여가 여건 개선 조치 강화

≫ 50대 이상, 저소득층의 삶에 대한 만족감 향상 정책

- 50대 이상에서 삶의 만족, 가치, 행복이 평균 이하를 보이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가치, 행복 경험이 상승하므로 50대 이상 저소득층 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감 제고 정책 요구

>> 50대 이상 '주관적 귀속계층' 향상 정책

- 50대 이상 주관적 귀속계층 중 '하' 응답 비율이 증가하므로 50대 이상의 귀속계층 상승 지원 강화

>> 10~30대 공동체효율성 지수 향상 조치 강화

- 10~30대 공동체 효율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5점 이하를 보이므로 청(소)년 세대의 공동체 효율성 지수 향상을 위한 조치 강화

>> 10~20대 청(소)년 후원(기부) 참여 활성화

- 10~20대 후원활동 참여율은 10% 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청(소)년 세대의 후원활동 참여 활성화 조치

>> 10~30대 청(소)년의 일반인에 대한 신뢰 확대 조치 강화

- 전체적으로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이지만 특히 10~30대는 10%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청(소)년 세대의 신뢰 확대 조치

>> 10~20대 청(소)년 문화예술 및 교육시설 확대, 소속감 강화

- 지역사회 소속감 관련 10~20대의 지역사회 소속감 느낌 비율은 50% 이하 수준이며, 지역사회 소속감을 못 느끼는 이유로 10대는 '교육환경 낙후', '문화체육시설 낙후'로 응답하였으며, 또한 필요 편의시설(1순위+2순위)로 10~20대는 '문화예술시설'을 가장 선호하여 청(소)년 세대의 지역사회 소속감 향상 및 정책수요 반영 조치로서 청(소)년 교육 및 문화여가 정책 확대

제3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1. 가족, 공동체, 사회통합

>> 사회안전망 강화

- 낮은 복지재정 수준 상향
- 중장년, 노년 세대의 빈곤 완화와 자살률 감소 대응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안전망 강화

>> 공동체 포용성 강화

- 1인, 노인, 한부모, 조손, 북한이탈, 다문화 등 가족 다양성 증가 대응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인권존중도 하락 대응
- 고립, 소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 청(소)년 층 계층이동가능성, 신뢰와 소속감 강화

- 10~30대 계층·사회 이동성 지원 기반 강화
- 10~30대의 일반인 신뢰와 지역사회 소속감 향상 정책 활성화
- 차세대에 미래 희망과 지역 애착을 강화하여 인구감소, 사회갈등 대응

2. 교육, 문화·여가

>> 아동·청(소)년 교육 및 문화 격차 축소

- 가구소득에 따른 아동·청소년 교육 및 문화 격차 축소
- 공교육 강화, 마을교육 및 미래사회 직업관련 (평생)교육 활성화
- 문화예술스포츠 시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장애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등의 문화예술 및 교육 기회 확대

>> 중장년, 노년, 저소득층 문화여가 기회 확대

- 중장년과 노년층, 저소득층 문화여가 참여 기회 확대
-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자 풀 확대, 공동체 자원 활용 활성화

3. 주거, 환경

>> 상하수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물·에너지 복지 확대

-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향상 및 적정 수준 물 제공
-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수질 관리 강화
- 도시가스 미보급 농어촌 지역 에너지 문제 대응 강화

4. 건강

>> 건강생활 활성화 및 건강관리 강화

- 규칙적 운동 실천 강화 등으로 비만, 고혈압, 당뇨 개선
- 우울,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관리 강화

5. 노동, 소득

>> 일자리 확대 및 소득격차 완화

-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소득과 일자리 정책 강화
- 장애인 고용 대책 강화

>> 취업자 시간빈곤 해소와 일-생활 균형(워라벨) 강화

- 취업자 장시간 근로 관행 축소로 일-가정, 일-생활 여건 마련
- 취업자 생활시간 압박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제4장

충남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제1절 양극화 정책수립을 위한 도민 의식조사
- 제2절 양극화 대응과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주요과제

제1절

양극화 정책수립을 위한 도민 의식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및 대상

- 충남의 양극화 정책방향과 과제도출을 위해 충남도민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과 원인,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수렴을 추진
- 표본의 추출은 충남의 15개 시군별 인구비례에 의한 성, 연령, 지역별 할당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총 552명을 대상으로 설문

≫ 조사기간 및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및 직접면접조사
- 2019년 11월 18일 ~ 11월 29일, 2주간

≫ 조사내용

구 분	세부내용
양극화 인식도	· 한국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 · 충남도의 양극화 현상 · 경제적(소득)불평등 인식도
양극화 심화원인	· 양극화 심화의 원인 · 소득 양극화 원인
생활수준	· 10년간 생활수준 변화정도 · 생활수준 악화 원인 · 경제적 측면에서 직면한 어려움
정책방향	· 경제정책방향(중요도, 시급성) · 사회정책방향(중요도, 시급성) · 충남도 양극화정책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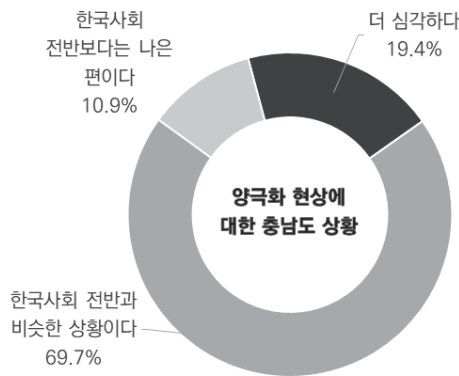
>> 응답자 일반현황

구분		표본 수	비율	구분		표본 수	비율
성별	전체	552	100.0	지역	천안시	162	29.3
	남	283	51.3		공주시	33	6.0
	여	269	48.7		보령시	24	4.3
연령	만20~29세	84	15.2		아산시	82	14.9
	만30~39세	90	16.3		서산시	50	9.1
	만40~49세	112	20.3		논산시	17	3.1
	만50~59세	105	19.0		계룡시	19	3.4
	만60세 이상	161	29.2		당진시	49	8.9
업종	자영업자	55	10.0		금산군	13	2.4
	사무·관리직	186	33.7		부여군	18	3.3
	기술·노무직	81	14.7		서천군	13	2.4
	농림어업	51	9.2		청양군	14	2.5
	학생	23	4.2		홍성군	22	4.0
	주부	109	19.7		예산군	25	4.5
	기타	47	8.5		태안군	11	2.0

>> 충남지역의 양극화 인식과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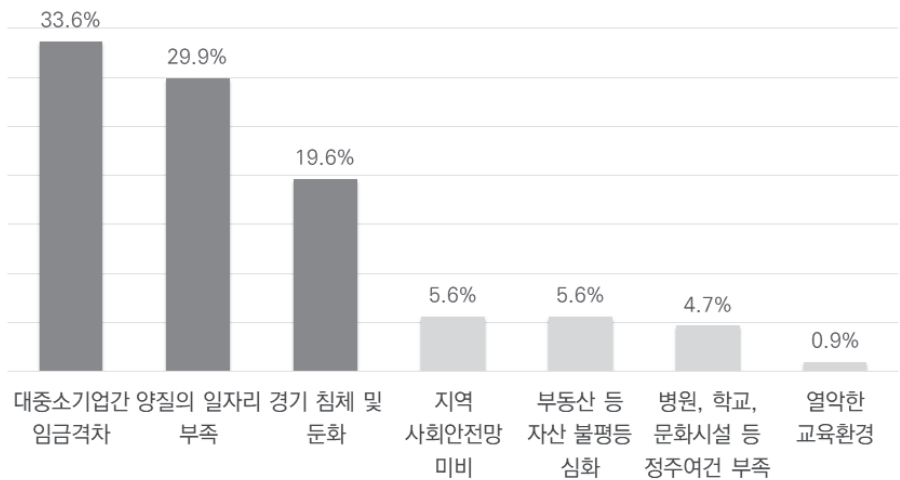
- 충남지역의 양극화 현상에 관해 한국사회 전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사회 전반보다 긍정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은 비중을 점유

[그림 4-2] 전국에 비해 충남의 양극화 상황



- 충남지역에서 양극화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경제구조적 측면과 관련이 있음
 - * 사회구조적 측면(지역 사회 안정망,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보다는 대중소 기업간 임금 격차, 양질의 일자리, 경기침체 등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더 심각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83.1%)

[그림 4-3] 충남지역이 양극화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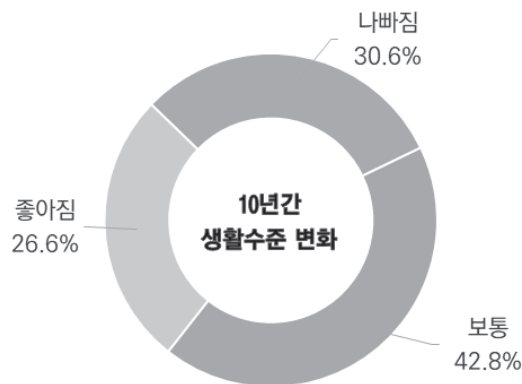


2) 개인적 측면에서의 (소득)양극화

≫ 지난 10년간 가계 생활수준의 변화정도

- 생활수준의 변화에 대해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나빠졌다(상당히 나빠졌다 + 다소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0.6%며, 좋아졌다(상당히 좋아졌다 + 다소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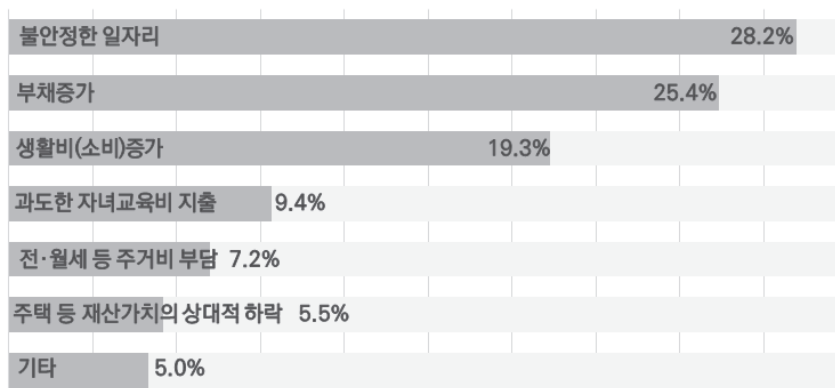
[그림 4-4] 개인의 10년간 생활수준의 변화



≫ 생활수준 변화 원인

- 10년간 가계 생활수준이 나빠진 이유에 대하여 불안정한 일자리가 원인이 라고 인정한 경우가 28.2%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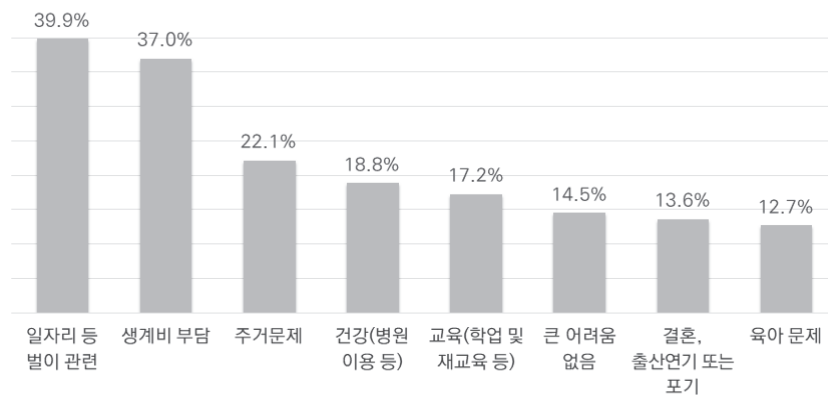
[그림 4-5] 생활수준 변화 원인



>> 경제(소득)측면에서의 어려운 점

- 소득부분과 관련하여 일자리, 생계비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76.9%)
- * 일자리 등 벌이관련(39.9%), 생계비 부담(37.0%), 주거문제(22.1%)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4-6] 경제적 측면에서 직면한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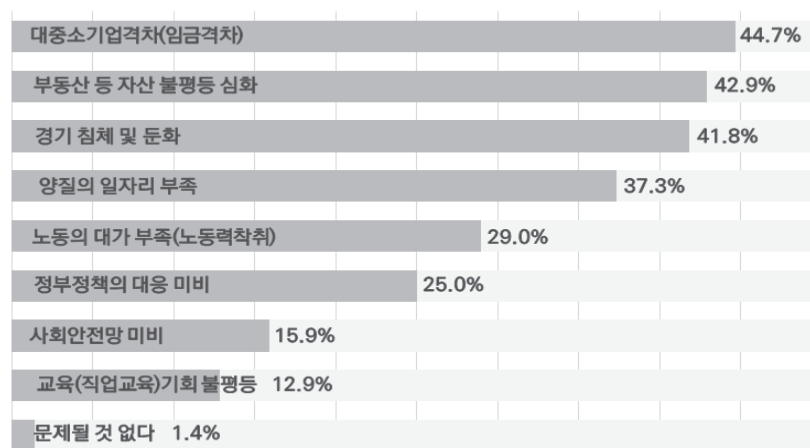


3) 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방향

>> 양극화 원인에 대한 의견

- 양극화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 경기침체 및 둔화가 소득양극화를 야기 시킨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각 분야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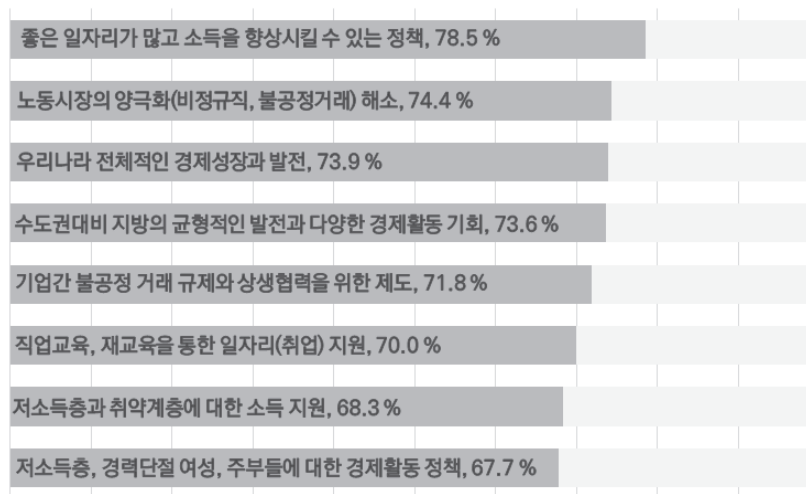
[그림 4-7] 양극화 원인에 대한 의견



》 양극화 정책방향의 중요성

- 경제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및 불공정거래로 인한 임금격차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음.
 - 특히, 좋은 일자리 및 소득 향상 정책의 중요성이 가장 높았음(78.5%)

[그림 4-8] 정책분야별 중요성 ; 경제분야



- 사회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보장 정책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충족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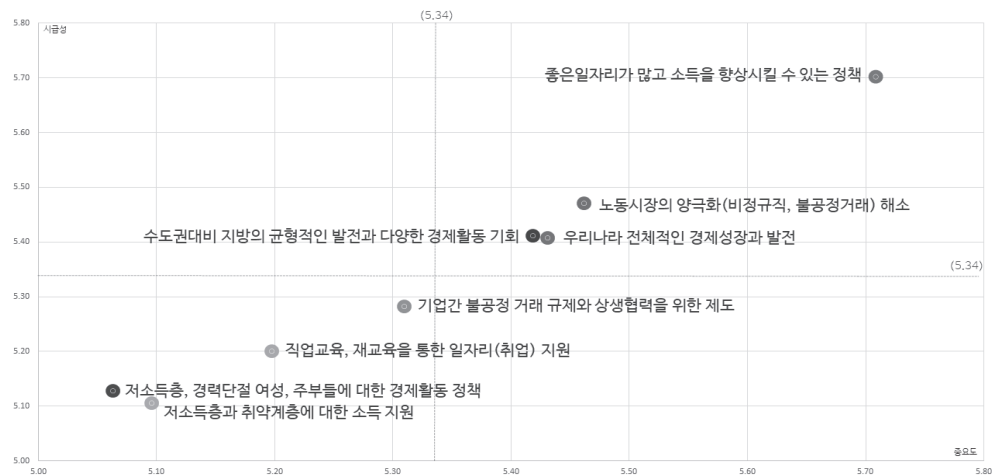
[그림 4-9] 정책분야별 중요성 ; 사회분야



>> 양극화 정책방향의 중요도 및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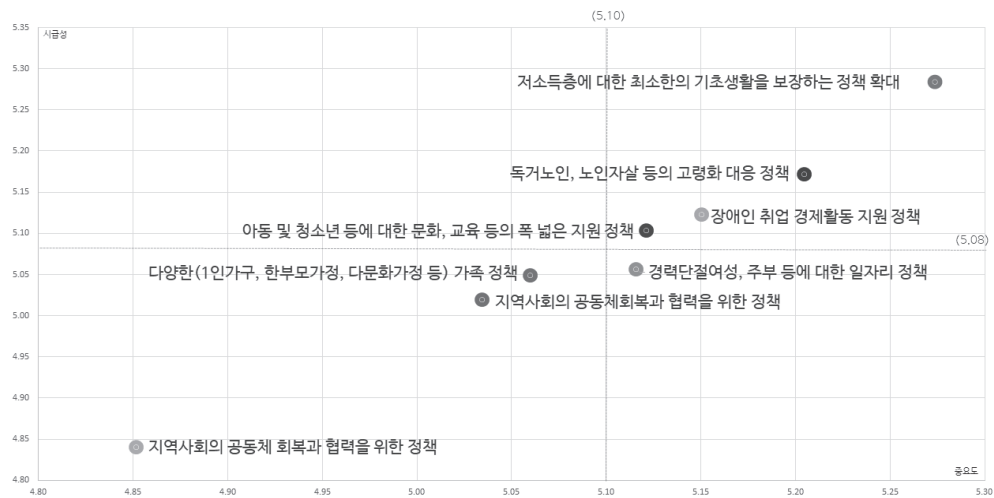
- 경제분야에서는 일자리 및 소득 관련 정책이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높게 나타남
 - 저소득층 및 여성, 취약계층에 지원에 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중요성, 시급성 모두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림 4-10] 정책분야별(경제분야) 중요도 및 시급성



- 사회분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권 관련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이 가장 높았음
 -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협력관련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중요도, 시급성 모두 낮게 나타남

[그림 4-11] 정책분야별(사회분야) 중요도 및 시급성



제2절

양극화 대응과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주요과제

1. 양극화에 대한 전망과 대응

≫ 충남에 대한 대·내외적 여건은 격차 확대를 가속화

- 글로벌화 가속, 우리나라와 충남경제의 성장률 둔화, 새로운 성장동력의 미비 등 대내외적 압박 요인 확대
 - 제조업, 대기업, 수출중심으로 성장한 충남 지역의 특성상 경제 성장 둔화는 경제주체 전분야에 영향
 - 충남지역 특성에 맞는 시의성 있는 경제정책 수단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요구

≫ 각 경제 주체간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

-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 경제주체간 혁신기반의 격차문제로 임시·단기 정책으로는 접근에 한계
 - 경제주체간의 혁신기반 격차는 교육·기술 등 기존 시장·제도의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제도 체계에 대한 검토 없이는 자동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
- 업종을 불문한 기업간 양극화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주체의 가계소득으로 연결되어 소득양극화도 심화될 전망
 - 양극화 완화와 해소를 위해 시장경제 중심의 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한계로 정부 개입의 당위성이 확대

≫ 전 산업에 걸쳐 선도업체와 함께 취약업체의 비중 확대 예상

- (제조업)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변화, 글로벌 블록화 및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도 기업, 글로벌 초국적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이 중심으로 성장하고, 기타 취약업종과 한계기업 역시 비중이 확대될 전망

- 경공업 부문은 물론 첨단산업 업종에서도 미적응 업체 및 취약업체 비율 확대

-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형태의 기업형 업체 확대 → 혁신형 및 독창적 기업 외의 소형업체의 지위 지속적 악화 예상

- 일부 서비스업의 수익성과 경쟁과다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비정규직의 고용)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사회적 이동성의 제약으로 근로빈곤층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 전망

- 경제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여력은 당분간 한계(서비스업은 포화상태)

>> 경제주체별 차별화된 접근방법 필요

- 경제주체의 격차 지속 전망 및 기존 정책의 한계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의 적극적 접근방법 필요

-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공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사회적 이동성의 제약으로 근로빈곤층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각각의 경제주체에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2. 충남의 양극화 대응을 위한 방향과 추진과제

1) 정책의 접근 방향

≫ 동태적이며, 중장기적 측면의 접근필요

- 정태적 측면이 아닌 동태적 시각에서 양극화 부작용에 대응하고, 동시에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소득보조형 재분배정책에 대한 검토와 도입이 필요
 - 단순 소득보조형 정책으로는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일없는 빈곤계층을 양산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개방, 경쟁 및 구조조정 촉진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 경제체질 개선의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단기적이거나 과도기적인 경제정책은 고용불안 계층을 증가시키고 분배구조를 악화 시킴으로서 결국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심각히 침식

≫ 선도부문과 낙후부문간의 동반성장 전략 필요

-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선도 부문에 대한 정책을 통해 상호 연관 보완
-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첨단산업 등의 선도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장을 촉진시키고 지속적으로 확대 파급될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
 -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시장의 기능에 충실하되,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기업에 대한 지원 → 사람(인적자원)에 대한 지원)
- 경쟁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선도부문과 동반성장이 가능토록 하는 전략 모색

>>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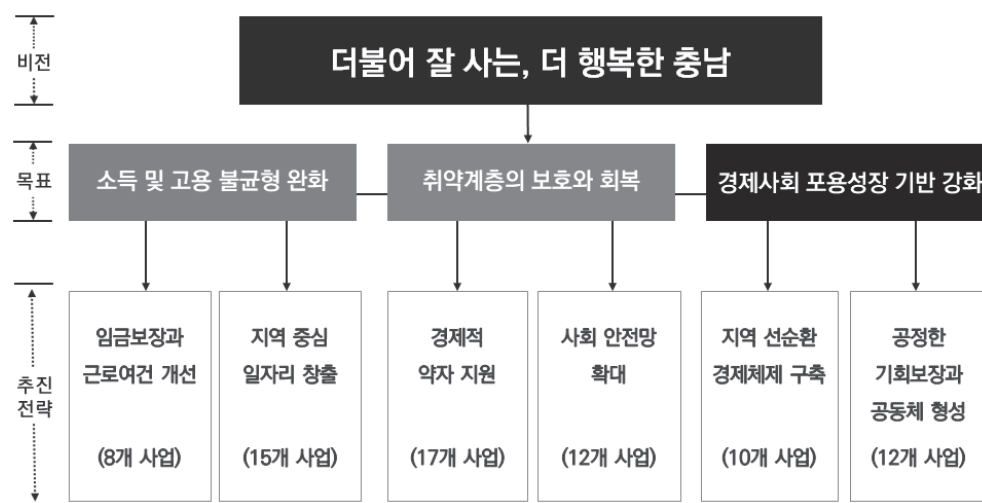
- ‘저성장속의 격차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선도부문의 성장 잠재력의 확충과 취약부문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정책수단적 측면에서 유형별 접근과 함께 개체적 접근을 통해 취약한 개별 경제주체에 대한 차별화·분화된 정책적 접근을 위한 인프라 전면 재정비
 - 관련 제도와 업무에 대한 종합적 점검·평가를 통해 성장·취약기반의 유형적 검토와 정책대상에 대한 개체적 접근을 통한 정책성과의 극대화 전략

>> 지속적 관리를 위한 체계구축

- 양극화는 경제·사회 전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도정기조하에서 총괄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존의 SDGs나 충남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총괄적으로 기획조정 및 환류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마련도 필요함

2) 목표별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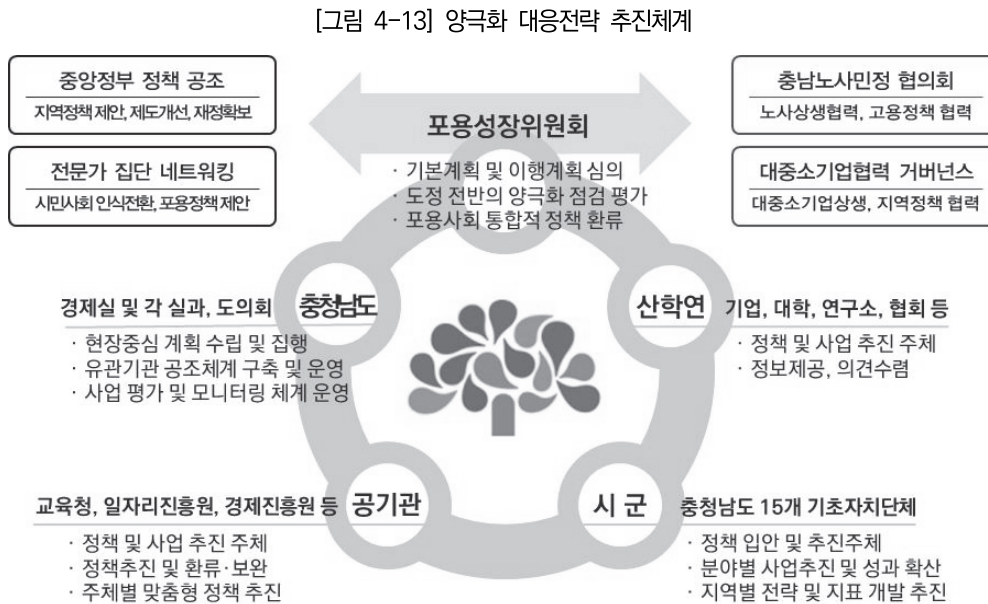
[그림 4-12] 충남의 양극화 정책방향과 전략



목표	추진전략	사업구분		과제명
		신규 22 계속 52	단기 11 중기 9 장기 54	
취약 계층의 보호와 회복 <29개>	경제적 약자 지원	계속	장기	37.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계속	장기	38.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지원
		계속	장기	39. 경로당 태양광 설치
		계속	장기	40.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회 안전망 확대	신규	장기	41. (핵심) 충남형 독거노인 공유주거모델 개발
		계속	단기	42. (핵심) 노인 자살예방 관리 체계 강화
		계속	중기	43. 의용소방대 현장 밀착형 자살예방 활동
		계속	장기	44.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계속	장기	4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계속	장기	46.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계속	장기	47.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속	장기	48.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119구급 서비스
		계속	장기	49.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 서비스 지원
		계속	단기	50.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
		계속	장기	51.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계속	장기	5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경제사회 포용성장 기반강화 <22개>	지역 선순환 경제 체계 구축	신규	중기	53. (핵심) 충남형 기업과 지역의 공유가치 창출지원
		계속	장기	54. (핵심) 사회적경제 지원 플랫폼 구축
		계속	장기	55. 지역기업 현지화
		계속	장기	56. 지역화폐 활성화
		계속	중기	57. ICT기반 지역 협력적 소비플래너 양성
		계속	장기	58. 마을기업 육성
		계속	장기	59. 상생형 어촌계 연금제 도입
		계속	중기	60. 청년 어촌정착 지원
		신규	장기	61. 성과공유제 도입
		계속	장기	62.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정한 기회 보장과 공동체 형성	신규	단기	63. (핵심) 도지사 직속 '포용성장위원회' 신설
		신규	장기	64. (핵심) 학교 밖 청소년 성장수당 지원
		계속	중기	65.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활성화
		신규	단기	66. 충남 진로융합교육원(가칭)설립 지원
		계속	장기	67.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및 교육권확보
		계속	장기	68.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규	장기	69. 사회문제해결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지원
		계속	장기	70.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계속	장기	7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계속	단기	72.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서비스
		계속	장기	73. 읍면동 마을 공동체 지원
		신규	단기	74.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 사회통합 특화사업 추진

3) 양극화 대응전략 추진방향

≫ 양극화 대응전략 추진체계



≫ 양극화 대응 지표체계(안)

〈표 4-1〉 양극화 대응 지표체계(안)

목 표		충남형 양극화 지표체계
소득 및 고용불균형 완화	〈대표지표〉	○ 충남형 임금격차 지표* - 고용형태별·성별 임금격차 등 *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생산한 지표
	〈보조지표〉	○ 고용률(청년 고용률) *SDG(충남지속가능발전지표)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SDG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SDG ○ 근로여건 만족도 *(통계청)사회조사
취약계층의 보호와 회복	〈대표지표〉	○ 삶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감) *(통계청)사회조사
	〈보조지표〉	○ 소상공 업황 BSI *SDG ○ 자살률 *SDG ○ 사회복지비 비율 *SDG
경제사회 포용성장 기반 강화	〈대표지표〉	○ 경제성장률 *(통계청)지역소득
	〈보조지표〉	○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통계청)지역소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의식 *SDG ○ 계층이동성 인식 *(통계청)사회조사

>> 양극화 대응전략 소요예산(잠정)

〈표 4-2〉 양극화 대응전략 소요예산(잠정)

목 표	추진전략	연도별 소요예산(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6		2027 ~2030	
			도비		도비		도비		도비		도비
계 (74개 과제)	8조 1,121억	5,152	1,413	5,395	1,665	5,794	1,788	21,351	6,251	43,429	9,587
소득 및 고용 불균형 완화 (5조 6,929억) (23개 과제)	임금보장과 근로여건 개선 (1조 1,018억)	1,002	408	1,008	414	1,018	424	4,006	1,630	3,984	1,608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4조 5,911억)	1,824	343	1,988	368	2,151	405	8,900	1,486	31,048	4,812
취약계층의 보호와 회복 (1조 8,050억) (29개 과제)	경제적 약자 지원 (1조 3,331억)	1,114	400	1,157	506	1,201	525	4,916	2,143	4,943	2,165
	사회 안전망 확대 (4,719억)	482	142	515	157	527	160	1,527	376	1,668	413
경제사회 포용 성장 기반 강화 (6,142억) (22개 과제)	지역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 (4,827억)	404	74	503	172	685	227	1,627	560	1,608	544
	공정한 기회보장과 공동체 형성 (1,315억)	326	46	224	48	212	47	375	56	178	45

3. 추진 전략별 주요 과제

1) 소득 및 고용 불균형 완화

(1) 임금보장과 근로여건 개선

① 충남형 지역사회 협약

(1) 사업개요

- 지역(지자체) 주도의 노사협약(임금협상), “도-시·군-사용자-노동자”의 지역사회 공동 협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광주형 일자리 등의 지역특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정책이 지역 특색에 맞도록 확대 추진되고 있음
- 충남 역시 지역특화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충남도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마련
- 사례 : 지역사회협약모델(이탈리아) 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역에서 행하고, 지방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협약을 맺고 정책시행
 - 지역협약은 산별협약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제도로 사회적 기업과 지역별 협동조합이 중심이 됨. 지역 주민과 제3섹터 등을 연결하여 원활하고 조직화된 지역협약을 수행
 -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조직 구성의 다양성이나 기능의 세분화를 통해 생활 속의 노동운동을 실천

※ 단체협약(공공): 1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RSU (Rappresentanza sindacale unitaria, 통합노조대표제)가 교섭

(3) 주요사업내용

- “도-시·군-사용자-노동자” 공동의 지역사회 공동 협약, 지역 주도의 노사협약(임금협상)
 - 기존 노사정 대표자협약 수준을 넘어 ‘완전 고용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한 다자간 협약으로 확대

- 충남형 지역사회 협약 모델 추진(2~3개 시군 시범사업 추진)
 - 특정 업종에서의 근로 취약계층 고용 및 공정임금 보장 (지자체의 재정지원 ; 공정 임금 부족분 또는 인센티브 지원)
- 동종·유사업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원·하청기업 공생 발전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영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단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모델 개발 및 시군 협약
 - * 지역사회협약 기본 방안 마련(대상업종 선정, 도 및 시군의 지원 정책 마련)
 - *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군 관계관 회의 및 기본추진 일정 협의
 - 2021년 : 충남형 시범 사업 추진 (2~3개 시군)
 - * 지역 취약업종 선정, 업종별 영세 자영업자 지원방안 및 근로감독 방안 모색
 - * 원하청기업 공생발전 기금 50억원 조성
 - * 취약업종에 대한 대상별 2억원 한도내 (시군별)
 - 2022년 : 시범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만족도 및 피드백 등)
 - * 포용성장위원회(가칭)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
 - 2023년 이후 : 사업에 대한 보완 및 시군 지역 적용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56		12	22	22	
국비							
지방비	도비	56		12	22	22	
	시군비						
민자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시범사업

(1) 사업개요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구축
- 산업, 업종, 직종별 임금수준을 비교 가능케 함으로써 노동이동의 유연성 제고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임금기준 정책 필요
- 지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 및 산업현장의 소모적 분쟁요소 중 하나인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임금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필요
- 기업간, 산업간, 업종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
 - 충남도의 지역 실정에 맞는 적용가능한 분야와 대상 발굴필요 (서울시 '성평등임금 공시제' 발표, 2019.12)

(3) 주요사업내용

-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업종별 임금기준 확보
 - 근속 및 숙련수준, 직종·경력별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표준임금체계 구축 및 표준임금정보 공시제 실시
- 표준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업종 및 대상 선정 등 단계별 추진 방안 마련
 - 1단계 : 근속, 직종, 사업장규모, 경력별 실태조사 또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한 표준임금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업종 선정
 - 2단계 : 시범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특정직종, 지역 대상 표준임금정보 공시제 실시
 - 3단계 : 표준임금정보 공시제 도내 전역 실시
 - 4단계 : 공공부문의 Work-net과 주요 민간 취업사이트와 연계 확대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중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노사민정협의회 표준임금체계 안건 제시 및 충남지역 적용방안 협의
 - * 서울시 성평등임금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도 적용방안 협의
 - *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도입가능 기업 등에 대한 시범사업화 방안 마련
 - 2021년 : 시범사업 추진 및 피드백
 - *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노사민정협의회, 경제단체 의견 수렴
 - 2022년 : 적용가능한 업종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안) 및 공시
 - * 도입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 (공공기관 평가,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의 도 정책 관련)
- 투자계획
 - 비 예산 사업

③ 최저임금미달 사업장 실태조사 및 특성화 방안 마련

(1) 사업개요

- 지역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군별 최저임금미달사업장 실태조사 추진 및 업종별 지원방안 마련
- 최저임금 준수를 통한 지역내 취약계층 보호와 취약사업체 지원방안 마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8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총 311만 1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약 15.5%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9년 4월호)
 - 세부적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43.1%), 농림어업(40.4%), 협회 및 단체(33.9%), 도매 및 소매업(21.6%), 부동산업(21.5%),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21.0%) 등
 - 소규모 사업체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41.1%,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3.4%,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비중은 단 1.9%
- 근로감독 미비 등으로 충남지역 역시 전국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충남 지역내 근로자 및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정당 임금을 보장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원정책 모색이 필요

(3) 주요사업내용

- 충남 15개 시군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실태조사를 위한 단계별(중장기적) 추진계획안 마련
 - 각 시군청과 공동으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을 마련할 사업대상 범위 선정
- 시범사업 사업체(업종)에 대한 최저임금미달사업장 실태 조사 추진(2020년) 및 업종별 수요대응형 지원방안 마련
 - 최저임금 미달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 시범사업 업종에 대한 사용자(기업)와 업종(직종)별 특화 및 전문화 방안 연구와 정책 지원방안 모색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단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시군과 공동 추진 협의 (우선 추진 대상 및 지역 선정)
 - *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군 관계관 회의 및 기본추진 일정 협의
 - 2021년 : 선정된 지역에 대한 시범 사업 추진 (2개 시군, 실태조사 추진)
 - * 지역 취약업종 선정, 업종별 영세 자영업자 지원방안 및 근로감독 방안 모색
 - * 현재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적용 방안 모색
 - 2022년 이후 : 시범사업에 대한 피드백 및 전 시군 확대
 - * 3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
 - 2023년 이후 : 충청남도 전 시군에 대한 기본계획 마련후 추진 (시군 추진)
- 투자계획
 - 비예산 사업

4 지자체 근로감독권 부여

(1) 사업개요

- 지역 차원에서의 고용주에 대한 법규준수 등의 근로지도 확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지도 필요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사업장수 및 신고사건수(2019.7)
 - 사업장수(만개소): ('12)169 → ('13)175 → ('14)186 → ('15)189 → ('16)195 → ('17)201
 - 신고사건수(천건): ('12)360 → ('13)369 → ('14)371 → ('15)379 → ('16)403 → ('17)414
-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311만 1000명(15.5%)수준
 - 숙박 및 음식점업(43.1%), 농림어업(40.4%), 협회 및 단체(33.9%), 도매 및 소매업(21.6%), 부동산업(21.5%),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21.0%) 등

(3) 주요사업내용

- 근로감독보다는 법규준수 등의 사용자에게 대한 근로지도 확대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산업안전법 위반 지도 등을 통한 소득불평등 해소
 - 최저임금 및 기초임금체계 산정기준 마련 및 지도 등
- 단기적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 (중앙정부 건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공유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공유하여 지역내 노동권보호와 취약노동자 및 사업자에 대한 감시·예방적 활동 강화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장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19년 : 노동권익센터 외부 위탁
 - 2020년 : 지자체에 대한 근로감독권 부여(중앙정부 제안 요청)
 - * 타 시도와 공감대 형성(의원입법발의 및 토론회 등)
 - 2021년 : 지자체 근로감독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제도 정비
- 투자계획
 - 비 예산 사업

5 노동법원 신설

(1) 사업개요

- 지역별 노동법원 신설을 통한 노동문제의 원스톱 해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각종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분쟁(해고, 임금, 산재 등)해결기능이 여러 기관에 혼재되어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에 접근성이 제약적
 - 노동청(근로감독조사), 근로복지공단(산재판정), 대한법률구조공단(취약계층구조) 등의 기능도 행정력·전문성의 한계
 - 특히, 해고·임금문제 등을 준사법적으로 다루는 노동위원회는 '사실상 5심제'처럼 운용되어 장시간 소요되고, 사용자 측 악용 빈번
- 근로자 입장에서 차별문제를 조사·시정하는 통로 불충분
 - 노동위원회(차별시정 신청), 국가인권위원회(권리침해 진정) 등에서 소극적으로 수행 중
- 지자체 단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동법원 신설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3) 주요사업내용

- 지역별 노동법원 신설을 통한 노동문제의 원스톱 해결
 - 다원화된 노동분쟁 해결기능을 일원화하고, 노동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제 절차로 운영, 전문성 제고 및 비용·시간 절감
 - * 노동권을 존중하는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운영 중이며, 「노동소송법」 발의('17.5)
- 노동권 개념이 보편화 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현장의 차별문제 조사·시정기능을 확충 및 전담하며, 공중노동(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침 개발·보급·컨설팅 역할을 위한 '충남 공정노동위원회' 신설
 - 실질적인 공정노동이 실현되도록 미국의 노동차별시정 전문기관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수준으로 강력한 권한 부여
 - *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 Commission), 기업실태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 역할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장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지역단위 노동법원 신설 건의 (중앙정부 제안 요청)
 - * 타 시도와 공감대 형성(의원입법발의 및 토론회 등)
- 투자계획
 - 비 예산 사업

⑥ 노동권익센터 운영 활성화

(1) 사업개요

-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동존중 사회 구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충남은 고용률 64.1%(전국 2위)로 일자리의 양은 양호한 반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35.7%에 이르는 등 일자리의 질은 낮은 편
 - * 충남 임금근로자 81만8천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29만2천명
-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체계 마련 및 효과적 정책개발을 위해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3) 주요사업내용

- 사업명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9.08.27. ~ 2021.12.31.
- 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600백만원)
 - * 연도별 예산편성액에 따라 결정
 - 지원내역 :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센터장 등 7인) 등
- 추진주체 : 노동권익센터(민주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 핵심내용 : 취약계층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등

≫ 그동안 추진현황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2019. 4.)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체결(2019. 8.)
- 2019년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2019. 9.)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2019.10.)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개소식(2019.11.)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현지 지도·점검(2019.12.)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계속, 장기
- 2020년 운영 2년차로 기반구축 및 사업본격화 1단계 수립
 - 2019년 충청남도 권익센터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2020. 1.)
 - 효율적인 상담체계, 상담과 권리구제를 통한 노동자 권리보호
 - 취약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노동실태조사
 -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및 노동정책 방향 연구
 - 노동교육을 통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노동존중 홍보·기획(콘텐츠를 통한 홍보 및 캠페인)
 - 노동조합 및 민간 노동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협력 활성화
- 2021년 운영 3년차로 기반확대 및 사업본격화 2단계 수립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66	6	6	6	24	24
국비						
지방비	도비	66	6	6	6	24
	시군비					
민자						

7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1) 사업개요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설 추진으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 및 농어민의 소득 안정 도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DDA/FTA 등 개방이 확대되면서 도·농 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심화
 -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 00)80.5% → 05)78.2 → 10)66.8 → 16)63.5
 → 17)64.1 → 18)65.5
- 특히, 전체 농가의 64.6%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ha미만)의 경우 농업 경영을 통해 창출되는 농업소득은 소비감소, 생산비 증가 등 개선여건 불투명

(3) 주요사업내용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 및 농어민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어민 수당 지급
 - (추진방식) 2020년부터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설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임가, 어가
 - (사 업 량) 165천가구(농가 150, 임가5, 어가 10)
 - (지급금액) 도·시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지사 결정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장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165천 가구(매년 심의위원회 개최로 대상 가구 결정)
- 그동안 추진상황
 - (추진위원회) 지급대상 및 지급 세부기준 등 협의 조정(단체, 전문가 등)

- (조례제정) 주민조례 청구안 이행절차를 걸쳐 도의회 수정안 통과
- (도시군협약) 사업시기 및 부담비율, 지급액 등 협약('19. 12. 26.)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10,890	990	990	990	3,960	3,960
국비							
지방비	도비	4,356	396	396	396	1,584	1,584
	시군비	6,534	594	594	594	2,376	2,376
민자							

8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 (사업결정) '만사형통충남' 도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사업이 도민참여위원회 분과위와 총회를 통해 도민참여예산으로 확정
 - (사업기간) 2020. 3. ~ 12.
 - (예 산 액) 총 620,400천원 (도비 100%)
 - (시행방법)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한 사업추진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대기업노동자에 비해 기업복지가 취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지원을 통해 노동자 건강권 지원이 필요
- (필요성)
 -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 및 가족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 업무집중도 증가 및 스트레스 감소로 산업재해를 줄임으로 인한 안전한 일터 구현과 노동상실률을 낮춰 경제활성화 기여
 - 산재사망사고 발생사업장의 동료 노동자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망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에 기여
 - 노사분쟁으로 인한 노-노 갈등, 노-사 갈등의 심리불안정 상태를 극복함으로써 노사안정과 개인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 감정노동 업무 종사자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적 건강악화를 방지하고 적절한 정신건강 돌봄사업과 연계로 노동자 건강권 지원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3. ~ 12.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 및 가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노동자 중 심리상담 희망자, 산재사망사고 사업장, 노사분쟁사업장, 감정노동 업무종사자
- (추진체계)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군 보건소와 협력 추진
 -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와 협력 추진
 - 중소기업연합회등 사용자단체 및 양대노총등 노동단체와 연계
 - 정신건강 돌봄사업(힐링캠프, 소통·갈등관리, 심리치유사업)과 연계
- (사업내용)
 - ❶ 심리상담사 모집 및 15개 시·군에 파견(3월~12월)
 - 심리상담사 11명 모집(연봉 3천만원, 계약직)/운영책임자 1명
 - 시·군 보건소 정신건강업무와 연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❷ 참여사업장 발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한 참여신청자 모집 홍보
 - 시·군 보건소를 통한 정신건강지원 사업장 발굴
 - 사용자단체와 협업을 통한 사업장 발굴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산재사망사고 사업장
 - 충남노동위원회를 통한 노사분쟁 사업장 파악
 - ❸ 개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대면상담, 가족상담)
 - 개인의 심리상태 및 맞춤형 심리치유를 위한 전문상담
 - ❹ 정신건강 돌봄사업(치유사업, 시군보건소 협력)
 - 정신건강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 형태별 4가지 프로그램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단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시범사업 운영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6.2	6.2				
국비							
지방비	도비	6.2	6.2				
	시군비						
민자							

(2)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①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1) 사업개요

-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혁신도시법에 의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충남도내 전 공공기관(양 체육회, 교통연수회 포함)에 도입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지역인재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적용에 한정
 -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를 위해 시험단계별로 합격정원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로 시행 중
 - 국가공무원 5급(지역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외교관후보자, 7급 공채 시험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적용.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한 지역화 적용
 - 도내 전 공공기관(양 체육회, 교통연수원 포함)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강화를 통해 지역순환 체계 마련
 - 점진적인 지역인재 채용규모 확대(20%(21년), 25%(22년), 30%(23년))

(3) 주요사업내용

- 지역대학 및 연고 출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의 전 기관 시행
 -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지역연고)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대학(지역연고)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시범 추진
 -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 목표연도 설정을 통해 지역대학(지역인재) 30~40% 수준 자율 목표제 시행
- 지역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지원(충남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발굴, 근로 환경개선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
 - * '19년부터 지역인재 채용비율 9~21%에 따라 가점 2~10점 신설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장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도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MOU체결
 - * 충남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시 지역인재 채용 가점 병행 추진
 - 2021년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2030년까지 단계별 추진, 각 기관별 자율 목표 설정(최대 40%)), 도 경영평가 지표 반영
 - 2022년 : 2021년 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
 - * 공공기관별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되, 의사, 간호사, 연구직 등 전문직에 대해서도 권장
- 투자계획
 - 비예산 사업

②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

(1) 사업개요

- 모든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자산으로서의 사회상속제도 도입
- 지역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의 동인 확보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청년정책(청년수당, 청년기초자산제 등)에 대한 이니셔티브 확보 및 정부제안
- 충남지역 인접시도(서울, 경기, 대전)에서 청년수당 도입 및 시행
 - (서울시 청년수당)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 최소3개월~최대6개월 지급. 4,000명 내외 심사·선정 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19년 만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급
- 청년 기초자산 취득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 확대
 - 청년사회상속법안(심상정, 의안번호12473, 2018.3)
 - 청년기초자산제(청년출발자산정책, 서울시 검토중)
- 다양한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토록 할 수 있는 청년 사회상속제에 대한 검토 필요

(3) 주요사업내용(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 충남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제 지급
 - 우리지역(연고)출신으로, 만19세 청년에게 1회 1000만원의 기초자산 지원
 - * 만 19세 이후 취업, 대학 졸업 등 만30세 이전 자유 수령
- 정부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활동구직신청자)수급자 등 전 대상 포함

③ 청년 지역인재 순환시스템 구축

(1) 사업개요

- 청년(지역인재)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지원
-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와 지역 취업 확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문 기술인력 양성 학교(특성화고) 현장과 산업체간 미스매치
 -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44.9%는 충남지역에 취업할 의사가 있으나, 기업체에서는 직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채용회피
- 도내 대학 졸업생들의 타 지역 취업비율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역에서 배출한 인재의 유출이 확대

구분		대학		합계
		충남 내	충남 외	
직장	충남내	5,671 (21.5%)	6,925 (2.0%)	12,596 (3.3%)
	충남외	20,668 (78.5%)	347,197 (98.0%)	367,865 (96.7%)
합계		26,339 (100.0%)	354,122 (100.0%)	380,461 (1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원자료

- 청년들의 지역내 정착화 필요
 -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

(3) 주요사업내용

- 지역인재(직업계고교생) 대상 직접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사업」추진
 - 도내 37개 직업계고(특성화고 30 + 마이스터고 4 + 직업교육 일반고 3개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2년 이내) 지원을 통한 고졸취업 활성화

-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현장실습 선도기업' 및 이에 준하는 기업(엔젤기업, 도제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질" 부분 보완
- 교통비(월 5만원), 자격증 취득 등(10만원×2회)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지역인재(대학생) 대상 직접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사업」추진

- 도내 27개(18개 대학 + 9개 전문대학)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자(2년 이내)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 지역 중소기업으로의 직접적인 채용지원을 통한 고용활성화
- 교육비(연 50만원), 복지포인트(월 40만원) 등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목표인원 관리
 - * 특성화고생 취업지원 : 104명 / 지역대학 인재 장학금 및 취업지원 : 20명
 - 2021년 이후 : 지속적인 공모신청을 통한 사업량 확대 노력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319	29	29	29	116	116
국비	154	14	14	14	56	56
지방비	도비	137.5	12.5	12.5	50	50
	시군비	-	-	-	-	-
민자	27.5	2.5	2.5	2.5	10	10

4 청년 창작·창업지원시스템 구축

(1) 사업개요

- (사업명)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사업기간) 2020 ~ 계속
- (추진체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위탁 추진
- (사업내용) 창의인재 양성 및 콘텐츠 발굴,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 충남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및 창의인재 양성
 - 시제품 제작지원 및 콘텐츠 창작동아리,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 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청년 대상 창의인재 역량 강화를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및 창의 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인프라 필요
-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생태계 조성

>> 현황과 여건

- 청년 창작인력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창작인프라 운영
 -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랩, 창업입주 공간 등 창작자들이 창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연계체계 제공
- 지역 문화산업 콘텐츠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인프라 구축
 - 콘텐츠분야 청년·창작 창업 지원시스템은 수도권 편중

(3) 주요사업내용

- (콘텐츠 창의인력 양성) 아이디어 기획력, 비즈니스 모델수립, 마케팅 역량 강화, 아이디어 피칭대회 등 창작자 전문인력 발굴

- (시제품 제작 및 융합콘텐츠 개발지원) 융합콘텐츠랩, 시제품 제작 및 콘텐츠 창작동아리 고도화, 융합콘텐츠 개발 및 제작지원
-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홍보·마케팅 및 유통채널, 투자유치 지원, 전시참여 및 실전비즈니스 코칭을 통한 스타트업 판로지원

>> 그동안 추진현황(2019년)

- 아이디어 교류·실험을 통한 콘텐츠 창의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아이디어 교육 및 발굴, 창작자 네트워킹 등(2,011명 참여, 98건 발굴)
- 문화를 기반으로 한 융합 콘텐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융합연구회 운영(21팀), 융합 콘텐츠 개발(7건), 시제품 제작(44건)
- 비즈니스 코칭 및 전시·마케팅 등 창업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 전시·마케팅 지원(29건), 문화 콘텐츠 창업지원(25건)
- 공간(시설·장비)운영 현황

구분	전체 이용자수	월 평균	회원수(누적)	기업 입주	장비대여
2019. 1 ~ 11	31,158명	2,596명	2,388명	11팀 28명	6,133회

⇒ 4차년도 지역 콘텐츠코리아랩(10개) 운영 평가 전국 3위 달성

>> 향후계획

- 충남 권역별 중간거점센터 운영을 통한 도내 균등한 창작문화 확산과 도내 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현안 해소 및 발전 이바지
- 충남콘텐츠코리아랩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발굴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단기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220	20	20	20	80	80
국비		110	10	10	10	40	40
지방비	도비	33	3	3	3	12	12
	시군비	77	7	7	7	28	28
민자							

5 신중년 성공 프로젝트

(1) 사업개요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예비노년부터 책임지는 평생일자리 복지 사업 추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12월말 기준 충남 노인인구 비중 18.2%로 고령인구 증가 가속화
-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빈곤 해소 등 다양한 노인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 신중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고,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3) 주요사업내용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내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로 일정수준의 경력, 자격 등이 요구되는 일자리
 - 노후 준비 강사 : 전문 분야(의료, 재무, 상담 등)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 신 중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활동 자격 취득 교육서비스 제공(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참여 지원)
 - 웰다잉 강사 : 신중년 웰다잉 강사를 양성하여, 지역민에게(웰다잉, 인권) 교육서비스 제공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신중년 의료, 재무 등 전문분야 강사 및 웰다잉 강사 양성 교육 추진 지원 및 일자리 발굴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16.2	1.8	1.8	1.8	5.4	5.4
국비		8.1	0.9	0.9	0.9	2.7	2.7
지방비	도비	8.1	0.9	0.9	0.9	2.7	2.7
	시군비						
민자							

⑥ 일자리 진흥원 운영 활성화

(1) 사업개요

- 지역 고용·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구축 및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선도적 추진
-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중앙주도형→지역특화형)에 따른 지역의 참신한 일자리브랜드 개발 요구
- 고용·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유기적 협력체계 필요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통한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을 위한 전문적 지역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 현황과 여건

- 2017. 10. 18.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 새 정부는 시대적 요구인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내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부’ 지향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과제
- 민선 7기 충남도정의 중점과제이며, 도정 전 분야에서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창출’을 전략으로 제시
- 현재, 전국 최초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설립·운영(2016. 9.) 중이며, 전남은 일자리플랫폼을 구축 운영(2018. 7.) 하여, 향후에도 고용서비스 통합 등 전국적 서비스 혁신 단행 전망
 - * 그 밖에, 울산·강원·제주·전남에서 일자리재단(출연기관) 설립 추진 중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8~2020년초<진흥원 설립>, 그 후 매년 진흥원 운영
- (사업대상) 주사무소는 ‘천안’ 또는 ‘내포’/ 수혜지역 및 대상은 도내 구인·구직자 등 전체
- (추진체계) 道の 출연기관<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자체추진
- (사업내용) 고용·노동 정책 개발 연구 및 기획, 일자리정보 수집과 분석, 일자리사업 발굴, 지역인적자원 양성 및 취업프로그램 개발지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성과평가 및 피드백

[참고: 진흥원 설립 개요]

- 도내 주요 고용·노동서비스 제공기관 통합*을 통한 기능강화로 총괄 거버넌스 구축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충남광역새일센터
- (설립예정일) 2020년 2월중 개원
- (설립형태) 지방출연기관<비영리 재단법인>
- (설립위치) 내포신도시 內, “충남전문건설회관” 7층 ※ 예산군 삼교읍 목리 903
- (조직규모) 1원장, 1사무국, 1실(4팀, 1센터) / 총 31명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일자리진흥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18.5.)
- 일자리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18.8.~12.)
- 道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19.3.)
-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19.5.)
-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9.10.)
-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초대 임원 선출(‘19.11.~’20.1.)
- 법인설립 허가(고용노동부) 및 등기(‘20.1.~2.)
- 사무실 리모델링 등 업무환경 구축 (‘20.3.)
- 일자리진흥원 개소(‘20.4.)

7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

(1) 사업개요

- 최근 어업환경 변화와 충남 여성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여성어업인 지원정책 수립
- 여성어업인 정책추진 기반 구축, 전문성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추진으로 여성어업인 성장 도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어촌지역은 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 경제침체 등 사회적 문제에 직면
- 우리도 여성어업인 비율은 전국대비 높은 상황으로 여성어업인의 체계적 육성은 어촌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대안으로 부각
- * 여성어업인 현황('18년 기준) : 17,999명 중 9,517명(52.9%) / 전국평균 50.3%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 2030년
- (사업대상) 충남도 여성어업인
- (추진체계) 도 및 시군 자체추진
- (사업내용) 여성어업인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 ①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여성어업인이 여가를 즐기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② (여성어업인 자문기구 구성) 여성어업인 발전 관련 제도·시책 발굴 및 자문역할을 수행할 회의체 구성
 - ③ (여성어업인 맞춤형 교육) 전문직업인으로서 여성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차별화된 교육 추진
 - ④ (여성어업인 워크숍 정례화) 여성어업인 간 정책공감대 형성 및 소통강화를 위해 매년 워크숍 실시

8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확대

(1) 사업개요

- 취약계층에게 지역특성을 반영한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 및 생계 안정 도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의 특성·자원·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1유형) 및 지역기업 연계 일자리사업(2유형) 확대로 사업의 다양성·지속성·자립성 증대
 - (1유형) 지역자원활용형 :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시책일자리, 자원재생
 - (2유형) 지역기업연계형 : 공동작업장 운영, 중소기업 취업지원
 - (3유형) 서민생활지원형 :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 (4유형) 지역공간개선형 :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희공간, 시설활용
- 중앙정부와 연계한 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 확대

(3) 주요사업내용

- 지역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특화자원을 이용한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한 참여자의 기술습득, 생계안정 도모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1인 가구는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기초지자체별 지역특화형 직접일자리 창출
 - 지역차원의 직접사업 발굴 및 사업기획, 활동가 역량 강화를 통한 행안부 사업선정 및 국고 보조 확대
 - 공동체 일자리 기획단 운영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기획 및 자문
- 지역 공동작업장 육성 및 마을·지역기업 연계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 발굴

9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사업개요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제활동 참여의 욕구가 있는 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유지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측면
- 비장애인의 실업률도 높아지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노동시장 진입은 높은 장벽
- 등록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가능인구 및 참여욕구도 증가
 - * 등록장애인 수: 2012년 124,872명 → 2018년 131,910명
-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준
 - * 충남도 평균 비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65.6%(2018년도 기준, 통계청)
 - * 충남도 평균 등록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49.2%(2018년도 기준, 맹준호(2019))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로 인한 자아실현을 위해 경제활동 가능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다양한 일자리 제공 필요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1. 1. ~ 2020. 12. 31.
- (사업대상)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추진체계) 15개 시군 및 민간위탁
- (사업내용)
 - 장애인일자리(전일제/시간제) :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행정도우미 등 지역

사회 복지행정 참여기회 제공 및 소득 증진

- 장애인복지일자리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도서관 사서 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보조 등 다양한 일자리 제공하여 직업경험 지원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식사, 실내외보행 및 이동 도와드리기 등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안마사 자격증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 제공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708	177	177	177	177	
국비		360	90	90	90	90	
지방비	도비	108	27	27	27	27	
	시군비	240	60	60	60	60	
민자							

1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 사업개요

- 지역여건을 잘 아는 시·군이 기획·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을 통한 청년의 실업해소와 지역정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청년유출과 지방소멸 위기, 중소기업 등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심각
-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 고용여건('18~'21년)이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여 지역·현장 중심 상향식·분권형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대상) 충남 거주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및 도 총괄, 시·군 보조 추진
- (사업내용)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교육비, 창업비 등 지원

구분	①지역정착지원형	②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③민간취업연계형
취·창업 분야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단체	신규창업 및 민간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예) 미술관 큐레이터, 여성안심귀가
지원 기간	2+1년 이내 (3년차 취·창업 시 추가지원)	창업 등 지원 : 2년 이내	1년 이내 (일 경험 후 민간 취·창업 연계)
지원 내용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2년간) ※ 3년차 추가지원 ※ 정주여건 지원 : 지자체 자체재원	창업 등 지원 : 인건비 외 (교육비, 임대료 등)	인건비, 직무교육비, 자격증 취득비용 등
기대 효과	청년 취·창업 +인구소멸 지역에 청년 정착 +마을기업 등 활력 제고	청년 취·창업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 경험 제공 +취·창업 연계 +지역사회서비스 수요 충족
1인당 단가	인건비 2,400만 기타지원비 300만	인건비 외 간접지원 1,500만 기타지원비 150만	인건비(풀) 2,250만 인건비(파트) 1,125만 기타지원비 200만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 63개 사업(계속 51 + 신규 12), 1,060명 청년일자리 창출

시군	사업수 (명)	인원 (명)	사 업 비 (천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업부담
시군계	63	1,060	23,432,829	11,498,199	4,876,636	4,876,636	2,181,358
천안시	3	289	6,576,220	3,288,110	1,352,055	1,352,055	584,000
공주시	3	28	651,316	325,658	106,810	106,810	112,038
보령시	4	57	1,223,552	611,776	281,140	281,140	49,496
아산시	9	79	2,011,686	1,005,843	393,720	393,720	218,403
서산시	4	57	1,268,180	634,090	209,250	209,250	215,590
논산시	5	63	1,136,907	567,597	228,511	228,511	112,288
당진시	7	211	4,331,738	2,095,469	926,054	926,054	384,161
계룡시	1	3	53,818	26,909	11,571	11,571	3,767
금산군	4	45	956,545	419,293	224,544	224,544	88,164
부여군	6	58	1,186,510	556,381	262,415	262,415	105,299
서천군	2	55	1,428,688	714,344	296,572	296,572	121,200
청양군	2	22	572,388	275,069	141,896	141,896	13,526
홍성군	7	34	596,803	296,421	125,191	125,191	50,000
예산군	3	42	929,506	426,753	209,864	209,864	83,026
태안군	3	17	508,972	254,486	107,043	107,043	40,400

- 2021년 이후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시·군별 사업규모 등 확정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1,165	233	233	233	233	233
국비	565	113	113	113	113	113
지방비	도비	245	49	49	49	49
	시군비	245	49	49	49	49
민자	110	22	22	22	22	22

11 노인일자리 장려금 지원

(1) 사업개요

- 취약계층 노인고용 민간 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여 어르신 민간기업 취업 분위기 확산 및 노인 일자리복지 확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통계청 설문조사 결과 은퇴 이후 10명 중 6명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함에 따른 일자리 제공 필요
- 이른 은퇴로 인해 노후준비에 미흡한 예비노년세대의 계속 근로를 통한 경제적 안정 및 노후준비 기간 마련

(3) 주요사업내용

- 노인 신규고용 민간(중소)기업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
 - 도내 중소기업 중 노인을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지속 고용시 최저임금의 30% 지원(도비 50%, 시군비 50%)
- 정년자 계속고용 중소기업,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농촌 체험마을 등 지원 대상 확대 추진
 - 일자리 창출 : ('19년)117명, ('20년)120명, ('21년)130명, ('22년)150명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19년: 시범사업 계획수립, 참여희망기업 발굴·홍보, 사업 추진
 - 2020년
 - 지원기간 확대(2019년 4월 → 2020년 1월)
 - 지원대상 연령 확대(2019년 만65세 → 만60세 이상)
 - 정년자 계속고용 중소기업 지원대상 포함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56.6	3.6	4	5	20	24
국비		0					
지방비	도비	28.3	1.8	2	2.5	10	12
	시군비	28.3	1.8	2	2.5	10	12
민자							

12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1) 사업개요

- 장애인 고용환경개선금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8년 기준 충청남도 50인 이상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로 의무고용률인 2.9%를 하회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19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1%로 상향되어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 도모가 필요

('18년 기준 충남, 단위 : 명, %)

구분	직종	총고용	장애인고용	장애인 고용률(A)	장애인의무 고용비율(B)	A-B
총합계		256,067	6,959	2.72		
정부부문	공무원	36,368	966	2.66	3.2	△0.54
	근로자	13,968	778	5.57	2.9	2.67
공공기관		10,596	310	2.93	3.2	△0.27
민간기업(50인이상)		195,135	4,905	2.51	2.9	△0.39

1) 충남도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4.00%(공무원 부문), 5.84%(근로자 부문)으로 의무고용비율상회

- 한국의 장애 관련 공공지출은 GDP 대비 0.61% 수준으로 OECD 평균 (2.11%)의 1/3 수준이며, 독일(2.06%), 일본(1.04%)에 비해 현저히 저조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기존 정책(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달 시 부담금 부과 등)의 실효성이 낮음
 -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부과 대상이 100인 이상 사업자로 국한
 - 장애인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부문 기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 분위기 조성 도모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1. ~ 2020. 12.(2020년 신규사업)
- (사업대상) 장애인 고용 촉진 기업

- (추진체계) 도-시군 자체추진

- (사업내용)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며, 평가지표를 통해 선정된 상위 6개 기업을 대상으로 1개 기업당 장애인 고용환경개선금으로 10,000천원 지급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장기
 - '20년 신규사업으로 본예산 60,000천원 확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활성화 기업 지원 사업 홍보 추진
 - 관련 부서 및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충남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확대 추진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6.6	0.6	0.6	0.6	2.4	2.4
국비						
지방비	도비	6.6	0.6	0.6	0.6	2.4
	시군비					
민자						

13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자립기반이 열악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도모 및 가치실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주요사업내용

- 사업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사 업 비 : 6,164백만원(국비 4,623, 도비 462, 시군비 1,079)
* 일반인력 4,640백만원, 전문인력 1,524백만원
- 매칭비율 : 국비 75%, 지방비 25%(도비 7.5%, 시군비 17.5%)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인증 사회적기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9.955%)
(1인당 월 1,974,030원 한도)
- 지원인원 : 기업 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추진일정 : 공모횟수 - 연 2회 (1월, 4월)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 62억원
 - 2021년 : 62억원
 - 2022년 : 62억원
 - 2023 ~ 2026년 : 248억원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682	62	62	62	248	248
국비		506	46	46	46	184	184
지방비	도비	55	5	5	5	20	20
	시군비	121	11	11	11	44	44
민자							

14 충남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작업장 설치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2029(10년간)
- (사업대상) 3개소 설치('22년까지 1개소, 이후 2개소)
- (추진체계)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
- (사업내용) 도내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동작업장 부재로 자활사업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에 한계
-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자활공동작업장 필요성 증대
 - 공동작업장 확보로 자활사업의 자양분으로 활용

(3) 주요사업내용

- 2030년까지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3개소 설치
- 공동작업장 설치비 지원
 - 단기('20~'21년) : 부지임대 및 건물설계용역 또는 건물매입 후 리모델링
 - 중기('22년) : 자활기업 창업 지원 및 공공시장 진입 시스템 구축
 - * 생산 및 판매 공간, 신규 사업의 인큐베이팅,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
 - 장기('29년) : 3개 권역(북부,중서부,남부) 설치(총 3개소)
- 총사업비 : 90억원(도45, 시·군45) * 개소당 30억원
 - * 예산마련 : 도 및 시·군 자활기금 등 활용

>> 현황과 여건

- 도내 지역자활센터(14개소) 내 138개(1,040명) * 사업단 운영중
* 자활사업단 91개(830명), 자활기업 47개(210명)
- 자활공동작업장 부재로 자활기업·사업단이 분산되어 사업별 관리에 어려움과 공통사업의 시너지 효과 미흡
⇒ 안정적인 사업장 확보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신규, 장기
- 향후계획
 -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설치 시·군 수요 조사('20. 3월)
 -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운영 우수 시군 벤치마킹('20. 10월)
 - 보건복지부에 정부예산 확보 지속 건의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90			30	30	30
국비							
지방비	도비	45			15	15	15
	시군비	45			15	15	15
민자							

15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충

(1) 사업개요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 강구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 기반 조성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년 ~ 계속
- (사업대상) 34,630명('19년 대비 4,413명 증가) * '19년 898억원(30,217명)
- (추진체계)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내용)
 - ① 공익형(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9,000명/ 월 30시간 27만원 지원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 ②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 2,200명/ 월 66시간 근무시 59.4천원 지원
 -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서비스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③ 시장형(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2,840명, 최저임금 이상
 - 아파트 택배, 매장 운영, 반제품(식품) 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등
 - ④ 취업알선형(만 60세이상) 590명, 최저임금 이상
 -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일자리 연계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속 확대 추진 및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어르신 경력과 활동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 2021년~ 2030년 : 특산물 등 지역특성 반영 시장형 일자리 발굴 강화 및 취업알선형 국비 사업 노인일자리 등 확대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39,211	1,224	1,345	1,480	6,511	28,651
국비	19,607	612	673	740	3,256	14,326
지방비	도비	5,880	184	201	222	4297
	시군비	13,724	428	471	518	10,028
민자						

2) 취약계층의 보호와 회복

(1) 경제적 약자 지원

①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도내 거주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회생 위해 긴급자금 소액대출 지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경기 둔화로 도내 경제적 곤란 심화, 채무조정 확정자 수 증가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내 금융 취약계층에 긴급자금 소액대출을 지원
 - 고금리 금융기관 이용 방지, 가계 경제 안정 및 양극화 해소 도모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2024년 [5년간]
- (사업대상) 도내 거주 금융소외계층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등
- (추진체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추진
 - 道(위탁) → 충남신용보증재단(대여) → 신용회복위원회(운영)
- (사업내용)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4억원씩 5년간 총 20억원,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사업비로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금을 대여(무이자) 받아 도내 지원 대상자에게 긴급자금 소액대출 지원
 - 사업종료 시 신용회복위원회 상환금 道에 반환 또는 사업기간 연장 검토

>> 현황과 여건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소액금융지원사업 추진 중

- 총 소액금융 기금(2019년 12월말 기준) 약 1,175억원
 - 가용기금 269억원 (기부금 190억원, 차입금 79억원)
- 소액금융 지원 실적(충남), 2007~2019: 5,978건 203.4억원
 - 2017: 534건 18억원 / 2018: 650건 23억원 / 2019: 631건 20억원

- 도내 지원대상(2019년 12월 기준) 19,119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가용액으로는 도민 수혜에 한계

- 타 시도 현황 : 9개 시도(서울,부산,대전,광주,경북,경기,대구,강원,제주)

- (자체기금)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용 중
 - * 대전 드림론, 광주 빛고을론, 대구 울타리론, 경기 재도전론 등
- (지원내용) 긴급 생활자금 등 최대 15백만원 대출
 - * 이자 : 연 3~4% 수준(학자금 2%, 취약계층 2.1~2.8%)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중기

- 향후계획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업제안 및 업무협약의 (2019. 7월, 2020. 1월)
-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사업계획 수립 (2019. 10월)
- 사업 시행을 위해 3개 기관(도·충남신용보증재단·신용회복위원회) 간 협약식 개최 (2020년 상반기 중 계획)
 - * 보증보험과 관련한 협약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서울보증보험(주)과 별도 체결
- 2020년 2회 추경에 예산 편성 (계획)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20	4	4	4	8	
국비						
지방비	도비	20	4	4	4	8
	시군비					
민자						

2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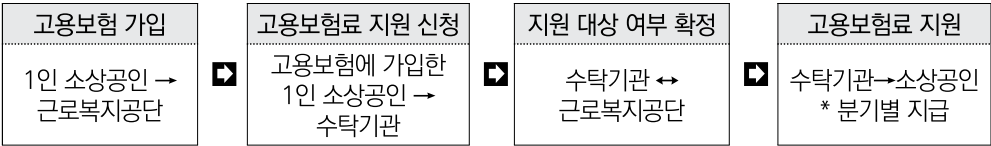
- 도내 1인 자영업자의 폐업 후 안정적 생활안정 등 퇴로안전망 확보, 경영 안정을 나아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호장치 필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부도·폐업 시 생계위협 등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도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편입 도모하여 생활안정, 재취업 지원 등 제공
- ※ 추진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 주요사업내용

- (사 업 비) : 150백만원 ※ 도비자체사업
- (사업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목표 700명)
- * 보험혜택 : 기준보수액의 50% 실업급여 지급(90~180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등
- (수행기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공기관 대행
- (지원체계)



- (사업내용) 최대 3년 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지원(1~7등급)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중기부) 월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	-	-
충남도 월 지원액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실제 부담금액	8,190	9,360	21,060	23,400	45,045	49,140	53,235

※보험료 산정 :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추진상 문제점

- 고용보험료 지원의 실효성 등 이견에 대하여 관련 통계자료 분석,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타당성 확보 후 추진
 - 고용보험료 지원의 실효성이 낮을 경우 기타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
 - * 자영업자의 4대보험 지원관련 타당성연구(중기부 / 용역 중) 결과 확인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장기
- 향후계획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지원사업 충청남도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
 -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추진상황 점검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17.45	1.5	1.55	1.6	6.4	6.4
국비						
지방비	도비	17.45	1.5	1.55	1.6	6.4
	시군비					
민자						

③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

(1) 사업개요

- 불경기 지속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 증가로 인한 생계형체납자의 사업재기 지원 방안 마련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일시해제 확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소액 체납비율 증가)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의 비율의 점진적으로 증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체납자수	298,143	333,151	346,062	439,620
체납액	45,131	52,132	54,118	63,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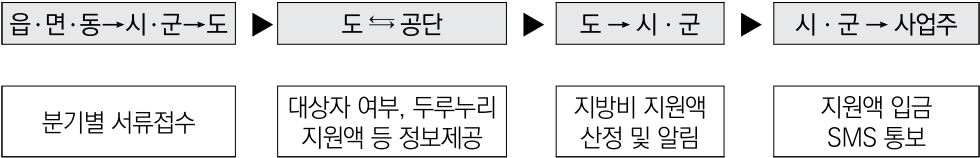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3년간]
- (사업대상)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
 - 영세기업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
 - 생계형체납자의 범위는 체납세액이 100만원이하 · 복지부서의 사업연결이 필요하다 판단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추진체계) 도 · 시군 자체추진
- (사업내용) 영세기업 ·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
 - 가.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 ·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지원
 -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 생계형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분납(징수유예 실시),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 나. 생계유지 목적 사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 생계형체납자가 세무부서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 제출
 - 다. 체납징수단을 통한 생계형 체납자 긴급 복지지원 연결
 - 체납징수단의 체납자 가택방문 시 생계형 소액체납자를 발견하는 경우, 복지부서에 연결

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는 기간
- (사업대상)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두루누리 사업 참여 조건)
- (추진체계) 도·시군 자체추진
- (사업내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중 일정액(두루누리 지원금 제외분)
- (지원절차) 월별 보험료 사업자 선납 → 분기별 정산하여 소급지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 전년 대비 10.9% 인상('18년 16.4%) ※'14~'17 평균 7.4%에 비해 높은 수치
- (道) 10인 미만 영세사업체 대다수(86.6%, 130,756개소) ※통계청(2017)
 - 신규채용 축소(56.0%), 감원(41.6%) 등 대응 계획 ※중소기업중앙회(2017)
 -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 완화는 물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사회보험) 편입 도모

(3) 현황과 여건

-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3만 756개로 도 전체 사업체의 86.6%
-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25만 7,572명으로 도 전체 종사자의 36.2%
 - *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15만 783개로, 종사자 수는 61만 7,878명

5 취업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1) 사업개요

- 재가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고 자활을 통한 자립준비 및 경제적인 안정으로 자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취업장애인의 평균임금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특히,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119만원 수준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242.3만원)의 49.4%, 장애인 근로자 전체 평균 187만원의 67.2% 수준(2018, 김용탁)
- 장애인 중, 다수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립을 위한 취업 촉진 및 경제적 지원제도가 미비
- 저소득층 및 청년, 시설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취업 및 자립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전무한 실정
⇒ 디딤씨앗통장(2007년), 희망키움통장Ⅰ(2010년), 내일키움통장(2013년), 희망키움통장Ⅱ(2014년), 청년희망키움통장(2018년)

(3) 주요사업내용(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 (사업기간) 2021~2026년
- (사업대상) 재가·탈시설 장애인 중 35세 미만의 취업장애인
- (추진체계) 지역은행과 협약 체결, 가칭 「비로소 자립통장」 위탁운영
- (사업내용) 장애인이 취업 후, 월급의 일정금액을 매월 적금할 경우, 도 지원금과 매칭하여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대상은 재가장애인 중, 취업장애인으로 하되,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
 - * 단, 본 지원사업의 중위소득 100%는 기존에 장애인 소득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미적용
 - * 도 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신규 지원 대상자를 300명 정도 선발
 - * 본인 저축액이 매월 10만원이면 보조금 15만원을 매칭하여 적금 지원
 - 금액 설정은 처음 계약 시 장애인 본인이 선택하여 계약
-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전까지의 적금만 지급
 - *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액은 본인 부담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중기
- 연차계획
 - 2020년 : 대상자 및 소요예산 추정, 지원 기준 마련
 - *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군 회의
 - 2021년 ~ 2022년: 대상자 모집 및 지원
 - 2023년 ~ 2026년 : 지속 지원 및 추진상황 점검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75	0.9	4.8	9.9	59.4	
국비						
지방비	도비	22.5	0.27	1.44	2.97	17.82
	시군비	52.5	0.63	3.36	6.93	41.58
민자						

6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1) 사업개요

-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공적 공제가입을 촉진하여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보호
 - 경영 여건 악화, 내수부진, 경쟁 심화에 따른 사업 재기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업 실패 시 사회빈곤층 전락 위험에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노후대비에 대한 지원 필요
 - 충남 소상공인 발전계획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18년) 20% 전후의 소상공인은 노후에 대해 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후대비책 필요
 - * 특히 제조업 소상공인은 약간대비(48%), 전혀 못함(40.9%)으로 매우 취약
- ⇒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을 통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촉진시켜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대책 마중물 역할로 작용

(3) 주요사업내용

- (사업비) 600백만원 ※ 도비자체사업(공기관 대행)
- (사업대상) 도내 소재 소상공인 (연매출액 2억원 이하) / 8,787업체
※ 제외대상(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
- 기가입자 3,879업체, 신규가입자 4,908업체
-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추진절차)



- (사업내용)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부금납입시마다 1만원(최대 1년간, 12만원)을 정액 장려금으로 추가 적립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이 폐업, 고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부금납부 : 월 5만원 ~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월납 또는 분기납)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추진계획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1~2월)
 -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총청남도 ↔ 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 (2~3월)
 -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추진상황 점검 (3~12월)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54	6	6	6	18	18
국비							
지방비	도비	54	6	6	6	18	18
	시군비						
민자							

7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문화 활동(건강증진, 영화관람, 미용원·안경점 이용, 도서구입) 등에 사용 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 여성농어업인의 신청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지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농어업인) 보호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7년부터 연중
- (사업대상) 도내 여성농어업인(전업농 및 겸업농)
- (사업내용) 여성농업인 1인 연간 2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지원
- (지원방법)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자부담액이 포함된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 ※ 농협에서 카드 발급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 15개 시군 여성농어업인 85,000여명에게 행복바우처 지원

- 2021년 : 15개 시군 여성농어업인에게 행복바우처 지원
- 2022년 : 15개 시군 여성농어업인에게 행복바우처 지원
- 2023 ~ 2030년 : 연도별로 여성농어업인에게 행복바우처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1,870	170	170	170	680	680
국비							
지방비	도비	476.85	43.35	43.35	43.35	173.4	173.4
	시군비	1,112.65	101.15	101.15	101.15	404.6	404.6
민자		280.5	25.5	25.5	25.5	102	102

8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 ~ 12월
- 사업대상 : 정보취약계층 4,320명(장애인, 고령층)
- 사 업 비 : 289백만원(국비 59, 도비 23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정보이용 생활화로 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

(3) 주요사업내용

- 추진기관 : 시·군 집합 정보화교육기관(18개소)
 - 장애인 12개 기관(농아, 시각 및 지체 장애인복지관 등)
 - 고령층 6개 기관(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노인복지관 등)
- 교육목표 : 4,320명(장애인 3024, 고령층 1,296)
- 교육내용 : 자체교육장 등에서 PC, 스마트폰, 인터넷 활용 등 정보화교육

>> 추진계획

- 2020년 분야별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 1 ~ 2월
- 정보취약계층 등 정보화교육기관 선정 협약 : 2월
- 집합 정보화 교육 기관별 교육 추진 : 3 ~ 12월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계획
 - 2020년 : 4,320명(장애인, 고령층)
 - 2021년 : 4,320명(장애인, 고령층)
 - 2022년 : 4,320명(장애인, 고령층)
 - 2023 ~ 2030년 : 34,560명(장애인, 고령층)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31.1	2.9	2.9	2.9	11.2	11.2
국비	5.8	0.6	0.6	0.6	2	2
지방비	도비	25.3	2.3	2.3	2.3	9.2
	시군비					
민자						

9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1) 사업개요

- 신체·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마인드 향상
- 장애유형에 맞는 정보화 기기 보급으로 정보활용 능력제고

(3) 주요사업내용

- 기 간 : 4 ~ 12월
- 보급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260명)
- 소요예산 : 266백만원(국비 83, 도비 183)
- 보급제품 : 103종(시각 50종, 지체·뇌병변 25종, 청각·언어 28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 기준 80% 지원(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 지원(개인부담 10%)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대상 보조기기 260대 보급 예정
 - 2021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대상 보조기기 보급 예정
 - 2022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대상 보조기기 보급 예정
 - 2023 ~ 2030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대상 보조기기 보급 예정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28.6	2.6	2.6	2.6	10.4	10.4
국비		8.8	0.8	0.8	0.8	3.2	3.2
지방비	도비	19.8	1.8	1.8	1.8	7.2	7.2
	시군비						
민자							

10 농어촌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

(1) 사업개요

- 위 치 : 15개 시·군
- 사업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의 고령자(65세) 및 등록장애인 등
- 사업내용 : 화장실개선, 문턱낮추기, 안전손잡이 설치 등
- 사 업 량 : '20년 200동('15 ~ '19년까지 총 900동 추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취약계층의 농어촌장애인·고령자 주거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일상생활 편의 증진도모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15년 ~ 계속
- (사업대상) 15개 시·군
- (사업내용) 화장실개선, 문턱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
- (수행기관 및 예산 기준) : 국가, 지자체

>> 현황과 여건

- 주거가 열악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농어촌장애인·고령자 주택의 경우 열악한 재정상황 등으로 인하여 개보수 어려움
- 이에 따라 도내 15개 시군에 200가구에 대한 화장실 개선, 문턱낮추기 등 수요조사를 통하여 국·도비 보조하여 편의시설 개선 실시

- (2015~2019년) 15개 시군 900가구 / 5,600백만원 시설개보수 지원

구 분	사업비 투자 현황 (백만원)						비고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가 구	900	100	200	200	200	200	
사업비	5,600	600	1,200	1,200	1,200	1,400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사업예산) : 1,400백만원(국비 173, 도비 368, 시군비 859)
- (사 업 량) : 200가구(가구당 700만원)
- (추진내용) : 화장실개선, 문턱낮추기,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사업홍보) :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 누락 방지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154	14	14	14	56	56
국비	18.7	1.7	1.7	1.7	6.8	6.8
지방비	도비	40.7	3.7	3.7	14.8	14.8
	시군비	94.6	8.6	8.6	34.4	34.4
민자						

11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1) 사업개요

- 위 치 : 4개 시·군(보령, 서산, 논산, 홍성)
- 사업내용 : 노후된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
- 사업대상 : 4개소 400세대(보령 90, 서산 60, 논산 200, 홍성 50)
- 사 업 비 : 10억원(국비 5, 지방비 5)
- 사업기간 : '09년~계속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불량시설을 개·보수하여 도내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 및 주거문화 향상

(3) 주요사업내용

- (사업대상) 영구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된 4개단지
- (사업내용) 옥상방수, 보안등 교체,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시설 개선, 욕실 개선 및 도배·장판·싱크대·창호 등 세대내 환경개선

>> 현황과 여건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취약계층 거주 및 열악한 재정상황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관리와 보수가 어려움
- 매년 단지별 노후시설 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국·도비 보조하여 시설개선 실시
 - (2009~2019년) 4개 단지 / 5,176백만원 시설개보수 지원

시군별	단 지 명	사업비 투자현황(백만원)					
		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4개 단지	5,176	3,023	310	555	500	788
보령시	갈매기아파트	1,107	620	62	185	120	120
서산시	부춘아파트	956	440	68	160	130	158
논산시	개나리아파트	2,155	1,677	88	140	140	110
홍성군	개나리아파트	958	286	92	70	110	400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시설영역 및 시급성, 비용지출의 효율성이 높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중점 추진
- 4개 단지 400세대 대상 수요조사 실시('19년 6월)
 - (보령) 발코니새시, 노후싱크대 교체, 단열재 보강 등 640백만원
 - (서산) 승강기 교체, LED등기구 보수, 옥상방수 등 150백만원
 - (논산) 발코니새시, 콘덴싱보일러 교체 등 150백만원
 - (홍성) 발코니 타일 교체 및 내부 도색 60백만원
- 사업시행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20년 4월)
- 공사 완료 및 사업수혜자 만족도 조사('20년 12월)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110	10	10	10	40	40
국비	55	5	5	5	20	20
지방비	도비	16.5	1.5	1.5	6	6
	시군비	38.5	3.5	3.5	14	14
민자						

12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1) 사업개요

- 신체적·인지적 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수혜형평성 유지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버스 이용료 지원
 - ('19.7.~'20.6.) 75세 이상 노인
 - ('20.7. 이후)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 ⇒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생활영위 및 실질적 교통복지 구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내 노인·등록장애인 등의 상대적 박탈감 완화·해소
 - 수도권 거주 노인·등록장애인의 전철·도시철도 등 무료 이용
 - 이에 반해, 도내에는 버스·택시 외의 대체 교통수단 부재로 거주지역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존재(천안·아산 일부지역 제외)
- 노인 편의제공(여가 및 병원진료, 경제활동 등) 및 교통권 보장
- 국가유공자 사회적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9. 7. ~ 계속(장기)
- (사업대상)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 (추진체계) 소요예산 산정(도) → 예산편성 → 예산 집행(시군)
- (사업내용) 교통약자 버스 이용료(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무상 지원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 버스 이용료 지원 대상자 확대*
 - * (기존) 75세 이상 노인, (추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 2021년 이후 : 계속 지원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4,861	385	404	424	1,780	1,868
국비		88	88				
지방비	도비	2,343	105	202	212	890	934
	시군비	2,430	192	202	212	890	934
민자							

13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1) 사업개요

-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청소년 및 성인장애인(만 12세~39세)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건강증진 향상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1. 1. ~ 2020. 12. 31.
- (사업대상) 15개 시군 248명
- (시행주체) 15개 시군
- (사업내용) 체육시설 제공 프로그램 이용토록 1인당 월8만원 지원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22.7	1.6	1.7	1.7	8	9.7
국비	15.7	1.1	1.2	1.2	5.5	6.7
지방비	도비	2.8	0.2	0.2	1.0	1.2
	시군비	4.2	0.3	0.3	1.50	1.8
민자						

※ 연평균 5%상승 가정

14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기회 제공으로 계층간 문화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사업비) 5,493백만원 (국비 3,896 도비 464 시군비 1,133)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1,040명 (1인당 9만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문화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로 문화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상황에서 문화복지 관련 정책사업의 다양화 필요
-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문화와 문화향유의 중요성 인식으로 문화적 혜택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크게 증가

(3) 주요사업내용

- 통합문화이용권 전용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간〉

- 발급기간 : 2020. 2. 1.(토) ~ 2020. 11. 30.(월)
- 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0. 12. 31.
- 신청방법 ① 대상자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②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 본인인증 후 신청
 - ③ 1544-3412 전화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751	55	60	66	285	285
국비		525	39	42	46	199	199
지방비	도비	68	5	5	6	26	26
	시군비	158	11	13	14	60	60
민자		-	-	-	-	-	-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2023년 : 매년 9개 마을(국·도비), 매년 사업비 27억원
(국 3, 도 10.5, 시군 10.8, 자담 2.7)
 - 2024년~2026년 : 매년 9개 마을(도비), 매년 사업비 27억원
(도 13.5, 시군 10.8, 자담 2.7)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297	27	27	27	108	108
국비		15	3	3	3	3	3
지방비	도비	133.5	10.5	10.5	10.5	51	51
	시군비	118.8	10.8	10.8	10.8	43.2	43.2
민자		29.7	2.7	2.7	2.7	10.8	10.8

16 경로당 태양광 설치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르신 에너지복지 실현과 화석연료 사용 감축
- 사 업 비 : 17.4억원(도비 8.7, 시군비 8.7)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냉·난방 전기 요금 부담 경감에 기여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 (사 업 량) 도내 경로당 312개소, 936kW
- (사업내용) 경로당 1개소당 태양광 3kW 설치 비용 지원
* 1개소당 : 560만원 지원(도비 50%, 시군비 50%)
- (추진체계) 추진계획 수립(도) → 수요조사(시군) → 대상 확정(도)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312개소 경로당 대상으로 태양광 사업 추진
 - 2021년 : 연차적으로 사업량 10%정도 증가하여 사업 추진
 - 2022년 : 지속적으로 사업대상 발굴하여 사업 추진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213	17.4	19.2	19.6	78.4	78.4
국비							
지방비	도비	106.5	8.7	9.6	9.8	39.2	39.2
	시군비	106.5	8.7	9.6	9.8	39.2	39.2
민자							

17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636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대상 : 4,000여명(내항여객선이용 도서 주민등록자)
 - 대상도서(17) : 보령 13, 서산 1, 태안 1, 당진 2
 - 대상항로(7) : 보령 4, 서산 1, 태안 1, 당진 1
- 지원근거 :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도서민의 복리증진
- 도서민의 과도한 교통비 부담을 덜고, 섬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여객선 운임의 일부 지원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연례반복
- (사업시행주체) 4개 시군(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사업내용)
 - 여객운임 : 일반 대인 운임의 20% +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액
 - * 본인부담금 상한 : 원거리 6개 도서(호도·녹도·외연도·삼시도·장고도·고대도) 5,000원
 - 차량운임 : 차량운임의 20%
 - * 단, 1,600cc미만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지원(1,000cc미만 50%, 1,600cc미만 30%)
 - * (‘20.1.1시행) 여객운임(일반대인 운임 기준 8,340원 미만 구간)과 5톤미만 화물자동차 운임 50% 지원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매년 내항여객선 여객운임(일반 대인 운임 20%), 차량운임(차량운임의 20%) 지원 추진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75.7	6.4	6.5	6.6	27.6	28.6
국비		37.9	3.2	3.3	3.3	13.8	14.3
지방비	도비	11.4	1.0	1.0	1.0	4.1	4.3
	시군비	26.4	2.2	2.2	2.3	9.7	10.0
민자							

(2) 사회 안전망 확대

① 충남형 독거노인 공유주거모델 개발

(1) 사업개요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경로당(또는 단독시설)을 활용 운영(기존)
 - (현 황) 15개 시군 179개소/1,128명 이용(개소당 평균 5명)
 - (운영비) 급식 냉난방비 등 → 개소당 / 주야간형 510만원, 주간형 300만원
 - (구축비) 시설 리모델링, 물품구입등 → 개소당 10백만원
 - ▶▶ 마을 거주를 희망하는 독거노인 이용시설로 지속 구축 운영
- (고령자 복지주택) 국토교통부(LH-지자체 공동) 영구임대주택(기존)
 - (현황) 65세 이상 고령자 맞춤형 주택 +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 보령, 청양, 예산 각각 120세대 조성, '21년 말 ~ 22년 초' 준공 예정
 - * 사회복지시설(예시): 물리치료, 헬스케어, 경로식당,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
 - ▶▶ 임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방안 마련(조례 제정 등)
- (노인공동주거시설) 공동생활홈 + 고령자복지주택의 중간형태(신규)
 - 요양원 + 요양병원을 결합한 개념의 노인공동주거시설 건립 운영(충남형 모델)
 - * 도지사 지시사항 및 만사형통충남 채택과제(3차)
 - 독립주거공간, 공동생활공간(취사시설, 거실, 화장실, 목욕실), 방문진료실, 건강 관리실, 상담실 등 배치
 - '20년도 시범사업(추경예산 확보)으로 공모 후 확대방안 마련
 - ▶▶ 읍면동 단위 지역 거점형 노인공동주거시설로 건립 운영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 및 주거·급식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
-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저소득 고령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필요성 대두

(3) 주요사업내용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 매년
 - (구축비) 경로당 또는 단독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물품구입 지원
 - (운영비) 주야간형 510만원, 주간형 300만원 지원
- (고령자 복지주택) - '21년
 - (대상지역) 영구임대주택(보령, 청양, 예산)
 - (운영지원) 준공 시기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방안 마련
- (노인공동주거시설) - '20년 추경 확보 후
 - (사업공모) 시군 대상 노인공동주거시설 건립사업 공모·선정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장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공동생활홈: 매년 수요조사 후 사업추진
 - 고령자 복지주택: 시군 영구임대주택사업 선정 후 지원
 - 노인공동주거시설: 매년 1개소 이상
-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367	7	36	36	144	144
국비							
지방비	도비	183.5	3.5	18	18	72	72
	시군비	183.5	3.5	18	18	72	72
민자							

② 노인 자살예방 관리 체계 강화

(1) 사업개요

- 노인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집중관리로 자살예방
- 자살예방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살위험대응체계 강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충남 노인 자살률은 전국 대비 1.3배 높은 수준(매년 상위권)으로 적극적인 자살위험군 발굴 및 집중관리 필요
 - [전국] 자살률 26.6명, 65세 이상 노인자살률 48.6명(통계청, 2018)
 - [충남] 자살률 35.5명, 65세 이상 노인자살률 62.6명(통계청, 2018)

》 현황과 여건

- 도 자살예방 전담 “생명사랑팀(4명)” 신설(2019.1.1.字),
 -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센터 부설(2팀 9명)(위탁)
- 시군은 보건소(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천안시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 수행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2022년(3년)
- (사업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 (추진체계)

구 분	수행기관	비고
도	■ 정책 개발 · 수립 : 건강증진식품과(생명사랑팀) ■ 연구 · 교육 · 위기지원 등 사업추진 : 충남자살예방센터(위탁)	
시군	■ 대상자 관리 등 사업 추진 : 보건소(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 노인 대상 자살위험군 발굴을 위한 우울 검사 실시(연 10만명 이상)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게이트키퍼 교육 실시(연 2회 이상)
- 자살유족, 시도자 등 자살위험노인에 대한 정보연계관리체계 구축
 - 자살예방지원기관(경찰·소방·응급의료기관 등)이 자살위험 노인 발견 시 개인정보를 보건소에 연계, 집중관리(개인정보제공 동의 전제)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단기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자살위험군 발굴을 위한 우울검사 실시(2019년, 10만명)

- * 「참고」노인 정신건강 검사지원('20~'22년, 치매관리팀 소관)
 - 70세 이상 노인 대상 우울 및 치매선별검사 등 정신건강검사 실시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게이트키퍼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 2019년 : 2019.3.28.일 714명 교육
 - 자살예방 지원기관(경찰·소방·응급의료기관 등) 간담회 실시
 - * 응급의료기관 간담회 : 3.21(목), 응급의료기관 등 50명
 - * 경찰·소방 자살예방협력 간담회 : 4.10(수), 경찰청, 소방본부 등 39명
 - 자살 시도 등 자살위험 노인 발견 대비한 체계적인 매뉴얼 제작·배포(2종)
 - 자살유족 지원 매뉴얼(168부), 자살시도자 개입 매뉴얼(135부)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180	60	60	60		
국비							
지방비	도비	180	60	60	60		
	시군비						
민자							

4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근거법령) 교통약자법 제16조: 시장·군수는 보행상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함
- (도입현황) '19년말 특별교통수단 134대, 바우처택시 20대 운행
- (구입예산) 대당 42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운영예산) 대당 30~50백만원(시군비 10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제5조 개정('19.7.5.)*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 장애인(1,2급) 200명당 1명 → 보행상장애인 150명당 1대
 - ※ 충남도 법정대수 : (기존) 131대 → (변경) 230대로 증가

(3) 주요사업내용(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 (사업기간) 2006년~ 계속
- (사업대상)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 (추진체계) 시·군 차량도입수요 제출 및 국·도비 요청 → 국토부 배분
→ 국·도비 및 시·군비 매칭, 차량도입 → 이동지원센터 운영
 - ※ 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차량배차·상담 / 시군 이동지원센터 : 차량관리·운영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특별교통수단 21대(천안9, 공주2, 아산2, 논산3, 당진2, 홍성2, 예산1)
관외이동전용 차량 9대, 바우처·임차택시 46대 도입
- 2021년 이후 :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230대 운영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54.6	12.6	4.2	4.2	16.8	16.8
국비		27.3	6.3	2.1	2.1	8.4	8.4
지방비	도비	14.2	3.7	1.05	1.05	4.2	4.2
	시군비	13.1	2.6	1.05	1.05	4.2	4.2
민자							

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 사업개요

-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추진체계) 신청(읍면동) → 조사(시군) → 지원결정(시군) → 급여지원
- (사업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자녀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등 지원
 - 2021년 :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등 지원
 - 2022년 :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등 지원

- 2023 ~ 2030년 :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등 지원

지원단가 증액 여부는 여가부 검토사항

※ 지원단가 및 지원범위 변동에 따라 예산 증액 예정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694.6	138.3	138.3	139	139	140
국비	555.8	110.7	110.7	111.2	111.2	112
지방비	도비	69.4	13.8	13.8	13.9	14
	시군비	69.4	13.8	13.8	13.9	14
민자						

6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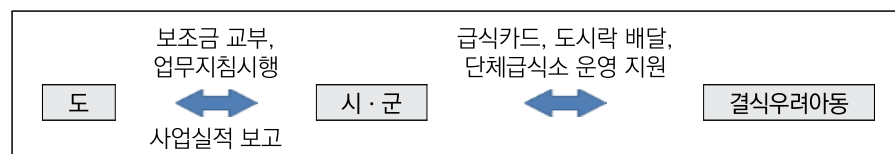
- (사업목적) 결식우려아동의 결식 예방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사업내용)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단체급식소(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도시락 배달, 아동 급식카드 및 식품권 지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1. 1. ~ 12. 31.
- (사업대상)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 (추진체계) 시·군 직접 수행,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내용)

- 미취학 아동 연중 조·중·석식, 취학아동 학기 중 조·석식, 방학 중 조·중·석식
지원(급식단가 : 1식 당 5,000원/인)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장기

• 추진방안

- 아동급식 모니터링 실시 : 「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운영
- 시·군별 아동 급식 실태 점검 및 평가 실시
-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
- 2020년 ~ 계속 : 급식지원 아동 지속 발굴 및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2,636	196	208	216	944	1,072
국비	-	-	-	-	-	-
지방비	도비	659	49	52	54	236
	시군비	1,977	147	156	162	708
민자		-	-	-	-	-

7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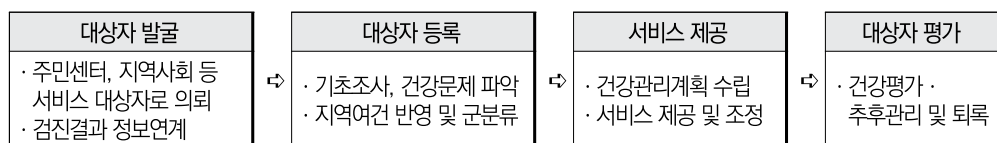
- 목 적 :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능력향상과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방문시행 : 15개 시·군 16개 보건소(전담인력 100명)
- 등록관리 : 54,547가구 / 노인 41,664가구(76%)
- 사 업 비 : 32억원(국비 16, 도비 5, 시·군비 1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빈곤, 질병,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해소 및 건강 형평성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및 자원의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가 요구됨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1. 1. ~ 2020. 12. 31.
- (사업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고령사회에 따라 노인 대상 단계적 방문관리 확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 (사업내용)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 ~ : 매년 65세 이상 노인 신규가구(3%) 상향 등록
 - 2022 ~ : 어르신 4명중 1명은 방문가구 대상으로 목표 설정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391	32	32	35	140	152
국비	189	16	16	17	68	72
지방비	도비	68	5	5	6	24
	시군비	134	11	11	12	48
민자						

8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119구급 서비스

(1) 사업개요

-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찾아가는 구급서비스 제공
- '18년 전체 응급환자 중 55.6% 취약계층(93,657명 중 52,067명)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불평등 갈수록 심화
- 찾아가는 119구급서비스를 통해 선제적인 이송체계 구축

(3) 주요사업내용

- (운영대상) 의료 취약계층(어르신, 행려자 등 불특정 다수인)
- (운영장소) 노인정, 무료급식소, 쉼터, 생계형 근로자 거주지역 등
- (운영방법) 16개 구급대(소방서별 1개대) 월 4회 이상 순회 방문
- (사업내용) 기초건강체크 및 이상징후 발생시 현장 응급이송 제공 및 응급 처치·심폐소생술 교육 등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 노인교실 69개소, 무료급식소 47개소
 - 2021년 : 장애인 거주시설 34개소, 도시공원 76개소
- 투자계획: 비예산

9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 서비스지원

(1) 사업개요

- 에너지 취약계층(저소득층, 복지시설)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통해 전기요금 및 전력수요 절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 절감혜택 부여하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3. ~ 2020. 12.
- (사업대상)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권자 가구), 복지시설
- (사업량) 8개 시·군 437개소 (저소득층 401 복지시설 36)
- (사업내용)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 지원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 8개 시·군 437개소 (저소득층 401 복지시설 36)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143	13	13	13	52	52
국비	81.4	7.4	7.4	7.4	29.6	29.6
지방비	도비	30.8	2.8	2.8	11.2	11.2
	시군비	30.8	2.8	2.8	11.2	11.2
민자						

10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

(1) 사업개요

- (목 적) 상수도 미 보급지역 중 지하수가 오염되어 먹는 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먹는물 복지 실현
- (사업내용) 정수기 보급 100세대
- (사 업 비) 매년 74백만원(도비 25, 시군비 25, 민자 24)
- (사업기간) 2015 ~ 202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수기 보급사업은 웅진코웨이와 협약 체결하여 15~2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1년 이후 사업 웅진코웨이와 협의하여 추진 예정
 - 웅진코웨이 지원 : 정수기 가격(240천원), 유지관리비(5년간, 810천원)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5년 ~ 2020년(2023년까지 연장 추진 예정)
- (사업대상) 상수도 미 보급지역 중 지하수 오염 취약계층
- (추진체계) 시군별 수요조사 후 사업 대상지 결정 (연간 100세대)
- (사업내용) 정수기 설치 대상 시군 결정 후 시·군에서는 해당 취약계층에 정수기 설치 및 관리 시행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단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 정수기 보급사업 대상 선정 및 설치(100세대)
- 2021년 : 웅진코웨이와 협의하여 지원사업 계속 추진 예정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2.22	0.74	0.74	0.74		
국비							
지방비	도비	0.75	0.25	0.25	0.25		
	시군비	0.75	0.25	0.25	0.25		
민자		0.72	0.24	0.24	0.24		

11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1) 사업개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
-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도내 전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매년
- (사업대상) 취약계층 10,000가구(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 (사업내용) 취약계층 주택 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보급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 취약계층 10,000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2021년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추진
 - 2022년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추진
 - 2023년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추진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년	-
합계	41.8	3.8	3.8	3.8	15.2	15.2
국비						
지방비	도비	41.8	3.8	3.8	3.8	15.2
	시군비					
민자						

1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1) 사업개요

- 읍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하여, 복지위기가구*에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

(실직이나 휴·폐업 등에 따른 생계 곤란 가구,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중대한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주민이 방문하여 복지를 신청하면 읍면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 제공 형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한계

* 위기상황임에도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 존재

- 2014년 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보건복지부) 결과,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등이 국민 복지체감도 높이는 데 성과가 있음을 확인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 생활에 밀착된 읍면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3) 주요사업내용

- (조직형태) 읍·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모형 】

- 권역형 : 2~4개 읍면동을 권역화한 뒤, 중심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 기본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및 해당 읍면동 관리(복지3, 간호1)
 ※ 면의 경우, 별도의 팀은 설치하지 않으나 기본형과 동일 기능의 전담인력만 배치하는 농어촌 특성화형 가능
- 확장형 : 기본형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대상·범위, 규모 등 확장된 형태(복지7, 간호1)

- (주요기능) 찾아가는 복지·건강서비스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위기 가정에 민간조직 및 민간자원 연계 등

- (신청주체) 복지대상자 본인 또는 이웃주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경찰·교사·구급대원·방문간호사·통장 등은 신고의무자이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통장·집배원·검침원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내어 지원하는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 (처리절차) 신청·접수 → 보건·복지 상담센터, 읍면 주민센터 혹은 시·군 행복키움지원단 상담 → 도움 제공여부 결정 및 통보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1년 : 권역형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본형으로 전환 확대
 - 2022년 : 도내 전 읍면 기본형 전환 완료(농어촌특성화형 포함)
 - 2023년 : 기본형 중 일부 확장형으로 전환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년	-
합계	209	19	19	19	76	76
국비	143	13	13	13	52	52
지방비	도비					
	시군비	66	6	6	24	24
민자						

3) 경제사회 포용성장 기반 강화

(1) 지역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

① 충남형 기업과 지역의 공유가치 창출 지원

(1) 사업개요

-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특화형 공유가치창출 지원사업 추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동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공유 가치 창출(CSV)’
- 공유 가치 창출(CSV : Created Shared Value) : 사회적 약자와 함께 경제적 이윤 및 지역·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공유
 - (SK그룹, 사회적기업 전문 사모 투자신탁) 사회적기업 발굴과 성장, 발전 지원
 - (삼성그룹, 삼성드림클래스) 도서 벽지 지역 중학생 대상 교육지원 사업
 - (롯데그룹, 롯데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신생벤처)대상 창업 지원금, 사무공간, 전문가 자문 등 제공)
 -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업 이윤의 사회에 환원(기업의 이익활동과는 별개)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충남형 새로운 모델의 발굴과 지역 밀착형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3) 주요사업내용

- 공유가치창출 중심의 경제상생 사다리 조성
 - (추진방법) 충남의 대중소기업 상생 파트너십 활용 공유가치 창출과 연계된 ‘충남형 경제상생 모델 제시’
 - (추진모델) 충남도와 대·중소기업 상호 제안하고 지속적 협의를 통한 안건 발굴 논의
- 경제상생 정책 추진 및 체계구축
 - (경제상생 포럼) 도내 유통, 제조 분야 등에 CSV 모델 발굴이 적용가능한 현장 중

심형 포럼 지속 추진

- (중소기업 연계) 중소기업 참여 유도를 통해 CSV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서 기업과 지역의 공유가치 창출

- 기업이 입지한 지역에서 인재육성, 관련산업의 창출,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기업과 지역의 미래성장을 위한 장기투자로서의 전환

- 공유가치 창출형 상생협력 사업 발굴위한 기본계획 수립

- 기업의 핵심이미지 및 주요 사업분야와 연계한 지역사회발전 사업에 대한 발굴 추진
(예, 디스플레이 특화거리, 미세먼지 저감숲 등)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중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공유가치창출형 기본계획 수립(지역자원 및 기업 연계 기본계획 수립)
- 2021년 : 기업-지역 공유가치 창출 모델 제시 및 네트워크 구성 등 공감대 형성
- 2022년~ : 공유가치 창출 상생협력 문화 확산 지속

- 투자계획

- 비예산 사업

② 사회적경제 지원 플랫폼 구축

(1) 사업개요

-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적 지원 플랫폼 구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충남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질적 저하 및 지역 불균형 심화
 - 업체수('10년 28개→'18년 786개), 매출액('12년 265억원→'18년 1,607억원)
 -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중 인건비 지원 51.6%, 지원중단시 폐업률 16.7%
- 충남의 사회적경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간 사업연대 및 공동 정책 발굴, 체계적지원(인력양성, 판로, 경영지원 등), 행정과 민간간 중재와 협력·조정 역할 필요
-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의 협업·네트워킹·혁신을 위한 거점 구축

(3) 주요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운용
 - 200억원 규모의 기금 운용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대한 기금 융자 및 비금융 사업 지원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생산·가공·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거점
 - 위치 : 청양군 청양읍 소재, 부지 : 14,090㎡(청양군 매입, 54.1억원)
 - 사업비 : 280억원(국 140, 도 42, 청양군 98), 기간 : '20~'22
 - 향후 지역맞춤 허브&스포츠형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으로 조성
 - 도시형 거점 혁신타운, 농촌형 거점 혁신타운, 미니형 혁신타운으로 연계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2022년 : 단계별 기금조성 및 운용
 - 2020년~2022년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2023년~2030년 : 허브&스포크형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300	24.5	169.7	102.6	3.2	
국비		140	9.5	82.1	48.4		
지방비	도비	62	8.35	30.13	20.32	3.2	
	시군비	98	6.65	57.47	33.88		
민자							

③ 지역기업 현지화

(1) 사업개요

- 목 적 : 소득역외 유출 최소화를 위해 본사이전 기업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소득 역외유출 최소화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대상 : 도내 투자 중 본사이전 기업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7년 기준 충남의 역외유출비중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가장 높음
 - 역외유출 비중 순위 충남 1위(26.7%), 충북(21.3%), 울산(20.1%) 등이며, 역외유입이 높은 지역은 대구(19.1%), 광주(13.9%), 대전(13.5%) 등
 - * 역외유출 비중 : 29.8%('14) → 26.4%('15) → 25.3%('16) → 26.7%('17)
-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가속화로 지역경제의 고른 성장에 한계
 - 지역내 경제가 생산-분배-지출이 체계적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단순한 생산중심의 기능만 담당

(3) 주요사업내용

- 본사이전보조금 지원 : 수도권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이 도내로 본사이전 시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10%를 지원
- 수도권직원이주지원비 :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에 투자 시 그 소속 직원이 주소를 도내로 할 경우 개인당 150만원, 세대당 1,000만원을 지원

>> 추진계획

- 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접수 : 수시
-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 : 수시

- 보조금 지급 : 6월(상반기), 12월(하반기)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7개사 지원(본사 수도권 소재)
 - 2021년 : 8개사 지원(본사 수도권 소재)
 - 2022년 : 9개사 지원(본사 수도권 소재)
 - 2023 ~ 2030년 : 10개사 지원(본사 수도권 소재)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564	46	50	52	208	208
국비		-					
지방비	도비	282	23	25	26	104	104
	시군비	282	23	25	26	104	104
민자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장기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1,989.1	289.1	300	400	500	500
국비		223	223				
지방비	도비	529.8	19.8	90	120	150	150
	시군비	1,236.3	46.3	210	280	350	350
민자							

⑤ ICT기반 지역 협력적 소비플래너 양성

(1) 사업개요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ICT기반 창업지원교육센터 확대운영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컨설팅, 교육, 멘토링 등 자립역량 강화 및 육성체계 마련
 - 식품제조·가공분야 : 충남 지역경제의 특성을 활용하여 농특산물 가공 및 체험형 상품개발에 특화된 지역연계형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 사회서비스분야 : 충남 지역현안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저출산 및 노인문제 해결 등 복지취약계층이 중심이 된 신규 기업양성 과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 충남 및 국가차원으로 공유경제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ICT의 발달로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에 대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3) 주요사업내용(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 ICT기반 지역 협력적 사회 콘텐츠 개발 및 프로젝트 실행
 - 일상속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협력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플래너 양성 및 콘텐츠 개발
- 창업촉진과 고용창출을 위한 창업준비자 교육비 지원
 - 현재 2개 분야 운영 중 식품제조·가공분야, 사회서비스 분야 외 ICT기반 창업지원 분야 확대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계속, 중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1년 : ICT분야 창업지원교육센터 추가 공모 및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22.5	3.2	3.2	3.2	12.9	
국비							
지방비	도비	22.5	3.2	3.2	3.2	12.9	
	시군비						
민자							

⑥ 마을기업 육성

(1) 사업개요

- 마을기업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및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공동체 붕괴,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에 따른 도농간 양극화 완화 해결책 필요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3) 주요사업내용

- (사업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 및 마을기업
- (사업비) 820백만원(균특 410 도 123 시군 287)
 - * 보조비율 : 균특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정요건) 마을기업 4대요건(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 (지원내용)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교육, 컨설팅 지원 등
 -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예비 10백만원 한도 지원
- (선정주체)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예비 마을기업(충청남도)
- (추진절차)
 - 마을기업 : 공고 → 시·군 접수 → 현장조사 → 도 심사·추천 → 행안부 최종심사 선정
 - 예비마을기업 : 공고 → 시·군 접수 → 현장조사 → 도 최종심사 및 선정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 신규 마을기업 발굴 및 지정 마을기업 육성(8.1억원)
 - 2021년 : 신규 마을기업 발굴 및 지정 마을기업 육성(8.5억원)
 - 2022년 : 신규 마을기업 발굴 및 지정 마을기업 육성(8.9억원)
 - 2023 ~ 2030년 : 신규 마을기업 발굴 및 지정 마을기업 육성(90.4억원)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115.9	8.1	8.5	8.9	40.8	49.6
국비	58.1	4.1	4.3	4.5	20.4	24.8
지방비	도비	17.2	1.2	1.2	6.1	7.4
	시군비	40.6	2.8	3.0	14.3	17.4
민자						

7 상생형 어촌계 연금제 도입

(1) 사업개요

- (목적) 어촌계원내 자력 수익활동이 불가한 인력 공동분배로 고령자의 생활 부담 경감
- 어촌계 세대간의 협의를 통한 어촌계 내의 발생수익의 분배로 상생 기반 마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어촌 고령화에 따른 빈곤 및 공동화 문제 심화
* ('11년 24천명 → '18년 18천명 감소)
- 어촌계 세대 간 협의로 주민 주도의 자체 상생방안 마련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6. 6 ~
- (사업대상) 자력 수입활동이 어려운 어촌계원
- (추진체계) 어촌계 자체 협의를 통한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
- (사업내용) 어촌계 활동에 따른 수익의 총액의 30%를 자력 수익활동이 불가능한 어촌계원에게 분배
- (추진실적)

내 용 \ 어촌계	만수동	중 왕	웃 점	탄 계	교 로
어장면적(ha)	마을양식 34	마을양식 170	마을양식 47	마을양식 27.5	새우양식장 4
어촌계원(명)	96	96	79	43	198
도입시기(년)	2016	2020	2018(시범)	2019(시범)	2020(계획)
정관개정 여부(년)	2017	2020	2020	성과분석 후	주민 의견 수렴 후
수혜대상(명)	18	20	25	15	20
연간지급액 (예정포함, 만원)	500	350	100	60	미정
기 타	마을어장 활용 재원확보	마을어장, 감태 가공시설, 체험마을 등 활용 재원확보	마을어장 활용 재원확보	마을어장 활용 재원확보	당진화력 협력사업 (4ha 중 1.5ha)활용 연금재원 확보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 만수동 어촌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상생형 어촌계 연금제 관련 교육 및 홍보 추진
 - 2021년 : 상생형 연금제 홍보 지속 추진 및 기존 연금제 추진 어촌마을 발전계획 컨설팅 및 상담(지속가능성 확보)
 - 2022 ~ 2030년 : 컨설팅 및 상담 지속 추진 및 마을 맞춤형 특화발전 지원(어촌 체험마을 조성, 어촌체험 편의시설 조성 등)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36.5	-	3.65	3.65	14.6	14.6
국비		-	-	-	-	-	-
지방비	도비	16.5	-	1.65	1.65	6.6	6.6
	시군비	20	-	2	2	8	8
민자		-	-	-	-	-	-

8 청년 어촌정착 지원

(1) 사업개요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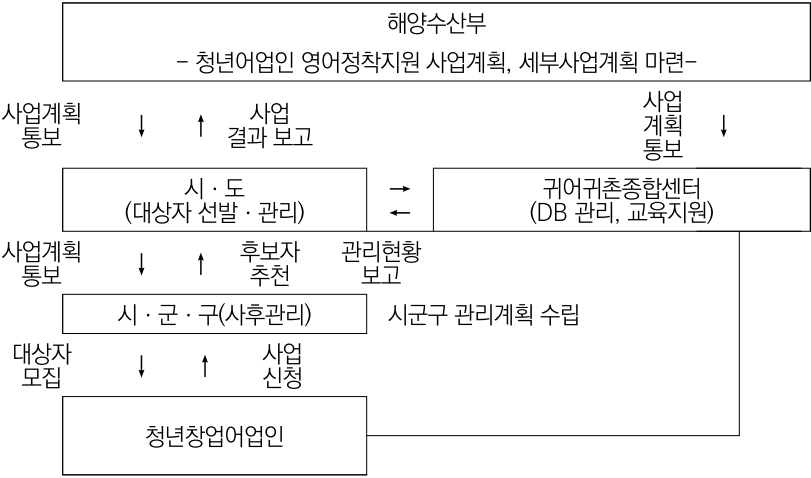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어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낙후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어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정책 필요
- 신규 창업어업인은 기술습득 기간소요, 진입 직후 소득감소 요인 등 초기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력 제고 필요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8 ~ (1년 단위 사업)
- (사업대상)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창업예정자 포함)의 어업인
- (사업내용)
 - 청년어업인에게 청년어촌정착 지원금 지급(매월 지급, 최대 3년)
 - 지원금은 어업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귀어귀촌 및 어업창업기술 교육 이수, 귀어학교 수료 등 권고

• (추진체계)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증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 연차별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후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20.83	2.83	3	3	12	
국비	14.58	1.98	2.1	2.1	8.4	
지방비	도비	1.88	0.26	0.27	0.27	1.08
	시군비	4.37	0.59	0.63	0.63	2.52
민자	-	-	-	-	-	-

9 성과공유제 도입

(1) 사업개요

- 지역내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제안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4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2018~2020)
 - 협력이익배분제(국정과제) → 협력이익공유제(협력네트워크의 공유)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에서 종합관리
-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 고용 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형태로 설계 필요
- 중앙정부의 성과공유제(협력이익공유제) 추진 성과 확산에 따른 지역내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공유제 도입을 통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검토

(3) 주요사업내용

- 지역내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 협력이익공유제(판매 이익 공유), 성과공유제(원가절감 이익 공유) 등 중앙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지역인센티브 및 가점 부여(중앙정부 추진동향에 따라)
- 새로운 형태의 성과 공유 모델 모색 및 성과 공유제도 정착위한 지원체계 구축
-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여론 및 추진 동향에 따라 대응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장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새로운 형태의 성과공유 모델 모색 및 유인책 마련
 - * 성과공유제 내실화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충분히 수렴

- 2022년 : 성과공유제도 확산 위한 대중소기업간 신뢰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 마련
 - 2024년 : 공공기관 시범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정비
-
- 투자계획
 - 비예산 사업

10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1) 사업개요

- 지역공동체형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실현하고, 생활에 불편 없고 활력 넘치는 농촌조성으로 지방소멸 적극 대응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균특 지방이양으로 마을만들기사업 축소 우려, 단계별 추진방식인 농식품부 기본정책을 유지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년 ~ (사업별 3년 원칙)
- (사업대상) 매년 15개시군 35지구(자율개발 30, 종합개발 5)
- (사업선정) 도 공모방식(전문가 평가 / 상대성 평가)
- (추진체계) 시·군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전 도 협의)
- (사업내용)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커뮤니티센터, 소공원조성, 농산물가공시설 등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2030년 : 매년 35지구 선정 및 사업추진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1,960	40	120	200	800	800
국비						
지방비						
도비	588	12	36	60	240	240
시군비	1,372	28	84	140	560	560
민자						

※ 2022년부터는 매년 200억원(도비 60, 시군비 140) 투입

(2) 공정한 기회보장과 공동체 형성

① 도지사 직속 '포용성장위원회' 신설

(1) 사업개요

- 도지사 직속의 '포용성장위원회' 운영을 통한 양극화 및 포용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한계로 인한 대안 논의 확대
- 기본소득 등 적극적 복지에 대한 지역적 공론화와 방안 모색 필요
 -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삶의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을 위한 새로운 경제모델 구상 필요(현재의 상황에서 지역상황에 부합하는 단계별 접근 필요)
 - 기본소득의 원칙(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 충분성)의 부합한 지역사회 적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논의 필요

(3) 주요사업내용

- 지역 경제 주체에 대한 맞춤형 기본소득 체계 구축 및 실천과제 모색
- 도민의 복지수혜와 연계한 기본소득간의 기능 분담 조정
 - 전 도민 기본소득 추진시 지역 특화정책(아기수당, 일자리 지원금 등)의 재편 등
 - 청년수당, 청소년사회상속제 등의 기본자산 제도 도입 검토
 - 현행 추진되고 있는 농민기본수당 등의 포괄적 기본소득 방안 모색
- 양극화 및 기본소득 관련 조례제정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 구분 : 신규, 단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관련 조례 제정 및 조례제정 전까지 특별위원회로 운영
 - 2021년 : 조례제정 및 위원회 운영 확대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13	1	2	2	4	4
국비		0					
지방비	도비	13	1	2	2	4	4
	시군비	0					
민자							

② 학교 밖 청소년 성장수당 지원

(1) 사업 개요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성장지원 수당 월 20만원 지원
-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등 개별 학생 학업·진로활동 설계 지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권 내 혜택에서 배제되며 문화적, 교육적 소외를 경험함
- 주요 학업중단 사유는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희망하는 학습 수강과 진로 탐색이 대부분 이므로 이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필요

(3) 주요 사업내용(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사업대상)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2회 이상 참여 청소년 중 우수 청소년 200명
- (추진체계) 성장수당지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사업내용) 지속, 우수 참여자에게 성장지원수당 월 20만원 지원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신규, 장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성장수당지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점검
 - 2021년 : 우수 학교밖 청소년 성장 지원수당 지원 및 운영

③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활성화

(1) 사업 개요

- 지역과 학교를 연계한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의 교육력 제고와 공교육 혁신을 추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입시위주와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교육방식 혁신을 통하여 미래교육 준비 필요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결과, OECD 회원국 평균 7.6점 보다 1점이나 낮은 최하위 기록

>> 현황과 여건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구호 아래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의지를 결집하고 교육력 회복 등을 위해 충남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
 - 도와 교육청 간「마을교육 공동체 만들기」업무협약(‘16.10.12.)에 따라 주입식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주민, 교사, 학부모 등과 마을이 학교와 함께 지역밀착형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
 - 타 시·도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18년)
 - 충남(10지구, 15시군), 경기(16지구, 31시군), 강원(7지구, 18시군)
충북(12지구, 11시군), 전북(5지구, 14시군), 전남(15지구, 22시군) 등
- * [출처]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협업체제 개발연구(2018. 12. 충청남도교육청)

(3) 주요 사업내용(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 (사업기간) 2016년 ~
- (사업대상)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지정한 지구
- (추진체계) 시·군 및 교육청 추진

• (사업내용)

- ❶ 마을교육 기반 조성 지원 :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단 구성 및 워크숍 개최, 마을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등
- ❷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 마을학교 및 교사 발굴·육성, 마을축제 개최 등
- ❸ 마을교육 내실화 지원 : 행복교육지구 운영 평가 컨설팅 및 워크숍 등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중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19년] : 12개 지구 운영, 일반지구 9개(천안, 아산, 논산, 당진, 공주, 홍성, 예산 보령, 서산) / 특별지구 3개(부여, 서천, 청양) / 마을학교 62개 운영, 마을교사 250명 활동
- [2020년] : 14개 지구로 확대 운영(금산, 태안 추가 지정)
- [2021년] : 15개 지구로 확대, 지속추진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433.8	68.3	73.1	73.1	219.3	
국비							
지방비	도비	26.7	4.2	4.5	4.5	13.5	
	시군비	237	37	40	40	120	
민자		170.1	27.1	28.6	28.6	85.8	

4 충청남도 진로융합교육원(가칭) 설립 지원

(1) 사업 개요

- 미래사회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진로교육과 학생들의 흥미·적성 발굴을 위한 체험과 원리 중심의 진로탐색이 중요
- 교과 원리와 연계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창의융합교육과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관 설립 필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충남 지역 진로체험처는 전국 대비 4.3%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고, 절반 이상(56.3%)의 학생들이 타 시·도 소개 체험처를 이용
- 2018년 충남 중·고등생 학교 밖 진로체험활동 비용이 1인당 25,500원으로 연간 총 55억원 이상의 비용이 사용되고 있음

학생수(명)	학교 밖 진로체험활동 1인당 1회 참여 경비			합계(원)
	교통비(원)	체험활동비(원)	소계(원)	
217,617명*	17,500원	8,000원 (잡월드 기준)	25,500원	5,549,233,500

* 주 : '2018년 충남 중·고등학생 1인당 평균 체험활동 횟수'의 '현장직업체험형', '직업실무 체험형', '현장견학형', '학과체험형'에 참여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추계함

(3) 주요사업내용(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 (설립주관/지원) 충청남도교육청/충청남도
- (공사기간) 2020. 6.~2022. 5.
- (사업비) 441억원(교육부 100, 충청남도 95, 교육청 246) 예정
 - *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은 내포신도시내 기관유치 차원에서 총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에 한해 2020~2022년까지 3년간 분할하여 지원할 계획
- (설립위치) 내포신도시 산학협력시설용지 지구단지 내 (대지 29,840㎡, 연면적 58,800㎡)

5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및 교육권 확보

(1) 사업 개요

- (목 적)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 (사업비) 매년 50,000천원 내외(도 출연금)
- (규 모) 운영단체 3개 내외 선정, 6개 장애인 시설프로그램 운영
- (추진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5조2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1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내 소외 아동의 문화예술 교육확대로 문화격차 해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균형있는 문화예술 교육 확대 추진
 - 기존 장애인 시설뿐 아니라 재가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통해 소외 없는 문화예술교육 실현

>> 현황과 여건

- 장애 소외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일반 도민보다 낮은 실정
 - 유아동기(3~12세) 일반 34.6%, 장애인 22.3%
 - 청소년기(13~18세) 일반 38.8%, 장애인 25.5%
- 일반인과 장애인 학교 이외 문화예술교육 참여 주요 어려움 상이
 - 일반인 : 비용과 시간, 정보 / 장애인 : 동반자, 비용, 교통 불편
 - * 자료 : 「2018 충남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충남문화재단(2018.10)

(3) 주요사업내용(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 (사업기간) 2020~(반복사업)
- (사업대상) 도내 문화예술분야에 소외된 아동 및 장애인

6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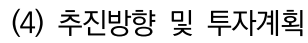
-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후 충분히 자립하지 못하고 빈곤, 사회 부적응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자립수당 지급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자립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1항 제1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시행하여야 함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 계속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만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이면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 (사업내용)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매월 30만원 지원
- (추진체계) : 시·군 직접 수행, 자치단체경상보조



-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217.8	13.8	15	16.2	76.8	96
국비		176	11	12	13	62	78
지방비	도비	20.9	1.4	1.5	1.6	7.4	9
	시군비	20.9	1.4	1.5	1.6	7.4	9
민자		-	-	-	-	-	-

7 사회문제해결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지원

(1) 사업개요

- ① (재능나눔 봉사단 구성) 전문화되고 다양한 재능분야 광역 단위 인력 POOL을 구성(100명 내외)하여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지원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야별 지원 강화
 - *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19.9월)에 근거하여 봉사활동 지원
- ② (자원봉사 참여 확대) 지역 내 유관기관 및 기업 등 참여유도로 맞춤형 자원봉사 수요처(취약계층 등)와 연계기능 확대
 - 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도내 소외계층 등 지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양극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 ※ 생활 봉사 중심의 지원을 다양한 분야(의료, 교육, 법률, 문화, 예술 등)으로 확대
- 지역 내 유관기관 등 자원봉사 참여확산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3) 기대효과

-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네트워크 확대로 사회불평등 해소 기여
- 자원봉사를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과 나눔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 확산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신규, 장기
- 연차별 추진방안
 - 2020년 : 재능나눔 봉사단 POOL 구성(100명 내외), 자원봉사 참여 확대
 - 2021~2030년 : 재능나눔 봉사단 POOL 구성 확대, 자원봉사 참여 확대 지속
- 투자계획: 비예산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82	6	7	7	30	32
국비							
지방비	도비	41	3	3.5	3.5	15	16
	시군비	41	3	3.5	3.5	15	16
민자							

9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 사업개요

- 예산액 : 301,000천원
- 지원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5조1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하나원 수료 후, 관할지역으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 교육과 기존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착지원 상담 및 사업 실시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과 자립을 지원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9. 1. 1. ~ 2021. 12. 31.
- (사업대상)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추진체계) 통일부 공모 지정기관
- (사업내용) 북한이탈주민 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 지원 사업, 취업지원, 사례관리 등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장기
- 추진계획(2020년)
 - 교육·진학지원(50명) 및 진로·취업지원(60명)
 - 심리안정사업(120명) 및 사회보장 제도(60명)
 - 법률지원(60명) 및 지역통합사업(500명)
 - 인권교육(60명) 부모교육(30명) 언어교육(60명)
 - 지역사회네트워킹(500명)지역사회네트워킹(500명)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27	3	3	3	9	9
국비		27	3	3	3	9	9
지방비	도비						
	시군비						
민자							

10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서비스**(1) 사업개요**

- 북한이탈주민 가족구성원 특수성에 따라 자녀 학습지도·학교생활지원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진행으로 안정적 정착 도모
- 예 산 액 : 100,000천원
- 지원근거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3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가족단위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가족관계를 위한 정서적 지원 및 자녀 학습지도 등 가족통합사업 필요

(3)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 2022
- (사업대상)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추진체계) 민간단체(공모예정)
- (사업내용)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교생활 지원 및 가족관계개선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단기
- 추진계획(2020년)
 - 통합지도사 가정방문(27가정/6개월간)
 - 가족캠프 및 가족체험(27가정/2회)
 - 슈퍼비전 통합지도사 역량강화(10명/1회)
 - 자조모임(2회/9팀)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3	1	1	1		
국비							
지방비	도비	3	1	1	1		
	시군비						
민자							

구 분	사 업 내 용
도	■ 사업계획 시달, 대상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추진 상황 점검, 사업비 정산 및 평가 ■ 교육, 사전 멘토링 및 컨설팅, 워크숍, 성과공유회 개최 등
시·군	■ 사업관리·운영, 사업비 집행·정산 확인 및 도 제출, 사후관리 등
읍·면·동	■ 공동체 사업계획 검토 및 현지 확인
공동체	■ 활동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교육 및 컨설팅 참여, 사업비 정산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계속, 장기

- 2020년 :

*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접수('19. 12. 17. ~ '20. 2. 5.)

* 접수 공동체 심사표에 의거 사업계획서 개별심사 및 종합심사(2월)

* 선정 공동체 회계예산 집합교육 및 컨설팅 교육(4월~10월)

지역주민 연계, 함께하는 활동 네트워크 협력활동 병행

- 2021년 : 도민참여예산 자원 및 공모사업 범위 확대

- 2022년 : 제안 단계부터 공모사업 완성까지 컨설팅 추진

- 2023~2030년 : 읍면동 소규모사업 상시 의제로 제안사업 발굴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30.5	2.4	2.4	2.7	11.0	12.0
국비						
지방비	도비	9.9	0.7	0.7	3.7	4.0
	시군비	20.6	1.7	1.7	7.3	8.0
민자						

12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사회통합 특화사업 추진

(1) 사업 개요

- 이주민 밀집지역 특화사업 추진
- 이주민 지역사회 정착 및 선주민과 이주민 상호이해와 소통증진 사업
- 이주아동의 보육·교육·건강 등 기본적 인권 증진 사업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충남 외국인주민 비율은 5.4%, 전국 1위에 해당(행안부, 2018.11기준)
- 충남 외국인주민 밀집 시군 증가(2018.11.1.기준, 6개 시군)
 - 천안시 33,614(5.0%), 아산시 29,369(8.6%), 당진시 9,882(5.8%), 논산시 7,022(5.7%), 예산군 4,035(5.1%), 금산군 3,760(6.8%)
- 최근 가족동반 한국계 동포 외국인 노동자와 아동기 자녀 증가
 - 한국 국적 없는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건강 등 권리 취약 문제 제기
- 충남 외국인주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집중 거주지역도 증가하고 있으나 도민의 다문화사회 인식은 하락 추세

- 도민 외국인근로자 인권존중도 인식 : '17년 5.60 → '19년 5.09점
- 도민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 인식 : '16년 3.09 → '19년 2.91점
- 도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결혼이주민 3.94점, 외국인근로자 4.2점

- 선주민과 이주민 상호이해와 소통증진, 기본권 증진 등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사회통합 강화 필요

* 경기도 안산시 : 다문화 특구로 특화사업 추진,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3) 주요사업내용(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 집중 거주 지역 선주민과 이주민 상호 이해·소통 증진사업 추진

- 아동 돌봄 및 교육, 건강 등 기본적 이주민 인권 증진 사업 추진

- 교육, 홍보, 문화·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방법 활용

(4)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구분 : 신규, 단기

- 연차별 추진 방안

- 2020년 : 특화사업 대상지역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 2021년 : 특화사업 확대
- 2022년 : 제4차 외국인정책, 다문화가족정책(2023~2027)과 연계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26년	'27~'30년
합계		1.24	0.04	0.6	0.6		
국비							
지방비	도비	0.372	0.012	0.18	0.18		
	시군비	0.868	0.028	0.42	0.42		
민자							

[학술자료]

- 강신욱, 2008.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 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외,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사우 외, 2013.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김성근 외, 2014. 국민통합의 과제와 전략: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김세훈 외, 2006. 문화양극화 대응 중기 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용성, 2006. 소득분배 양극화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김용탁 외, 2017.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복지-고용서비스 개선 방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김우영. (2012).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 :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2(1): 1-28.
- 김정훈 외, 2017. 포용적 성장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철희 외, 2016. 충청남도의 사회적 격차구조 연구, 충남연구원
- 김흥종 외, 2005.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맹준호. 2019. 충남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박경호 외, 2017.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배진한, 2019. 최저임금과 지역별 청년·장년·여성 고용 - 지역 간 임금보포 격차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 변미리 외, 2017.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서울연구원
- 우천식, 2012. 산업·기업의 양극화와 경쟁력,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 이우진, 2016. 한국의 소득유형별 분배구조의 변화, 예산정책연구 제5권 제2호.
- 이재준, 2019.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장경섭 외, 2006. 경제사회적 양극화시대의 가족정책. 여성가족부
- 정경희 외, 2017. 2017년 전국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외,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은희 외, 2018.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보건사회연구원
- 최효미 외, 2018. 사회보장제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연구. 육아정책 연구소

- Allanson, 2014, Income stratification and between-group inequality, Economics letters
- Kim, 2018, Top Incomes in Korea, 1933-2016: 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 WID
- Koh, 2018, The Evolution of Wage Inequality in Korea, KDI
- Mookherjee & Shorrocks, 1982,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uk income inequality, The Economic Journal

[보고자료]

- 고용노동부, 2018,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한국사회 계층갈등과 해소방안 연구
- 대전광역시, 2020 주요 업무계획
- 보건복지부,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 사회조사센터. 2018. 2018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17,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 세이브더칠드런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18, 2018년 한국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움 자료집
- 아산시. 2018. 아산시 아동친화도 조사.
- 충남문화재단. 2018. 2018 충남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 충청남도, 충남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연구(2020~2022)
- 충청남도,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지표(2019년 시행계획)
- 충청남도,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지표
-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2018~2022)
- 충청남도, 충남형 가족정책 종합계획 (2019~2023) 수립 연구
-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 충청남도, 제4기(2019~2022)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
- 충청남도,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 충청남도, 제7기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 계획 중장기 계획(2019~2022년)
- 충청남도, 행복출발 아동프로젝트 5개년 계획(2014~2018)
- 충청남도, 행복한 안전 충남 실행계획 2050.
- 충청남도, 2018, 충청남도 민선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 충청남도, 2018, 충남사회지표[종합편]
- 통계청, 2019,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5~2045)'

통계청,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2018,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한국개발원, 2019, KDI글로벌경제포럼 발표자료
 ILO, 2014, Global Wage Data bas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보도자료 (2019.2.19. 관계부처합동)
 ‘포용과 혁신이 선순환해 따뜻하고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청사진’.(한겨레 2019.12.23.)
 포용국가 아동정책 보도자료(2019.5.23. 관계부처합동)

[통계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국가지표체계(<https://www.index.go.kr/>)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충청남도 통계정보관(<http://www.chungnam.net/statsMain.do>)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환경부. 상수도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연구진 및 자문위원

연구기관 충남연구원 (www.cni.re.kr)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www.cwpdi.re.kr)

연구책임 백운성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우복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신동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상욱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임우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맹준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강수현 충남연구원 연구원
김희영 충남연구원 연구원
송민정 충남연구원 연구원
윤종선 충남연구원 연구원
김우영 공주대학교 교수
설영훈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전경숙 평택대학교 교수
김미숙 전)서울기독대학교 교수
김은하 사회복지학 박사

연구자문 김우영 공주대학교 교수(충청남도 양극화대책자문위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충청남도 양극화대책자문위원)
김혜경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의장(충청남도 양극화대책자문위원)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충청남도 양극화대책자문위원)
신혜종 순천향대학교 교수(충청남도 양극화대책자문위원)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경제실장(충청남도 양극화대책자문위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충청남도 양극화대책자문위원)

연구자문	이진	건양대학교 교수(충청남도 양극화대책자문위원)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충청남도 양극화대책자문위원)
	정윤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충청남도 양극화대책자문위원)
	천영민	한국고용정보원(충청남도 양극화대책자문위원)
	최운현	청운대학교 교수(충청남도 양극화대책자문위원)
	황선재	충남대학교 교수(충청남도 양극화대책자문위원)
	김기희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만석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종법	대전대학교 교수
	온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유용구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이영구	충남경제진흥원 경영기획팀 총괄파트장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임병철	충남연구원 전임연구원

행정협조	김석필	충청남도 경제실장
	송무경	충청남도 경제정책과장
	조강연	충청남도 양극화대책팀장
	이영호	충청남도 양극화대책팀 주무관
	최성애	충청남도 양극화대책팀 주무관
	신동헌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전)
	유재룡	충청남도 경제정책과장(전)
	김환석	충청남도 양극화대책팀장(전)
	신일호	충청남도 양극화대책팀장(전)
	김보성	충청남도 양극화대책팀 주무관(전)
	주 경	충청남도 양극화대책팀 주무관(전)

